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수립 (2009~2020)

2009. 02



경 상 남 도

제 출 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수립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2월

경 남 발 전 연 구 원
원 장 이 창 희

◇ 본 과업에 참여한 연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구책임	김 영 규	경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연구위원
------	-------	----------------------

연구진	이 재 희	경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실 연구원
-----	-------	---------------------

자문위원	이 우 배	인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

	문 태 헌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	----------------

공동연구기관	(주)정림E&C	
--------	----------	--

목 차

제1장 서론	3
① 과업의 배경 및 목적	3
1. 과업의 배경	3
2. 과업의 목적	3
② 과업의 범위	4
1. 공간적 범위	4
2. 시간적 범위	4
3. 내용적 범위	4
4. 과업의 절차	6
③ 과업의 수행방법	7
제2장 산업입지 추이	9
① 산업현황	9
1. 개요	9
2. 제조업 현황	10
3. 경남지역의 변화 추이	11
4. 업종별 변화 추이	12
5. 입지 유형별 현황	14
6.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17
7. 원단위 변화 추이	22
② 권역별 산업용지 현황	26
1. 총괄	26
2. 계획입지	27
제3장 산업입지정책 및 공급규모 변화 추이	47
① 시기별 산업입지 정책	47

1. 산업입지 정책의 역사	47
② 산업입지 공급변화 추이	55
1. 산업입지 변화추이	55
2. 산업단지 개발현황	56
③ 산업입지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60
1. 산업입지 정책의 문제점	60
2. 산업입지제도의 문제점	62
④ 산업입지 활성화 사례	63
1. 해외 산업입지 활성화 사례	63
2. 국내 산업입지 활성화 사례	68
⑤ 첨단산업단지의 사례	75
1. 외국의 첨단산업단지	75
2. 한국의 첨단산업단지	84
3. 첨단산업단지 사례의 시사점	87
제4장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과 과제	93
① 산업입지 환경의 변화	93
1. 산업환경의 변화	93
2. 산업구조 변화	94
② 산업입지 여건변화와 주요과제	112
1. 산업입지 여건변화	112
2. 산업단지 개발환경의 변화방향	113
③ 경남지역 산업입지의 문제점	115
1. 자본재 생산부문의 취약성	115
2. 첨단(기술)산업의 상대적 열세	115
3. 농림·수산업 미래의 불투명성	115
4. 지식기반산업의 불투명성	115
5. 지역금융의 취약성	116
6. 지역혁신체계의 미흡	116
④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117
1. 산업입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도출	117

2. 지식기반산업의 합리적 입지공급	118
3.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및 임대공장 공급확대	118
4. 지역의 자율적인 산업단지 육성과 책임경영 강화	119
5. 산업입지 개발의 지원확대	119
6.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개발	120
7. 기존 산업단지의 계획적 재정비	120
8. 국가의 산업단지개발에서의 역할 재정립	121
9. 외국인 투자기업의 효과적 유치를 위한 입지공급	121
10. 해외직접투자 증대에 따른 산업입지의 대응	122

제5장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127

① 제3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127
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평가	127
② 산업입지 수요추정 및 전망	129
1. 경남의 업종별 생산액 전망	129
2. 산업입지 원단위 전망	132
3. 생산액당 부지원단위 방식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135
4. 과거추세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136
5. 경남의 산업용지 수요추정 및 결과값 보정	139
③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140
1. 공급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140
2.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140
3. 경남의 산업용지 공급규모의산정	146

제6장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149

① 계획의 전제	149
② 공급현황 및 제3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149
1.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현황	149
2. 경남의 산업입지 조성계획	151
③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159

1. 지역별 공급비중의 추정	159
2. 지역별·입지유형별 공급계획	159
3. 개발가능지 고려에 따른 공급계획	162
4.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165

제7장 산업입지 관련계획 및 법률 171

①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안)	171
1. 총칙	171
2.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범위	172
3.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내용 및 작성원칙	173
4.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기준	174
5.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절차	180
6.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효율적 관리	181
7. 부 칙	182
② 산업용지 관련계획	183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183
2.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185
3.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2002~2011)	187
③ 산업용지 관련법률	189
1. 산업입지 관련 법률체계	18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관련지침	190
3. 산업집적법 및 관련지침	195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008.9.6)	197
5. 기존 법률과의 비교분석	204
④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 지원제도	205
1.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제도 개요	205
2. 지원내용	206
3. 산업단지 개발 비용보조 및 지원기준	207

제8장 산업단지 개발의 기대효과	211
[1] 제도의 개편	211
1. 제도의 개편방향	211
2. 제도개선 추진방안	213
[2] 산업용지 개발의 기대효과	219
 부 록	 223
[1] 설문조사 개요	223
1. 조사의 개요	223
2. 주요조사내용	223
3. 표본설계 (Sampling Design)	223
4. 실사 설계(Fieldwork Design) 및 자료처리	223
[2] 결과분석	225
1. 계획입지 결과분석	225
2. 개별입지 결과분석	231
3. 시사점	238
[3] 설문조사서	239
1. 계획입지 설문조사서	239
2. 개별입지 설문조사서	241

표 목 차

(표2- 1) 산업입지 변화 추이	9
(표2- 2) 경남 기계산업의 전국비중(2004)	10
(표2- 3) 경남기계산업의 사업체수 비중	11
(표2- 4) 경남기계산업의 종사자수 비중	11
(표2- 5) 경남기계산업의 생산액 비중	11
(표2- 6) 경남기계산업의 동남권내 비중	12
(표2- 7) 동남권 제조업 특화도 분석(2004)	13
(표2- 8) 경남의 산업단지 현황(2008년)	14
(표2- 9) 개별입지 현황	15
(표2-10) 9중핵권별 산업단지 현황(2008년)	16
(표2-11) 경남도내 국가산업단지 현황	18
(표2-12) 경남의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19
(표2-13) 경남의 농공단지 현황	20
(표2-14) 부지면적(1000m ²)당 생산액 원단위 변화추이	23
(표2-15) 생산액(백만원)당 소요부지 면적	24
(표2-16) 경남의 산업용지 현황	26
(표2-17) 동부경남권역(김해·양산)산업용지 현황	27
(표2-18) 중부경남권역(창원·마산·진해)산업용지 현황	29
(표2-19) 중북부경남권역(밀양·창녕)산업용지 현황	31
(표2-20) 중부내륙경남권역(함안·의령) 산업용지 현황	33
(표2-21) 서부경남권역(진주·사천)산업용지 현황	35
(표2-33) 서남부경남권역(하동·산청)산업용지 현황	37
(표2-23) 남부해양경남권역(거제·통영)산업용지 현황	39
(표2-24) 서부해양경남권역(남해·고성)산업용지 현황	41
(표2-25) 서북부경남권역(거창·함양·합천)산업용지 현황	43
(표3- 1)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51
(표3- 2) 우리나라 산업입지 정책의 변화과정	54
(표3- 3) 제조업 입지원단위 추이	55
(표3- 4) 전국의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57

(표3- 5) 전국의 도시첨단산업단지	58
(표3- 6) 전국의 농공단지현황	58
(표3- 7) 주요국의 산업단지 개발방식	60
(표3- 8) 주요국의 산업단지 분양방식	61
(표3- 9) 산업입지정책과 관련제도의 변화	61
(표3-10) 대덕연구단지 개발 초기단계의 기본정책 변화	72
(표3-11) 세계각국의 첨단기술산업단지 유형	78
(표3-12) 우리나라 첨단산업단지 조성현황	86
(표3-13) 각국의 첨단산업단지 성공요인	87
(표3-14) 산업단지의 분양률	88
(표3-15) 오창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생산업종과 유치계획업종	89
(표4- 1) 경상남도 인구현황	95
(표4- 2) 경남의 지역총생산 (1995~2007)	95
(표4- 3) 지역내 총생산의 지역별 구성비(2007)	95
(표4- 4) 경남의 1인당 지역생산(2004)	96
(표4- 5) 경남의 지역총생산 구조 비중 추이	96
(표4- 6) 소득 및 지출 (2000)	97
(표4- 7) 경남의 수출현황	97
(표4- 8) 경남의 산업별 비중 특화도 추이	98
(표4- 9) 경남의 광공업 변화 추이	99
(표4-10) 경남 주요 시·군의 산업별 구성배분(2004년 GRDP기준)	108
(표4-11) 권역별 제조업 비중(2006년 기준)	109
(표4-12) 경남 제조업의 시·군별 입지계수(중사지수 기준)	111
(표5- 1) 산업입지 공급계획	128
(표5- 2) 경남의 업종별 생산액(1990~2007)	129
(표5- 3) 경남의 업종별 생산액 전망치(2008~2020년)	131
(표5- 4) 생산액(백만원)당 소요부지 면적원단위 추정	132
(표5- 5) 업종분류변환에 따른 원단위 조정	133
(표5- 6) 생산액당 부지원단위 방식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135
(표5- 7) 업종별 산업용지 증가추이	136
(표5- 8) 생산액당 부지원단위 방식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138
(표5- 9) 수요추정의 방법론별 차이값 및 결과값의 보정	139

(표5-10)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과정	141
(표5-11) 해외투자금액에 대한 매출액 현황	144
(표5-12) 산업용지 추정	145
(표5-13) 경남의 산업용지 공급계획	146
(표6- 1)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현황	150
(표6- 2) 경남의 산업단지 조성계획현황	152
(표6- 3) 공급계획 반영이 필요한 지역별 조성계획현황	157
(표6- 4) 지역별 공급비중	160
(표6- 5) 지역별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161
(표6- 6) 개발가능지 고려에 따른 공급계획량 산정	163
(표6- 7) 경상남도 산업용지 공급계획	164
(표7- 1) 시·도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188
(표7-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관련규정	190
(표7- 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주요내용	193
(표7- 4)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주요내용	194
(표7- 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95
(표7- 6) 「산업단지 관리지침」 주요내용	196
(표7- 7) 지원센터의 기능(제5조 제6항)	198
(표7- 8)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제6조 제2항)	198
(표7- 9)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8조 제1항)	199
(표7-10) 「산업단지 관리지침」 주요내용	205
(표7-11)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제도 개요	205
(표7-12)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내용	206
(표7-13) 적용범위	207
(표7-14) 지원대상	207
(표7-15)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자유도지구 지원도로 지원기준	208

그림목차

(그림1- 1) 연구의 개요	6
(그림1- 2) 연구진행 과정	8
(그림2- 2) 부지원단위 실적치에 대한 경향분석도 (1)	25
(그림2- 3) 부지원단위 실적치에 대한 경향분석도 (2)	25
(그림2- 4) 권역 구분도	26
(그림2- 5) 동부경남권역(김해·양산) 산업단지 현황도	28
(그림2- 6) 중부경남권역(창원·마산·진해) 산업단지 현황도	30
(그림2- 7) 중북부경남권역(창녕·밀양) 산업단지 현황도	32
(그림2- 8) 중부내륙경남권역(함안·의령) 산업단지 현황도	34
(그림2- 9) 서부경남권역(진주·사천) 산업단지 현황도	36
(그림2-10) 서남부경남권역(하동·산청) 산업단지 현황도	38
(그림2-11) 남부해양경남권역(거제·통영) 산업단지 현황도	40
(그림2-12) 서부해양경남권역(남해·고성) 산업단지 현황도	42
(그림2-13) 서북부경남(거창·함양·합천) 산업단지 현황도	44
(그림4- 1) 지역별 GRDP의 누적 성장률 지수 (전국=100)	104
(그림4- 2) 1인당 GRDP의 누적 성장률 지수 (전국=100)	105
(그림4- 3) 경남 지역의 주요 산업별 GRDP 누적 성장률 지수(전국=100)	107
(그림4- 4) 경상권의 주요 산업별 GRDP 누적 성장률 지수(전국=100)	107
(그림5- 1) 업종별 산업용지 증가추세 분석도	137
(그림7-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틀	183
(그림7- 2)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도	184
(그림7- 3)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종합계획도	186
(그림7- 4)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목적과 주요목표	189
(그림7- 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추진절차	203



연구 요약

1 서론

1. 배경

-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임. 산업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연차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장래 2020년도 목표로 도내 산업입지 수요 예측과 공급계획 수립과 개발예정지 조사연구용역 시행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므로써 중복계획 및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

2. 목적

- 본 과업은 경남의 산업입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토하여 이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입지수요 예측모형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으며, 아울러 지식기반시대의 입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분석 및 전망을 통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발전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

3.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전역(20개 시·군)

4.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8년
- 목표년도 : 2020년

5. 과업의 절차

- 최근 산업법이 개정(2008.12)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각 시·도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2 산업입지 추이

1. 산업현황

1) 경남지역 제조업 현황

- 경남 제조업을 업종별로 보면 생산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종사자수 모두가 기계산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 기계관련 업종에 대한 경제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61.4%가 고용되어 있어 기계산업이 경남의 주력산업임을 입증함
- 2004년 경남 기계산업의 사업체수는 4,825개로 전국 기계산업 사업체의 11.4%이고 종사자수는 18만 3천명으로 전국의 17.7%에 비해, 생산액은 48조 3천억원으로 전국의 22.5%를 차지함

2) 경남지역 변화 추이

- 기계산업이 경남지역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을 기준으로 사업체수의 56%, 종사자수의 61.4%, 생산액의 61.4%를 점유하여 지역 제조업이 기계산업에 특화되어 있음
- 경남은 전국 제조업 사업체의 7.6%, 고용자수의 10.6%, 생산액의 9.9%, 부가가치의 9.1%를 차지함에 따라 경남은 고용자수와 부가가치에 있어 동남권 전체 제조업의 절반의 비중을 가지고 있음

3) 경남의 산업단지 현황

① 계획입지

- 2008년 현재 경남의 산업단지는 7개의 국가산업단지와 24개의 일반산업단지, 65개의 농공단지로 이들 산업단지에서 약 164,500명의 고용과 약 207,500억원의 생산액, 약 13,433백만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그리고 현재 경남의 산업용지가 총 112.2km²로 파악되어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 예측하고 있는 2011년 경남의 산업입지 수요 68.6km²에 이미 육박하고 있음

② 개별입지

- 시군별 개별입지를 살펴보면 김해시가 12,137천m²로 가장 많은 개별공

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거제, 양산, 사천, 함안 순으로 나타났음

- 경남의 개별입지 공장의 총 면적은 약 40km²로 조사되어 이를 계획단지에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제2차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100km²의 약 40% 물량에 해당되어 계획보다 공급량을 확대시켜야 하는 실정임
- 현재 전국 평균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경남 지역은 미분양률이 0.86%에 불과하여 공장용지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입지의 급격한 증가 및 해외 이전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개별입지 증가의 억제를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계획입지의 공급확대 방안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무분별한 계획단지의 공급확대는 개별입지와 같은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권역별 계획단지의 집적화 방안이 요구됨
- 동남권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경남의 특화산업은 기계·장비·금속분야에서는 부산의 금속산업과 조선산업분야에서는 울산과 일부 경쟁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계획입지 현황> (단위:천 m²·%)

구분	단지수	지정 면적	분양대 상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국가	7	72,211	50,462	48,130	47,250	880
일반	24	30,418	21,332	9,571	9,538	33
도시 첨단	1	145	71	-	-	-
농공	65	9,590	7,615	6,067	5,978	89
합계	97	112,364	79,480	63,768	62,766	1,002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개별입지 현황> (단위:천 m²)

9대 중핵권	개별입지		
	면적	공장수	휴업공장수
동부경남권역	16,330	5,558	100
중부경남권역	3,007	1,321	30
중북부경남권역	2,385	489	10
중부내륙경남권역	3,557	965	13
서부경남권역	4,587	1,165	3
서남부경남권역	817	185	4
남부해양경남권역	7,034	297	-
서부해양경남권역	1,047	179	5
서북부경남권역	1,223	353	1
합 계	39,987	10,512	166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2. 권역별 산업용지 현황

- 경남 전체지역을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한 9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계획 및 개발 입지량을 조사하여 분석함
- 지자체별로 수집한 산업용지는 112,841천㎡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112,367천㎡보다 474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총 개발면적의 57.2%가 조성완료된 것으로 파악되며 미분양률은 5.3%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미분양률 0.9%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남의 산업용지 현황>

(단위:천㎡)

단지명	개소	지정 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시	53	94,630	66,435	58,250	57,370	880
군	44	17,734	13,045	5,518	5,396	122
합계	97	112,364	79,480	63,768	62,766	1,002
동부경남권역		6,840	4,973	3,111	3,111	-
중부경남권역		58,432	41,464	39,319	38,439	880
중북부 경남권역		2,824	2,059	752	752	-
중부내륙경남권역		4,817	3,578	3,575	3,476	99
서부경남권역		10,807	7,674	5,811	5,811	-
서남부 경남권역		7,837	5,803	309	309	-
남부해양경남권역		16,921	11,123	9,414	9,414	-
서부해양경남권역		673	535	317	317	-
서북부 경남권역		3,213	2,271	1,160	1,137	23
합 계		112,364	79,480	63,768	62,766	1,002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3 산업입지정책 및 공급규모 변화 추이

1. 시기별 산업입지 정책

<우리나라 산업입지 정책의 변화과정>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정책대상	◦계획입지 개발시도	◦수도권내 산업 집중	◦지역적 불균형 심화	◦개별입지 증대 ◦첨단산업입지 공급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 ◦기존단지의 경쟁력 제고
정책기조	◦수출위주 경공업의 입지	◦수도권 억제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 내실화 ◦농공단지 개발	◦입지유형의 다양화 ◦입지규제 완화 ◦구조조정 촉진	◦전문화된 집적 지구 ◦지식기반경제구축지원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추진
관련법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지방공업개발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진흥법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산업입지법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개정 ◦산업기술단지지원 특별법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 ◦문화산업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고	◦울산공업센터 조성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방공업개발장려 지구 ◦동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수출자유지역개발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개발 ◦아파트형 공장 조성	◦산업단지 명칭 변경 ◦개발절차 간소화 ◦개별입지 증대 ◦테크노파크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클러스터시범단지

2. 산업입지 공급변화 추이

- 2008년 9월 기준 전국 35개의 국가산업단지¹⁾와 262개의 일반산업단지·4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363개의 농공단지가 지정(산업입지정보시스템)
- 동남권에는 부산1개·울산2개·경남7개의 10개 단지 154,700천㎡가 개발(전체 국가산업단지 면적의 18.1%)되었고, 수도권에는 7개 단지 266,571천㎡개발됨(전체 면적의 31.1%)
- 262개의 일반산업단지 중 수도권(경기도 포함)에 82개 단지에 36,323천㎡가 개발(전체 일반산업단지 중 약 12.2%), 동남권에는 41개(부산 10·울산7·경남24)가 지정되어 19.2%를 점유하고 있음
- 국가일반산업단지의 전체면적 중에서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282,153천㎡ 24.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남이

1)국가산업단지 중 제조시설이 없는 단지는 제외 : 고정국가·대죽자원비축기지·월성원전·지세포자원비축기지 등 총 5개 단지.

213,028천㎡ 18.4%, 경남이 102,773천㎡ 8.9%의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북·전북·울산·충남·대전의 순을 보임

- 분양률의 경우 국가일반산업단지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97.5% 정도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며 수도권·동남권에 입지한 산업단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률 높음
- 전국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502천㎡가 지정되었으며 강원도의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가 196천㎡, 경상남도의 경남지능형홈산업도시첨단 산업단지가 145천㎡ 순으로 산업용지가 입지하고 있음
- 2008년 9월 현재 전국 363개 57,374천㎡가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산업단지 전체면적에서 약 4.7%에 불과함
- 이들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충남지역(75개)이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으면서 다음으로 경남(65개)·경북(55개)·전남(43개)·충북(41개)의 순으로 입지하고 있음
- 현재 국가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7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급격히 감소함

3. 산업입지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1) 산업입지 정책 문제점

- 공급자 위주(공공부문 주도)의 산업입지 공급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지수요 대응미흡
- 입지의 고비용구조와 지원미흡
- 산업입지 공급제도의 복잡성

2) 산업입지 제도 문제점

① 계획입지제도의 문제점

- 복합단지유형으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정책, 입지개발, 공장설립 등이 긴밀하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복잡다기한 제도와 관련업무의 산재가 문제점임. 그리고 다른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미비로 산업단지와 연계된 기반시설의 개발이 부진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음

② 개별입지제도의 문제점

- 공장설립절차가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관련업무 및 제도가 다원화되어 있음. 개별공장에 적용할 환경기준이 각종 환경관련법에 분산되어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따름. 또한 개별입지를 집단화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집단화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기존 집단화된 개별입지의 경우 환경, 난개발 등의 문제가 있으나 관리방안이 미흡하여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③ 산업입지 관련 제도의 문제점 종합

- 산업입지 관련 개발절차에서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양한 제도의 연계부족, 영향평가제도의 복잡 및 장기간 소요 등이며, 개발단계에서는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위주의 개발방식, 단지의 획일적인 유형화 및 대규모 획지분할, 지원제도의 미흡 등임. 관리부문에서는 높은 분양가, 선분양-후개발방식의 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증가, 비경쟁적인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임

4. 산업입지 활성화 사례

1) 해외 산업입지 활성화 사례

① 일본

□ 오사시의 도시산업단지(CIT: City Industrial Town)

- 오사카의 경우 주거지와 공업지역의 인접 및 혼재로 인한 환경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하였고, 공장이전부지의 재활용 및 재개발에 효과적이었음

□ 도쿄시의 기타 가미야지구

- 가미야지구는 196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공장들이 이전함에 따라 이전적지의 발생,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노후가옥의 밀집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정비사업과 단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파급효과가 주변 건물의 개선으로 나타나도록 하게 한 사례임
- 또한 이전적지를 산업용지를 활용하도록 하면서 채택한 보상방법은 아파트 부지와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나누어 지역권을 설정하고, 아파트형공장 면적을 뺀 잔여 용지를 아파트 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권의 이양임

② 영국

□ 버밍햄의 공업개선지구(Industrial Improvement Area)

- 지역공업중심지등의 쇠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중심으로서 입지중요성을 인식함으로서 당해지역의 기업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그 결과로서 주변지역의 투자동기를 유도함

□ 런던의 도크랜드 지구

- 1960년대 이후 선박의 대체교통수단인 항공, 자동차 등의 기술 발달로 해상운송사업이 위축되고 영국경제가 쇠퇴하면서 항만시설이 유희화됨에 따라 도심지역의 업무용건물 부족문제와 과밀화 해소를 목적으로 도크랜드 항만지구에 사무실, 주택, 상업, 어뮤즈먼트 시설, 신교통, 통신시스템 등의 기능을 정비하여 공급하는 재개발계획이 수립됨

③ 싱가포르 과학단지(Singapore Science Park)

-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룽도시공사가 조성한 과학단지이며 공공에서 산업단지 개발 및 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산업단지 재개발정책기구임
- 싱가포르 과학단지의 혁신환경 창출이 부진한 원인으로 싱가포르 사회의 환경 및 경제 규모와 관계가 있음. 싱가포르 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기업을 창업하는 문화와 기업가 정신의 배양이 어려우며, 전반적인 기술 혁신의 확산과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주로 연구개발보다는 마케팅, 판매, 시장조사, 기술정보 수집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2) 국내 산업입지 활성화 사례

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 기존 '구로공단'으로 알려진 곳으로 총 198만㎡ 규모로 조성된 국내 산업단지 제1호임
- 성공요인은 규제완화, 입지적 비교우위, 네트워크 효과라 볼 수 있음

② 대덕연구단지

- 서울 홍릉과학단지의 공간 부족 문제 해결과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연구·교육·주거시설 등을 포함한 상주인구 5만 명의 연구학원도시 건설계획을 수행함
- 대덕연구단지에서 혁신환경이 조기에 창출되지 않았던 것은 연구단지 자체의 공간 구성 방식과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인근지역의 산업구조와의 연계성 확보에 실패, 대덕연구단지만의 특화 분야 창출에 실패, 경직된 공간배치 등)

5. 첨단산업단지 사례

1) 외국 첨단산업단지 사례

① 미국 : 리서치트라이앵글(RTP: Research Triangle Park)

- 노스캐롤라이나 주위 수도인 Raleigh, Chapel, Cary 등 중소도시가 모여 인구 90만 명의 대도시권을 구성하고 있음
- 세 도시에는 2개 주립대학(UNC, NCSU)과 1개 사립대(Duke)가 자리 잡고 있어 이 도시들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중앙부에 6,900에이커(27km²) 규모의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105개의 연구소 및 기업이 입주, 약 42,000명이 근무함
- RTP를 실리콘밸리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면 혁신환경의 다양성과 역동성 측면에서 아직도 부족함. 그럼에도 RTP 개발모델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는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협력에 의한 계획적 노력으로 첨단기술산업의 불모지였던 낙후지역에서 21세기 첨단산업을 주도하는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였기 때문임

② 영국 : 케임브리지 과학단지

- 양질의 저렴한 토지를 제공함. 트리니티 대학소유의 토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중소기업체에 분양하였으며, 위치적으로 탁월한 토지환경을 갖고 있음

- 산학협동과 기업간 접촉이 용이함.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급두뇌와 R&D가 산학협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지역 내 첨단기술업체가 이미 집적되어 있었음
- 지역특유의 명성을 들 수 있음. 트리니티 대학이 배출한 과학자들(뉴턴, 다윈 등)의 명성이 높았으며, 소규모 자본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혁신 및 기술경영의 정보교환이 수월하였음

③ 프랑스 : 소피아 앙티폴리스

- 주요 성공요인은 천혜의 주거환경, 탁월한 교통·통신시설의 요충지,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시설과 생산기능의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위한 민간·공공기관의 설립을 들 수 있음

④ 일본 :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 가나가와현 지사인 K.Nafasu가 1980년부터 두뇌센터의 필요성을 지역 사회에 확산시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나가와현의 특성에 적합한 도시형 사이언스파크를 구성하였으며, 지역금융권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하는데는 성공하였음
- 연구개발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건물)임대업을 병행함으로써 인큐베이터에 투입되는 자본투자를 어느 정도 보전하고 있음

⑤ 대만 : 신죽과학단지

- 중앙정부주도로 첨단산업단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표적인 사례로 신죽과학단지는 실리콘밸리의 모방을 통해 첨단두뇌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대만의 산업구조조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하에 건설된 것으로,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창작품이라 할 수 있음
- 지나친 정부주도로 개인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시너지를 내는 본래 첨단산업단지의 긍정적인 면은 부족한 것을 지적되고 있음

2) 국내 첨단산업단지 사례

① 과학연구단지

- 송도 테크노파크, 대구·경북 테크노파크,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원주 의료전자기술연구집단지, 안산 테크노파크, 전북지역대학교연합테크노파

크, 서울 기술연구집단지, 충북 테크노파크, 부산 테크노파크, 대전 테크노파크, 충남 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여기에 속함

② 협의의 첨단산업단지

- 산·학·연 협동을 목적으로 조성된 단지로 여기에는 창업보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함께 첨단제품의 생산활동을 행함으로써, 연구성과를 생산활동에 연계하는데 주력하는 특징을 볼 수 있음. 대표적 사례 춘천 멀티미디어밸리를 들 수 있음

③ 첨단산업도시

- 산·학·연 협력에 기초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산업생산의 활성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기술인력을 유지할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가해서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는 경우를 가리킴
- 대덕연구단지, 포항 테크노폴리스, 광주·오창·강릉첨단산업단지, 인천의 미디어밸리 등을 들 수 있음

4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과 과제

1. 산업입지 환경의 변화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활동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음. 또한 기술의 고도화, 가속화, 융합화가 급진전하고 있고,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세분화 되고 있음. 대도시 제조업의 특성은 연성화와 복합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2. 산업입지 여건변화와 주요과제

- 산업단지의 복합기능화
- 지식산업단지 및 신산업단지화
- 산업단지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강화
- 산업집적을 촉진하는 전문단지화

3. 경남지역 산업입지의 문제점

- 자본재 생산부문의 취약성
- 첨단(기술)산업의 상대적 열세
- 농림·수산업 장애의 불투명성
- 지식기반산업의 불투명성
- 지역금융의 취약성
- 지역혁신체계의 미흡

4.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산업입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도출
- 지식기반산업의 합리적 입지공급
-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및 임대공장 공급확대
- 지역의 자율적인 산업단지 육성과 책임경영 강화
- 산업입지 개발의 지원확대
-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개발

- 기존 산업단지의 계획적 재정비
- 국가의 산업단지개발에서의 역할 재정립
- 외국인 투자기업의 효과적 유치를 위한 입지공급
- 해외직접투자 증대에 따른 산업입지의 대응

5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1. 산업입지 수요추정 및 전망

1) 생산액당 부지원단위 방식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 지수평활법에 의해 2009~2020년까지의 생산액을 추정하고, 각각의 업종에 대해 전항에서 예측한 생산액당 부지원단위를 곱하여 소요 산업 용지를 추정함
- 추정결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부지생산성향상으로 부지면적 원단위 값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약하나마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 방법은 신규산업의 생성과 경제침체에 따른 가동율 저하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음

<생산액당 부지원단위 방식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단위:km²)

업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식료품	5.12	5.3	5.5	5.6	5.8	6.0	6.2	6.3	6.5	6.7	6.8	7.0	7.2
섬유의복	1.2	1.1	1.1	1.0	1.0	1.0	0.9	0.9	0.8	0.8	0.8	0.7	0.7
목재종이	2.6	2.7	2.8	3.0	3.1	3.3	3.4	3.5	3.7	3.8	4.0	4.1	4.3
석유화학	3.0	2.9	2.8	2.7	2.6	2.5	2.4	2.4	2.3	2.2	2.2	2.1	2.1
비금속	4.8	4.8	4.8	4.9	4.9	4.9	5.0	5.0	5.0	5.0	5.1	5.1	5.1
철강	4.5	4.3	4.2	4.0	3.8	3.7	3.6	3.4	3.3	3.2	3.0	2.9	2.8
기계	38.2	38.9	39.7	40.5	41.2	42.0	42.8	43.5	44.4	45.2	46.0	47.0	47.8
전기전자	2.1	2.0	2.0	2.0	1.9	1.9	1.9	1.9	1.9	1.9	1.9	1.8	1.8
운송장비	11.0	10.7	10.5	10.3	10.1	9.9	9.8	9.6	9.4	9.3	9.2	9.0	8.9
기타	0.5	0.5	0.5	0.6	0.6	0.6	0.6	0.6	0.6	0.6	0.7	0.7	0.7
계	72.8	73.2	73.9	74.5	75.0	75.8	76.5	77.1	78.0	78.8	79.5	80.5	81.4

2) 과거추세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 과거(1998년~2003년)추세의 산업 용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광공업 통계 자료」를 활용, 업종별 산업용지를 추출한 후 추세연장법(extrapolation)을 이용하여 2008~2020년까지의 산업용지의 면적을 추정하였음
- 경남의 업종별 구성에 있어 22개 업종을 10개 업종으로 변환하여 살펴보면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이 약 30~35%, 운송장비제조업이 25~30%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 두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도의 경우 조립금속이 16.28km², 운송장비가 16.80km²에 달하고 전체면적(58.51km²) 대비 약 56.5%로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1998년도를 기준으로 업종별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장래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연장 추계해본 결과 경남지역의 산업용지 총 면적은 약 81.13km²로 추정됨
- 경남지역의 특화 업종인 조립금속 및 전기·전자 업종의 변화를 살펴보면 조립금속의 경우 전체의 23%, 전기·전자의 경우 23.8%로 추정되어 과거 년도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됨
- 반면에 석유화학, 전기·전자 제조업이 2003년 현재 8.6%, 4.2%에서 2020년에 13.1%, 5.3%로 추정되어 타 업종에 비하여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생산액당 부지원단위 방식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단위:km²)

업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식료품	5.38	5.53	5.68	5.83	5.98	6.13	6.28	6.43	6.58	6.73	6.88	7.03	7.18
섬유의복	2.84	2.90	2.95	3.01	3.06	3.12	3.17	3.23	3.29	3.34	3.40	3.45	3.51
목재종이	2.27	2.36	2.45	2.54	2.63	2.72	2.81	2.90	2.99	3.08	3.17	3.26	3.35
석유화학	6.71	7.04	7.36	7.68	8.01	8.33	8.65	8.98	9.30	9.62	9.95	10.27	10.59
비금속	5.53	5.63	5.73	5.84	5.94	6.04	6.15	6.25	6.35	6.45	6.56	6.66	6.76
철강	4.36	4.48	4.60	4.72	4.83	4.95	5.07	5.18	5.30	5.42	5.54	5.65	5.77
기계	17.85	17.93	18.01	18.09	18.17	18.25	18.33	18.41	18.49	18.57	18.65	18.73	18.81
전기전자	3.06	3.16	3.27	3.37	3.48	3.58	3.69	3.79	3.90	4.00	4.10	4.21	4.31
운송장비	17.89	18.11	18.31	18.50	18.68	18.84	19.00	19.15	19.29	19.43	19.56	19.69	19.81
기타	0.67	0.70	0.73	0.76	0.79	0.82	0.85	0.88	0.91	0.94	0.97	1.00	1.03
계	66.57	67.84	69.09	70.33	71.57	72.79	74.00	75.20	76.40	77.59	78.78	79.96	81.13

3) 경남의 산업용지 수요추정 및 결과값 보정

- 각각의 수요추정 방법론에 의한 산업용지 수요추정 면적치는 2009년 추정면적의 경우 생산액당 부지원단위 방법과 과거추세에 의한 방법을 비교해 볼 때 유사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생산액당 부지원단위법이 약 5.38km² 더 높게 산출됨. 따라서 2009년 산업용지 수요추정면적 및 2009~2020년의 산업용지 순수요 면적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2009년 결정값의 평균값을 두고 2020년의 추정방법에 따른 결과값과의 차이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정하였음
- 추정결과 2009년 산업용지 수요추정면적은 70.53km²로 산출되었으며, 2020년 수요추정면적은 81.13km²~81.43km², 순수요 면적은 10.6km²~10.9km²로 추정됨

<수요추정의 방법론별 차이값 및 결과값의 보정>

방법론	2009년 추정 면적(km ²)	2020년 추정 면적(km ²)	순수요 면적(km ²)
생산액당 부지원단위법	73.22	81.43	(+)8.21
과거추세에 의한 방법	67.84	81.13	(+)13.29
평균값	70.53	81.28	(+)10.75
최종 보정값	70.53	81.13~81.43	10.6~10.9

2.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 2008년 현재 앞에서 설명한 산출과정을 적용해 보았을 때 2009~2020년 산업용지 순수요는 10.6~10.9km²로 분석되었으며, 2020년까지 총 공급규모는 14.69~15.04km²가 예상되어, 2020년 산업용지 공급규모는 85.22~85.57km²가 예상되어짐

<경남의 산업용지 공급계획>

(단위 : km²)

	현황 (A)	순수요 (B)	추가수요 (C)					총공급 (D)			2020년 면적 (E)
		2009년 ~2020년	계	선공급 (+)	재개발 재정비 (+)	미분양 (-)	해외 이전 (-)	계	계획 입지	개별 입지	
경남	70.53	10.60 ~10.90	4.09 ~4.14	1.86 ~1.91	2.75	0.36	0.16	14.69 ~15.04	10.28 ~10.53	4.41 ~4.51	85.22 ~85.57

주) (A)는 2009년 산업용지 추계면적임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은 산업입지 공급계획수립지침에 의해 70:30으로 산정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성된 산업용지 중 순수산업시설에 해당하는 부지는 보통 60% 정도로 나머지 40%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는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경남의 경우 산업시설 부지가 65% 정도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기계,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 관련 산업용지가 많은 경남의 특성으로 파악되나 세계적인 추세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종사자들의 욕구 증가를 고려할 때 공공용지 비율이 많이 증가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6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1. 지역별·유형 공급계획

- 제5장에서 산정된 산업용지의 공급규모를 순증가분의 최소값으로 설정하고 본 공급규모에 각 지역별 조성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급량을 합한 값을 최대값으로 설정하여 순증가분을 계획함
- 해당지역내 공급량을 도내 전체공급규모에 2008년 지역별 공급비중을 고려하여 배분함
- 지역별 개별입지량은 지역별 공급량 중 산업입지 지침에 의거 30%로 강제 배분하고 이외의 양을 계획입지에 수용토록 계획함
- 특히, 김해시와 같이 개별입지량이 너무 방대하여 순계획단지에 입지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준산업단지제도를 활용하여 공급량의 70%이상이 계획입지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장래(2020년) 각 지역별 공급량을 배분한 결과 창원시가 29.90~30.19㎢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으로 김해시, 거제시가 각 8.42~12.78㎢, 10.97~11.70㎢로 나타났으며, 마산시의 경우, 창포, 난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공급량이 1.62㎢~10.2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입지에 있어 수위도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2009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는 마산시, 창원군, 밀양시, 함천군 등이 해당할 것으로 추정됨

<지역별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단위:km²)

구 분		2009년	순수요						2020년		
			최소치			최대치					
권역	시군		계획입지	개별입지	합계	계획입지	개별입지	합계			
동부경남	김해시	6.97	1.02	0.44	1.45	4.06	1.74	5.81	8.42	~	12.78
	양산시	3.72	0.54	0.23	0.78	0.79	0.34	1.12	4.50	~	4.85
중부경남	창원시	24.75	3.61	1.55	5.15	3.81	1.63	5.44	29.90	~	30.19
	마산시	1.34	0.20	0.08	0.28	6.21	2.66	8.88	1.62	~	10.22
	진해시	2.26	0.33	0.14	0.47	0.88	0.38	1.26	2.73	~	3.52
중북부 경남	창녕군	0.72	0.11	0.05	0.15	0.38	0.16	0.55	0.87	~	1.27
	밀양시	1.32	0.19	0.08	0.27	2.35	1.01	3.36	1.59	~	4.68
중부내륙 경남	함안군	4.06	0.59	0.25	0.84	1.90	0.82	2.72	4.90	~	6.78
	의령군	0.55	0.08	0.03	0.11	0.08	0.03	0.11	0.66	~	0.66
서부경남	진주시	2.85	0.42	0.18	0.59	0.42	0.18	0.59	3.45	~	3.45
	사천시	3.96	0.58	0.25	0.82	2.34	1.00	3.34	4.78	~	7.30
서남부 경남	하동군	3.71	0.54	0.23	0.77	2.96	1.27	4.23	4.48	~	7.93
	산청군	0.42	0.06	0.03	0.09	0.22	0.09	0.31	0.51	~	0.74
남부해양 경남	거제시	9.08	1.32	0.57	1.89	1.83	0.79	2.62	10.97	~	11.70
	통영시	1.97	0.29	0.12	0.41	1.60	0.69	2.29	2.39	~	4.26
서부해양 경남	남해군	0.09	0.01	0.01	0.02	0.88	0.38	1.26	0.10	~	1.35
	고성군	0.71	0.10	0.04	0.15	1.93	0.83	2.75	0.86	~	3.46
서북부 경남	거창군	0.74	0.11	0.05	0.15	1.53	0.66	2.19	0.89	~	2.92
	함양군	0.93	0.14	0.06	0.19	0.63	0.27	0.90	1.13	~	1.83
	합천군	0.38	0.06	0.02	0.08	0.56	0.24	0.80	0.46	~	1.18
합계		70.53	10.28	4.41	14.69	35.37	15.16	50.53	85.22	~	121.06

주1) 2009년 자료는 2008년 자료를 기초로 한 추정치임

주2) 순증가분의 최대치는 수요량의 증가를 기초로한 공급량(최소치)에서 각 지역별 조성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급량을 더하여 산출

-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조성계획뿐 아니라 개발가용지도 고려하여 총공급량을 산정함. 최종적으로 경상남도 각 시군에 대한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가능지를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수립
- 실질적으로 산업용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 및 시가화예정구역으로, 그 중 시가화예정구역은 2020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개발가용지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7 경상남도 통계연보」와 각 시군별 내부자료 상의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의 면적을 이용하여 보정
- 그 결과 총 약 11km²정도가 공급계획안에 추가산정 되었음. 권역별로는 서북부경남권역이 2.77km²로 가장 많은 면적이 추가 산정되었으며, 다음으로 서남부경남권역 1.87km², 중북부경남권역 1.52km², 중부내륙경남권역이 1.13km², 서부해양경남권역 1.07km², 서부경남권역이 1.03km², 동부경남권역이 0.64km², 중부경남권역 0.5km², 남부해양경남권역 0.45km²이 추가 산정됨

2.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 경남의 산업용지 순수요량은 2009~2020년까지 14.69km²~50.53km²로 2020년에는 85.22km²~121.06km²가 될 것이며, 이에 개발가용지를 고려하면 2020년 산업용지는 최대 132.02km²가 될 것임
- 동부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2.23km²~7.57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12.92km²~18.26km²가 될 것이며, 중부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5.9km²~16.07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34.25km²~44.42km²가 될 것임
- 중북부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0.42km²~5.43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2.46km²~7.47km²가 될 것이며, 중부내륙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0.95km²~3.96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5.56km²~8.57km²가 될 것임
- 서부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1.41km²~4.96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8.23km²~11.78km²가 될 것이며, 서남부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0.86km²~6.41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4.99km²~10.54km²가 될 것임

- 남부해양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2.30km²~5.36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13.36km²~16.41km²가 될 것이며, 서부해양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0.17km²~5.08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0.96km²~5.88km²가 될 것임. 서북부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0.42km²~6.66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2.48km²~8.7km²가 될 것임

<경상남도 산업용지 공급계획>

(단위:km²·천 m²)

구 분		2009년	순수요		2020년(A)	조성 계획	계획관리 지역/조성 계획	채택량	개발 가용지	2020년(B)	
			최소치	최대치							
권역	시군		합계	합계							
동부경남	김해시	6.97	1.45	5.81	8.42 ~ 12.78	4.35	0.10	4.80	0.44	8.42 ~ 13.22	
	양산시	3.72	0.78	1.12	4.50 ~ 4.85	0.35	0.56	0.54	0.19	4.50 ~ 5.04	
	소계	10.69	2.23	6.93	12.92 17.63	4.7	-	5.34	0.63	12.92 18.26	
중부경남	창원시	24.75	5.15	5.44	29.90 ~ 30.19	0.29	0.92	0.55	0.26	29.90 ~ 30.45	
	마산시	1.34	0.28	8.88	1.62 ~ 10.22	8.60	0.02	8.80	0.20	1.62 ~ 10.42	
	진해시	2.26	0.47	1.26	2.73 ~ 3.52	0.79	0.04	0.82	0.03	2.73 ~ 3.55	
	소계	28.35	5.9	15.58	34.25 43.93	9.68	-	10.17	0.49	34.25 44.42	
중북부 경남	창녕군	0.72	0.15	0.55	0.87 ~ 1.27	0.40	1.87	1.14	0.74	0.87 ~ 2.01	
	밀양시	1.32	0.27	3.36	1.59 ~ 4.68	3.09	0.25	3.86	0.78	1.59 ~ 5.46	
	소계	2.04	0.42	3.91	2.46 5.95	3.49	-	5	1.52	2.46 7.47	
중부내륙 경남	함안군	4.06	0.84	2.72	4.90 ~ 6.78	1.88	0.35	2.53	0.65	4.90 ~ 7.43	
	의령군	0.55	0.11	0.11	0.66 ~ 0.66	-	0.00	0.48	0.48	0.66 ~ 1.14	
	소계	4.61	0.95	2.83	5.56 7.44	1.88	-	3.01	1.13	5.56 8.57	
서부경남	진주시	2.85	0.59	0.59	3.45 ~ 3.45	-	0.00	0.54	0.54	3.45 ~ 3.99	
	사천시	3.96	0.82	3.34	4.78 ~ 7.30	2.52	0.19	3.00	0.49	4.78 ~ 7.79	
	소계	6.81	1.41	3.93	8.23 10.75	2.52	-	3.54	1.03	8.23 11.78	
서남부 경남	하동군	3.71	0.77	4.23	4.48 ~ 7.93	3.46	0.26	4.35	0.89	4.48 ~ 8.82	
	산청군	0.42	0.09	0.31	0.51 ~ 0.74	0.23	4.33	1.20	0.98	0.51 ~ 1.72	
	소계	4.13	0.86	4.54	4.99 8.67	3.69	-	5.55	1.87	4.99 10.54	
남부해양 경남	거제시	9.08	1.89	2.62	10.97 ~ 11.70	0.73	0.41	1.02	0.30	10.97 ~ 12.00	
	통영시	1.97	0.41	2.29	2.39 ~ 4.26	1.88	0.08	2.03	0.15	2.39 ~ 4.41	
	소계	11.05	2.3	4.91	13.36 15.96	2.61	-	3.05	0.45	13.36 16.41	
서부해양 경남	남해군	0.09	0.02	1.26	0.10 ~ 1.35	1.24	0.40	1.74	0.49	0.10 ~ 1.84	
	고성군	0.71	0.15	2.75	0.86 ~ 3.46	2.61	0.22	3.18	0.58	0.86 ~ 4.04	
	소계	0.8	0.17	4.01	0.96 4.81	3.85	-	4.92	1.07	0.96 5.88	
서북부 경남	거창군	0.74	0.15	2.19	0.89 ~ 2.92	2.03	0.41	2.87	0.84	0.89 ~ 3.76	
	함양군	0.93	0.19	0.90	1.13 ~ 1.83	0.71	0.93	1.37	0.66	1.13 ~ 2.49	
	합천군	0.38	0.08	0.80	0.46 ~ 1.18	0.72	1.77	1.99	1.27	0.46 ~ 2.45	
	소계	2.05	0.42	3.89	2.48 5.93	3.46	-	6.23	2.77	2.48 8.7	
합계		70.53	14.69	50.53	85.22 ~ 121.06	35.84	-	46.81	10.96	85.22 ~ 132.02	

주1) 2009년 자료는 2008년 자료를 기초로 한 추정치임

주2) 순수요의 최대치는 수요량의 증가를 기초로 한 공급량(최소치)에서 각 지역별 조성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급량을 더하여 산출

(A) 조성계획부분만을 반영한 2020년 산업용지량

(B) 조성계획과 개발가용지를 분석하여 반영한 2020년 산업용지량
2020년(A) 최대치 + 개발가용지 = 2020년(B) 최대치

7 산업입지 관련계획 및 법률

1.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안)

- 산업집적활성화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도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2. 산업용지 관련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우리 국토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2)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광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천적 계획으로, 도내 20개 시·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을 가짐

3) 산업입지 공급계획

<산업입지 공급계획>

구분	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3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계획기간	1992~1996(5년간), 2001(10년)	2002~2011(10년간)	2007~2017(11년간)
계획의 주요내용	공급규모 : 5년간('92~'96) : 49.3km ² 공급 계획입지 비율 : '96년 61.4%, 2001년 63.1%로 확대 국가공단 공급비율 : '96년 60%, 2001년 58.2% 배정 지역별 배분비율 : 전반기 공급량의 56%인 34.0km ² 를 충남북 및 호남지역에 공급	공급규모 : 106.3km ² ~120.0km ² 공급 계획입지 비율 : 수도권 65%, 울산 80%, 기타 대도시 65%, 도지역 75%로 산정 권역별 공급규모는 수도권 21%인 22.8km ² ~24.4km ² , 비수도권이 79%인 83.5km ² ~95.6km ² 공급	공급규모 : 108.6km ² ~123.2km ² 계획입지 비율 : 수도권 60%, 울산 80%, 기타 대도시 60%, 도지역 70%로 산정 수도권은 25.9~26.5km ² 24.4~26.8%

3. 산업용지 관련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관리, 개별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008.9.6)

- 최근 조선·자동차산업 등의 수출호조, 중국진출기업의 회귀수요 등의 영향으로 산업용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인·허가에 2~4년이 소요되는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적용됨

5.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 지원제도

-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제도」에 따르면 개발비용의 보조 및 기반시설 설치 지원,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산업단지 개발자금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에 따른 지원내용으로는 보조의 내용 및 비용 부담, 기반시설 우선공급 등에 대한 것임

8 산업단지 개발의 기대효과

1. 제도개선 추진방안

1) 수요자 중심의 산업용지 개발

- ① 민간 산업입지 개발의 적극지원
- ② 실수요기업의 산업용지 지정요청제 도입
- ③ 공장입지유도지구제도 활성화

④ 준산업단지 제도 도입

⑤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화

2. 산업용지 개발의 기대효과

- 산업용지의 개발은 필요한 공급량을 필요한 시기에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고려한 용지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함
 - －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성장을 견인
 - － 환경에 대한 악 영향의 최소화
 - － 지역관리자의 경제적 관리가 가능
 - － 경제적 정(+)의 효과 발생



제1장 서론

- ①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② 과업의 범위
- ③ 과업수행방법

제1장 서론

1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임. 산업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연차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장래 2020년도 목표로 도내 산업입지 수요 예측과 공급계획 수립과 개발예정지 조사·연구용역 시행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므로써 중복계획 및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
- 제2차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에서는 연평균 약 10km²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 이미 공급계획량을 초과한 실정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의 미분양률이 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경남지역은 0.86%에 불과하여 공장용지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어 개별입지의 급격한 증가와 해외 이전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음
- 이에 개별입지 증가의 억제를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계획입지의 공급확대 방안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계획단지의 공급확대 또한 무분별한 산업입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체계적인 공급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 본 과업은 경남의 산업입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토하여 이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입지수요 예측모형을 정립하고, 효과적인 공급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아울러 지식기반시대의 입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분석 및 전망을 통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발전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

2.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지위와 성격

- 산업집적활성화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이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시·도 산업여건 및 수요,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며 수요자 중심의 계획임. 필요한 경우 시·군별로 수립하거나 지역권역별로 작성 가능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입지 수요와 공급실적을 검토하여 5년을 주기로 검토·보완하는 연동계획임
-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입지분야의 전략계획으로 산업정책, 입지정책, 기반시설 공급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임

2 과업의 범위

- 경남도내 관련계획과 시·군별 도시계획 및 개별입지 계획에 대한 조사내용을 반영하고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지역의 산업단지 집적화 가능여부 등도 조사연구하여 실질적으로 시·군의 산업용지 수급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의 범위를 설정함

1.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전역
 - 10개 시(창원·마산·진해·거제·통영·사천·진주·양산·김해·밀양)
 - 10개 군(함안·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08년 목표년도 : 2020년

3. 내용적 범위

-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별 및 입지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주요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재정비에 관한 사항
- 기업들의 입지 관련 각종 지표들의 구조변화
- 지역별 산업용지 공급계획 분석
- 산업용지 수요추정 및 산업용지 수급안정화 방안

<참 고>

법 령	내 용
산업법 제5조의2 (산업입지공급 계획 등)	<p>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산정방법 3.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공급전망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p>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제5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⑤ 시·도지사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⑦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의 작성 및 제5항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4. 과업의 절차

- 기존의 산업법(2008.3)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공급계획을 확정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공급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했음
- 그러나 최근 산업법이 개정(2008.12)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한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제도가 폐지됨
- 따라서 각 시·도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산업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한 즉시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그림1-1) 연구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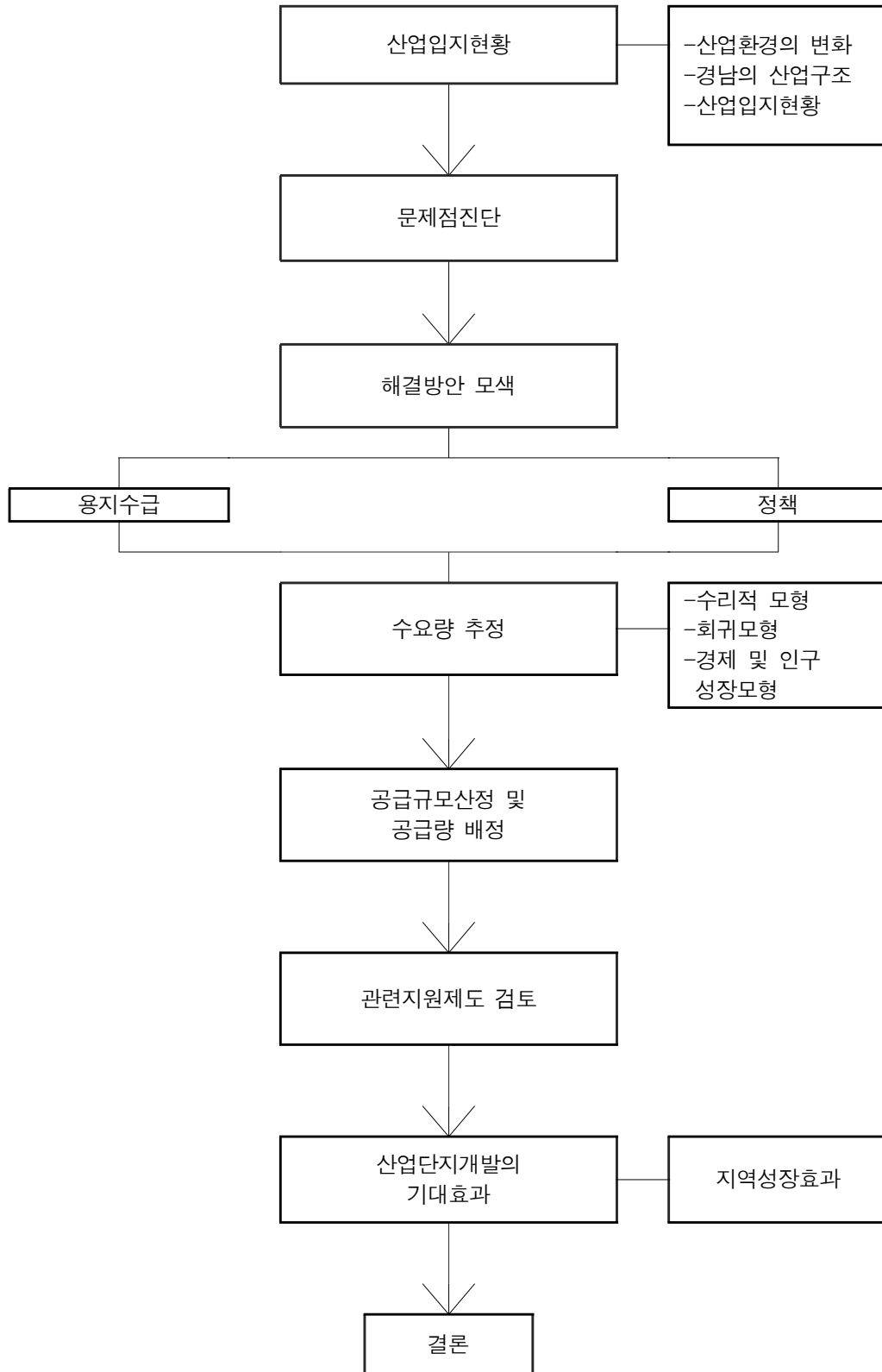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내 용
배경	<p>⇒ -산업입지 공급계획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법)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산업법 시행령 제5조의 2는 10년마다 연차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p> <p>-산업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규정(산업입지공급계획 등)에 따라 장래 2020년도 목표로 도내 산업입지 수요 예측과 공급계획 수립과 개발예정지 조사·연구용역 시행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중복계획 및 과잉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p>
목적	<p>⇒ -지식기반시대의 입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산업용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발전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함</p>
방법	<p>⇒ -산업입지 수요 및 공급과 관련한 문헌자료 이용</p> <p>-수리적 방법론 등을 이용한 수요 추정 및 공급규모 제시</p> <p>-기존 자료 등을 활용한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작성</p>
범위	<p>⇒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 : 2008년 ·목표 연도 : 2020년</p> <p>-공간적 범위 ·경상남도 전역</p> <p>-내용적 범위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지역별·입지유형별 산업용지 공급계획안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사항 ·산업단지 지정 및 주요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산업용지 수요추정 및 산업용지 수급안정화 방안</p>

3 과업의 수행방법

- 산업용지 수요분석과 관련된 각종 문헌조사를 통해 방법론, 시사점 등을 도출하여 본 과업에 이용함
- 시·군별, 업종별, 첨단산업 및 전통산업별 사업체수, 종업원 수, 생산액, 부가가치액,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등 산업입지 변화추이를 광공업 통계 조사보고서 등 정부 발표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분석함
- 광공업통계조사자료(통계청)는 1998년~2003년도¹⁾를 기준으로 분석하되, 최근동향의 분석에 역점을 둠
- 입지유형(계획입지와 개별입지)별 변화추이와 산업단지의 유형별(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변화추이, 생산성 증가, 고부가가치화, 자동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입지 원단위 추이를 조사·분석함
- 이를 토대로 목표연도(2020) 산업입지 수요량을 다양한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여 장래 경남지역의 산업용지의 공급 규모와 지역별 공급량을 제시함
- 경남지역의 제시된 공급량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계획 및 법률, 다양한 지원제도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기대효과를 파악하는 과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함

1) 광공업 통계자료 중 부지면적 수요추정면적 산출은 1998~2003년 광공업 통계자료를 활용함. 생산액당 부지 원단위 산출은 1998~2006년 통계자료를 활용함.

(그림1-2) 연구진행 과정





제2장 산업입지 추이

- ① 산업현황
- ② 권역별 산업용지 현황

제2장 산업입지 추이

1 산업현황

1. 개요

- 1980년대 기존의 전통제조업의 생산성과 기술력 향상 및 1990년대 정보통신 부문 비약적 발전과 함께 제조업은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옴. 이러한 성장으로 사업체수는 1981년 33,431개에서 2003년²⁾ 79,231개 증가(약 2.4배) 약 112,662개 업체로 증가하였으며, 생산액은 1981년 46조원에서 2003년 657조원으로 14.3배 증가함
- 제조업의 성장은 입지수요에 반영되어 1981년 전국 제조업 부지면적 234km²에서 2003년 520.8km²로 증가하여 지난 22년간 2배 이상 증가함
-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1998년 외환위기를 맞아 구조조정 및 생산설비 축소 등으로 인해 급속히 위축되었고, 1997년과 비교해볼 때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액,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등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998년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1990년대 제조업의 성장률은 1980년대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외환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가 회복되고 있으며 제조업 역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표2-1) 산업입지 변화 추이

구분	1981년	1986년	1991년	1996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81~'91	'91~'03	'81~'03
사업체(개)	33,431	50,063	72,213	97,144	112,662	8.0	3.5	5.7
종업원(천인)	2,044	2,738	2,918	2,897	2,726	3.6	-0.6	1.3
생산액(십억원)	46,717	91,950	205,699	380,621	657,494	16.0	10.2	12.8
부가가치(십억원)	15,413	32,882	86,366	158,760	251,599	18.8	9.3	13.5
부지면적(천 m ²)	234,000	270,249	371,742	476,602	520,785	4.7	2.8	3.7
건물연면적	57,287	76,106	126,594	181,637	202,843	8.3	4.0	5.9

자료 : 건설교통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2007.10)

2) 광공업통계조사 보고서의 발표자료 한계로 인하여 2003년까지의 자료만을 사용

2. 제조업 현황

1) 제조업·업종별 비중 : 기계산업 중심구조

- 경남 제조업을 업종별로 보면 생산액, 부가가치, 사업체수, 종사자수 모두가 기계산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기계관련 업종에 대한 경제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61.4%가 고용되어 있어 기계산업이 경남의 주력산업임을 입증함

2) 경남의 기계산업의 현황 : 전국 제조업체수의 11.4%, 종사자수의 17.7% 차지

- 2004년 경남 기계산업의 사업체수는 4,825개로 전국 기계산업 사업체의 11.4%이고 종사자수는 18만 3천명으로 전국의 17.7%에 비해, 생산액은 48조 3천억원으로 전국의 22.5%를 차지함
- 이는 전국 평균과 비교해 경남 기계산업체의 규모가 대규모인 관계로 생산 효율이 극대화(규모경제화)되어 있음을 의미함

(표2-2) 경남 기계산업의 전국비중(2004)

(단위:개·%·천명·십억)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사업체수	전국	19,183	32,572	27,898	34,863	38,080	40,225	42,226
	전국(경남제외)	17,439	29,059	28,429	31,071	33,958	35,831	37,579
	경남	1,744	3,513	3,792	4,122	4,394	4,647	4,825
	비중	9.09	10.79	13.59	11.8	11.5	11.5	11.4
종사자수	전국	806	990	888	944	960	994	1,035
	전국(경남제외)	605	745	740	790	802	829	857
	경남	201	245	154	158	165	177	183
	비중	24.93	24.75	17.3	16.7	17.2	17.8	17.7
생산액	전국	47,907	110,363	138,623	162,049	178,228	197,542	214,319
	전국(경남제외)	31,043	72,281	111,928	131,972	144,448	160,610	173,137
	경남	16,864	38,082	30,077	33,780	36,932	41,182	48,314
	비중	35.20	34.51	26.9	20.8	20.7	20.8	22.5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KOSIS, 광공업통계조사

3. 경남지역의 변화 추이

- 기계산업이 경남지역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을 기준으로 사업체수의 56%, 종사자수의 61.4%, 생산액의 61.4%를 점유하여 지역 제조업이 기계산업에 특화되어 있음

① 사업체수 변화 추이

(표2-3) 경남기계산업의 사업체수 비중

(단위:개·%·천명·십억)

구분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사업체수	제조업	4,231	7,035	6,635	7,065	6,639	8,026	8,435	8,610
	기계	1,744	3,513	3,482	3,792	4,122	4,394	4,647	4,825
	비중	41.22	49.94	52.48	53.67	62.09	54.75	55.09	56.04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KOSIS, 광공업통계조사

② 종사자수 변화 추이

(표2-4) 경남기계산업의 종사자수 비중

(단위:개·%·천명·십억)

구분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종사자수	제조업	399	428	261	272	276	281	294	298
	기계	201	245	148	154	158	165	177	183
	비중	50.38	57.24	56.70	56.62	57.25	58.72	60.00	61.41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KOSIS, 광공업통계조사

③ 생산액 변화 추이

(표2-5) 경남기계산업의 생산액 비중

(단위:개·%·천명·십억)

구분		1990	199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생산액	제조업	37,752	76,574	44,680	52,088	57,290	61,723	67,954	78,643
	기계	16,864	38,082	26,695	30,077	33,780	36,932	41,182	48,314
	비중	48.53	49.73	59.75	57.74	58.96	59.84	60.60	61.44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KOSIS, 광공업통계조사

④ 제조업의 동남권 비교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제조업은 전국 제조업체의 17.1%, 제조업체 고용자수의 21.7%, 생산액의 25.4%, 부가가치의 21.7%의 비중을 차지함
- 경남은 전국 제조업 사업체의 7.6%, 고용자수의 10.6%, 생산액의 9.9%, 부가가치의 9.1%를 차지함
- 따라서 경남은 고용자수와 부가가치에 있어 동남권 전체 제조업의 절반의 비중을 가지고 있음

(표2-6) 경남기계산업의 동남권내 비중

(단위:개·명·백만원·%)

구 분		사업체수		고용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전 국		113,920	(100.0)	2,814,598	(100.0)	790,881,553	(100.0)	303,311,895	(100.0)
계		19,441	(17.1)	609,415	(21.7)	200,594,514	(25.4)	65,865,487	(21.7)
동남권	경남	8,610	(7.6)	297,879	(10.6)	78,643,121	(9.9)	27,742,142	(9.1)
	부산	9,262	(8.1)	170,631	(6.1)	26,132,320	(3.3)	10,120,882	(3.3)
	울산	1,569	(1.4)	140,905	(5.0)	95,819,073	(12.1)	28,002,463	(9.2)

주) ()는 전국비중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KOSIS, 광공업통계조사

4. 업종별 변화 추이

1) 특화산업 분석 : 기계·장비·조선·금속산업 등에 특화

- 2004년 종사자수와 생산액 자료를 이용한 특화도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 기계·장비·고무플라스틱·조선·금속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된 산업구조를 보유함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이 특화산업임
- 동남권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경남의 특화산업은 기계·장비·금속분야에서는 부산의 금속산업과 조선산업분야에서는 울산과 일부 경쟁력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2-7) 동남권 제조업 특화도 분석(2004)

(단위:%)

제조업	종사자수			생산액		
	경남	부산	울산	경남	부산	울산
음·식료품	0.97	1.03	0.14	0.97	1.13	0.10
담배 제조업	-	-	-	-	-	-
섬유제품 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0.53	1.24	0.32	0.57	1.96	0.35
섬유제품제조업 : 봉제의복 제외	0.07	2.02	0.03	0.07	1.90	0.01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0.54	5.62	0.19	0.54	6.82	0.05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0.75	1.28	0.41	0.60	2.12	0.22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67	0.57	0.36	0.91	0.45	0.34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17	0.52	0.09	0.11	0.68	0.02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0.30	0.45	9.96	0.02	0.15	4.6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0.41	0.48	1.95	0.20	0.29	1.73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13	0.89	0.37	1.15	1.13	0.3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5	0.34	0.29	0.81	0.65	0.13
제1차 금속산업	1.15	1.66	1.00	0.82	1.99	0.75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29	1.39	0.51	1.82	2.24	0.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2	1.22	0.37	3.00	1.42	0.14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0.24	0.04	0.00	0.05	0.01	0.00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0.78	0.91	0.35	0.95	0.97	0.08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0.48	0.42	0.42	0.60	0.27	0.27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0.92	0.81	0.06	0.92	1.05	0.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97	0.67	3.78	0.61	0.96	2.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4.32	1.17	6.82	4.83	1.47	3.13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0.32	1.08	0.15	0.30	1.23	0.08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0.58	0.60	0.38	0.45	0.94	0.32

자료)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KOSIS, 광공업통계조사

비고 : 산업특화계수(LQ)=지역의 산업별 구성비/전국의 산업별 구성비

- 산업특화계수 LQ>1이면 전국에 비해 「특화」
- 산업특화계수 LQ=1이면 전국에 비해 「평균수준」
- 산업특화계수 LQ<1이면 전국평균에 비해 「비특화」

5. 입지 유형별 현황

1) 계획입지

- 2008년 현재 경남의 산업단지는 7개의 국가산업단지와 24개의 일반산업단지, 1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5개의 농공단지로 이들 산업단지에서 약 164,500명의 고용과 약 207,500억원의 생산액, 약 13,433백만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 그리고 현재 경남의 산업용지가 총 112.4km²로 파악되어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 예측하고 있는 2011년 경남의 산업입지 수요 68.6km²에 이미 육박하고 있음

(표2-8) 경남의 산업단지 현황(2008년)

(단위:천 m²·%)

구분	단지수	지정면적	분양대상면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국가산업단지	7	72,211	50,462	48,130	47,250	880
일반산업단지	24	30,418	21,332	9,571	9,538	33
도시첨단산업단지	1	145	71	-	-	-
농공단지	65	9,590	7,615	6,067	5,978	89
합계	97	112,364	79,480	63,768	62,766	1,002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2) 개별입지

- 시군별 개별입지를 살펴보면 김해시가 12,137천㎡로 가장 많은 개별공장이 등록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거제, 양산, 사천, 함안 순으로 나타났음

(표2-9) 개별입지 현황

(단위:천㎡)

9대 중핵권	지역명	개별입지			9대 중핵권	지역명	개별입지		
		면적	공장수	휴업공장수			면적	공장수	휴업공장수
동부 경남권역	김해시	12,137	4,203	99	서남부 경남권역	하동군	463	95	4
	양산시	4,193	1,355	1		산청군	354	90	-
	소계	16,330	5,558	100		소계	817	185	4
중부 경남권역	창원시	552	273	-	남부해양 경남권역	거제시	6,531	126	-
	마산시	1,749	832	23		통영시	503	171	-
	진해시	706	216	7		소계	7,034	297	-
	소계	3,007	1,321	30	서부해양 경남권역	고성군	126	53	-
중북부 경남권역	밀양시	1,368	241	-		남해군	921	126	5
	창녕군	1,017	248	10		소계	1,047	179	5
	소계	2,385	489	10	서북부 경남권역	거창군	314	107	-
	함안군	3,190	873	-		함양군	528	122	-
중부내륙 경남권역	의령군	367	92	13		합천군	382	124	1
	소계	3,557	965	13		소계	1,223	353	1
서부 경남권역	진주시	784	771	3	합계		39,987	10,512	166
	사천시	3,803	394	-					
	소계	4,587	1,165	3					

자료)경상남도 내부자료

- 경남의 개별입지 공장의 총 면적은 약 40km²로 조사되어 이를 계획단지에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제2차산업입지공급계획(2002~2011)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100km²의 약 40% 물량에 해당되어 계획보다 공급량을 확대시켜야 하는 실정임
- 현재 전국 평균 산업단지 미분양률은 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경남 지역은 미분양률이 0.86%에 불과하여 공장용지의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개별입지의 급격한 증가 및 해외 이전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개별입지 증가의 억제를 위해서 산업단지 개발 등을 통해 계획입지의 공급확대 방안을 강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무분별한 계획단지의 공급확대는 개별입지와 같은 난개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권역별 계획단지의 집적화 방안이 요구됨

(표2-10) 9중핵권별 산업단지 현황(2008년)

(단위:천 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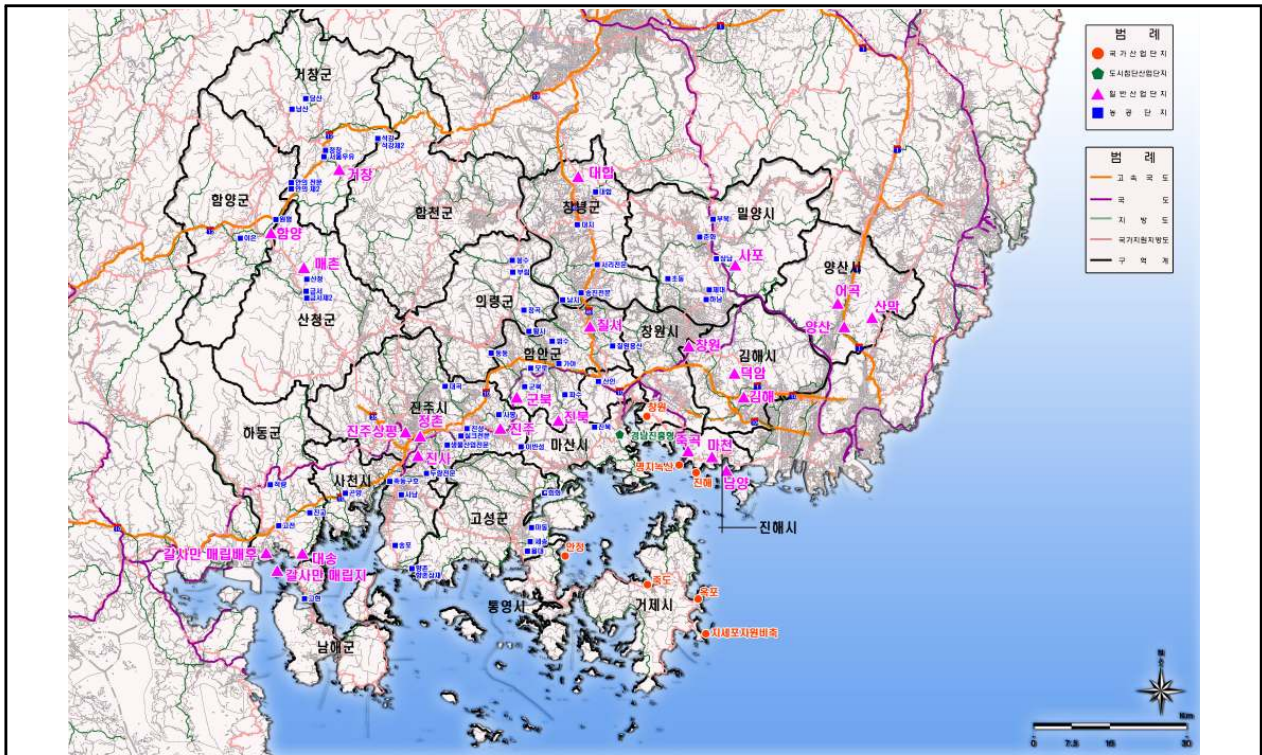
9중핵권	지역명	계획입지				
		지정면적	분양대상면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동부 경남권역	김해시	2,963	2,126	920	920	-
	양산시	3,877	2,847	2,191	2,191	-
	소계	6,840	4,973	3,111	3,111	-
중부 경남권역	창원시	53,074	38,096	36,870	35,990	880
	마산시	1,160	687	111	111	-
	진해시	4,198	2,681	2,338	2,338	-
	소계	58,432	41,464	39,319	38,439	880
중북부 경남권역	밀양시	1,630	1,201	595	595	-
	창녕군	1,194	858	157	157	-
	소계	2,824	2,059	752	752	-
중부내륙 경남권역	함안군	4,001	2,904	2,904	2,814	90
	의령군	816	674	671	662	9
	소계	4,817	3,578	3,575	3,476	99
서부 경남권역	진주시	5,399	3,543	1,969	1,969	-
	사천시	5,408	4,131	3,842	3,842	-
	소계	10,807	7,674	5,811	5,811	-
서남부 경남권역	하동군	7,569	5,600	106	106	-
	산청군	268	203	203	203	-
	소계	7,837	5,803	309	309	-
남부해양 경남권역	거제시	13,145	8,107	7,160	7,160	-
	통영시	3,776	3,016	2,254	2,254	-
	소계	16,921	11,123	9,414	9,414	-
서부해양 경남권역	고성군	614	487	269	269	-
	남해군	59	48	48	48	-
	소계	673	535	317	317	-
서북부 경남권역	거창군	1,280	919	430	407	23
	함양군	1,491	987	365	365	-
	합천군	442	365	365	365	-
	소계	3,213	2,271	1,160	1,137	23
합계		112,364	79,480	63,768	62,766	1,002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6. 산업단지 유형별 현황

1) 경남의 산업단지

- 1960년대에 울산공업도시의 탄생과 1970년대 초에 자동차·중화학 업종을 중심으로 한 온산·미포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국토 동남권의 임해산업벨트의 형성이 시작되었음. 이에 따라 점적인 산업입지군이 형성되었고, 1970년대에는 현재 경남의 산업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경제성장기에 국가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창원국가산업단지(메카트로닉스·항공·자동차산업)가 조성되었음
- 또한 바다를 접하고 있는 거제에 조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단지(죽도·옥포·지세포·녹산)가 입지함으로써 창원과 거제, 즉 경남의 중부와 남부해안(거제)에 하나의 거대한 산업거점(군)이 형성되었음
- 1980년대에는 양산과 김해시에 중화학·자동차산업 관련기업들이 울산-창원으로 이어지는 벨트 상에 입지하면서 산업입지상 변화가 시작되었음
- 1990년대에는 진주사천에 자동차산업·실크산업(진주)과 항공·우주산업(사천)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등 서부경남의 산업기능이 급부상하였는데, 특히 사천의 항공·우주관련 산업단지의 조성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면서 동남임해산업벨트와 경남의 새로운 산업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1970년대부터 국가산업기반이 노동집약적 경공업에서 기술·지식집약적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고 수출지향적 산업정책을 추진하면서 이에 유리한 산업입지여건을 가진 국토남단의 동남임해산업벨트가 중점적으로 육성되었음
- 즉 포항의 제철산업단지를 시작으로 울산의 자동차 및 석유화학단지·창원 기계공단·거제 조선산업·여수와 여천의 석유화학단지 등 제철·자동차·기계·부품·석유화학 분야에서 상호 기능적 연계를 갖고 국토남단의 임해지역에 집중적으로 산업입지가 이루어졌음
- 이러한 동남임해산업벨트 상에 있는 경남지역은 비교적 많은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는 편이고, 도내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은 기계·부품·자동차·조선산업이며, 이들 업종은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특화되어 있음



(그림2-1) 경남의 산업단지 현황도(2008년)

(표2-11) 경남도내 국가산업단지 현황

(단위:천 m²·%)

단지명	시군	지정면적	분양대상면적	개발면적	분양	미분양
국가산업단지	7개소	72,211	50,462	48,130	47,250	880
명지·녹산국가단지 (진해만 해당)	진해시	1,672	865	865	865	—
안정국가산업단지	통영시	3,776	3,016	2,254	2,254	—
옥포국가산업단지	거제시	6,167	4,002	3,787	3,787	—
죽도국가산업단지	거제시	3,577	2,764	2,405	2,405	—
진해국가산업단지	진해시	1,497	1,051	981	981	—
지세포자원비축단지	거제시	2,927	968	968	968	—
창원국가산업단지	창원시	52,595	37,796	36,870	35,990	880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표2-12) 경남의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단위:천㎡·%)

단지명	시군	지정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일반산업단지	24개소	30,418	21,332	9,571	9,538	33
덕암일반산업단지	김해시	156	106	106	106	-
사천제1 일반산업단지	사천시	2,555	1,975	1,969	1,969	-
사천제2 일반산업단지	사천시	1,617	1,161	1,161	1,161	-
양산일반산업단지	양산시	1,529	1,319	1,319	1,319	-
어곡일반산업단지	양산시	1,270	802	802	802	-
진주상평 일반산업단지	진주시	2,135	1,593	1,593	1,593	-
마천일반산업단지	진해시	611	492	492	492	-
철서일반산업단지	함안군	3,067	2,129	2,129	2,096	33
진주(사봉) 일반산업단지	진주시	809	356	-	-	-
오비일반산업단지	거제시	194	151	-	-	-
진북일반산업단지	마산시	882	505	-	-	-
사포일반산업단지	밀양시	747	483	-	-	-
정촌일반산업단지	진주시	1,664	1,037	-	-	-
죽곡일반산업단지	진해시	138	112	-	-	-
대송산업단지(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군	992	723	-	-	-
남양지구산업단지(부산진해경제 자유구역)	진해시	280	161	-	-	-
갈사만매립지(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군	3,967	3,019	-	-	-
갈사만매립배후지역(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군	2,314	1,655	-	-	-
함양일반산업단지	함양군	795	424	-	-	-
창원일반산업단지	창원시	479	300	-	-	-
산막일반산업단지	양산시	992	656	-	-	-
거창일반산업단지	거창군	726	478	-	-	-
김해일반산업단지	김해시	1,502	998	-	-	-
대합일반산업단지	창녕군	997	697	-	-	-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145	71	-	-	-
경남지능형융합산업도시첨단산업단지	마산시	145	71	-	-	-

자료)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표2-13) 경남의 농공단지 현황

(단위:천 m²·%)

단지명	시군	지정 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농공단지	65개소	9,590	7,615	6,067	5,978	89
나전농공단지	김해시	144	96	96	96	-
봉림농공단지	김해시	93	66	66	66	-
내삼농공단지	김해시	113	94	94	94	-
진영죽곡농공단지	김해시	410	346	346	346	-
병동농공단지	김해시	135	100	100	100	-
진북농공단지	마산시	133	111	111	111	-
부북특별농공단지	밀양시	108	108	108	108	-
상남특별농공단지	밀양시	84	76	76	76	-
초동특별농공단지	밀양시	317	265	265	265	-
하남농공단지	밀양시	181	146	146	146	-
곤양농공단지	사천시	84	58	58	58	-
사남농공단지	사천시	568	481	481	481	-
송포농공단지	사천시	104	83	83	83	-
웅상농공단지	양산시	86	70	70	70	-
대곡농공단지	진주시	133	95	95	95	-
사봉농공단지	진주시	150	110	110	110	-
이반성농공단지	진주시	141	111	111	111	-
진성농공단지	진주시	86	60	60	60	-
석강농공단지	거창군	152	127	127	118	9
남산농공단지	거창군	154	122	120	120	-
당산농공단지	거창군	103	90	82	68	14
정장농공단지	거창군	52	46	45	45	-
울대농공단지	고성군	110	82	82	82	-
회화농공단지	고성군	92	78	78	78	-
고현농공단지	남해군	59	48	48	48	-
금서농공단지	산청군	156	118	118	118	-
산청농공단지	산청군	112	85	85	85	-
동동농공단지	의령군	291	228	225	225	-
봉수농공단지	의령군	315	277	277	271	6
부림농공단지	의령군	145	122	122	119	3
정곡농공단지	의령군	65	47	47	47	-
남지농공단지	창녕군	44	39	39	39	-
대합농공단지	창녕군	86	73	73	73	-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표2-13) 경남의 농공단지 현황(계속)

(단위:천 m²·%)

단지명	시군	지정 면적	분양대상 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고전농공단지	하동군	83	57	57	57	-
적량농공단지	하동군	75	49	49	49	-
진교농공단지	하동군	138	96	96	96	-
가야농공단지	함안군	77	66	66	9	57
군북농공단지	함안군	99	78	78	78	-
법수농공단지	함안군	226	177	177	177	-
산인농공단지	함안군	129	103	103	103	-
파수농공단지	함안군	166	146	146	146	-
수동농공단지	함양군	102	90	90	90	-
이은농공단지	함양군	40	34	34	34	-
아로농공단지	합천군	114	95	95	95	-
울곡농공단지	합천군	234	190	190	190	-
적중농공단지	합천군	94	80	80	80	-
서울우유농공단지	거창군	93	56	56	56	-
원평농공단지	함양군	136	112	112	112	-
안하농공단지	김해시	127	100	100	100	-
대지농공단지	창녕군	67	49	45	45	-
두량전문농공단지	사천시	118	90	90	90	-
진교농공단지	하동군	138	97	0	0	-
세송농공단지	고성군	133	109	109	109	-
본산농공단지	김해시	148	120	12	12	-
황사농공단지	함안군	146	128	128	128	-
모로농공단지	함안군	91	77	77	77	-
안의전문농공단지	함양군	147	132	129	129	-
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진주시	148	86	-	-	-
한내조선특화농공단지	거제시	280	222	-	-	-
실크전문농공단지	진주시	133	95	-	-	-
마동농공단지	고성군	279	218	-	-	-
향촌농공단지	사천시	262	195	-	-	-
제대농공단지	밀양시	193	123	-	-	-
하계농공단지	김해시	135	100	-	-	-
축동구호농공단지	사천시	100	88	-	-	-
안의제2농공단지	함양군	271	195	-	-	-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 경남의 일반산업단지 분양가는 사천시 제2일반산업단지가 m²당 70만6천 원으로 가장 비싸고, 양산일반산업단지가 3만원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었음
- 그리고 일반산업단지의 토지이용구성을 보면 산업시설용지는 평균적으로 지정면적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음

7. 원단위 변화 추이

- 산업입지 원단위는 ‘한국토지공사의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상의 단위면적(1,000m²)당 생산액 실적치(19~20억)를 이용하여 변화경향을 파악하여 목표연도의 원단위를 추정함
-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원단위는 생산액 당 부지면적 원단위로서 상기 자료에서 정의되고 있는 단위면적당 생산액 원단위는 사용할 수 없는 관계로 이를 변환하여 사용함
- 생산액당 부지면적 원단위는 부지면적당 생산액 원단위의 역수로서 계산 가능함
- 변환한 22개 업종의 부지면적 원단위를 살펴보면 대체로 감소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장래에는 현재보다 소요면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1991~2003년도의 평균 증가율에 있어 가장 높은 증가 경향을 보여 주는 업종은 '담배'업종으로 분석되며 감소의 정도가 가장 큰 업종은 '석유정제품'으로 분석됨
- 다만 '담배'의 경우 분석기간 중 최종년도인 2003년도의 실적치가 높게 조사되어 일시적으로 타 업종보다 매우 높게(24.74%)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이 실적치에 따른 부지면적 원단위를 이용하여 장래의 원단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적치의 변화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 과거 년도의 실적치에 대한 변화경향을 파악 해본 결과 총 22개 업종 중 나무제품 등 6개 업종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에 16개 업종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분석결과 변화 유형에 있어 등차 급수식 변화(증감)경향을 보여주는 업종은 '나무제품'·'섬유제품'등 11개 업종·등비 급수식 변화경향은 전기기계·자동차 등 5개 업종, 지수함수식경향은 기타운송장비·화학제품 등 5개 업종, 로그함수식 경향은 비금속광물 1개 업종으로 분석됨

(표2-14) 부지면적(1000m²)당 생산액 원단위 변화추이

(단위:백만원·%)

업 종 별	1991	1994	1997	2000	2003	기간증가율		
						1991 ~1997	1997 ~2003	1991 ~2003
음식료품	1,003.60	918.8	966.1	1,052.10	1,060.50	-0.60	1.60	0.50
담배	3,594	1,866.20	6,541.80	1,812.20	905.70	10.50	-28.10	-10.90
섬유제품	634.8	608	673.8	744.1	813.1	1	3.2	2.1
의복 및 모피	2,934.20	2,587.80	3,102.40	3,622.40	5,011.10	0.90	8.30	4.60
가죽, 가방	2,775.00	2,519.10	1,914	2,146.30	2,043.30	-6.00	1.10	-2.50
목재 및 나무	746.00	482.4	553.3	508.20	493.20	-4.90	-1.90	-3.40
펄프, 종이	739.40	910.8	937.8	914.40	885.80	4.00	0.90	1.50
풀판, 인쇄	2,628.20	1,548.30	2,063.80	2,482.60	1,885.90	-3.90	-1.50	-2.70
석유정제품	577.40	1,469.00	1,339.30	2,356.00	2,163.50	15.10	8.30	11.60
화학제품	412.20	492.90	660.6	924.70	999.50	8.20	7.10	7.70
고무	845.80	847.00	785.2	911.20	973.40	-1.20	3.60	1.20
비금속	238.10	250.90	276.6	381.40	387.00	2.50	5.80	4.10
1차 금속	452.90	576.30	667.5	820.20	877.60	6.70	4.70	5.70
조립금속	1,001.10	927.40	753.3	716.10	728.70	-4.60	-0.60	-2.60
기타 기계	818.40	911.00	948.2	985.40	1,210.40	2.50	4.20	3.30
사무용기기	1,186.30	1,757.80	2,404.10	6,739.90	9,007.60	12.50	24.60	18.40
기타 전기기계	988.40	1,118.40	1,079.40	1,629.70	1,648.60	1.50	7.30	4.40
음향 및 통신장비	1,316.90	1,610.40	2,382.60	4,411.50	6,183.20	10.40	17.20	13.80
의료, 정밀, 광학기기	1,019.00	1,277.40	1,508.10	1,937.90	1,718.20	6.80	2.20	4.40
자동차 및 트레일러	922.80	1,202.00	1,100.20	1,573.70	1,727.40	3.00	7.80	5.40
기타 운송장비	392.50	468.40	645.60	670.50	908.60	8.60	5.90	7.20
가구 및 기타	1,011.30	880.20	733.40	830.00	787.30	-5.20	1.20	-2.10
제조업 평균	731.60	776.60	877.00	1,163.90	1,327.50	3.10	7.20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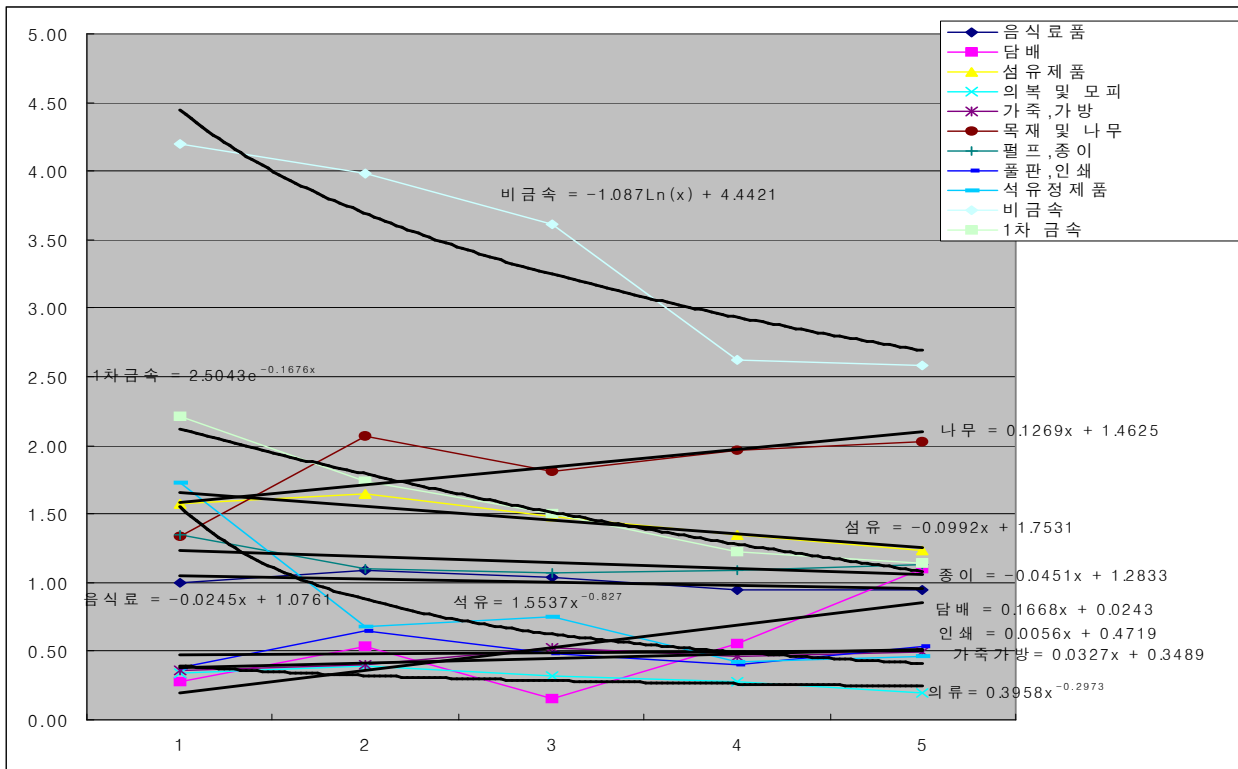
자료) 한국토지공사. 산업입지원단위 산정에 관한 연구, 2006. p.77

(표2-15) 생산액(백만원)당 소요부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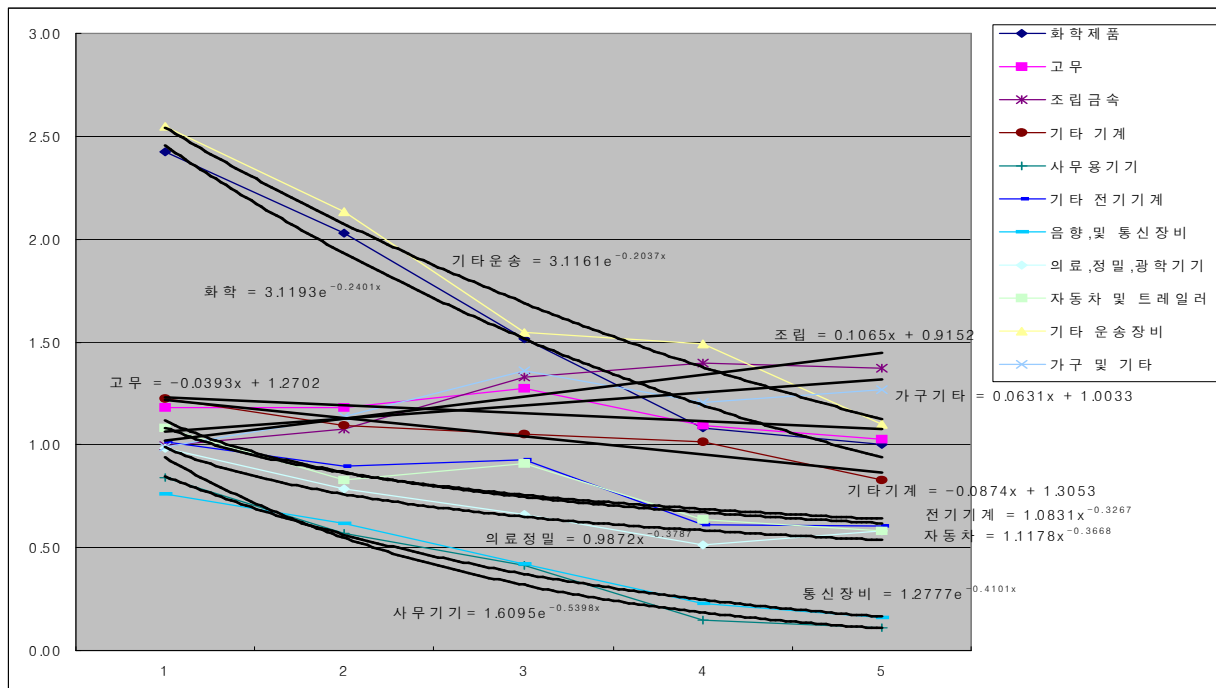
(단위:㎡·%)

업 종 별	1991년	1994년	1997년	2000년	2003년	기간증가율		
						1991~ 1997	1997~ 2003	1991~ 2003
음식료품	1.00	1.09	1.04	0.95	0.94	0.65	-1.48	-0.45
담배	0.28	0.54	0.15	0.55	1.10	-7.51	103.72	24.74
섬유제품	1.58	1.64	1.48	1.34	1.23	-0.96	-2.86	-1.83
의복 및 모피	0.34	0.39	0.32	0.28	0.20	-0.90	-6.35	-3.45
가죽·가방	0.36	0.40	0.52	0.47	0.49	7.50	-1.05	2.98
목재 및 나무	1.34	2.07	1.81	1.97	2.03	5.80	2.03	4.27
펄프·종이	1.35	1.10	1.07	1.09	1.13	-3.53	0.98	-1.38
폴판·인쇄	0.38	0.65	0.48	0.40	0.53	4.56	1.57	3.28
석유정제품	1.73	0.68	0.75	0.42	0.46	-9.48	-6.35	-6.11
화학제품	2.43	2.03	1.51	1.08	1.00	-6.27	-5.65	-4.90
고무	1.18	1.18	1.27	1.10	1.03	1.29	-3.22	-1.09
비금속	4.20	3.99	3.62	2.62	2.58	-2.32	-4.75	-3.21
1차 금속	2.21	1.74	1.50	1.22	1.14	-5.36	-3.99	-4.03
조립금속	1.00	1.08	1.33	1.40	1.37	5.48	0.56	3.12
기타 기계	1.22	1.10	1.05	1.01	0.83	-2.28	-3.61	-2.70
사무용기기	0.84	0.57	0.42	0.15	0.11	-8.44	-12.22	-7.24
기타 전기기계	1.01	0.89	0.93	0.61	0.61	-1.41	-5.75	-3.34
음향 및 통신장비	0.76	0.62	0.42	0.23	0.16	-7.45	-10.24	-6.56
의료·정밀·광학기기	0.98	0.78	0.66	0.52	0.58	-5.41	-2.04	-3.39
자동차 및 트레일러	1.08	0.83	0.91	0.64	0.58	-2.69	-6.05	-3.88
기타 운송장비	2.55	2.13	1.55	1.49	1.10	-6.53	-4.82	-4.73
가구 및 기타	0.99	1.14	1.36	1.20	1.27	6.32	-1.14	2.37
제조업 평균	1.37	1.29	1.14	0.86	0.75	-2.76	-5.66	-3.74

- 그림과 같은 변화경향을 이용하여 장래 원단위를 추정한 결과 나무제품·조립금속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음향 및 통신장비업은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2-2) 부지원단위 실적치에 대한 경향분석도 (1)



(그림2-3) 부지원단위 실적치에 대한 경향분석도 (2)

2 권역별 산업용지 현황

1. 총괄

- 경남 전체지역을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제시한 9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계획 및 개발 입지량을 조사하여 분석함
- 지자체별로 수집한 산업용지는 112,841천㎡로 산업입지정보시스템의 112,364천㎡보다 474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2-16) 경남의 산업용지 현황

(단위:천㎡)

구분	개수	지정면적(A)	지정 면적(B)	분양대상 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시	53	94,208	94,630	66,435	58,250	57,370	880
군	44	18,633	17,734	13,045	5,518	5,396	122
합계	97	112,841	112,364	79,480	63,768	62,766	1,002

자료)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주 : 지정면적(A)는 지자체별로 수집한 산업용지 현황

지정면적(B)는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산업용지 현황



(그림2-4) 권역 구분도

2. 계획입지

1) 동부경남권역(김해·양산)

- 김해시는 계획입지의 면적이 2,963천㎡인 반면 개별입지는 공장 4,203개, 면적12,136.8천㎡로 계획입지의 4배 이상 면적이 조성되어 있음
- 계획입지 중 1,183.7천㎡는 조성완료되어 약 40%정도 조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 양산시의 계획입지 면적은 3,877천㎡로 조성완료면적은 2,847천㎡ 약 74%의 조성률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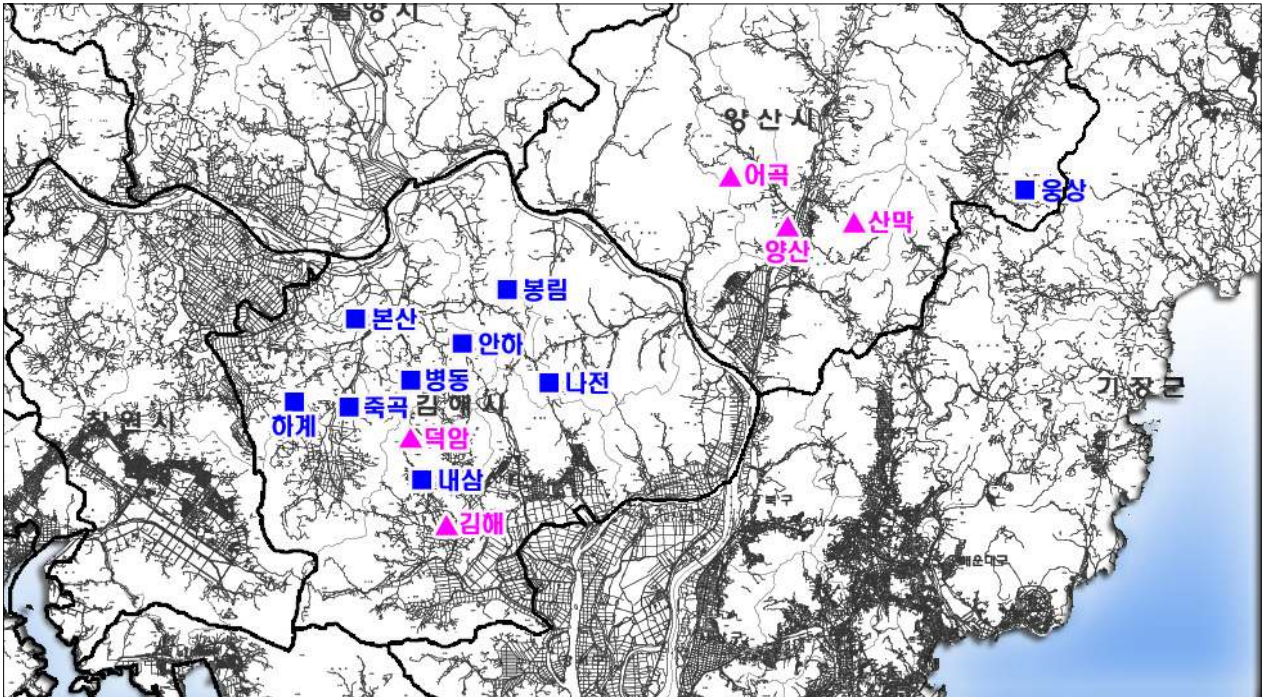
(표2-17) 동부경남권역(김해·양산)산업용지 현황

(단위:천㎡)

지역	단지명	지정 면적	분양 대상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개별입지	
							면적	공장수*
김해시	덕암일반	156	106	106	106	-	12,137	4,203(99)
	김해일반	1,502	998	-	-	-		
	나전농공	144	96	96	96	-		
	봉림농공	93	66	66	66	-		
	내삼농공	113	94	94	94	-		
	진영죽곡농공	410	346	346	346	-		
	병동농공	135	100	100	100	-		
	안하농공	127	100	100	100	-		
	본산농공	148	120	12	12	-		
	하계농공	135	100	-	-	-		
	소계	2,963	2,126	920	920	-		
양산시	양산일반	1,529	1,319	1,319	1,319	-	4,193	1,355 (1)
	어곡일반	1,270	802	802	802	-		
	산막일반	992	656	-	-	-		
	웅상농공	86	70	70	70	-		
	소계	3,877	2,847	2,191	2,191	-		
합계		6,840	4,973	3,111	3,111	-	16,330	5,558 (100)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 : ()는 휴업공장수.



(그림2-5) 동부경남권역(김해·양산) 산업단지 현황도



양산어곡일반산업단지



양산일반산업단지



김해일반산업단지

2) 중부경남권역(창원·마산·진해)

- 창원시는 계획입지면적 총 53,074천㎡ 중 99.1%를 국가산업단지가 차지하고 있으며 마산시는 전국 4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1개인 경남지능형융합산업단지 145.3천㎡를 조성하고 있음
- 진해시는 총 계획입지 4,198천㎡ 중 국가산업단지가 약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조선산업관련 업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져 추가 공급량 또한 실수요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며 전체 공급량에는 영향이 작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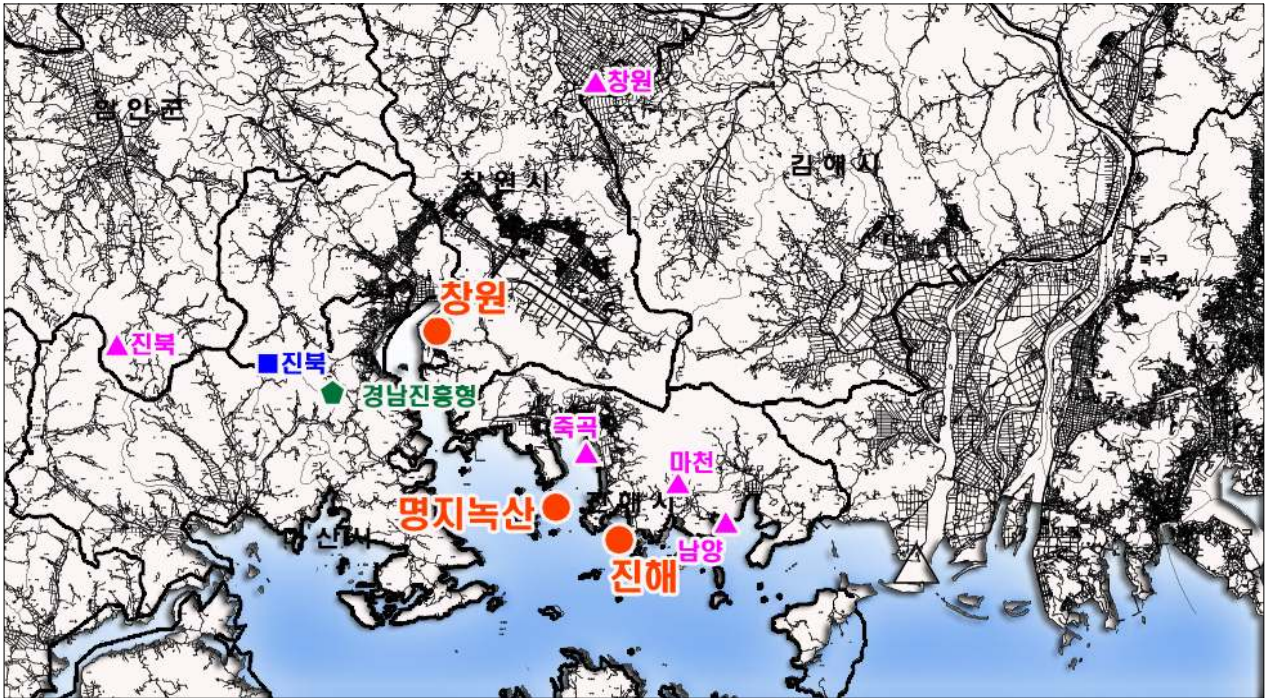
(표2-18) 중부경남권역(창원·마산·진해)산업용지 현황

(단위:천㎡)

지역	단지명	지정 면적	분양 대상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개별입지	
							면적	공장수*
창원시	창원국가	52,595	37,796	36,870	35,990	880	552	273
	창원일반	479	300	-	-	-		
	소계	53,074	38,096	36,870	35,990	880		
마산시	진북일반	882	505	-	-	-	1,749	832(23)
	경남지능형융 도시첨단	145	71	-	-	-		
	진북농공	133	111	111	111	-		
	소계	1,160	687	111	111	-		
진해시	명지·녹산국가 (진해)	1,672	865	865	865	-	706	216 (7)
	진해국가	1,497	1,051	981	981	-		
	마천일반	611	492	492	492	-		
	죽곡일반	138	112	-	-	-		
	남양지구산업단지	280	161	-	-	-		
	소계	4,198	2,681	2,338	2,338	-		
	합계	58,432	41,464	39,319	38,439	880	3,007	1,321 (30)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 : ()는 휴업공장수.



(그림2-6) 중부경남권역(창원·마산·진해) 산업단지 현황도



창원국가산업단지



마천일반산업단지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



마산진북일반산업단지

3) 중북부경남권역(창녕·밀양)

- 밀양시는 계획입지면적 1,630천m² 중 약 36.5%가 조성완료 되었으며 개별입지면적은 1,368천m²이며 등록공장수는 241개임
- 창녕군은 계획입지면적이 1,194천m² 중 약 13.4%가 개발되었으며 개별 입지면적은 1,017천m²이며 등록공장수는 248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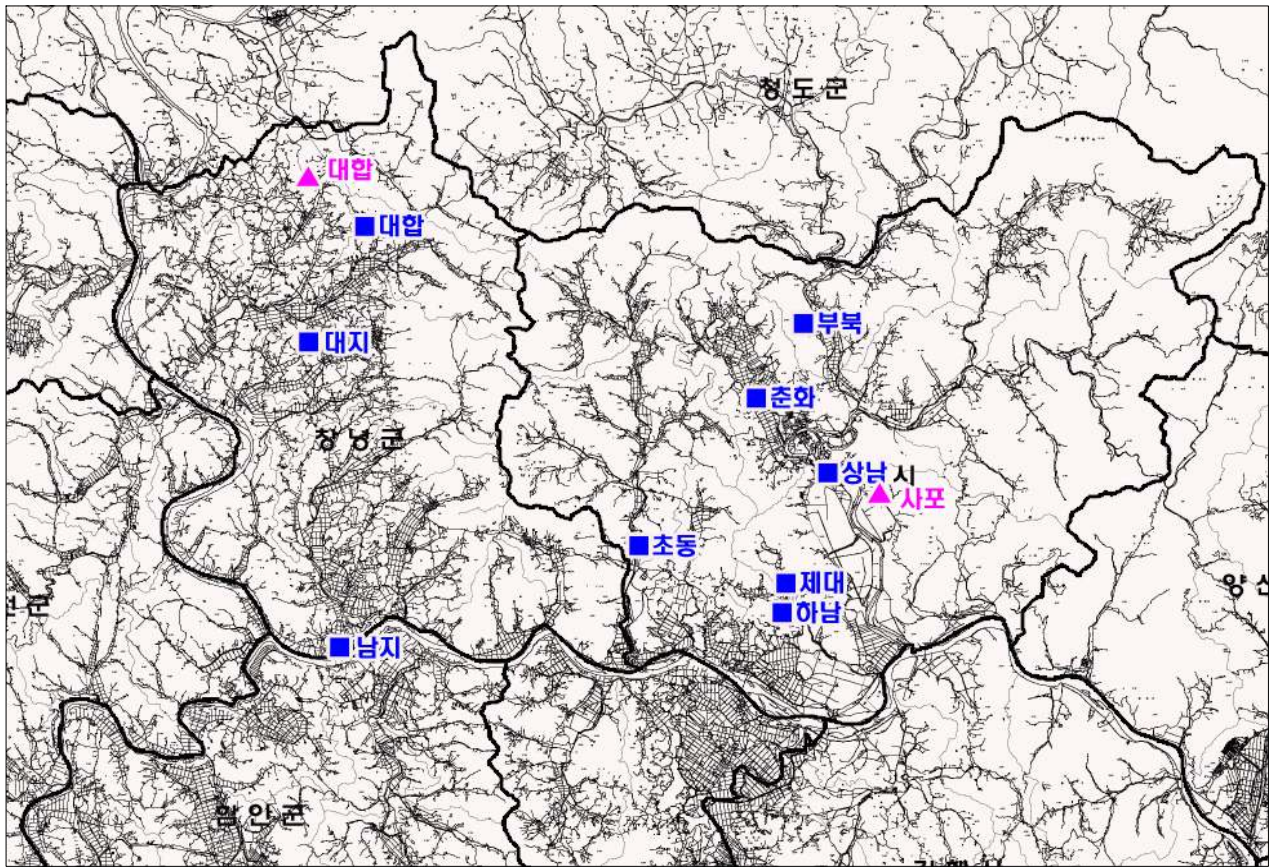
(표2-19) 중북부경남권역(밀양·창녕)산업용지 현황

(단위:천 m²)

지역	단지명	지정 면적	분양 대상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개별입지	
							면적	공장수*
밀양시	사포일반	747	483	-	-	-	1,368	241
	부북특별농공	108	108	108	108	-		
	상남특별농공	84	76	76	76	-		
	초동특별농공	317	265	265	265	-		
	하남농공	181	146	146	146	-		
	제대농공	193	123	-	-	-		
	소계	1,630	1,201	595	595	-		
창녕군	대합일반	997	697	-	-	-	1,017	248 (10)
	남지농공	44	39	39	39	-		
	대합농공	86	73	73	73	-		
	대지농공	67	49	45	45	-		
	소계	1,194	858	157	157	-		
합계		2,824	2,059	752	752	-	2,385	489 (10)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 : ()는 휴업공장수.



(그림2-7) 중북부경남권역(창녕·밀양) 산업단지 현황도



밀양초동특별농공단지

밀양상남특별농공단지

4) 중부내륙경남권역(함안·의령)

- 함안군은 4,001천㎡의 계획입지 중 935.2천㎡가 90년대 초에 조성완료 되었으며 현재 칠서일반산업단지 3,067천㎡가 조성중이며 칠원용산농공 단지 100천㎡ 미개발 상태임
- 의령군은 현재 816천㎡의 산업단지가 모두 조성완료 되었으며 60만평 (1,983.5천㎡) 정도 추후 개발 예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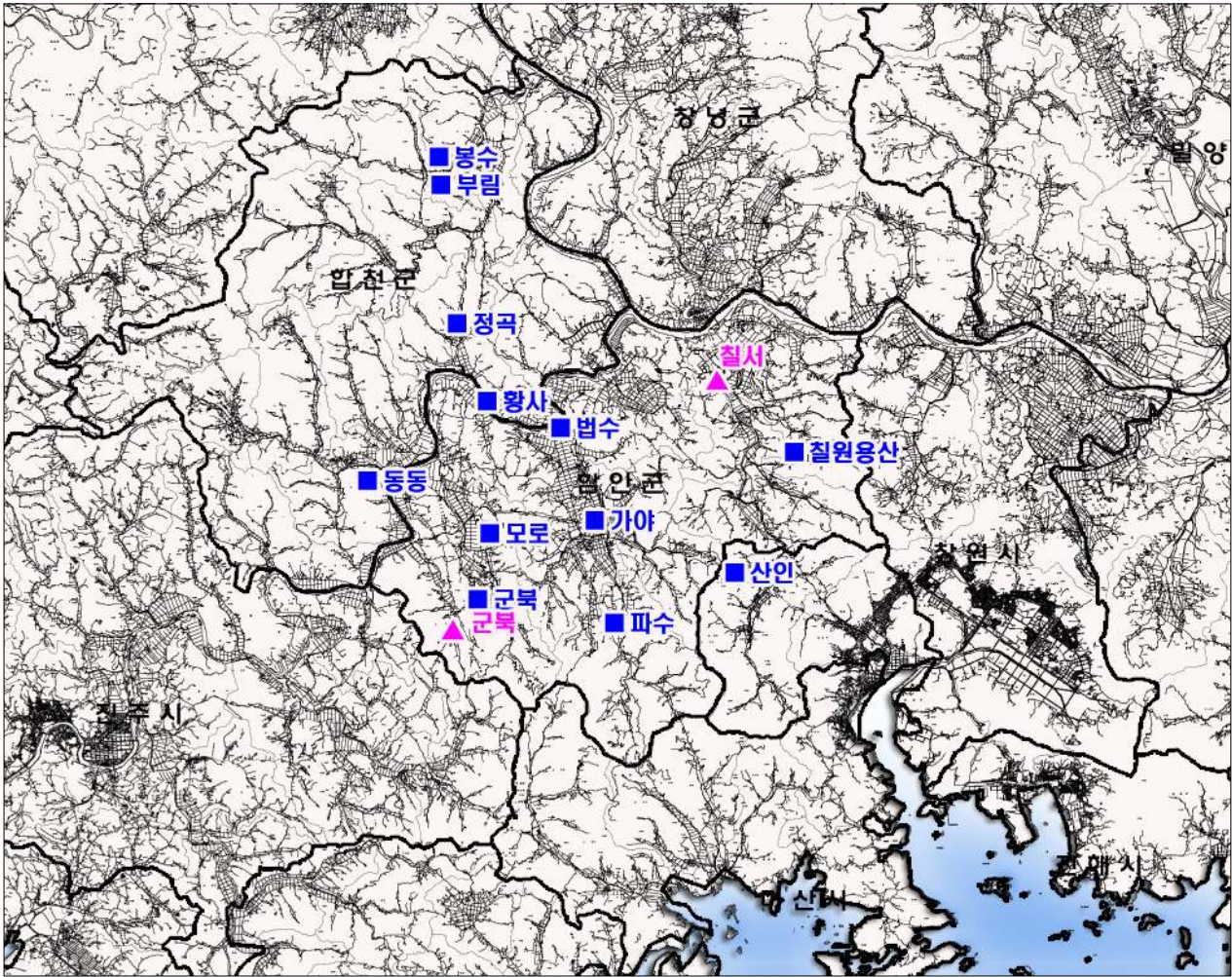
(표2-20) 중부내륙경남권역(함안·의령) 산업용지 현황

(단위:천㎡)

지역	단지명	지정 면적	분양 대상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개별입지	
							면적	공장수*
함안군	칠서일반	3,067	2,129	2,129	2,096	33	3,190	873
	가야농공	77	66	66	9	57		
	군북농공	99	78	78	78	-		
	법수농공	226	177	177	177	-		
	산인농공	129	103	103	103	-		
	파수농공	166	146	146	146	-		
	황사농공	146	128	128	128	-		
	모로농공	91	77	77	77	-		
	소계	4,001	2,904	2,904	2,814	90		
의령군	동동농공	291	228	225	225	-	367	92 (13)
	봉수농공	315	277	277	271	6		
	부림농공	145	122	122	119	3		
	정곡농공	65	47	47	47	-		
	소계	816	674	671	662	9		
합계		4817	3578	3575	3476	99	3,557	965 (13)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 : ()는 휴업공장수.



(그림2-8) 중부내륙경남권역(함안·의령) 산업단지 현황도



함안칠서일반산업단지



의령부림농공단지

5) 서부경남권역(진주·사천)

- 진주시의 산업용지는 시설노후화로 산업단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단지가 있으나 반면 진주(사봉)·정촌일반산업단지 및 생물산업·진주실크농공단지와 같은 신규산업단지 개발이 추진중임
- 사천시에는 주로 항공기 및 조선기자재 관련한 업종이 입지해 있으며 향촌·축동구호농공단지 개발이 추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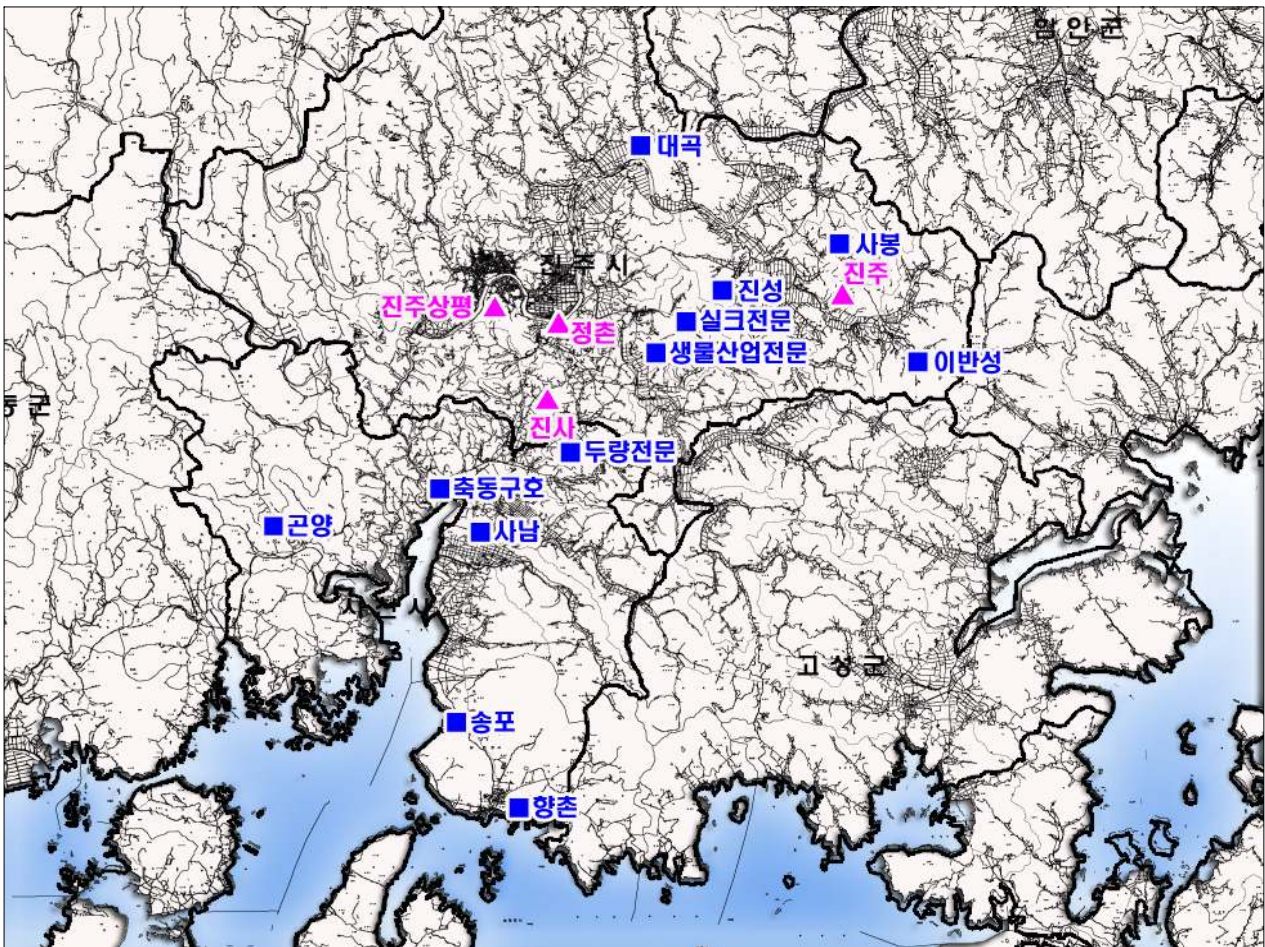
(표2-21) 서부경남권역(진주·사천)산업용지 현황

(단위:천㎡)

지역	단지명	지정 면적	분양 대상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개별입지	
							면적	공장수*
진주시	진주상평일반	2,135	1,593	1,593	1,593	-	784	771(3)
	진주(사봉) 일반	809	356	-	-	-		
	정촌일반	1,664	1,037	-	-	-		
	대곡농공	133	95	95	95	-		
	사봉농공	150	110	110	110	-		
	이반성농공	141	111	111	111	-		
	진성농공	86	60	60	60	-		
	생물산업전문농공	148	86	-	-	-		
	실크전문농공	133	95	-	-	-		
	소계	5,399	3,543	1,969	1,969	-		
사천시	사천제1일반	2,555	1,975	1,969	1,969	-	3,803	394
	사천제2일반	1,617	1,161	1,161	1,161	-		
	곤양농공	84	58	58	58	-		
	사남농공	568	481	481	481	-		
	송포농공	104	83	83	83	-		
	두량전문농	118	90	90	90	-		
	향촌농공	262	195	-	-	-		
	축동구호농공	100	88	-	-	-		
	소계	5,408	4,131	3,842	3,842	-		
합계		10,807	7,674	5,811	5,811	-	4,587	1165(3)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 : ()는 휴업공장수.



(그림2-9) 서부경남권역(진주·사천) 산업단지 현황도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사천송포농공단지

6) 서남부경남권역(하동·산청)

- 하동군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하동지구에서 대송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음
- 반면 이미 완료된 농공단지 중 유치업종의 특성상 휴업기간이 장기화되어 단지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공동화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음
- 산청군은 계획입지면적 268천㎡중 47.6%가 조성완료 되었으며 미착수 중인 금서·금서제2농공단지외에도 산청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추진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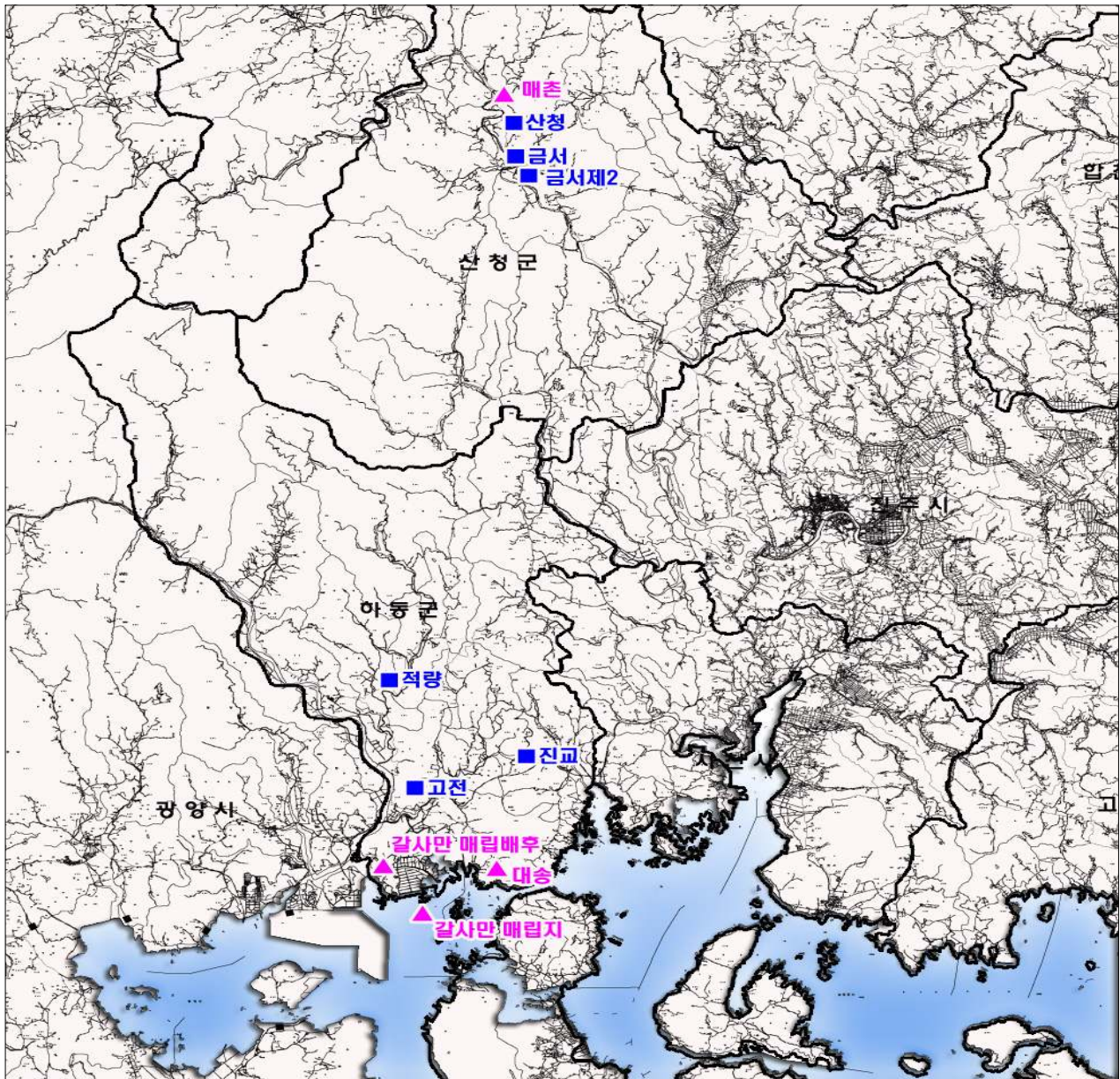
(표2-33) 서남부경남권역(하동·산청)산업용지 현황

(단위:천㎡)

지역	단지명	지정 면적	분양 대상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개별입지	
							면적	공장수*
하동군	대송산업단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992	723	-	-	-	463	95 (4)
	갈사만매립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3,967	3,019	-	-	-		
	갈사만매립 배후지역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2,314	1,655	-	-	-		
	고전농공	83	57	57	57	-		
	적량농공	75	49	49	49	-		
	진교농공	138	97	-	-	-		
	소계	7,569	5,600	106	106	-		
산청군	금서농공	156	118	118	118	-	354	90
	산청농공	112	85	85	85	-		
	소계	268	203	203	203	-		
합계		7,837	5,803	309	309	-	817	185 (4)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 : ()는 휴업공장수.



(그림2-10) 서남부경남권역(하동·산청) 산업단지 현황도



하동적량농공단지



산청일반산업단지 예정지2

7) 남부해양경남권역(거제·통영)

- 거제시의 개별입지면적이 김해시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계획입지중 현재 조성완료된 단지는 없음
- 그러나 조선 및 해양플랜트 등과 같은 단지 개발로 산업단지가 활황을 맞고 있으며 계획입지 총면적 중 국가산업단지가 약96%를 차지하고 있음
- 통영시는 안정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최근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확대 개발사업을 추진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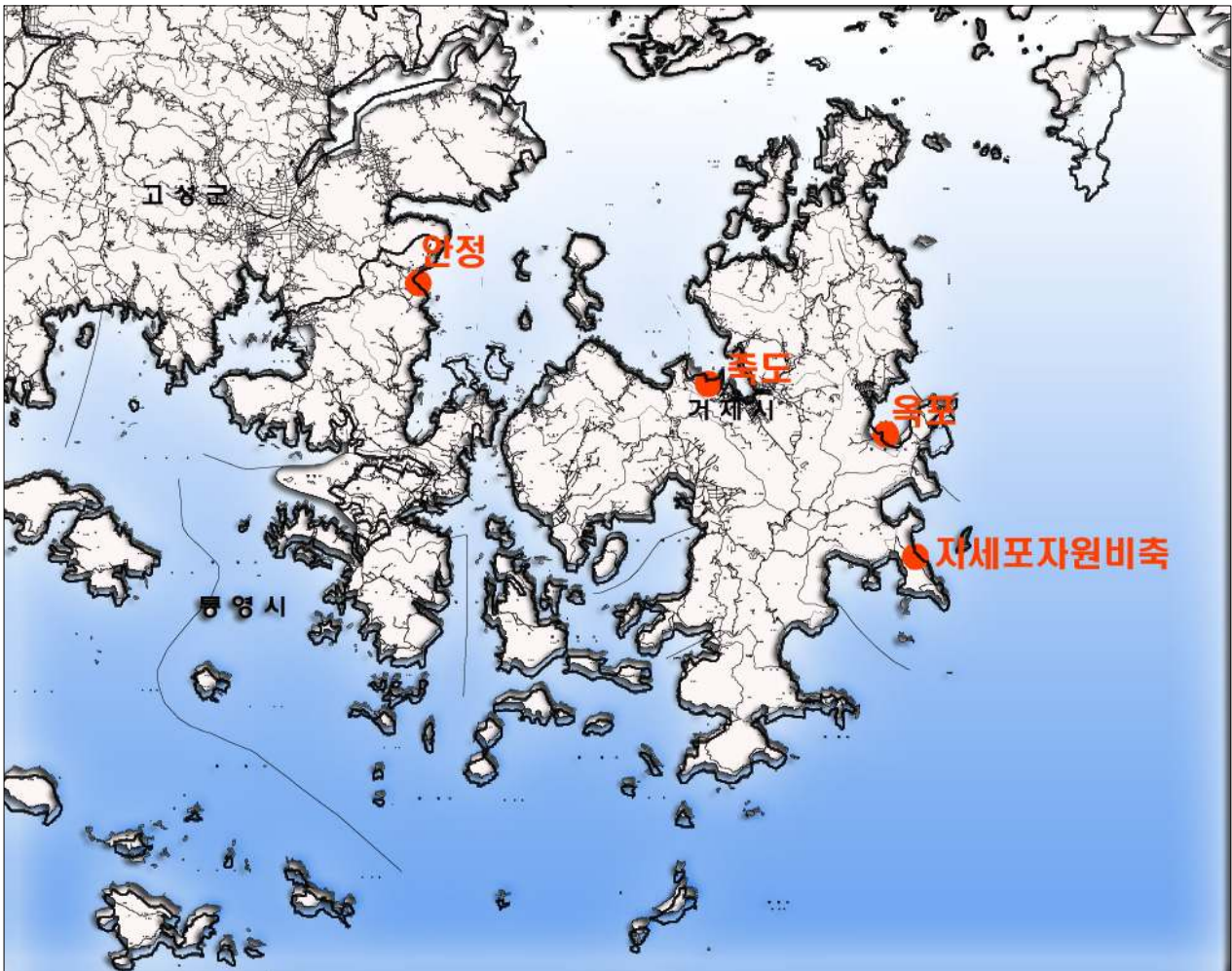
(표2-23) 남부해양경남권역(거제·통영)산업용지 현황

(단위:천 m²)

지역	단지명	지정 면적	분양 대상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개별입지	
							면적	공장수
거제시	옥포국가	6,167	4,002	3,787	3,787	-	6,531	126
	죽도국가	3,577	2,764	2,405	2,405	-		
	지세포 자원비축	2,927	968	968	968	-		
	오비일반	194	151	-	-	-		
	한내조선특화농공	280	222	-	-	-		
	소계	13,145	8,107	7,160	7,160	-		
통영시	안정국가	3,776	3,016	2,254	2,254	-	503	171
	소계	3,776	3,016	2,254	2,254	-		
합계		16,921	11,123	9,414	9,414	-	7,034	297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 : ()는 휴업공장수.



(그림2-11) 남부해양경남권역(거제·통영) 산업단지 현황도



거제옥포국가산업단지

거제죽도국가산업단지

통영안정국가산업단지

8) 서부해양경남권역(남해·고성)

- 고성군의 계획입지면적은 614천㎡로 약60%가 조성완료 되었으며, 또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한 조선산업특구 추진중에 있음
- 남해군은 공장 개별입지가 주로 영세업체이며 가내수공업위주의 공장이며 가동기간에 비해 장기간 휴업하는 현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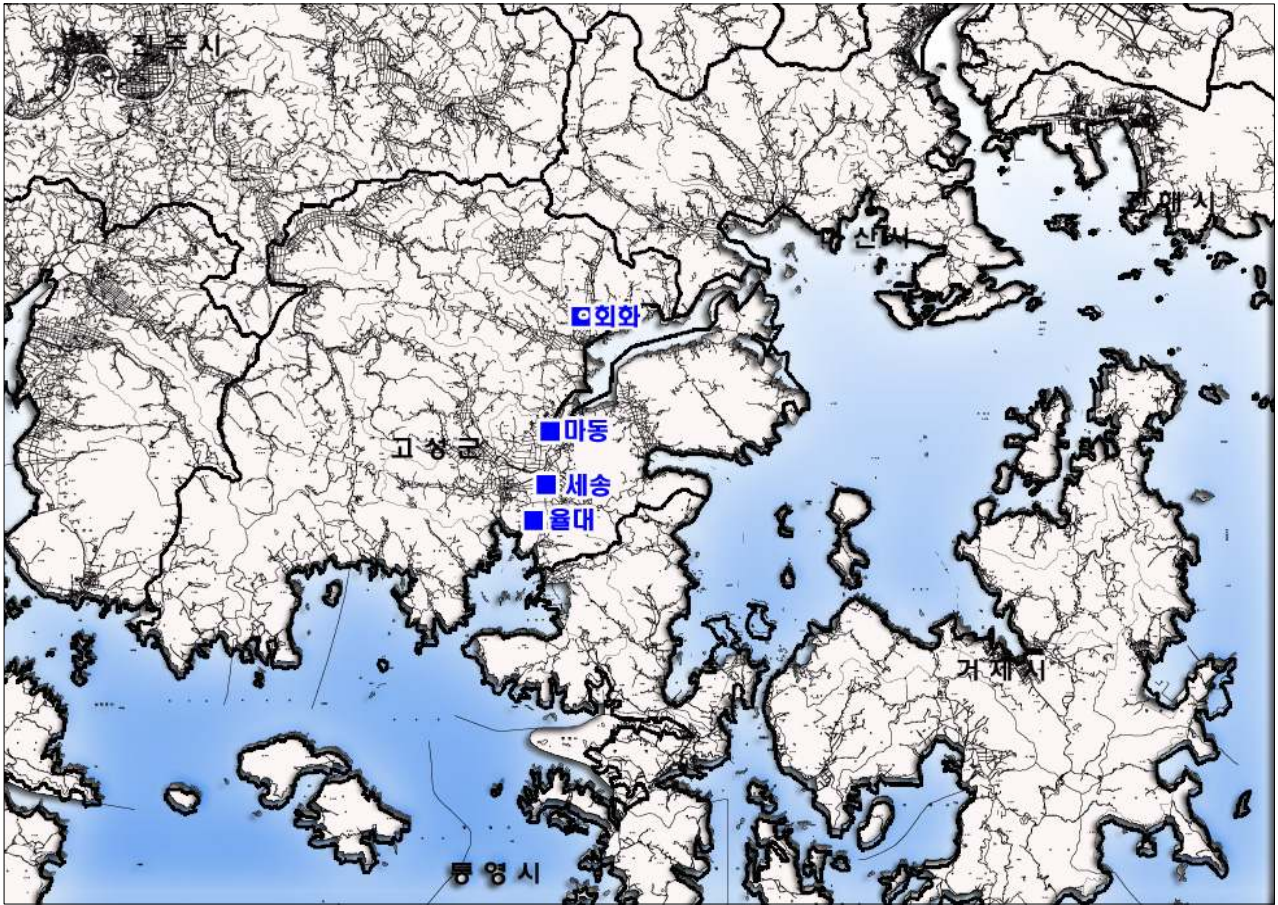
(표2-24) 서부해양경남권역(남해·고성)산업용지 현황

(단위:천㎡)

지역	단지명	지정 면적	분양 대상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개별입지	
							면적	공장수*
고성군	울대농공	110	82	82	82	-	126	53
	회화농공	92	78	78	78	-		
	세송농공	133	109	109	109	-		
	마동농공	279	218	-	-	-		
	소계	614	487	269	269	-		
남해군	고현농공	59	48	48	48	-	921	126(5)
	소계	59	48	48	48	-		
합계		673	535	317	317	-	1,047	179(5)

자료)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 : ()는 휴업공장수.



(그림2-12) 서부해양경남권역(남해·고성) 산업단지 현황도



남해 조선산업단지 조성계획 조감도



고성 율대농공단지

9) 서북부경남권역(거창·함양·합천)

- 거창군은 총 1,280천㎡ 계획입지하고 있으며 승강기 산업클러스트 산업단지 100만평(3,305.8천㎡) 계획중에 있음
- 함양군은 1,491천㎡가 계획입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함양일반산업단지 795천㎡, 안의제2농공단지 271천㎡가 미개발 상태임
- 합천군은 총 442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최근 야로농공단지는 섬유 제조업의 전반적인 하향세에 따른 것으로 휴업 및 폐업하는 공장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며 추가로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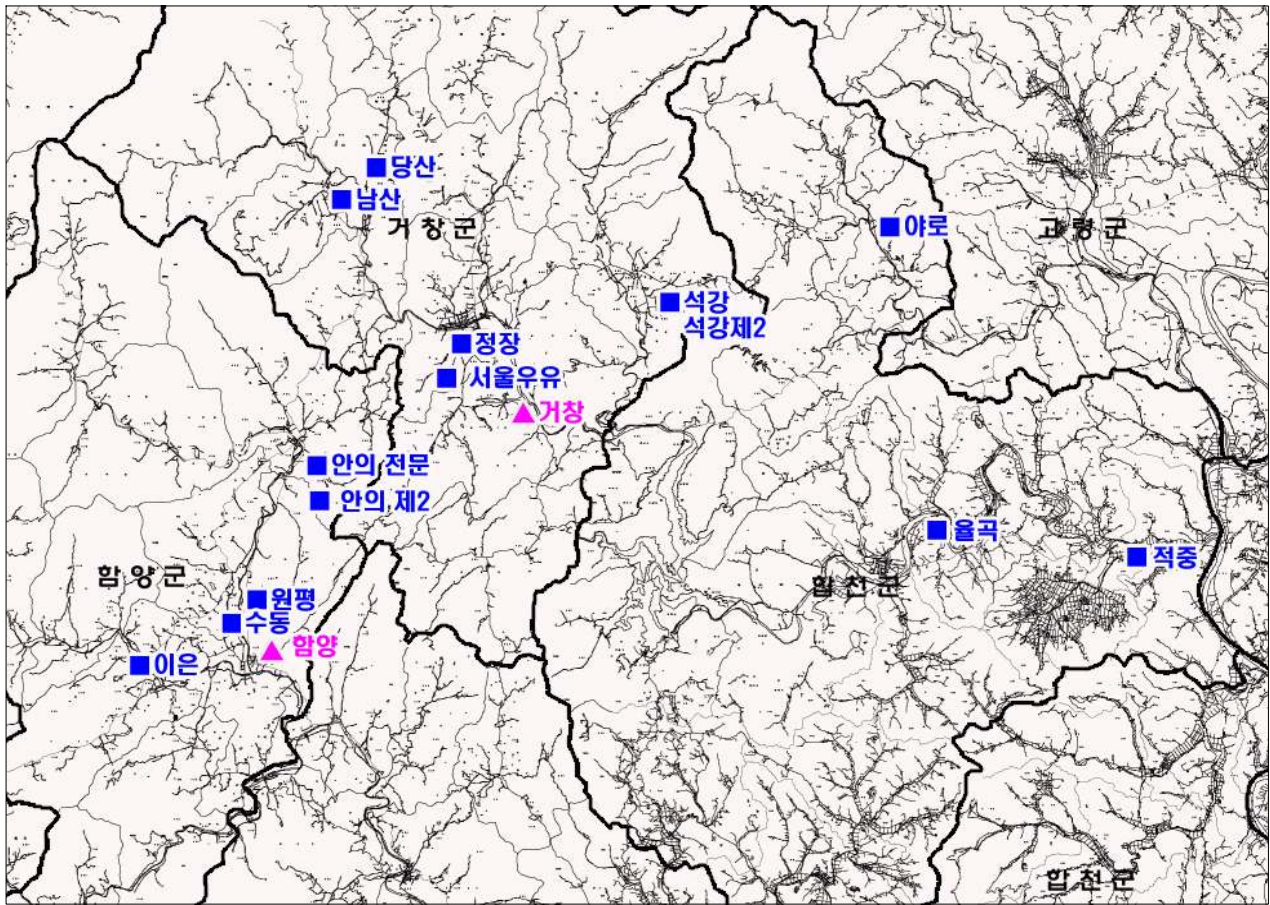
(표2-25) 서북부경남권역(거창·함양·합천)산업용지 현황

(단위:천㎡)

지역	단지명	지정 면적	분양 대상면적	개발 면적	분양	미분양	개별입지	
							면적	공장수*
거창군	거창일반	726	478	-	-	-	314	107
	석강농공	152	127	127	118	9		
	남산농공	154	122	120	120	-		
	당산농공	103	90	82	68	14		
	정장농공	52	46	45	45	-		
	서울우유농공	93	56	56	56	-		
	소계	1,280	919	430	407	23		
함양군	함양일반	795	424	-	-	-	528	122
	수동농공	102	90	90	90	-		
	이은농공	40	34	34	34	-		
	원평농공	136	112	112	112	-		
	안의전문농공	147	132	129	129	-		
	안의제2농공	271	195	-	-	-		
	소계	1,491	987	365	365	-		
합천군	야로농공	114	95	95	95	-	382	124(1)
	울곡농공	234	190	190	190	-		
	적중농공	94	80	80	80	-		
	소계	442	365	365	365	-		
합계		3,213	2,271	1,160	1,137	23	1,223	353(1)

자료)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자료(2008년 3월)

* : ()는 휴업공장수.



(그림2-13) 서북부경남(거창·함양·함천) 산업단지 현황도



함양일반산업단지



함양원평농공단지



제3장 산업입지정책 및 공급규모 변화 추이

- ① 시기별 산업입지 정책
- ② 산업입지 공급변화 추이
- ③ 산업입지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 ④ 산업입지 활성화 사례
- ⑤ 첨단산업단지의 사례

제3장 산업입지정책 및 공급규모 변화 추이

1 시기별 산업입지 정책

1. 산업입지 정책의 역사

1) 1960년대

① 정책배경

-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기존의 산업시설들이 대부분 파괴되어 생산활동이 극히 저조한 상태였음. 미국의 무상원조를 토대로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농공생산시설의 복구 등 전후복구사업에 힘쓰고 있었으나 경제상황은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었음
- 정부는 이러한 취약한 국가경제기반을 타개하기 위해 제1차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
- 제1차경제개발계획은 1962년~1967년까지 5개년계획이었으며 사회경제악순환 시정과 자립경제개발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추진함
- 제1차경제개발계획에서는 주요 국토건설사업으로는 치수사업, 건설사업, 도로사업, 울산·진해·부산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등을 제시하였음

② 주요정책 및 입지특성

- 정부는 자립경제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 수출지향의 성장우선정책을 추진하였고 그 수단으로 비교우위를 지니는 노동집약적 경공업 등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였음
- 1960년대 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대부분 1차산업 중심이었으므로 자본과 기술이 취약했던 당시로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주력산업이 될 수 밖에 없었음
- 경공업의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일교포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입지조건에 있어 상대적 우위를 갖는 특정지역에 공업단지를 조성하였음
- 이 시기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수출산업 공업단지 조성법 제정(1964년)되었고 이 법에 의해 서울 구로구의 한국

수출산업공업단지를 비롯하여 인천의 부평과 주안 등 6개의 수출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음

- 또한 정부는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초의 산업단지인 울산공업단지 건설사업을 직접 추진하였음. 울산공업단지는 초기단계에서 석유화학공단으로 시작하여 자동차조선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화학 산업단지로 발전하였음
- 한편 정부의 경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지방의 인구와 자본·기반시설 등이 수도권에 비롯한 일부 특정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과밀지역의 제조업 활동 분산과 지방의 공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도시에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시작하였음
- 그리고 1도 1산업단지 조성방침에 의거 도청소재지 도시에 공업단지 개발을 추진하였음. 지방의 산업단지들은 1966년 상공부와 각 시도 등 지자체의 주도로 개발되었으며 이에 지방 중소토착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 산업입지에 있어서는 1960년대 중반까지 토지이용 규제 미비로 기존의 공업지대인 경인지역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지역에 개별입지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졌음
-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민간기업의 개별입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대두되었으며, 제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과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합리적 이용 도모라는 주장의 타협방안으로 영등포기계공단, 한국합성수지공단, 인천기계공단, 인천비철금속공단, 한국제재공단과 같은 민간산업단지가 조성되었음
- 1960년대 공업용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민간주도로 개발)과 특별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정부의 전폭적 지원으로 개발)로 공업용지가 공급되었음

2) 1970년대

① 정책배경

- 1970년대 유가파동 등의 국제적인 자원파동과 값싼 노동력을 토대로 한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우리나라는 대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였음
- 또한 대내적으로는 경공업 위주의 개발이 단기적으로 생산확대와 수출증대에 기여했지만 원료, 자본재, 자본의 대외 의존을 심화시켜 수출증대가 곧 국제수지 적자폭의 확대를 가져오는 모순을 초래하였음
- 한편 60년대 산업기반조성시기를 거치면서 기반시설·시장·금융 등의 입지조건이 유리한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 많은 공장들이 집중함에 따라 수도권집중 억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지방에서는 1970년대 들어와 투기붐 분위기가 가라앉고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감소함에 따라 선분양 후개발 방식의 재원조달계획에 차질을 받게 됨으로써 산업단지 조성은 지연 또는 중단되고 대규모 미분양사태가 발생하였음
- 1970년대에 들어서서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1972년부터 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추진된 제1차 국토계획이 수립되었음. 제1차 국토계획은 고도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산기반의 구축에 초점을 맞췄으며 정부축 중심의 투자가 이루어졌음

② 주요정책 및 입지특성

- 1970년초 경공업의 대외경쟁력 약화와 무역수지 구조적 모순으로 정부의 산업육성정책은 철강·비철금속·조선·기계·전자·화학 등 6개 업종을 주로 하는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으로 전환되었음
-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전략으로 규모의 경제를 채택하고, 규모의 대형화에서 파생되는 국내시장의 협소에 따른 제품판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중화학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였으며, 연관산업을 집단적으로 유치·개발하기 위한 산업기지화 계획을 마련하였음
-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중화학기획단 등 특별기구 설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년) 제정 등 임해지역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을 지정하여 국가

주도하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였음

- 중화학공업 중점육성정책에 따라 동남해안지역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여 70년대 후반기에 포항·울산·부산·마산·창원·여천을 잇는 동남해안 산업벨트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음
- 한편 지방의 공업기반조성 시책은 재원의 부족으로 지방도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을 빚게 되자 1973년부터 정부가 일반산업단지조성에 직접 참여하여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였음
- 또한 수도권으로 집중하는 인구와 산업을 지방에 묶어두기 위하여 지방 공업개발법을 제정하여 지방도시에 「지방공업개발 장려지구」를 지정하여 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였음
- 이와 더불어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국고보조와 기채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재정 투·융자 실시 등 각종 재정지원 및 지방세법을 개정해 조세감면 제도를 정비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 실시, 지방공업개발법 제정으로 인해 기반시설, 입주기업 세제혜택 등 국가지원체제가 확립되었음
- 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에 대한 중과세 제도를 도입, 지방이전 업체에 대한 면세조치, 수도권내 공업지역의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업배치법이 1977년 제정, 수도권 공업집중 억제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졌으며 반월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수도권지역의 부적격공장과 용도지역 위반 공장을 대상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음

3) 1980년대

① 정책배경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난 20년간 정부주도에 의한 고도성장정책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문간의 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은 비효율을 초래하였음
- 특히 석유파동 등의 원자재가격 폭등과 1970년대의 무리한 중화학공업 투자부담 때문에 1980년대초 높은 인플레이와 경기후퇴를 겪게 되었음
- 1970년대의 중화학공업육성 정책으로 인해 대규모 제조업은 포항(철강)·울산(비철금속)·여천(화학)·울산(조선)·거제(조선)·창원(기계)·구미(전자)

등 동남해안의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등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었음

-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토정책은 성장지원보다는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두었음. 한편 고도성장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음

(표3-1) 제2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기본목표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의 지방정착 유도 ◦개발가능성의 전국 확대 ◦국민복지수준의 제고 ◦국토자연환경의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다핵구조 형성 ◦지방생활권 조성 ◦서울·부산 양 대도시의 성장억제 및 관리 ◦지역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낙후지역의 개발촉진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

② 주요정책 및 입지특성

- 서울과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와 산업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음
- 지역개발전략도 28개 지역생활권을 설정하고 지방도시 육성을 위해 지방공단 조성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표방하면서 중부권 지역에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입지기반을 강화하여 중소규모의 산업단지를 집중 개발하는 한편 서해안에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에 착수하였음
-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한 농촌의 공업 개발은 입지에 있어 개별적이고 분산적이며 기반시설과의 연계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 1981년 정부에서는 ‘농외소득원 개발 사업단’을 설치하고 1983년 농외소득제고를 위한 농공단지의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 소득원개발촉진법」이 제정·시행되었음
- 정부에서는 이 법률에 근거하여 농어촌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농공단지를 농어촌생활권별로 조성하여 인구흡인력을 고양하고 농어촌 소득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농어촌 지역에 저렴하게 공업용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조세 및 금융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같은 종합적 지원을 추진하였음

- 1984년 시범단지 조성이후 1986년부터 농공단지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기본목표는 공업개발여건이 불리한 낙후 농어촌지역에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공업도입을 촉진함
- 농공단지의 개발시에는 농공단지가 입주한 시·군의 총량면적규제와 개별 단지 면적규제가 동시에 적용됨
- 또한 1990년 산업단지의 체계적 개발과 지원을 위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의 개발 및 지원법을 제정하였음
- 1980년대 후반부터 수도권지역에 공장건설 억제와 용도지역 위반의 공해산업의 분산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였음
- 한편 19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조정으로 산업단지의 유희면적이 증가하자 산업단지개발이 대규모 단지개발에서 벗어나 중소기업단지의 육성을 추진하였음
- 1982년 「중소기업진흥법」이 제정되어 대도시에서 이전하여 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및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국세 감면조치를 취하는 등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방유치를 위한 관련 근거법을 마련하였음
- 수도권에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 공장 신·증설 규제, 서울 근교 공업지역의 신규지정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도권에 대한 직접적 규제를 실시하였으며 인천의 남동산업단지와 시화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부적격공장의 이전을 추진하였음

4) 1990년대

① 정책배경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외적으로는 개방화·국제화·정보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기술경쟁의 심화, 지역경제 블록화의 확산 등으로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커다란 과제로 대두되었음

- 또한 1990년대 중반이후 경제 전반에 걸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심화와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후발개발도상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산업경쟁력 저하를 초래하였음
- 중화학공업육성계획에 의한 성장위주의 공업화 추진으로 인해 항만·도로·철도·용수 등 인프라 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수도권과 동남권에 공업이 집중 배치되었음
- 이러한 일부지역에의 공업집중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였고, 개별기업들은 집적의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입지하는 것을 선호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었음
- 공업의 특정지역 집중육성과 공장유치를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조성정책은 그동안의 급속한 공업성장에 큰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지만 지역간 불균형 성장에 따른 과밀과대문제, 집중지역의 자원부족 및 낙후지역의 산업입지에 대한 진입장벽·지역주민간의 위화감형성 문제 등이 발생하였음
-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을 도모함으로써 산업구조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하였고 이러한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로 인해 기존의 전통제조업에서 첨단정보통신 및 컴퓨터 관련산업 등 소위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음

② 주요정책 및 입지특성

- 1990년 1월에는 「산업기지개발촉진법」·「지방공업개발법」·「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 등으로 다분화되어 있던 산업입지 관련 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로 통합하였음. 그리고 「공업배치법」·「공업단지관리법」·「수출자유지역설치법」 등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였음
- 1994년 지역균형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이 법에서는 성장거점 조성 및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광역권 계획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으며 특정지역 개발을 위한 개발촉진지구제도는 이 법으로 통합되었음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동서남해안을 따라 U자형으로 개발하고 이를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주·목포권, 광양만권, 부산권, 대구·포항권, 대전·청주권 등 7개의 광역개발권역으로 구분하여 고려한 산업입지 정책을 수립하였음
- 대중국관계의 개선에 따라 그동안 낙후되었던 서해안지역 개발에 대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서해안신산업지대 개발을 촉진하고자 대불, 군장, 아산 등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하였음
-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989년 과기처의 「전국적 기술지대망 계획」과 상공부의 「첨단산업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지역별 거점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 네트워크 구축하는 지방첨단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음
- 정보통신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보화촉진기본법」, 기술에 바탕을 둔 기술기반 신생기업의 육성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고부가가치산업에 대한 제도도 마련되었으며, 산업입지 정책은 산업정책과의 관련 속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되었음

(표3-2) 우리나라 산업입지 정책의 변화과정

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정책대상	◦계획입지 개발시도	◦수도권내 산업 집중	◦지역적 불균형 심화	◦개별입지 증대 ◦첨단산업입지 공급	◦지식기반산업입지 공급 ◦기존단지의 경쟁력 제고
정책기조	◦수출위주 경공업의 입지	◦수도권 억제 ◦대규모 산업단지조성	◦산업단지 내실화 ◦농공단지 개발	◦입지유형의 다양화 ◦입지구제 완화 ◦구조조정 촉진	◦전문화된 집적 지구 ◦지식기반경제구축지원 ◦산업단지 클러스터 사업추진
관련법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 ◦기계공업진흥법 ◦조선공업진흥법 ◦전자공업진흥법	◦지방공업개발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중소기업진흥법 ◦농어촌소득원 개발촉진법 ◦공업발전법	◦산업입지법 ◦공업배치법 ◦국토이용관리법개정 ◦산업기술단지지원 특별법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 ◦문화산업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고	◦울산공업센터 조성 ◦수출산업단지 조성	◦지방공업개발장려 지구 ◦동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수출자유지역개발	◦서남권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개발 ◦아파트형 공장 조성	◦산업단지 명칭 변경 ◦개발절차 간소화 ◦개별입지 증대 ◦테크노파크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클러스터시범단지

2 산업입지 공급변화 추이

1. 산업입지 변화추이

1) 부지면적 증가추세 둔화

- 공장부지 면적 증가율이 1981년~2003년간 연평균 3.7% 증가함
- 공장부지의 순증가 면적은 지난 22년간(1981~2003) 총 287.0km²로 년평균 13.0km² 증가함
- 그러나 최근 들어 증가추세가 크게 둔화됨. 1981년~1991 4.9%, 1991년~2003년간에는 2.8% 증가에 그침. 1981년~1991년간에는 매년 14.1km², 1996년~2003년간에는 매년 5.7km²의 증가에 그침

2) 공장용지의 토지이용 고도화

- 공장 건물연면적의 연평균(1981~2003) 증가율(11.8%)이 부지면적 증가율(3.7%)보다 큼
- 용적율이 1981년 24.5%, 1991년 33.7%에서 2003년에는 39.0%로 증가하여 토지이용의 입체화고도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3) 부지면적 원단위 감소

- 생산성 증가, 고부가가치화, 자동화 등에 힘입어 부지면적의 원단위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선진국형의 입지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생산액당 부지면적(m²/십억원)은 1981년 5,008.2에서 2003년에는 2,069.9로 매년 약 -8.7% 감소

(표3-3) 제조업 입지원단위 추이

구분		1981년	1986년	1991년	1996년	2003년	연평균 증가율(%)		
							'81~'91	'91~'03	'81~'03
사업체당 (m ² /개소)	부지면적	6,998.6	5,398.2	5,202.7	4,946.9	4,622.5	-2.9	-1.0	-1.9
	건물연면적	1,713.6	1,520.2	1,753.1	1,745.2	1,800.5	0.2	0.2	0.2
종업원당 (m ² /인)	부지면적	114.5	98.7	128.8	165.8	191.0	1.2	3.3	2.4
	건물연면적	28.0	27.8	43.4	58.5	74.4	4.5	4.6	4.5
생산액당 (m ² /십억원)	부지면적	5,008.2	2,939.1	1,826.5	1,195.6	792.1	-9.6	-6.7	-8.0
	건물연면적	1,226.2	827.7	615.4	421.8	308.5	-6.7	-5.6	-6.1
부가가치당 (m ² /십억원)	부지면적	15,180.3	8,218.8	4,350.1	2,758.5	2,069.9	-11.7	-6.0	-8.7
	건물연면적	3,716.8	2,314.5	1,465.8	973.2	806.2	-8.9	-4.9	-6.7

자료 : 건설교통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2007.10)

2. 산업단지 개발현황

1) 전국의 산업단지

- 2008년 9월기준 국토해양부·국토연구원의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에는 35개의 국가산업단지³⁾와 262개의 일반산업단지·4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 그리고 363개의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음
- 35개의 국가산업단지 중 국토 동남권에는 부산1개·울산2개·경남7개의 10개 단지 154,700천㎡가 개발되어 있어 이는 전체 국가산업단지 면적 855,901천㎡중에서 18.1%에 달하고, 수도권에는 7개 단지 266,571천㎡로 전체 면적의 31.1%가 분포하고 있음
- 262개의 일반산업단지 중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에 82개 단지에 36,323천㎡가 개발되어 있어 전체 일반산업단지의 약 12.2%가 입지하고 있고, 동남권에는 41개(부산10·울산7·경남24)가 지정되어 19.2%를 점유하고 있음
- 국가일반산업단지의 전체면적 중에서 지역별 분포를 보면, 경기도가 282,153천㎡ 24.4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전남이 213,028천㎡ 18.4%, 경남이 102,773천㎡ 8.9%의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경북·전북·울산·충남·대전의 순을 보임
- 분양률의 경우 국가일반산업단지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97.5% 정도의 높은 분양률을 보이며 수도권·동남권에 입지한 산업단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률 높음
- 이는 지금까지는 중후장대형의 산업이 경제성장을 이끌어 옴에 따라 이러한 산업입지에 유리한 지역의 산업단지가 비교적 잘 분양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음
- 그러나 앞으로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와 지식기반산업·문화산업·바이오산업 등이 부상하는 등 산업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산업입지에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3) 국가산업단지 중 제조시설이 없는 단지는 제외 : 고정국가·대죽자원비축기지·월성원전·지세포자원비축기지 등 총 5개 단지.

(표3-4) 전국의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 현황

(단위:천㎡·%)

시도	유형	단지수	비율 (%)	지정 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가		35개	100	855,901	532,644	255,293	227,832	222,241	5,591	97.5
일반		262개		298,896	296,190	183,547	115,547	109,901	5,646	95.1
도시첨단		4개		502	493	219	59	48	11	81.4
서울	국가	1	0.2	1,982	1,982	1,500	1,500	1,500	-	100.0
	일반	1		156	155	132	132	132	-	100.0
부산	국가	1	2.3	8,844	6,972	4,317	4,317	4,317	-	100.0
	일반	10		17,799	17,005	9,209	5,388	5,377	11	99.8
대구	일반	11	2.5	29,226	28,039	15,424	11,734	11,630	104	99.1
인천	국가	2	1.6	11,320	11,319	7,392	7,392	7,392	-	100.0
	일반	7		7,283	7,378	4,159	2,890	2,661	229	92.1
광주	국가	1	2.1	9,992	4,491	2,709	1,975	1,794	181	90.8
	일반	6		14,328	14,051	9,485	8,066	7,986	80	99.0
대전	국가	1	6.2	70,417	70,413	6,273	5,969	5,969	-	100.0
	일반	2		1,256	1,256	977	977	977	-	100.0
울산	국가	2	7.2	73,645	65,338	48,593	45,987	43,723	2,264	95.1
	일반	7		9,263	9,263	5,180	692	692	-	100.0
경기	국가	4	24.4	253,269	51,339	28,203	27,725	27,725	-	100.0
	일반	74		28,884	28,270	18,284	14,089	13,682	407	97.1
강원	국가	1	0.7	4,030	1,873	1,137	1,002	1,002	-	100.0
	일반	9		4,333	4,332	2,644	2,346	2,044	302	87.1
	첨단	1		196	196	94	-	-	-	-
충북	국가	2	3.3	8,810	7,895	2,811	2,452	1,915	537	78.1
	일반	22		29,442	29,392	16,001	12,514	12,035	479	96.2
	첨단	1		51	43	22	22	11	11	50.0
충남	국가	5	6.9	36,627	34,850	23,478	8,492	8,492	-	100.0
	일반	31		43,118	43,128	27,776	17,936	16,330	1,606	91.0
전북	국가	3	7.6	65,586	22,993	16,282	16,282	14,663	1,619	90.1
	일반	14		22,289	22,350	15,128	14,141	14,019	122	99.1
	첨단	1		110	109	37	37	37	-	100.0
전남	국가	4	18.4	171,700	143,645	54,307	47,908	47,792	116	99.8
	일반	17		41,328	41,384	26,796	5,950	5,433	517	91.3
경북	국가	4	7.5	66,371	64,630	30,510	29,568	28,800	768	97.4
	일반	27		19,774	19,769	13,522	9,549	8,072	1,477	84.5
경남	국가	7	8.9	72,211	43,988	27,349	26,985	26,985	-	100.0
	일반	24		30,417	30,418	18,830	9,143	8,831	312	96.6
	첨단	1		145	145	66	-	-	-	-
제주	국가	1	0.1	1,096	916	432	278	172	106	61.9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2008.1분기)

- 전국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502천㎡가 지정되었으며 강원도의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가 196천㎡, 경상남도의 경남지능형융합산업도시첨단 산업단지가 145천㎡ 순으로 산업용지가 입지하고 있음

(표3-5) 전국의 도시첨단산업단지

(단위:천㎡,%)

시도	시·군구	단지명	조성 현황	지정 면적	관리 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 면적	분양 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도시첨단산업단지				502	493	219	59	48	11	81.4
강원	춘천시	춘천도시첨단문화	미개발	196	196	94	－	－	－	－
경북	청주시	청주도시첨단문화	조성중	51	43	22	22	11	11	50.0
전북	전주시	전주도시첨단	조성중	110	109	37	37	37	－	1000
경남	마산시	경남지능형융합산업도시첨단	조성중	145	145	66	－	－	－	－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2008.1분기)

2) 농공단지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해당 시장·군수가 지정·개발하는 산업단지임
- 2008년 9월 현재 전국 363개 57,374천㎡가 농공단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산업단지 전체면적에서 약 4.7%에 불과함
- 이들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도지역에 입지하고 있고, 충남지역(75개)이 가장 많이 입지하고 있으면서 다음으로 경남(65개)·경북(55개)·전남(43개)·충북(41개)의 순으로 입지하고 있음

(표3-6) 전국의 농공단지현황

(단위:천㎡·%)

지역별	단지수	비율 (%)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합계	363	100	57,374	57,260	45,090	41,249	40,524	725	98.2
부 산	1	0.4	258	259	189	189	189	-	100.0
대 구	2	0.6	354	352	284	284	284	-	100.0
광 주	1	0.6	324	324	262	262	262	-	100.0
울 산	4	1.0	595	595	457	457	457	-	100.0
경 기	1	0.2	117	117	96	96	96	-	100.0
강 원	30	8.6	4,950	4,937	3,674	3,395	3,124	271	92.0
충 북	41	9.6	5,481	5,476	4,597	4,367	4,340	27	99.4
충 남	75	20.2	11,617	11,584	9,018	8,587	8,507	80	99.1
전 북	42	12.2	7,001	6,981	5,615	4,890	4,881	9	99.8
전 남	43	13.4	7,685	7,677	6,045	5,346	5,196	150	97.2
경 북	55	15.8	9,085	9,091	7,126	7,005	6,904	101	98.6
경 남	65	16.7	9,594	9,554	7,487	6,131	6,044	87	98.6
제 주	3	0.6	313	313	240	240	240	-	- 100.0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2008.1분기)

3) 산업단지 유형별 변화 추이

- 현재 국가산업단지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70.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1990년대 이후 국가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급격히 감소함
- 1990년대 지정된 산업단지 면적 중 국가산업단지 면적은 19.2%에 불과한 반면,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지정면적 80.8%를 차지하고 있음
- 총 증가분 중 일반산업단지 비중이 1980년대에는 10.7%에서 1990년대에는 69.7%로 증가함

3 산업입지 정책과 제도의 문제점

1. 산업입지 정책의 문제점

- 산업입지 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공급자 위주(공공부문 주도)의 산업입지 공급인데 이는 산업입지 공급이 시장원리에 충실하지 못한 결과 공급된 산업입지는 미분양되고, 기업은 용지가 부족한 상태로 지역특성 및 산업 특성에 대한 배려 미흡으로 인해 산업입지 공급과 수요지역의 불일치로 지역별 과부족 현상이 발생하였음
- 아울러 편중된 산업입지개발로 인한 지역격차를 초래하였음.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된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 집중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산업단지 개발의 동남권 및 수도권 편재로 인한 인구 및 산업의 경부축 집중이 심화되었음

(표3-7) 주요국의 산업단지 개발방식

구분	개발방식	개발주체	기타
영국	민간개발 중심	◦부동산개발업자 ◦도시개발공사 및 EP	◦공영개발은 주로 낙후지역개발 ◦지방정부가 지역내 산업단지 개발 적극적
미국	민간개발 중심	◦부동산개발업자 ◦county, 경제개발공사	◦지방정부가 산업단지 개발 추진 ◦연구단지개발은 공영개발 주도
일본	공영개발 중심	◦지방자치단체 ◦지역진흥정비공단	◦지역진흥정비공단은 주로 대규모 단지개발
대만	공영개발 중심	◦중화공정공사 ◦대만 토지개발공사	◦민간개발 비율 약 10%

- 둘째,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지수요 대응미흡인데, 즉 다양한 산업입지 수요에 대한 대응 미흡임. 공장용지 공급위주의 산업입지 개발로 다양한 산업입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물적 기반시설 위주의 입지공급으로 생산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부문과의 연계가 미흡하였음
- 셋째, 입지의 고비용구조와 지원미흡임. 높은 용지가격으로 고비용 구조를 초래하며, 산업입지 개발의 지원체계 미흡과 비경쟁체제에 따른 비효율성을 초래하였으며, 높은 용지가격과 분양위주의 방식은 계획입지의 문제점과도 연계됨

- 넷째, 산업입지 공급제도의 복잡성임. 부처별, 유형별 산업입지개발 체계가 복잡하며, 산업용지 공급체계 복잡으로 비효율성이 심화됨. 또한 지방의 경쟁적 입지개발 및 중앙의 조정기능이 미흡함
- 따라서 테크노파크, 벤처타운 등 첨단기술산업단지를 각 부처, 지자체가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공급하고 있어 수급과리 상태를 보이고 있음

(표3-8) 주요국의 산업단지 분양방식

구 분	토지		공장	
	임대	매각	임대	매각
한 국	-	◎	-	-
영 국	○	○	◎	-
미 국	○	◎	◎	○
일 본	-	◎	-	-
대 만	-	◎	-	○

주) 주방법 ◎, 보조방법 ○

(표3-9) 산업입지정책과 관련제도의 변화

문 제 점		주 요 내 용
공급자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입지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 미분양, 과잉공급의 초래 ◦ 공공위주의 개발방식 ◦ 편중된 산업입지개발로 지역격차 상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지수요 대응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산업입지 수요 대응 미흡 ◦ 국가, 지방, 농공단지 등 획일적인 공급 ◦ 유통, 판매, 연구 및 생산지원 기능 미흡 ◦ 용지공급 위주의 입지정책
입지의 고비용구조와 지원 미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용지가격으로 고비용 구조 초래 ◦ 산업입지 개발의 지원체계 미흡 ◦ 비경쟁체제에 따른 비효율성
산업입지 공급제도의 복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유형별 산업입지개발 체계 복잡 ◦ 산업용지 공급체계 복잡으로 비효율성 노정 ◦ 지방의 경쟁적 입지개발 및 중앙의 조정기능 미흡

2. 산업입지제도의 문제점

1) 계획입지제도의 문제점

- 첫째, 일부 산업단지는 복합단지유형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사례가 일부 있으나 산업정책, 입지개발, 공장설립 등이 긴밀하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둘째, 복잡다기한 제도와 관련업무의 산재임. 산업입지정책의 수립 및 집행기관이 다원화되어 있고, 산업입지법을 비롯한 다양한 관련제도가 존재함과 아울러 현행 산업단지개발 체계인 수요추정, 지정, 개발, 분양, 관리 등이 사업추진 단계별로 다원화됨에 따라 사업수행의 혼란과 지연 등을 야기하였음
- 셋째, 다른 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미비로 산업단지와 연계된 기반시설의 개발이 부진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성이 저하되었음

2) 개별입지제도의 문제점

- 첫째, 공장설립절차가 기본적으로 복잡하고 개별입지에 관련된 법규정이 여러개의 법률로 분산 규정되어 있는 등 관련업무 및 제도가 다원화되어 있고, 개별공장에 적용할 환경기준이 각종 환경관련법에 분산되어 있어 적용에 어려움이 따름
- 둘째, 개별입지를 집단화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높은 분양가로 인해 집단화 효과에 한계가 있음. 기존 집단화된 개별입지의 경우 환경, 난개발 등의 문제가 있으나 관리방안이 미흡하여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3) 산업입지 관련 제도의 문제점 종합

- 산업입지 관련 개발절차에서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양한 제도의 연계부족, 영향평가제도의 복잡 및 장기간 소요 등이며, 개별입지의 경우는 관련업무 제도의 다원화 등임
- 개발단계에서는 산업단지의 경우 공공위주의 개발방식, 단지의 획일적인 유형화 및 대규모 획지분할, 지원제도의 미흡 등임. 개별입지의 경우 환경기준의 미비, 산업입지개발지침의 낮은 실효성 등임
- 관리부문에서는 산업단지의 경우 높은 분양가, 선분양 후개발방식의 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증가, 비경쟁적인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임. 개별입지의 경우 지가상승과 난개발 확대, 사후관리의 현실적 어려움 등이 있음

4 산업입지 활성화 사례

1. 해외 산업입지 활성화 사례

1) 일본 : 오사카

① 오사카(大阪)시의 도시산업단지(CIT: City Industrial Town)

- 사업의 목적은 도시 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도시형 산업을 육성하며, 도시계획 측면에서 혼잡을 해소하는 데 있으며 공업지역내 공장이전적지를 도시개발자금으로 취득한 후 이를 소구획으로 분할하여 도시형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했음
- 이 과정에서 분양 공장의 수요, 부담능력 등을 사전에 검토했으며 오사카시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토지개발공사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업단지 및 테크노파크를 조성함
- 헤이야구내 공장전용지역인 공업단지의 예로 외곽도로의 교통부하를 줄이기 위해 이들 도로와 직접연계를 지양했으며, 외곽의 부지경계에 폭 1m의 녹지를 배치하였으며 영세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장구획을 248~661㎡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함
- 하역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전면을 도로로부터 4.5m~5m 후퇴시켜 배치하도록 했고, 이 경우 대상기업의 선정이 매우 중요한 입주조건을 도시형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혼재해소라는 목표의 달성이 어려워지고, 반대로 혼재정비의 실효성에 우선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하게 되면 분양상환능력이 확실한 기업과 일치시키기 어려웠음
- 오사카시의 CIT사업은 주공혼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진동·교통문제 등 도시환경개선효과와 이들 주공혼재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이 새롭게 개발되는 소규모 산업단지(CIT)에 입주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성화효과를 얻을 수 있음

② 도쿄(東京)시의 기타 가미야지구

- 가미야지구는 1960년대 중반부터 대규모 공장들이 이전함에 따라 이전적지의 발생,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노후가옥의 밀집 등의 문제가 제기되던 곳임

-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목표를 공업용지 일부를 대체지로 확보하여 세입자 등의 이주주택을 건설하고, 공단용지에 인접한 주거밀집지역의 환경개선을 도모하여 중소공장이 집적되어 있는 지구 남측은 공업지구, 북측은 주택지구로 설정하여 토지 이용의 순화를 도모하면서 혼합지구의 해소를 계획하고, 공업지구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여 주택과 인접해 있는 기존 공장이전을 유도함
- 정비사업과 단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그 파급효과가 주변 건물의 개선으로 나타나도록 했으며 시행구역은 주택지, 공업용지 및 인근 사유지를 포함하고, 개발주체는 기업조합, 도시주택정비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임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주택정비공단에 이전적지를 산업용지로 활용하도록 한 것은 산업단지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의 저하를 의미함. 이에 따른 보상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개발권의 이양임.
- 즉 용지를 아파트 부지와 아파트형 공장부지로 나누어 지역권을 설정하고, 아파트형 공장 면적을 뺀 잔여 용지를 아파트 부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권을 다른 부지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임

2) 영국의 정비사례

① 버밍햄의 공업개선지구(Industrial Improvement Area)

- 공업개선지구(I.I.A:Industrial Improvement Area)의 정책 목표는 부적절한 환경요소, 노후불량한 건물, 현재 여건에 적합지 못한 토지이용패턴의 결과로 쇠퇴하는 공업지역의 고용을 안정된 수준으로 유지,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업체면담조사를 통해 입증되도록 함
- 이러한 조사에 추가하여 I.I.A개념은 지역공업중심지등의 쇠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위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중심으로서 입지중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당해지역의 기업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그 결과로서 주변지역의 투자동기를 자극하게 된다는 것임
- I.I.A접근방식은 민간투자의 오인과 공공 투자의 극대화를 위한 자원집중을 위하여 기존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선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으로 I.I.A의 지정목적은 당해지역의 고용유지 및 창출, 투자지역으로서의 입지매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환경의 개선, 현재와 미래수요에 대응하기 위

한 공장의 개축, 개선과 함께 지역사회의 기본요건에 알맞은 상품과 서비스질의 유지임

② 런던의 도크랜드 지구

- 영국은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 내부에 대한 정책에 많은 변화를 주었음. 특히 민간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를 회복하고자 재정긴축을 통한 작은 추진과 동시에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를 철저히 시행하면서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을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함
- 런던 도크랜드지구는 1960년대 이후 선박의 대체교통수단인 항공, 자동차기술의 발달로 해상운송산업이 위축되고 영국경제가 쇠락하면서 항만시설이 유희화되고 실업자가 증가함
- 이에 따라 도심지역의 업무용건물 부족문제와 과밀화를 해소할 목적으로 런던 동쪽 8km에 위치한 템즈강 유역의 도크랜드 항만지구에 사무실, 주택, 상업, 어뮤즈먼트 시설나, 신교통, 통신시스템 등의 기능을 정비하여 공급하는 재개발계획을 수립함
- 도크랜드지구는 2001년을 목표로 고용인구 20만 명, 거주인구 12만 명을 수용함. 그러나 도크랜드 개발사업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 없으며, 사업 전반에 관한 기본 골격만을 설정하여 개발이 필요할 때마다 개발자와 협의를 통해 개발용도와 규모 등 상세한 내용을 결정함
- 따라서 한번에 획일적으로 세운 종합계획에 의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여건의 변화, 개발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구획마다 개성 있고 다양하며 유연한 개발이 가능함
-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LDDC(London Dock-lands Development Corporation)는 도크랜드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기본계획 작성, 토지이용 및 계획 인허가, 지역내 토지취득, 도시기반시설 정비, 토지의 매각 및 임대 등을 맡고 있음
- LDDC는 이러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전반에 관한 기본골격만 설정하고, 개별지역은 개발업자가 개발토록 하고 있음. 개발계획을 공모하여 개발업체를 선정하고,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개발회사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됨

- 도크랜드 4개의 주요 개발지역이 있는데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책으로 각국의 투자자와 기업 등을 유치하는데 성공함
- 도크랜드는 기업지구(Enterprise Zone)를 지정하여 일반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나 철광·조선·자동차 등 종래의 기간산업이 급속히 쇠퇴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함
- 기업지구의 부지는 다양한 규모로 대부분 공장이전적지 등 문제지역을 대상으로 지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경제활성화에 큰 효과를 미치고 있음. 지정 초기부터 1987년까지 영국의 23개 지역에서 약 4만명의 고용증가를 가져왔다.
- 영국의 성공은 시장주의와 규제완화가 근본이 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이 중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위험요소가 많은 실험적인 사업도 창의성 있는 아이디어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임
- 시민, 행정가, 기업의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도시의 재생사업을 추진하였고, 파트너십은 인력, 재정, 자원을 공동 출현하여 국가의 보조금을 청구하여 구성함
- 사업제안은 공개경쟁제로 선정하고, 지원지구를 설정한 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원자조직과 민간 섹터가 협조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실시함. 국고의 보조는 시민 자원봉사자 집단과 관으로 결성된 파트너십이 결성된 조직에 한하여 지급하였고, 기존의 관과 관의 로비, 정치력, 지역의 대정부 민원진정이 아니라 주민의 열의에 의해 사업의 추진되도록 유도함

3) 싱가포르 과학단지(Singapore Science Park)

-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사례는 주룽도시공사가 조성한 과학단지이며 공공에서 산업단지 개발 및 재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산업단지 재개발정책기구임
- 1980년대 이전 주룽도시공사의 가장 큰 역할은 적정 규모의 공업 용지를 공급하는 것이었으나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전으로 1980년대 이후의 산업단지 개발은 양적 공급의 확대라는 전통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어떻게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공업용지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인지에 관심을 두게 됨
- 기존의 산업과 새롭게 대두되는 첨단산업은 공간적 요구가 상이해 노동집약적 산업을 위해 설계되었던 아파트형 공장이나 표준공장으로 첨단산업의 입주에 적절하도록 재개발되어야 할 필요다 제기되었으며, 단지 내 토지이용의 방향도 보다 쾌적하면서도 집약적 이용으로 전환함
- 싱가포르 산업단지 재정비 사업은 1969년과 1970년대에 조성된 공단을 중심으로 주룽도시공사 소유의 노후화된 공단의 정비를 추진한 것으로 첫 단계는 Tanglin Halt공단의 재개발임. 1993년 3월 연면적 8,600㎡의 고층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하였고, 공단 내 토지이용의 변경과 더불어 다른 지역과 연결된 도로망을 구축함. 1997년 가용 토지가 부족한 싱가포르에서 주룽도시공사에게 보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권하는 계획을 발표함
- 산업용지계획21(Industrial Land Plan 21)은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장려하고 생산적 이용을 통하여 토지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계획임. 주룽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오래된 산업지역에 재건축되는 종합적인 재개발로서 기반 시설의 개선, 필지 규모나 형상의 개선 및 지원 서비스의 개선을 포함한 토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블록단위재개발(en-bliock redevelopment)프로그램을 도입함
- 블록단위재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토지의 경우 19ha의 토지를 22개 회사로부터 사들였고, 15ha는 임대가 끝난 5개 회사로부터 반환받았고, 2002년 임대가 끝난 표준공장 72,442㎡의 36%가 블록단위재개발 프로그램 하에서 재개발 대상으로 지정됨

①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시사점

- 싱가포르 과학단지의 혁신환경 창출이 부진한 원인으로 싱가포르 사회의 환경 및 경제 규모와 관계가 있음. 싱가포르 사회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기업을 창업하는 문화와 기업가 정신의 배양이 어려우며, 전반적인 기술 혁신의 확산과 시너지 효과 창출에 대한 기대가 낮기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이 주로 연구개발보다는 마케팅, 판매, 시장조사, 기술정보 수집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싱가포르 과학단지의 경우 과학단지의 물리적 개발과 관리·운영이 기술혁신 활성화와는 성격이 다른 활동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개발된 단지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기관들의 설립과 외부의 기존 혁신클러스터와의 네트워크 구축에 소홀하였던 점이 문제점임
- 그러나 싱가포르의 경우 과학단지의 전문성을 인식하고, 아센다스(Ascendas)와 같은 전문개발·관리회사를 성공적으로 설립·운영한 점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싱가포르 과학단지가 기관 형성 단계에서 성공하여 혁신환경 창출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노력을 필요할 것임

2. 국내 산업입지 활성화 사례

1) 서울디지털산업단지

① 사업추진 배경 및 조성과정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90년 말부터 지역 내의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산업기능을 연계한 첨단벤처산업의 군집을 목표로 첨단기술의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자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함. 이에 따라 1960년대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해 섬유 및 봉제 산업 위주로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정보지식형 산업, 대기업연구소, 벤처기업 등이 입주한 첨단 도시형 산업단지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음
- 구로공단으로 잘 알려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1964년부터 서울 구로동과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 총 60만 평 규모로 조성된 국내 산업단지 제1호로 1970~80년대 국가 경제 부흥의 상징으로 '수출 한국의 꽃'으로 불

리며 고속성장의 원동력 중 하나였음

- 1980년대에는 조립금속, 종이, 인쇄, 석유 등 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었지만 1990년대 들어 국내의 공장 가동률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집약형 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변모하는 1990년대 초·중반부터는 완전히 낙후된 경제모델의 상징으로 그 위상이 낮아짐.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면서 산업단지의 역할이 더욱 더 위축됨
- '구로공단'의 변화는 1997년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구로단지 첨단화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구로공단의 중심축을 이루던 조립금속, 섬유, 인쇄 등 6개의 노동집약적 업종을 고도기술, 벤처, 패션디자인, 지식산업 등 4개의 첨단업종으로 재배치하는 중장기 프로젝트임
- 이 계획에 따라 1단지 8만 평을 벤처전문단지로 조성하였고, 2단지 12만 평은 패션디자인단지, 3단지 34만 평은 지식산업단지로 바뀌고, 1997년부터 1단지에 키콕스(KICOX) 벤처센터를 건설하여 2000년에 완공하였으며, '구로공단'이라는 명칭 대신 '서울디지털산업단지'라는 명칭을 사용함

②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시사점

-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기업 주도로 형성된 자발적인 도시형 기업생태계라 할 수 있음. 기존 산업의 경쟁력 쇠퇴로 전통 제조업이 이전한 자리에 민간 건설업체가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입주를 유도하였고, 구로단지에 중소·벤처기업이 모여들면서 규모의 경제, 비용절감, 다양한 사업기회 등 클러스터의 이점이 발생함
- 정부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세제혜택 등을 통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부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시형 첨단기업 입주를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함
- 그러면서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가 일반 오피스나 상업시설로 전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면서 쾌적하고 수준 높은 비즈니스 파크 형성을 유도하였음. 특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민간 주도의 아파트

형 공장 설립을 가능케 하는 한편, 동시에 세제감면 등을 통해 이를 활성화함

-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클러스터로 구조고도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기업 간 신뢰 형성 등을 통해 혁신 시너지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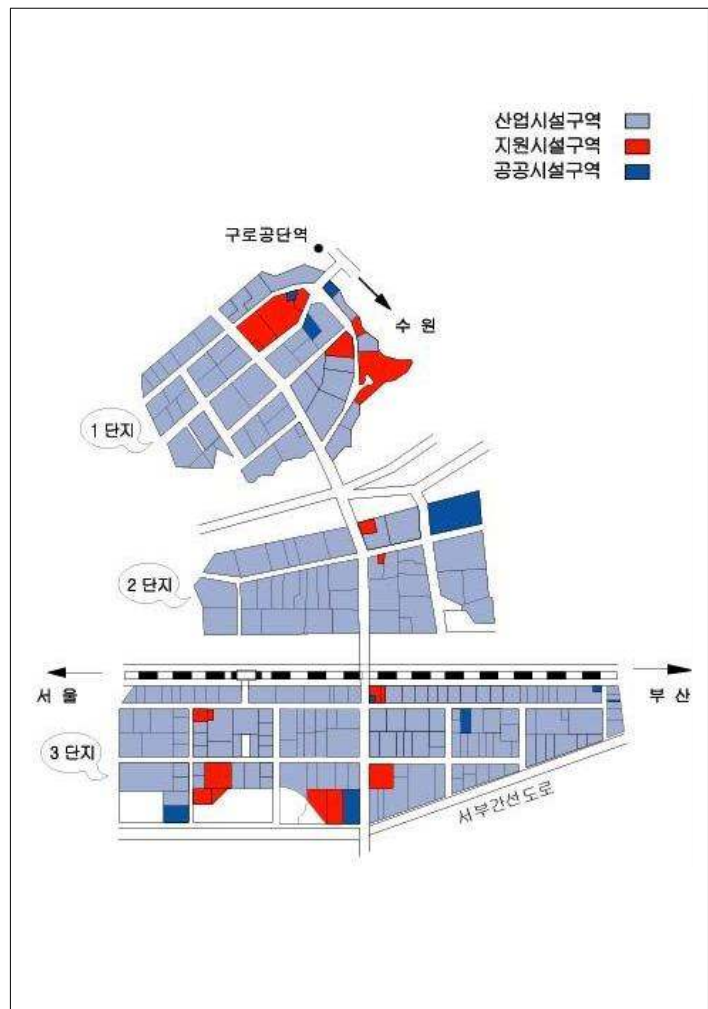
주택 단지



외부전경



창업보육센터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배치도

2) 대덕연구단지

① 사업추진 배경 및 조성 과정

- 서울 홍릉과학단지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정부는 1973년 5월 충남 대덕군 인근 810만 평의 부지에 연구·교육·주거시설 등을 포함한 상주인구 5만 명의 연구학원도시 건설계획을 수행함
- 그러나 1974년 이후 재원 조달 곤란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고, 이를 보완하고자 1976년 4월 사업추진주체를 과학기술처에서 청와대 비서관실로 이관하였으며, 사업의 명칭도 대덕전문연구단지건설계획으로 축소 조정함
- 1977년 12월 대덕연구단지 조성은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1978년 6월 단지의 성격을 대전의 부도심 생활권으로 변경함
- 1981년의 2차 수정계획안에서는 대덕연구단지의 개념을 여타 공업단지와 동일한 산업전진기지로 규정하였고, 주거 형태도 고밀도·고층 아파트로 계획하는 등 당초 계획하였던 연구 단지 개념이 많이 퇴색됨
- 과학기술처는 1982년 9월 대덕연구단지 기본계획재정비방안을 제시하였고, 1984년 4월 기술진흥심의회에서 이를 토대로 '대덕연구단지 건설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음. 개발방법도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토지를 일괄 매입한 후 분양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단지의 개발과 관리를 전담할 공동관리기구를 설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독립적인 특수행정구역 설립을 제시하였으나 특수행정구역 신설과 관련된 제정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음

(표3-10) 대덕연구단지 개발 초기단계의 기본정책 변화

내용	기본계획	1차 수정 (1977)	2차 수정 (1981)	3차 수정 (1984)
-건설주체 -단지개념 -인 구 -목표년도 -도시구조	-과학기술처 -연구학원도시 -5만 -1981년 -특수기능의 독립도시	-산업기지개발공사 -전문연구단지 -4.1만 -1991년 -대전시를 중심으로 한 단지개념	-건설부 -산업기지 -5만 -1991년 -좌측과 같음	-토지개발고사 -연구단지 -5만 -1989년 이후2000년대 -대전시를 모도시로 하여 단지와 연계성을 갖되 단지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
토지이용개념	-계열화된 연구소 배치 -시설의 공동이용 -전원적 도시환경	-근린주구개념에 수개의 단지 형성 -단지 전체를 대전 부도심의 생활권	-좌측과 같음	-대전시 재정비계획에 의한 모도시로서 대전도시계획의 연계를 고려, 기능별 지역계획 -토지 공개념에 의거 토지이용 효율성 극대화 -정부출연(연) 교육기관과의 계열화 추구 -시설의 공동이용 -전원적 도시환경
도로망	-중심 및 공동이용시설지구 중심의 방사상형	-대전시와의 연계성을 강조한 패턴	-좌측과 같음	-단지외부: 대전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계획하되 단지 내 연구활동과 관련이 없는 통과교통 유발 가능성 최대 억제 -단지내부: 단지 내 각연구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추적 기능을 갖도록 계획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평가센터(1990)

- 개발이 시작된 후 20년이 경과한 1992년, 약 840만 평 규모의 단지에
기반시설과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연구단지 준공을 기념하고자 1993
년 8월에는 국제박람회가 개최되었음
- 이를 계기로 정부와 민간기업 부설 연구소 입지가 추진되어 20개 정부출
연 연구기관, 25개 민간기업 부설연구기관, 10개 정부투자기관 부설연구
소, 4개 고등교육기관, 9개의 공공기관, 그리고 50개 벤처기업 등이 입
주함
- 별도의 과학학원도시 건설을 염두에 두고 개발이 시작되었던 대덕연구단
지는 27km²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인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관리, 쾌적
한 교육·연구 활동 유지를 위한 단지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단지 전체 면적의 47%인 399만 평이 교육·연구시설 보호구역으로, 단지의 43%인 358만 평은 녹지구역으로 지정. 주거구역 72만 평, 상업구역 11만 평으로 단지를 구성하였으나, 산업별·기능별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공간배치로 단지기능의 조기 활성화에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연구기관 입주가 시작된 1978년부터 대덕연구단지 관리는 과학기술처 산하 대덕단지관리사무소가 업무를 관장하였고, 1993년 12월 연구단지 관리법이 제정되어 교육·연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등 대덕전문연구단지 관리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덕연구단지 내 연구소들 간의 기능적 연계나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혁신환경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과학기술부는 1999년 12월 '대덕연구단지관리법'의 개정을 추진함. 이는 산학연 협력 방안 모색, 시설보호구역에 실험실 공장, 도시형 공장, 시험공장 등의 시설 설립을 허용하며, 교육·연구시설 보호구역에 공장 설립을 허용하고자 '시설보호구역'으로 개칭한 것임
- 이처럼 대덕연구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자통신연구원과 생명과학연구소 등에서 분리 신설된 벤처기업들의 군집이 단지 내부와 외부에 형성되기 시작함
- 전반적인 연구 수준과 생산성, 산학협력 네트워크, 지역혁신체계 구축 측면에서 볼 때 대덕연구단지는 아직 세계적으로 성공한 혁신도시 사례라고는 할 수 없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대전광역시시는 세계테크노폴리스 협회(WTA: World Technopolis Association)를 조직하여 해외 혁신클러스터와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또한 한국화학 등 민간기업과 제3섹터 방식으로 연구단지 인근에 대덕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연구단지의 국제화와 혁신환경 조성에 노력함
- 정부는 2005년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대덕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에 특화한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함

②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시사점

- 대덕연구단지에서 혁신환경이 조기에 창출되지 않았던 것은 연구단지 자체의 공간 구성 방식과 관리·운영상의 문제

-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을 분리하여 배치함으로써 인근지역의 산업구조와의 연계성 확보에 실패
- 연구단지에 너무 다양한 기능과 성격의 입주기관들을 입주시킴으로써 대덕연구단지만의 특화 분야 창출에 실패하였고, 연구기관들 간의 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고려 없이 경직된 공간배치함
- 사업추진주체와 사업계획을 수차례에 걸쳐 변경하였고, 물리적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기관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못함
- 대덕연구단지가 이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혁신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지의 동산 구성 및 배치, 연구 분야의 특화, 지역산업체와의 연계체계 구축, 단지 기능 활성화 및 단지의 국제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기관의 설립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기술부 산하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소와 대전광역시, 최근 신설된 대덕연구개발특구청 간의 기능과 역할의 정립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첨단산업단지의 사례

1. 외국의 첨단산업단지

1) 개발현황

① 미국

- 미국은 실리콘밸리의 성공신화를 이룩함으로써 각국에서 첨단산업단지개발을 경쟁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함
- 첨단기술의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발전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연구 및 기술단지를 개발해 왔으며, 실리콘밸리, 루트128, 리서치 트라이앵글이 그 대표적 사례
- 미국은 전통적으로 전체 연구개발 투자에서 정부투자비중이 높은 특징을 지니는데 특히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는 주로 첨단산업분야에 집중되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민간기업에 직접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비영리 연구기관의 기초과학기술분야에 투입되어 첨단산업분야를 지원하는 특징을 지님
- 지방정부는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주변의 지방정부는 첨단산업의 창업에 대한 상담 및 자문 역할과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 민관협력등의 방식에 의해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음
- 리서치파크의 경우도 미국의 리서치파크 3개 지방대학 (듀크,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주립)의 인적자원을 이용하여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산업계·학계 및 주정부의 협동으로 개발됨

② 영국

- 1960년대 이후 고질적인 영국병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주도로 형성
- 첨단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유럽 어느 나라보다도 지하자원이 결핍되어 있어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이용한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

급하였기 때문

- 첨단산업개발정책은 대학의 연구개발능력을 상품화하여 지역개발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이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 지방은행등과 협력하는 방식을 사용함
- 실업문제와 불경기의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강화,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조달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등이 결합되어 과학단지의 조성 붐이 이루어 졌으며 1981년까지 2개였던 첨단산업단지가 1985년에는 21개, 1990년에는 39개, 1995년 46개, 1997년 52개로 급증함

③ 프랑스

- 테크노폴리스 건설은 지난 10년간 세계적인 경제불황의 영향과 함께, 실업률을 줄이고 최첨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기업을 쇄신하고, 사회의 고령화와 지역산업의 시설노후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및 공해문제 확대, 반핵운동 등 시대적 여건변화 등의 배경에 의해 시작되어짐
- 제5차 경제계획(1966-1969)기간 중 낙후지역을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 8대 균형대도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균형개발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추진하여 인구가 적은 소규모의 과학단지를 이들 각 지역에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 그 외에도전국에 5개의 과학기술쇄신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함
- 1991년 현재 40여곳에 테크노폴리스가 존재하는데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발전이 주목적이고 산·학·주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의 공업기술개발생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공간임

④ 일본

- 196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 팽창을 억제하고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주력하였으나,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는데 미흡하여 종래의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개발정책을 바꾸었으며, 동시에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사양산업에 대처할 새로운 전략을 세웠는데, 그 중 하나가 첨단산업단지의 건설임

- 첨단산업단지 정책은 정부주도적인 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1983년 「고도기술공업집중지역개발촉진법」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틀을 갖추고, 1984년 15개 지역을 테크노폴리스로 지정했고, 최근 26개 지역으로 늘어남
- 테크노폴리스는 테크놀로지(Technology, 기술) + 폴리스(Polis, 도시)로 일본이 만든 합성어로서 일본의 테크노폴리스는 대상지역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테크노폴리스법에서 명확히 구분됨
- 일본의 테크노폴리스지역의 설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자연적, 경제적, 사회적 조건으로 일체성이 확보되어야 함(면적은 약 13ha이하, 시·군단위에 인접한 지역)
 - 고도기술 개발기업 또는 기술고도이용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 존재해야 함
 - 공업용지, 공업용수 및 주택용지의 확보가 용이해야 함
 - 도시가 존재해야 함(인구는 약 15만 명 이상의 도시, 대상 지역외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약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함)
 - 고도기술에 관한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이 존재해야 함
 - 고속 수송시설의 이용이 용이해야 함(인터체인지, 공항 및 신간선 정차역 등의 시설이 인접해야 하며 대상지역 이외에 있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30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함)

⑤ 대만

- 신죽(新竹)과학 단지는 1976년 대만정부가 첨단산업의 집적화와 실리콘밸리내 대만출신 인력의 활용을 위해서 건설이 시작되었음
- 정부재정으로 각종 기반시설을 공급하며, 행정간소화와 개방정책을 통해 국내외 첨단기업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음
- 신죽과학단지는 초기에는 중앙정부 주도로 단지를 개발한 이후 현재는 민간 주도로 운영되면서 자율적인 벤처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

2) 개발 특징

- 테크노폴리스의 개발특징은 국가주도적으로 계획된 경우와 자연발생적인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미국과 영국의 경우는 자연발생적으로 첨단산업단지가 발전되었으며, 프랑스, 일본, 대만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에 의한 계획적인 발생형태로 볼 수 있음
- 프랑스, 일본, 대만은 지방발전, R&D와 첨단산업의 지방분산을 위해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된 반면, 미국, 영국은 기술개발 및 산업부흥의 장소로서 첨단산업단지가 개발되었음

(표3-11) 세계각국의 첨단기술산업단지 유형

구 분	단 지	개발목적	개발주체	수행기능
미 국	실리콘밸리	·산학협동 ·지역경제발전	대학 자연발생적	R&D:스탠포드 산업연구단지 생산:지역내 개발 및 대량생산 주거:기존도시(분산형)
	리서치 트라이앵글	·산학협동 ·지역경제발전	산·관·학	R&D:R.T.연구단지, 기존대학 생산:단지내(개발), 주변(대량생산) 주거:주거3도시(분산형)
영 국	케임브리지	·산학협동 ·대학재정개선	대 학	R&D:과학단지, 기존대학 생산:단지내 개발생산 주거:기존도시(분산형)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과학단지	·국가기술발전 ·지역균형발전	정 부 中央·地方	R&D:과학단지, 기존대학 생산:단지내 개발 및 대량생산 주거:단지내(집중형)
일 본	쓰꾸바연구학원도시	·동경기능분산 ·지역균형발전	중앙정부	R&D:단지내 연구학원지구 생산:단지내 없음 주거:단지내(집중형)
	테크노 폴리스	·지역경제발전 ·지방도시확충	정 부 中央·地方	R&D:도시내 생산:도시내 주거:도시내(집중형)
대 만	신죽과학산업단지	·첨단산업개발 ·수출촉진	중앙정부	R&D:단지내, 기존대학 생산:단지내 개발 및 대량생산 주거:단지내(집중형)

① 미국

- 산업단지 개발을 영리목적의 부동산 개발산업의 하나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 산업단지의 개발은 주로 민간부문에 의해 개발되나, 과학단지의 조성에는 지방정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이 특징
- 지방정부가 주관이 되어 개발되기 때문에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계를 갖는다는 특징이 있으며, 경제단체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자გი지방의 첨단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함

② 영국

- 첨단산업단지의 구성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의 주로 북서부의 산업침체지역을 대상으로 쇠퇴하는 중소기업의 지원, 신설기업의 창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의 역할을 하였으며, 첨단산업단지의 구성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으나 지역개발청을 통해 단지조성, 영구공여주택을 통한 토지조성 등의 지원시책을 전개하였음
- 지방정부는 대학 혹은 민간회사, 상공회의소 등과 시(市)가 함께 공동출자하거나, 첨단산업의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이언스파크의 구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

③ 프랑스

- 프랑스는 일본과 같이 첨단산업단지에 대해 지방당국은 발의를 하며, 인프라 투자에 대해 장기간의 투자전략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
- 첨단산업단지 개발에 있어 중앙정부가 국가와 계획계약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낮은 임대료 유지 및 운영을 위해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고려에 의해 조성되었으며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도기업의 유치, 신생분리기업의 육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④ 일본

- 적극적인 테크노폴리스 정책 추진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과학기술단지 조성은 대학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혁신 지원이라는 내발형 발전전략과 외부의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외발형 발전전략을 병행하여 구사하고 있음
- 중앙정부가 개발에 필수적이고 집행과정에 긴밀히 관여하며, 미개척 분야의 R&D를 위해 공공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산업단지의 개발에 있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중앙정부는 개발하기 곤란한 광역적이고 대규모적인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함

⑤ 대만

- 중앙정부가 산업단지 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민간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음
- 신죽과학단지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 및 인프라시설을 건설하고, 주택과 주거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단지개발과 과감한 투자를 하고, 현재도 단지의 일상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산업이 발전하게 될 요인들이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리콘밸리의 성장과정을 축약적으로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는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짐

3) 외국의 첨단산업단지 개발의 성공요인

① 미국의 리서치 트라이앵글 연구단지

- 지방대학의 R&D산실, 전문인력 공급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4억 불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세계적인 R&D연구소(RTI)와 밀접한 연계를 갖고 있음

- 산학협동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주정부의 적절한 역할 뒷받침이 있었음. 마이크로 전자학센터(MCNC), 생물공학센터(NCBC), 슈퍼 컴퓨터(NCSC)등을 설치하여 산학협동을 추진하였음
- 産·學·官의 협동과 리더십이 크게 기여하였음
- 탁월한 연구개발 및 생산환경을 갖추고 있음. 삶의 질에 비해 저렴한 생활비와 전국에서 가장 건설비가 저렴하며, 다양한 문화여가시설을 향유하고 있음

② 영국의 케임브리지 과학단지

- 양질의 저렴한 토지를 제공함. 트리니티 대학소유의 토지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중소기업체에 분양하였으며, 위치적으로 탁월한 토지환경을 갖고 있음
- 산학협동과 기업간 접촉이 용이함.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급두뇌와 R&D가 산학협동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지역 내 첨단기술업체가 이미 집적되어 있었음
- 지역특유의 명성을 들 수 있음. 트리니티 대학이 배출한 과학자들(뉴턴, 다윈 등)의 명성이 높았으며, 소규모 자본의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혁신 및 기술경영의 정보교환이 수월하였음

③ 프랑스(소피아 앙티폴리스)

- 주요 성공요인은 천혜의 주거환경, 탁월한 교통·통신시설의 요충지,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시설과 생산기능의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위한 민간공공기관의 설립을 들 수 있음
- 첫째, 소피아앙티폴리스의 주거환경은 세계 일급의 휴양지역(해변, 레저, 카지노)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적 문화생활을 향유(니스-칸느-그라스-앙티브 등 4개도시 중심)할 수 있음
- 둘째, 소피아앙티폴리스의 주거환경은 프랑스 제2국제공항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기통신시설이 풍부하고 철도, 고속도로 등의 교통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음

- 셋째,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과 생산기능을 통합하였는데, 프랑스 국공립 연구소를 이전하였으며, 민간기업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첨단제품생산시설을 동시에 유치하였으며, 전문기술 및 경영확보를 위해 1965년 신설된 니스대학교를 단기간내 세계일류대학으로 부상시키고 관리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였음
- 넷째, 지원 네트워크를 위한 민간·공공기관을 설립하였음
- 전반적으로 소피아앙티폴리스에 대한 평가는 Technopole 자체가 파리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업무·행정·산업 부문을 남부프랑스로 분산시키는 데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쾌적한 자연환경, 공공연구소, 다국적 기업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지역활성화에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관광·문화위주의 지역에서 첨단산업 및 기술지역으로의 변모를 꾀할 수 있었음

④ 일본의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

- 일본의 과학기술단지는 대부분 1988년 이후 조성되어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으나, 일본의 대표적인 과학기술단지로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의 경우 도시형 첨단산업단지로서 국내외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 가나가와현 지사인 K.Nafasu가 1980년부터 두뇌센터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확산시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나가와현의 특성에 적합한 도시형 사이언스파크를 구성하였으며, 지역금융권 등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하는데는 성공하였음
- 연구개발형 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건물)임대업을 병행함으로써 인큐베이터에 투입되는 자본투자를 어느 정도 보전하고 있음

⑤ 대만

- 중앙정부주도로 첨단산업단지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음

- 신죽과학단지는 실리콘밸리의 모방을 통해 첨단두뇌와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대만의 산업구조조정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 하에 건설된 것으로, 전적으로 중앙정부의 창작품이라 할 수 있음
- 실리콘밸리와 같은 첨단산업이 발전하게 될 요인들이 구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리콘밸리의 성장과정을 축약적으로 달성해야만 했으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수적 요소였으나, 대만의 경우 지나친 정부주도로 개인의 창의력을 자극하고 시너지를 내는 본래 첨단산업단지의 긍정적인 면은 부족한 것을 지적되고 있음

2. 한국의 첨단산업단지

- 우리나라의 첨단산업단지는 모험기업의 창업촉진, 연구개발활동의 진작,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역개발활성화 등과 같은 다목적 부처별로 또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음
- 그 가운데 대표적인 단지들의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과학연구단지

- 전문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연구교류의 활성화, 연구개발활동의 지원 등을 핵심기능으로 삼되, 생산활동을 부가적으로 실시하는 중·소형 첨단산업단지로 대부분 대학을 모태로 해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이 전개되는 산·학 협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송도 테크노파크, 대구·경북 테크노파크, 광주·전남 테크노파크, 원주 의료전자기술연구집단지, 안산 테크노파크, 전북지역대학교연합테크노파크, 서울 기술연구집단지, 충북 테크노파크, 부산 테크노파크, 대전 테크노파크, 충남 테크노파크, 경남테크노파크 등이 여기에 속함

② 협의의 첨단산업단지

- 산·학·연 협동을 목적으로 조성된 단지로 여기에는 창업보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함께 첨단제품의 생산활동을 행함으로써, 연구성과를 생산활동에 연계하는데 주력하는 특징을 볼 수 있음
- 오송 보건의료단지, 충주 테크노타운, 춘천멀티미디어밸리, 대전엑스포공원 벤처단지, 파주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서부경남 첨단일반산업단지, 용인 소프트웨어단지, 계룡 군사산업기지, 천안 첨단산업단지, 대전·전주·대구·부산 첨단산업단지를 들 수 있음
- 대표적 사례로는 춘천 멀티미디어밸리를 들 수 있음. 춘천시의 천혜의 자연조건과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정보도시로 육성한다는 취지 하에 춘천시와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한 (주)포테이토가 주축이 되어 멀티미디어 영상산업을 중심으로 개발하려는 방안

으로 여기서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민간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을 결합시킴으로써, 춘천시는 멀티미디어 지원센터, 애니메이션 타운 등을 조성하고, 대학은 전문인력을 양성·공급하며, 민간 모험기업들은 멀티미디어 산업을 선도해가도록 하는 분업체제를 이루고 있음

③ 첨단산업도시

- 산·학·연 협력에 기초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산업생산의 활성화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문기술인력을 유지할 쾌적한 주거환경을 추가해서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는 경우를 가리킴
- 대덕연구단지, 포항 테크노폴리스, 광주·오창·강릉첨단산업단지, 인천의 미디어밸리 등을 들 수 있음
- 대덕연구단지는 국내의 자체적인 과학기술 개발과 지역균형개발을 목적으로 1973년 대전유성구의 840만 평 부지에 조성되기 시작해서 1992년 완공되었음. 애초에는 연구학원도시로 개발되었으나, 80년대 이후로 문화·주거 생활의 기능이 추가되었으며, 최근 파생창업(spin-off)활동이 활발해지는 등 생산기능도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함으로써 복합적인 도시기능을 갖춘 첨단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음
- 광주 과학산업단지는 1980년대 후반 산업·연구·교육·주거기능이 복합된 기술집적도시로서 구상되었음. 민·관 협력형태를 취한 미디어밸리와 달리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건설교통부가 건설주체가 되고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조성작업에 참여해서 서남권의 첨단산업육성 및 지역개발의 교두보로서 개발하고 있음

(표3-112) 우리나라 첨단산업단지 조성현황

권역		계획명칭	사업주체 및 유치(계획)업종	입지 (면적, 입주업체수)	비고
대전 충청권	대전권	대전첨단산업단지	·대전광역시 ·신소재, 정밀화학, 전자, 기계	·129만평	불확실
		창업보육센터지정	·대전광역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창업동(2,500평) ·지원동(1,750평) ·벤처기업 50개 ·지원기관 20개	부지조성 계획중
	충청권	충남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 ·신기술 지식집약형미래기술	·11만6천여평	부지조성 계획중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아산시, 삼성전자(주)	·2,021㎡ ·523개업체 입주	조성 및 분양완료
		오창과학산업단지	·충북, 한국토지공사 ·전기기계, 기계장비, 영상음향통신, 화학 제품	·9,442㎡ ·12개업체	부지조성중 (3,375천㎡ 조성)
경인권	서울 인천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정보통신부	·서초동 35실 ·역삼동 16실 ·구의동 18실 ·충정로 8실	부지조성 중
		벤처기업집적시설	·중소기업청	·연면적2만5,500평 (인텔리젠트빌딩) ·벤처기업 200개	부지조성 중
		미디어밸리	·인천광역시 (주)미디어밸리	·송도신도시지구 106만평 ·2,055개업체 예정(2005년)	부지조성 중
	경기	분당벤처기업	·정보통신부, 통상산업부, 경기도, 성남시, 정보통신중소기업협회	·1998 ~ 2002년 구축계획 ·민간주도의 단지건설 및 운영	부지조성 계획중
		안산테크노파크	·안산시, 경기도, 통상산업부	·15만평	부지조성 계획중
호남권	광주 전남	광주첨단산업단지	·광주광역시 ·첨단산업	·2,403천평	2단계부지 조성계획중
		광주-전남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정보통신, 정밀기기, 정밀화학, 생명공학, 문화예술	·2만평 ·산학협동	부지조성 중
	전북	전주과학산업단지	·전라북도·한국토지공사 ·화학제품, 영상음향통신, 의료, 정밀기계 등	·3,111천㎡	계획중단
		전주영상종합랜드	·전주시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937,300평 ·주제공원 등 총8개지구	부지조성 계획중
영남권	대구 경북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경산시·경산시상공회의소·영 남대·대구대 ·기계, 자동차, 소재, 섬유	·4만6천평 ·영남대(22개업체) ·대구대(3개업체)	1차시험사업 계획중
	부산 경남 울산	부산과학산업단지	·한국토지공사 ·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기계 기타운송장비	·4,470천㎡	부지조성 계획중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	·경남개발공사 ·기타운송장비, 전기기계재소재가공업	·1,465천㎡	조성 및 분양중
기타 (제주, 강원)	강원	강릉과학산업단지	·강릉시	·3,341천㎡	부지조성 계획중
		춘천첨단산업단지	·춘천시 ·의료정밀기계	·3,970천㎡	부지조성 계획중
	제주	메가리조트	·제주도	·500만평(3개단지, 20개지 구)	부지조성 계획중

3. 첨단산업단지 사례의 시사점

1) 외국 선진국의 성공요인

- 과학적 탁월성의 확보를 위한 우수한 대학과 연구인력의 존재, 즉 강력한 연구기반의 존재
- 정부역할의 중요성 :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연구소나 기업에 대규모 연구개발비를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는 주립대학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교육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자체적으로 기술혁신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함
- 산업협동체제의 중요성 :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등을 위한 지역 거점대학이 주도가 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며,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표3-13) 각국의 첨단산업단지 성공요인

구 분	성 공 요 인
미 국	·지방대학의 R&D산실, 전문인력 공급으로서의 역할 수행 ·산학협동체제의 구축 ·주정부의 적절한 역할 뒷받침 ·産·學·官의 협동과 리더십 ·탁월한 연구개발 및 생산환경
영 국	·양질의 저렴한 토지제공 ·산학협동과 기업간 접촉이 용이 ·지역 특유의 명성
프 랑 스	·천혜의 주거환경 ·탁월한 교통·통신시설의 요충지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시설과 생산기능의 통합 ·지원 네트워크를 위한 민간·공공기관의 설립
일 본	·설립주체의 강력한 리더십 ·중앙정부의 지원
대 만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국립 공업기술원의 역할

2) 우리나라 첨단산업단지 건설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현재 진행 또는 목표기간이 완료된 광주, 전주, 오창 첨단산업단지의 건설과정중에 나타나는 문제점
- 분양 과정중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 현재 분양이 실시되고 있는 광주, 전주, 오창 첨단산업단지는 높은 미분양률, 연구시설의 입주수요부족, 주거용지의 100%에 가까운 분양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표3-14) 산업단지의 분양률

(단위:천평·%·천원/평)

구분	산업용지(공장용지)			교육/연구용지			주거용지		
	면적	분양률	분양가	면적	분양률	분양가	면적	분양률	분양가
광주	488	78	410	563	29	680	306	100	700
오창	804	50	340	332	0	340	297	80.7	876
전주	464	0	253	105	0	253	68	19	–
부산	610	0	800	162	0	800	109	0	0
강릉	215	0	0	119	0	0	43	0	0
대전	500	0	400				197	0	0

- 주거용지의 경우 분양률이 일반산업용지에 비하여 아주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첨단산업단지에서의 주거용지의 용도는 첨단산업단지내 연구시설, 생산시설에 거주하는 자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한 용도로 계획된 것임을 생각할 때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의 높은 미분양 상태에서의 주거용지의 100%분양은 이후 연구용지, 생산용지에 입주할 사람들이 첨단산업단지내 주거용지에 입주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견하는 것임
- 첨단산업단지내 입주할 생산업체의 부족,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을 담당할 연구기관의 부재, 첨단산업단지내 생산과 연구를 담당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주택의 부족은 많은 자본과 노력을 투자한 첨단산업단지가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임

- 일반제조업의 입주

- 첨단산업단지에 일반제조업이 입주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게 됨. 오창첨단산업단지의 입주업체현황을 보면 2000년 5월 19개 업체가 생산용지를 분양받았으며, 그 생산업종현황은 <표>와 같음

(표3-15) 오창산업단지 입주업체 현황과 생산업종과 유치계획업종

업체명	생산업종	업체명	생산업종	업체명	생산업종
현대반도체	반도체	대성산소	고순도가스	한국산업가스	고순도가스
로제화장품	정밀화학	한도통상	화동처리	회성전선	전력케이블
한림금속	전자의료기기	S.M.E	반도체모듈, 통신기기	국보제약	가정용 살균·살충제
유한양행	의약품(양약)	HDI	인쇄회로기판	영화산업(주)	유압펌프
한국스프레쉬	착향탄산음료	사임당화장품	정밀화학	바티오테크	전기전자부품소재
선우테크	인쇄회로기판	(주)녹십자	의약품	엔제피아(주)	의약품
(주)울트라텍	반도체장비				
유치계획업종	전자전기 및 정보, 정밀기계·신공정, 항공기·수송, 재료·소재·신물질, 생물공학, 과학의료기기				

- 오창첨단산업단지가 초기에 계획한 유치계획업종과 비교하여 볼 때, 착향탄산음료, 전력케이블, 가정용 살균·살충제, 유압펌프등 첨단업종이라 보기에는 어려운 업종이 많이 입주하여 있음

- 목표기간의 지연

-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비교적 활발히 첨단산업단지 건설이 진행되는 광주의 경우도 최초 단지 조성문제가 제기된 86년에서 단지조성이 확정되고, 공식적인 단지지정을 받은 90년 7월까지 4년여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로부터 실제공사에 착수한 92년 4월까지 1년 9개월이 소요되었고, 이후 공사가 완공되는 98년말까지는 다시 6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첨단산업단지의 경우 산학연계가 일어나 진정한 첨단산업단지로 발전하

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을 볼 때, 지방이 산업주체인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단지조성에 있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음

- 목표기간의 지연은 초기투자비의 빠른 투자를 목표로 하는 사업주체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입주를 원하는 기업에게는 첨단산업단지에 대한 미래의 확실한 보증을 줄 수 없으므로 기업에게는 첨단산업단지의 분양에 참여하기를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임



제4장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과 과제

- ① 산업입지 환경의 변화
- ② 산업입지 여건변화와 주요과제
- ③ 경남지역 산업입지의 문제점
- ④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제4장 산업입지 여건변화 전망과 과제

① 산업입지 환경의 변화

1. 산업환경의 변화

-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있음
- 과거에는 저임금의 많은 노동력 투입 또는 대규모 기계설비를 통하여 원가를 낮추어 대량생산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했지만, 산업의 지식기반화로 인해 생산방식이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전환되고 있음
- 지식기반경제에서 기업은 생산뿐만 아니라 마케팅, 인력양성, 기술개발, 아이디어 창출 등이 실시간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유기적인 혼합이 가능해지고 있음
- 지식기반산업의 핵심은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며, 이러한 고급인력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글로벌 경제활동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음
- 생산, 판매, 기술개발 등에 있어 기업의 활동무대가 자국에서 전 세계로 확대되고,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증대된 국가간 자본이동으로 인해 기업은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함
- 기술의 고도화, 가속화, 융합화가 급진전하고 있음
- 기존의 모방이나 기술도입 위주의 기술개발 방식에서 핵심기술과 원천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
- IT, BT 등 첨단기술의 발전·융합으로 인해 특정 기업이나 연구소 단독으로 연구개발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공동연구 형태로 진행해 가고 있음
-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입지수요가 중후장대형 장치산업 위주에서 대규모 입지가 아닌 첨단산업 지식산업 위주로 변화하면서 소규모 산업단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짐
- 소비자의 수요가 다양화·세분화되고 있음
- 소득수준의 향상과 양질의 교육으로 인해 소비자는 다양화, 세분화된 제

품과 브랜드를 선호함

-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패턴도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바뀌고 유연하고 신속적인 시장대응을 하게 됨
- 대도시 제조업의 특성은 연성화와 복합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연성화는 대도시의 제조업이 주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소량생산하면서 기술과 지식이 집약화되는 현상을 뜻하며, 연성화되는 제조업은 금융산업이나 생산자서비스 부문과 강한 연계관계를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킴
- 복합화는 대도시의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생산활동 뿐만 아니라 기획, 연구개발, 유통 등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다른 기업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말함

2. 산업구조 변화

1) 경제·산업현황

① 인구·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

- 경남의 인구는 2007년 기준 3,239,342명
-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 분리된 이후 인구가 줄어들었으나 이후 점진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2007년 약 260만 명
-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62.0%로 1995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
- 실업자수는 2007년 기준 37,000여 명

(표4-1) 경상남도 인구현황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인구(만명)	367.2	384.2	297.9	312.4	314.3	316.2	316.9	316.0	320.9	323.9
15세 이상 인구(만명)	268.8	290.2	232.6	238.7	241.1	243.8	245.5	247.1	256.7	260.4
경제활동 참가율(%)	62.1	60.4	60.9	61.3	61.2	62.4	62.8	62.1	61.8	62.0
실업자수 (천명)	25	18	46	48	34	35	33	40	36	37
실업률(%)	1.6	1.1	3.3	3.4	2.4	2.4	2.2	2.7	2.3	2.4

자료)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경상남도 통계연보, 2007

② 지역총생산(GRDP) : 1인당 지역총생산

- 2004년 경남의 지역총생산은 약 52조 2천억원으로 전국 16개 시·도의 지역총생산 약 787조 8천억원의 6.6% 수준이며, 2003년에 비해 전국 비중이 0.1% 하락했음

(표4-2) 경남의 지역총생산 (1995~2007)

(단위:백만원·%)

구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GRDP (백만원)	44,799,195	37,728,411	41,846,261	45,639,283	48,660,929	52,206,767	54,253,972	57,708,548	63,161,785
경남/전국 (%)	10.9	6.5	6.7	6.7	6.7	6.6	6.6	6.7	6.9

자료)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당해년 기준)

- 경남 지역내 총생산은 서울, 경기, 이어 전국 3위이지만, 수도권 지역에 비해 1/3~1/4 규모에 불과함

(표4-3) 지역내 총생산의 지역별 구성비(2007)

(단위:%)

구분	서울	경기	경남	경북	충남	부산
구성비(%)	22.8	20.0	6.9	6.5	6.0	5.6
순위	1	2	3	4	5	6

자료)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

- 2004년 경남의 1인당 GRDP는 1천 7백만원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연평균 8.0%씩 성장했는데, 같은 기간 전국은 연평균 7.0%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경남은 전국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보임

(표4-4) 경남의 1인당 지역생산(2004)

(단위 : 천원, %)

연도	전국			경남		
	1인당 GDP	전년대비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1인당 GRDP	전년대비 성장률	연평균 성장률
2000	12,310	8.4	7.0	12,429	4.5	8.0
2001	13,138	6.7		13,751	10.6	
2002	14,371	9.4		14,911	8.4	
2003	15,145	5.4		15,792	5.9	
2004	16,190	6.9		16,963	7.4	

주) 전국의 경우 GDP, 경남의 경우 GRDP를 각각 추계인구로 나누었음

자료 :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KOSIS, 지역내 총생산(당해년 기준), KOSIS, 각년도

- 2004년 기준 경남의 지역총생산의 구조 비중을 보면 서비스 및 기타부문이 40.6%로 가장 크고, 제조업은 38.9%, 건설업이 10.3%이고, 농림어업부문은 6.2%로 가장 낮음
- 2004년을 제외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조금씩 증가해온 반면, 제조업과 농림어업 부문은 감소하는 추세임

(표4-5) 경남의 지역총생산 구조 비중 추이

구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7
생산구조(기초가격기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농림어업	8.2	7.4	6.5	6.2	5.8	5.0
광업·제조업	41.3	40.5	38.5	39.3	40.9	43.1
(제조업)	(40.9)	(40.2)	(38.2)	(38.9)	(40.6)	(42.8)
전기·가스·수도	2.6	3.5	4.5	3.6	3.0	2.7
건설업	10.2	7.9	8.9	10.3	9.4	9.9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	37.7	40.7	41.6	40.6	40.9	39.2

주 :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서비스업

2) 1인당 지역총생산=지역내총생산/지역내총인구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07

③ 소득·지출

- 통계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0년 기준 경남 주민의 연간소득, 가처분 소득, 소비지출 수준은 전국 평균이나 광역시 평균에 비해 낮으며, 저축액과 부채액도 낮은 수준임

(표4-6) 소득 및 지출 (2000)

항목	단위	전국평균	광역시 평균	경남
조사가구수	가구	20,105	11,336	897
가구원수	명	3.48	3.49	3.43
취업인원수	명	1.46	1.49	1.43
연간소득	천원	30,359	31,362	29,253
가처분소득	천원	26,034	26,947	24,784
소비지출	천원	19,207	19,937	17,392
평균소비성향	%	73.8	74	70.2
소비지출	천원	24,086	24,462	19,453
평균소비성향	%	9,842	10,157	848

주) 본 결과는 2000. 12. 31. 기준으로 2001. 5. 7~5. 18(12일간) 전국 약 27,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2인이상 비농어가의 생활실태(소득, 지출, 저축, 부채 및 가구내구재 등)를 분석한 결과임

자료) 통계청(2002),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

④ 수출액

- 경남의 수출액은 2006년 현재 256억 달러 수준으로 전년대비 16.2% 증가했고 전국의 9.6% 비중을 차지함

(표4-7) 경남의 수출현황

(단위:천달러·%)

년도	금액	증가율	전국비중
2000	16,651,312	-	9.7
2001	17,134,337	2.9	11.4
2002	17,336,016	1.2	10.7
2003	19,236,299	11.0	9.9
2004	24,292,390	26.3	9.6
2005	26,685,339	9.9	9.4
2006	25,687,070	16.2	9.6

주) 2006년 자료는 1~11월 집계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2) 산업구조의 특징

① 광공업(2차산업) 중심

- 사업체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볼 때 2004년 전국 1, 2, 3차 산업의 비중은 각각 0.21%, 28.55%, 71.24%이나, 경남은 각각 0.24%, 40.13%, 59.63%로 전국 평균과 비교해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은 높은 반면 3차산업의 비중은 낮은 수준임

(표4-8) 경남의 산업별 비중 특화도 추이

(단위:%)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전 국	1차산업	0.41	0.25	0.24	0.24	0.21
	2차산업	29.78	29.26	28.56	28.57	28.55
	3차산업	69.81	70.49	71.20	71.19	71.24
경 남	1차산업	0.93	0.23	0.19	0.23	0.24
	2차산업	38.70	39.71	39.25	39.52	40.13
	3차산업	60.37	60.06	60.56	60.25	59.63
경남/전국	1차산업	2.26	0.92	0.81	0.95	1.15
	2차산업	1.30	1.36	1.37	1.38	1.41
	3차산업	0.86	0.85	0.85	0.85	0.84

주) 산업별 비중은 사업체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경남의 산업별 특화도를 보면 2차 산업의 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1차산업의 특화도는 미약한 반면, 3차산업의 경우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 경남의 2차산업 비중은 2000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화도도 높아지는 추세에 있어 광공업 중심의 산업구조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남의 광공업 주요지표를 보면 사업체수, 종업원수, 생산액, 부가가치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부가가치도 1990년 이후 증가 추세임

(표4-9) 경남의 광공업 변화 추이

구분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체수 (개)	4,335	7,115	7,106	7,688	8,076	8,484	8,610	9,197	9,753
종업원수 (명)	401,879	430,231	272,702	277,372	281,974	294,927	297,879	305,262	316,955
생산액 (백만원)	34,883,046	76,708,109	52,165,309	52,397,176	61,845,795	68,086,787	79,193,072	84,635,396	91,764,904
부가가치 (백만원)	12,588,137	27,969,440	19,330,656	20,630,009	21,743,592	23,401,912	27,742,142	27,816,326	30,630,306
1인당 부가가치 (백만원)	31.32	65.01	70.89	74.28	77.11	79.35	93.12	91.1	96.6

주) 산업별 비중은 사업체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함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3) 대외 경제 환경 변화와 지역경제의 중요성

①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

- 1990년대 이후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촉진에 따라 생산요소로서 지식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는 지식기반시대를 맞이하였음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기존의 공급자 중심,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에서 수요자 중심,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시장에서의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어 국가보다는 지역이 경쟁에서 보다 효율적인 경제 단위로 부각되고 있음

②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기술혁신의 가속화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이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노동, 토지,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보다는 기술적 우위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등장함
- 현재 세계는 경제를 포함한 정치·행정·교육·문화 등 사회 각 분야의 지식

기반화가 진행중임

- 지식은 부가가치의 새로운 원천이자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최근 나타난 중요한 경제·사회적 변화의 대부분은 지식과 관련이 있음
 - 세계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200년 동안 네차례에 걸친 연쇄적 기술발전을 경험한데 이어 현재는 정보통신 기술이 주도하는 다섯 번째 기술혁신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
-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바이오기술(BT), 나노기술(NT) 등 신기술이 활용되는 한편 신기술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지고 신기술의 접목·융합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혁신이 창출되고 있음
 - 이러한 기술은 시스템적 성격이 강하여 동종 또는 이종간의 기술융합(convergence)과 퓨전(fusion)을 통해 기존 기술의 개량과 응용은 물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창출 되면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경쟁에 대응하여 혁신주체간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기술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위해 자원의 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음
-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경쟁력은 지식을 창출하고 축적·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확보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음
- 경쟁적이며 유연한 인적자원 양성체계의 구축과 부문간 인적자원의 원활한 이동과 활용도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사회경제체제가 필수적임
- 그러나 지식과 정보에의 접근성 차이에 따른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의 확대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 지위의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임

③ 중국의 성장과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 중국은 연 8% 이상의 고도성장으로 2020년경 세계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풍부한 노동력과 지속적인 국내외 투자를 바탕으로 고성장저비용의 경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것임
- 동북아 경제권은 중국이 연결되는 환황해 경제권과 일본 및 러시아 극동

지역과 연결되는 환동해 경제권으로 형성됨

- 2004년 기준 동북아 지역 인구는 유럽의 2배 규모이고, 경제규모는 세계 GDP의 약 16%를 점유하고 있음
- 2020년 세계경제는 FTAA(미주자유무역지대)와 EU 그리고 동북아 경제권의 3개 권역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④ 노동시장 구조의 변화

-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패러다임 변화속에서 산업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통적인 노동시장 패턴이 변화됨
- 제조업 종사자 비중이 하락하고 서비스부문 종사자 비중이 증가함
- 제조업에서 생산설비 자동화, 지능화, 저부가가치 생산 공정 해외이전 등으로 생산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사회·개인서비스(교육훈련, 의료보건, 문화예술)와 금융, 보험, 부동산, 기업서비스 부문이 고용증가를 주도함
- 유통·물류·통신부문에서 정보통신 기술발달에 의한 생산성 증가가 지속되나, 수요증가는 제한되어 고용비중이 저하됨
- 제조업 부가가치에서 생산부문 비중이 하락하고 연구개발·마케팅 부문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고용구조도 이런 변화를 반영하게 됨
- 세계시장의 통합으로 서비스 및 무역의 자유화가 확대되어 국가간 전문인력의 이동과 활용이 늘어나는 추세임

⑤ 지식기반경제에서의 공간경제의 특징

- 동서 냉전시대의 종식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도래로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더욱 촉진되고 있음
- 이러한 경제환경에서 기업들은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자본, 노동, 기술, 경영능력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국제 분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포가 상당히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발전에 있어 그 역할이 커지고 있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 국가간의 경쟁보다는 지역 및 도시간의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연계화 국제화된 기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발전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 특히 급속한 기술발전과 경쟁심화에 따라 산업발전 패턴이 변화되고 고속 성장시대의 마감과 함께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음
- 이것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시장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성장해온 기존의 산업발전 양식과는 다른 유연적 생산체제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임
- 안정된 대량소비시장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던 과거와는 달리 시장수요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개성적이고 다양한 소비패턴에 의해 소비시장의 세분화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음
- 유연적 전문화 생산체제에서는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속한 적응력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경우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의 향유가 가능하므로 생산요소와 생산조직의 유연성 확보에 유리한 중소·벤처기업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⑥ 산업집적의 중요성 부각

- 국가간 경쟁우위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가 산업의 집적이라는 점이 새로이 평가되면서 특정 지역의 입지상 우위를 활용하고 관련 자원을 집적시킴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음
- 산업의 지역집중화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 to scale)을 유발하고 개별기업에게 규모의 외부경제(External economies of scale)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임
- 또한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하면서 국가단위보다는 지리적 인접성을 갖는 지역수준의 경쟁력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지역차원의 산업집적을 강조하는 요인의 하나임
- 지리적 인접성이 중요한 이유는 지리적·문화적·제도적 의미에서 인접성이 원거리에서는 연결하기 어려운 특별한 접근, 특별한 관계, 더 나은 정보, 강력한 인센티브 그리고 여타의 생산성에서의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임
- 이러한 집적의 이익을 향유하기 위한 정책이 국가 또는 지방 차원에서

폭넓게 추진되고 있음

- 세계의 주요 집적지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게 된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지역에 형성된 발전 기반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임
- 예컨대, 미국의 실리콘밸리 및 루트 128, 영국의 캠브리지 테크노 폴과 셰필드 문화산업 클러스터,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폴리스와 폴 메즈2000, 이탈리아의 밀라노,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등이 전형적임 사례임
- 산업집적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형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의 단순한 산업단지 군집을 혁신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함
- 즉 국내 산업단지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인 연구개발 기능의 취약성을 획기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⑦ 지역혁신의 일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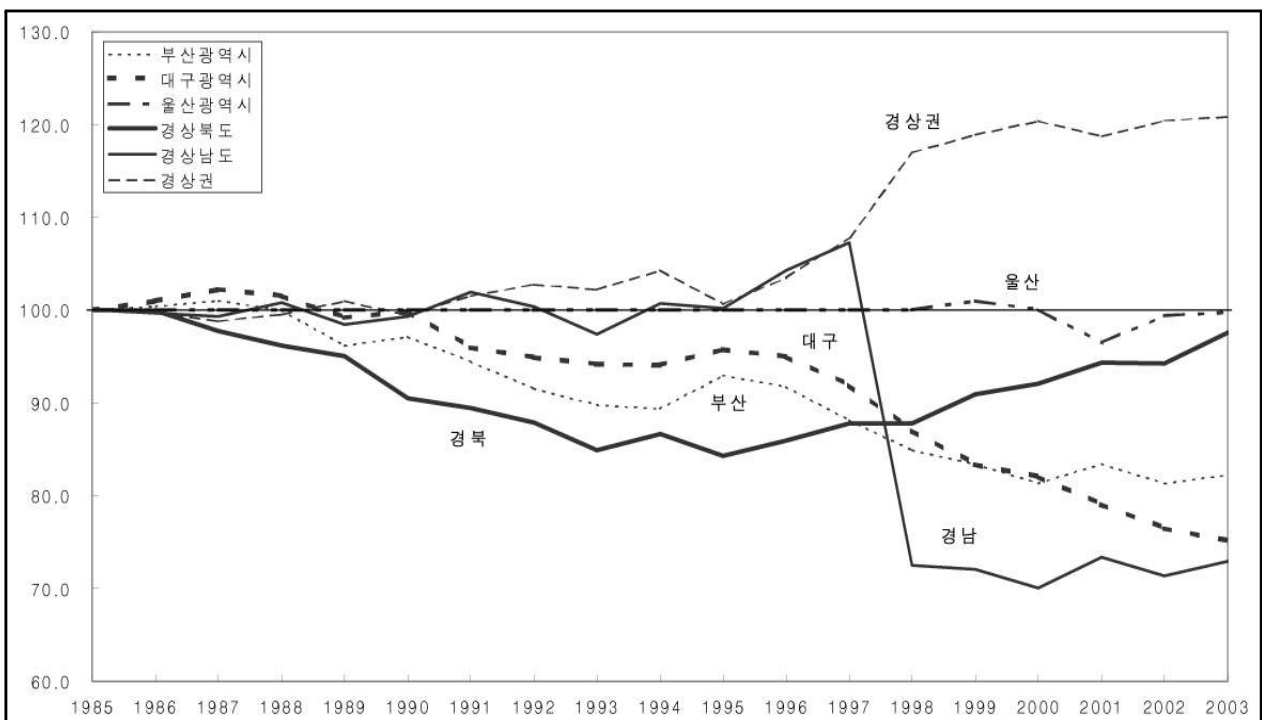
- 21세기 환경변화와 지식기반경제 패러다임속에서 혁신(innovation)은 국가든 물론 지역과 개인의 운명이 걸린 키워드로 부각됨
- 국가혁신체계(NIS)를 구성하는 지역혁신체계(RIS)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개발하고 혁신 역량을 결집하고자 하는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함
- 지역혁신체계는 지역 내의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지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도입·활용·교류·수정·확산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일정지역내의 연결망으로 상호작용과 학습이 성공의 핵심요건임

4) 경남 경제의 성장과정과 패턴

- 경남경제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지역의 경제성장 경로와 그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 지역경제의 성장경로와 변화과정 분석은 지역경제의 성장과정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인 GRDP지표를 사용하여 전국대비 누적 성장률을 분석함

① 지역별 GRDP와 1인당 GRDP의 누적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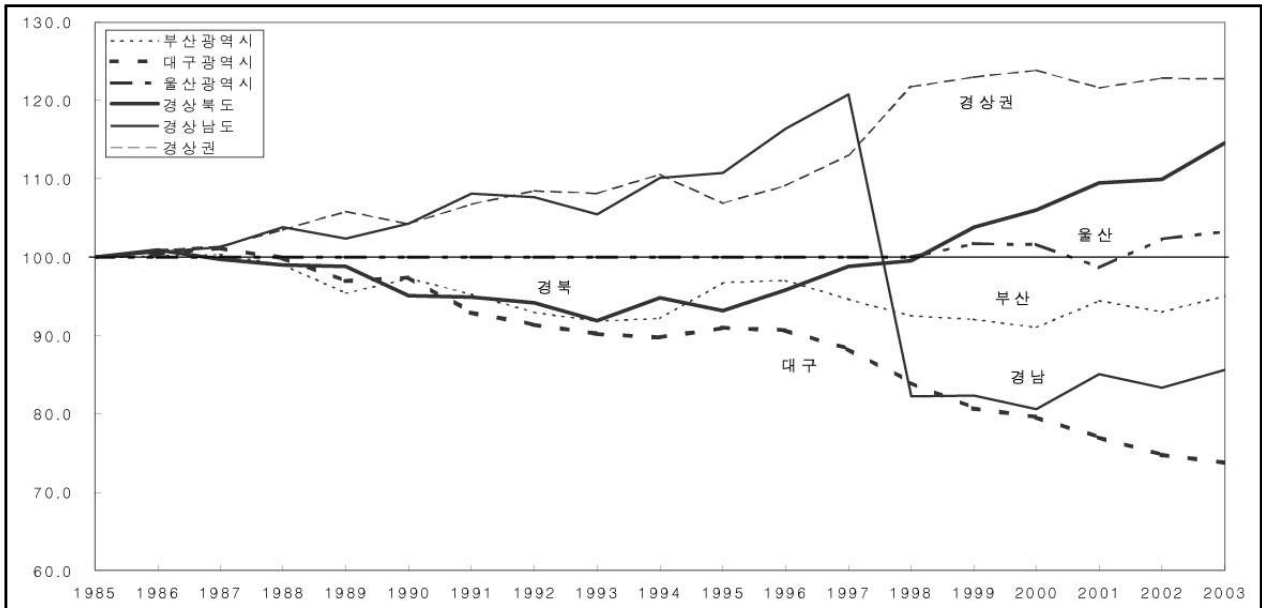
- (그림4-1)은 지역별 GRDP를 (그림4-2)는 1인당 GRDP의 누적성장률 지수를 보여줌
- 2003년을 기준으로 경상권과 경남 지역의 GRDP 누적성장률 지수는 각각 약 121과 72를 기록함
- 1985년~1998년 기간 동안에 경상권과 경남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발전지역에 해당됨
- 다만 1998년 울산이 경남에서 분리되면서 경남의 성장추세는 약간 둔화되어 있음



주) 울산자료는 1998년부터 이용하기 때문에 지수의 기점이 1998년임

자료) 통계청 KOSIS '지역 내 총생산'(2000년 불변가격 기준)

(그림4-1) 지역별 GRDP의 누적 성장률 지수 (전국=100)



주) 울산의 경우는 자료 이용 가능 시점인 1998이 지수의 기점임

자료) 통계청 KOSIS '지역 내 총생산'(2000년 불변가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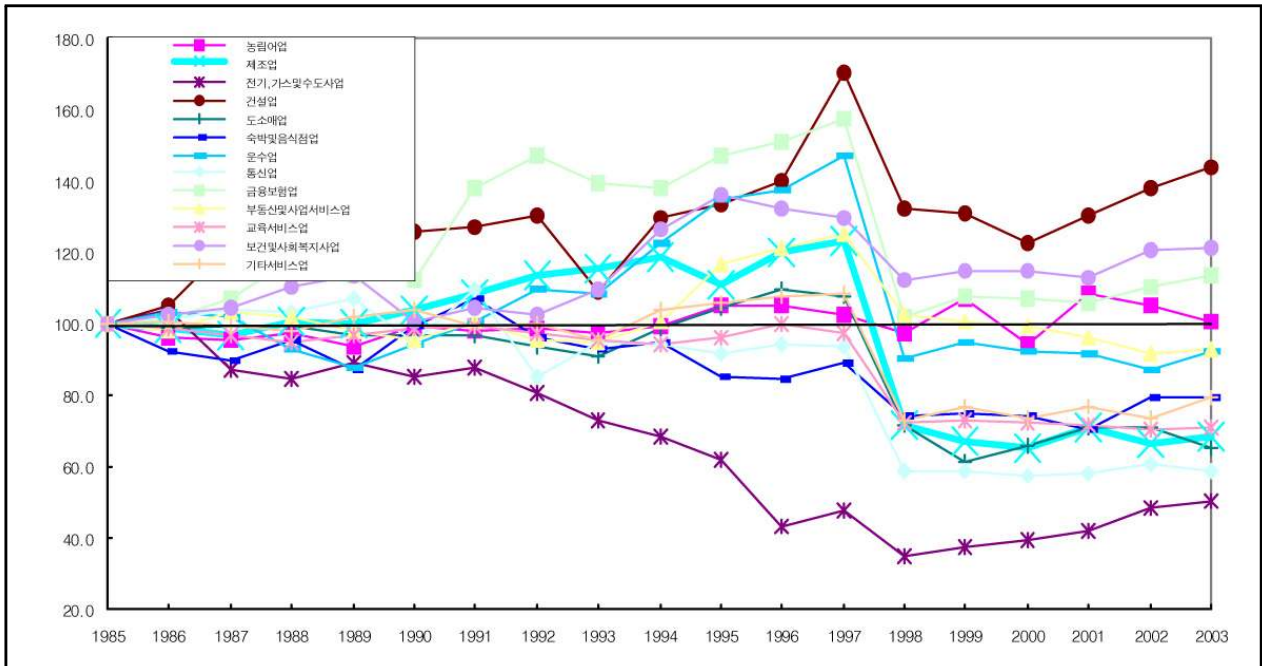
(그림4-2) 1인당 GRDP의 누적 성장률 지수 (전국=100)

- 2003년을 기준으로 경상권과 경남 지역의 1인당 GRDP 누적 성장률 지수는 각각 약 120과 80을 상회하고 있음
- 1인당 GRDP 누적성장률의 측면에서도 경상권과 경남 모두 지역경제 여건이 양호함을 보여줌
- 다만 1인당 GRDP의 성장이 경남의 인구규모 감소와 연관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함
- 경상권에서는 부산과 대구 등의 대도시권의 전국대비 생산능력의 성장 추세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북지역의 경우 1998년 이후 생산능력의 누적 증가율의 측면에서 약진을 보임
- 경남과 울산의 경우는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해 기존의 누적 성장패턴과 단절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결과적으로 경상권 전체로는 전국평균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1990년 중반이후 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 경상권의 성장추세를 견인하는 지역은 경남과 울산이고, 최근에 경북이

그 추세에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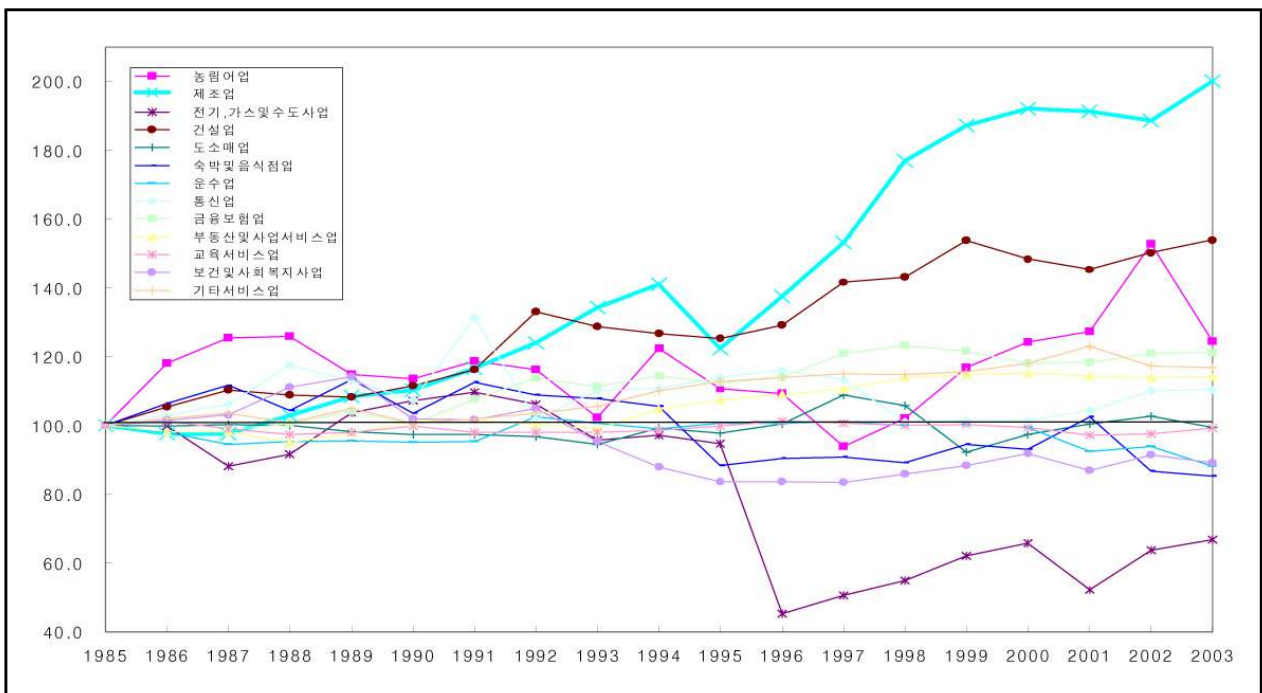
② 주요 산업별 GRDP의 누적성장 패턴

- 1985년~2002년 기간 동안에 경상권 지역에서 전국평균 이상의 누적성장 패턴을 보여주는 산업들은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등으로 이들 산업들이 경상권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
- 특히, 제조업은 200을 약간 상회하여 경상권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였고, IMF 외환위기와 거의 무관할 정도로 성장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농림어업은 2003년에는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임
- 경남의 경우에는 건설업, 보건 및 사회복지, 금융 및 보험, 운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의 성장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지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 지역경제의 생산능력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제조업은 울산의 분리로 인한 성장 추세의 단절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 성장추세 또한 둔화되었음
- 경남의 제조업 성장률 둔화는 울산의 분리로 인한 일시적 충격으로 여겨지지만, 이러한 제조업의 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경남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지역의 생산능력과 성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경남은 기계 및 관련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육성이 요구됨



자료) 통계청 KOSIS '지역 내 총생산'(2000년 불변가격 기준)

(그림4-3) 경남 지역의 주요 산업별 GRDP 누적 성장률 지수(전국=100)



자료) 통계청 KOSIS '지역 내 총생산'(2000년 불변가격 기준)

(그림4-4) 경상권의 주요 산업별 GRDP 누적 성장률 지수(전국=100)

4) 권역별·지역별 특화산업의 검토

① 경남 시·군의 산업별 비중 배분

- 경남도내의 시·군간 산업별 비중은 표와 같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도시지역은 경남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93.8%, 사회간접자본의 67.8%, 서비스업 생산액의 81.2%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림어업 생산액의 60.6%도 점하고 있음

(표4-10) 경남 주요 시·군의 산업별 구성배분(2004년 GRDP기준) (단위 : %)

시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양산	진주	밀양	거제	사천	통영	합계 (시)
농림어업	3.6	1.9	0.2	9.8	2.4	15.9	13.6	2.1	6.2	4.9	60.6
제조업	6.9	39.4	2.3	12.6	11.1	2.1	0.8	14.1	3.4	1.1	93.8
사회간접자본	7.6	10.7	5.2	15.1	6.5	7.1	3.7	4.5	4.5	2.8	67.8
서비스업	13.2	18.6	4.7	10.6	6.0	11.3	3.5	5.0	4.1	4.2	81.2
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산청	하동	남해	함양	거창	합천	합계 (군)
농림어업	3.5	3.6	5.1	4.4	4.0	3.3	3.2	2.8	4.4	5.1	39.4
제조업	0.3	3.4	0.8	0.6	0.1	0.2	0.1	0.2	0.3	0.2	6.2
사회간접자본	2.0	2.4	1.3	9.4	2.2	9.9	3.7	1.2	1.8	1.1	32.4
서비스업	1.2	2.0	3.2	1.9	1.3	1.8	3.5	1.5	2.1	1.9	18.8

자료) 경남통계청, 2005.

② 9중핵권역별 제조업 비중 비교

- 경남의 시·군을 동일 영향권을 보유한 9중핵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제조업 비중을 비교해 보면 마산, 창원, 진해, 김해, 양산이 포함된 동부·중부경남권이 압도적인 산업화 지역임을 알 수 있고, 서남부경남권역이 가장 낮은 제조업 기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음
- 서부해양경남권역과 서북부경남권역도 동부·중부경남권역에 비하면 취약한 제조업 기반을 가지고 있음

(표4-11) 권역별 제조업 비중(2006년 기준)

권역별		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생산액(백만원)		부가가치(백만원)	
동부 경남	김해	3,261	45.5	64,469	32.3	12,991,086	23.3	4,526,229	25.0
	양산	1,172		37,981		8,351,784		3,143,146	
	소계	4,433		102,450		21,342,870		7,669,375	
중부 경남	창원	1,995	28.9	94,243	38.6	37,579,402	50.7	12,243,704	47.1
	마산	590		17,585		5,677,476		1,410,113	
	진해	237		10,372		3,272,002		785,215	
	소계	2,822		122,200		46,528,880		14,439,032	
중북부 경남	밀양	145	2.8	3,939	2.2	710,525	1.6	278,872	1.6
	창녕	129		3,009		755,503		208,673	
	소계	274		6,948		1,466,028		487,545	
중부 내륙 경남	함안	521	5.9	11,353	3.9	3,189,694	3.8	1,168,793	4.1
	의령	51		1,135		267,773		97,754	
	소계	572		12,488		3,457,467		1,266,547	
서부 경남	진주	505	7.7	9,637	5.8	1,824,854	3.8	672,010	4.9
	사천	249		8,723		1,691,089		818,170	
	소계	754		18,360		3,515,943		1,490,180	
서남부 경남	하동	37	0.8	492	0.3	84,811	0.2	33,929	0.2
	산청	37		466		73,644		33,795	
	소계	74		958		158,455		67,724	
남부 해양 경남	거제	323	5.0	40,797	15.0	12,628,574	15.6	4,265,587	15.7
	통영	165		6,717		1,669,868		543,056	
	소계	488		47,514		14,298,442		4,808,643	
서부 해양 경남	고성	129	1.5	2,705	0.9	454,601	0.5	183,053	0.6
	남해	18		105		17,737		4,771	
	소계	147		2,810		472,338		187,824	
서북부 경남	거창	70	1.9	1,281	1.0	190,130	0.6	74,406	0.7
	함양	53		1,185		216,991		94,728	
	합천	66		761		117,360		44,302	
	소계	189		3,227		524,481		213,436	
총계		9,753	100.0	316,955	100.0	91,764,904	100.0	30,630,306	100.0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자료. 2006.

③ 지역별 특화산업의 검토

- 경남의 시·군별 특화산업을 파악하기 위해 종사자 기준의 입지계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 입지계수는 해당지역 해당제품의 전국 해당제품의 비로서 나타나며 '1'이상일 경우 전국 평균보다 해당지역의 제품이 비교우위를, '1'이하의 경우 비교열위를 나타냄
- 따라서 '1'이상의 경우 수출제품, '1'이하의 경우 수입제품으로 구분하기도 함
- 창원외의 경우 제1차 금속, 조립금속, 기타 기계 및 장비, 전기기계, 자동차 트레일러 등 전통적인 기계, 금속부문에서 LQ계수가 '1'이상으로 분석되어 타 지역에 비하여 특화되어 있음
- 반면에 김해·양산지역은 가죽, 가방, 섬유 제품과 화학, 고무제품 등 섬유, 의복 및 화학제품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들 도시지역 외에 전형적이고 농촌지역인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등의 군 지역은 1차산물의 가공제품인 음식료품에 절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으나, 부분적으로 금속, 나무, 비금속광물 등이 지역에 따라 특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표4-12) 경남 제조업의 시·군별 입지계수(종사자수 기준)

(단위:%)

구분	식품	담배	섬유	복합	가죽	목재	필름	출판	코스	화학	고무	금속	제1	조금	기타	컴퓨터	기타	전자	의료	자동차	기타	가구	재용
구분	및	제조	제품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및
창원	0.2	0.0	0.1	0.0	0.0	0.7	0.1	1.2	0.0	0.1	0.3	0.3	1.3	1.2	1.8	0.0	1.5	1.2	1.6	1.6	0.4	0.3	0.0
마산	1.0	0.0	0.7	0.9	0.0	0.4	0.6	4.8	0.0	0.8	1.0	0.5	0.3	0.6	0.8	0.0	2.1	6.2	2.6	0.3	0.0	0.7	1.5
진주	1.1	0.0	3.8	0.0	0.0	0.7	7.7	3.9	0.0	1.3	1.1	2.5	0.6	0.6	1.1	0.0	0.5	0.0	0.2	1.4	0.1	1.0	0.0
진해	3.7	0.0	0.3	0.0	0.0	5.0	0.0	0.0	0.0	0.8	0.0	0.6	0.0	0.6	0.0	0.0	0.0	0.0	0.0	0.0	3.6	1.1	0.0
통영	3.7	0.0	0.3	0.0	0.0	5.0	0.0	0.0	0.0	0.8	0.0	0.6	0.0	0.6	0.0	0.0	0.0	0.0	0.0	0.0	3.6	1.1	0.0
사천	2.3	0.0	0.1	0.0	0.0	0.4	0.7	0.0	0.0	0.0	0.1	1.3	0.6	0.4	0.9	0.0	0.2	2.4	0.0	0.7	2.0	0.0	0.0
김해	0.8	0.0	1.5	0.7	4.4	2.2	1.4	0.8	2.9	1.5	1.9	1.1	1.0	1.0	1.0	5.4	1.2	0.4	0.7	1.2	0.2	3.1	2.8
밀양	1.9	0.0	5.8	0.0	0.0	0.0	0.0	0.0	0.0	0.9	0.6	6.6	0.8	1.4	0.8	0.0	0.0	0.0	0.0	0.8	0.0	1.4	0.0
거제	0.5	0.0	0.2	0.4	0.0	0.0	0.0	0.3	0.0	0.0	0.0	0.1	0.3	1.1	0.0	0.0	0.0	0.0	0.0	0.0	4.9	0.0	0.0
양산	1.3	0.0	2.8	5.8	1.2	0.7	2.1	0.4	3.7	2.5	2.9	1.3	0.9	0.9	0.5	0.0	0.7	1.1	1.4	0.9	0.0	1.2	1.3
의령	2.6	0.0	0.0	0.0	0.0	0.0	8.7	0.0	0.0	3.0	0.9	2.9	4.5	0.9	0.8	0.0	0.0	0.0	0.0	0.0	0.0	0.0	0.0
함안	1.5	0.0	1.1	0.0	0.0	2.4	2.2	0.0	0.0	3.0	0.5	1.8	2.3	1.2	1.2	0.0	0.7	0.2	0.6	1.0	0.1	1.6	6.1
창녕	3.0	0.0	1.0	0.0	0.0	0.0	1.2	0.0	0.0	2.0	1.1	1.6	0.0	0.6	0.8	0.0	4.2	0.0	0.0	2.5	0.0	0.0	0.0
고성	7.8	0.0	0.0	0.0	0.0	0.9	0.0	0.0	0.0	7.3	0.0	0.9	0.0	0.2	0.0	0.0	0.0	0.0	0.0	0.0	1.9	0.0	0.0
남해	16.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하동	10.4	0.0	0.0	0.0	0.0	0.0	0.0	0.0	0.0	2.8	0.9	7.4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산청	5.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6.7	0.0	0.0	0.7	0.0	0.0	0.0	0.0	0.0	0.0	0.0	0.0
함양	5.9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14.0	0.0	1.5	0.0	0.0	0.0	0.0	0.0	0.0	0.0	0.0	0.0
거창	9.6	0.0	1.9	0.0	0.0	2.9	0.0	0.0	0.0	2.9	0.0	7.6	0.0	0.3	0.0	0.0	0.0	0.0	0.0	0.0	0.0	0.0	0.0
합천	3.7	0.0	9.9	0.0	0.0	0.0	0.0	0.0	0.0	2.1	0.0	14.3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주) 산업특화계수(LQ)=지역의 산업별 구성비/전국의 산업별 구성비, 산업특화계수LQ>1이면 전국에 비해 「특화」, 산업특화계수LQ=1이면 전국에 비해 「평균수준」, 산업특화계수LQ<1이면 전국에 비해 「비특화」

자료) 경남통계청, 2005

2 산업입지 여건변화와 주요과제

1. 산업입지 여건변화

- 지식기반산업들이 무겁고 규모가 큰데서 가볍고 규모가 작아짐에 따라 생산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규모도 작아지게 되어 대규모의 값싼 부지를 선호하는 것에서 중소규모의 전문화된 산업 집적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
- 단순한 제조기능보다 지식을 창출하는 혁신기능이 중요하게 되면서, 산업입지 공간의 복합기능이 중요하게 바뀌고 있으며 산업입지공간은 R&D (Research & Development), 디자인, 유통 및 판매, 경영활동 등 복합기능을 가져야 함
- 기업은 급변하는 외부환경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핵심역량만 제외하고는 전문화된 기업들에게 위탁함으로써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됨
-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역간에 업체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산업입지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되며, 인센티브는 다양화됨
- 환경 또는 경관상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자연과 조화된 환경친화적인 시설을 선호함
- 기업활동이 광역화되고, 범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인력과 정보 등이 비교적 잘 공급되는 수도권과 대도시권에 대한 입지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 기업간 경쟁이 치열함에 따라 기업환경이 양호한 수도권과 대도시권을 선호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입지수요는 증대되고, 기존 산업집적지는 재구조화가 진행될 것임

2. 산업단지 개발환경의 변화방향

1) 산업단지의 복합기능화

- 생산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 교육훈련, 창업기능, 공동전시·판매시설 등 복합단지로 변화하고 있음
-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면서 산학연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들을 지원할 주거, 상업, 유통, 복지 등 다양한 업종과 지원시설을 연계 배치하여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임

2) 지식산업단지 및 신산업단지화

-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신산업 또는 지식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단지로 변화되고 있으며, 기존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유망신산업의 창업을 유도하는 단지로 전환되고 있음
-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는 산업의 혁신기능·연구 개발기능·기업간 네트워크 등이 중심이 되고, 시장수요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역할이 증대됨
-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요지향적 입지정책 추진, 다양한 지식기반산업 입지정책의 연계 및 조정, 지속적인 집적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업종별 특성과 지역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에 기초한 시장주도형 정책수단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함
 - 중앙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공공과 민간간 역할을 정립하고 이들 정책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업이 필요한 입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성장단계별, 업종별 입지정책의 연계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집적지구 조성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건물 등 다양한 시설공급 위주의 정책과 함께 재정, 금융, 인력확보, 기술진흥, 마케팅 등 소프트 인프라와 토지, 건물, 기반시설 등 하드 인프라를 포괄하는 통합시책이 필요함

3) 산업단지 혁신주체간 네트워킹 강화

- 기업지원을 위한 기관 협의회, 기업간 교류회 등 다양한 혁신주체간 네트워킹이 활성화되어 부품조달, 연구개발,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

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유도함

4) 산업집적을 촉진하는 전문단지화

- 동종 및 관련기업들이 집적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기업에게 필요한 연구시설, 공동장비, 교육시설, 마케팅 등을 상호 공동으로 활용하는 전문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증가됨
- 설비, 기술, 정보와 노하우 등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때 공동으로 활용하는 범위의 경제가 중요시되면서 공공의 혁신자원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 공간이 창출됨으로써 기업들의 집적을 촉진함

3] 경남지역 산업입지의 문제점

1. 자본재 생산부문의 취약성

- 고도의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자본재산업의 미성숙으로 핵심부품의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선박, 기계 등의 산업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기여도가 낮은 편임
- 경남의 기계산업은 기술집약적이 아닌 단순 자본집약적 가공조립에 치우쳐, 후발개도국의 추격이나 수출입, 환율변동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편임

2. 첨단(기술)산업의 상대적 열세

- 첨단(기술)산업은 기존 제조업 중 항공·우주, 의약, 컴퓨터, 정보통신기기 산업과 생명공학, 메카트로닉스 등 기술융합화나 새로운 과학기술적 발견 또는 연구성과의 상업화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발전 비전 차원에서 제시되는 산업을 말하고 있는데, 경남은 항공·우주와 메카트로닉스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비중이 낮은 편임
- 이 분야가 취약함은 곧 21세기의 국가 산업경쟁력 전체의 약화를 의미하므로 향후 경남의 전략사업으로 지정된 기계, 로봇 및 지능형 홈, 바이오 산업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됨

3. 농림·수산업 장래의 불투명성

- 한·칠레간 한·미간 FTA협정에 이어 앞으로 한·일간 FTA는 물론 한·중간 FTA등 계속해서 체결될 전망이다
- 현재 정부의 대책안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금까지의 농정에 대한 불신으로 농어민이 크게 신뢰를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중앙정부와는 별도로 경남도 차원에서 전면개방에 대비한 경남농업 전략수립이 필요함

4. 지식기반산업의 불투명성

- 경남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지원하는 소위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미발달로 우리 경제의 중심축인 제조업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음

-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는 전문과학기술서비스, 건축 및 엔지니어링서비스, 전기통신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부동산임대공급업, 금융관련서비스, 영화공연산업, 법무회계관련서비스 등을 들 수 있음
- 현재 이 산업 종사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전산업 종사자의 약 50%, 지식기반제조업의 62%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 산업임
-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세계경제 추세에 부합하고, 제조업 중심의 경남경제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이 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임

5. 지역금융의 취약성

- 지역금융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물 자본에 비해 금융자본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임. 그 중요한 요인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로 지역소재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구조조정에 따른 흡수합병과 경영악화 등으로 경남지역 저축기관의 점포가 크게 감소하여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의 기회가 더욱 줄고 있음

6. 지역혁신체계의 미흡

- 경남은 공공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기술연구 기반 인프라가 전국 대비 6.8%, 4.8%, 5.3%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과 대전지역을 제외하고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하여 크게 뒤지는 편은 아님
-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기술연구기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혁신주체와 혁신메카니즘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아 아직 그 효과가 미흡한 실정임

4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1. 산업입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도출

- 기존의 산업단지 정책은 산업용지, 도로, 항만, 수자원, 전력 등 물리적 입지여건 공급에 치중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인 입지여건은 간과해온 경향이 있음(소프트시설, 정보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생산환경의 중요성 인식 부족)
- 또한 지금까지 산업입지의 공급은 규모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치중해 왔으며, 대부분 토지이용상의 상충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기존의 시가지와 격리되어 개발됨
 - － 이에 비해 새로운 생산공간은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 이전의 생산공간에 비해 혁신적 환경, 고기술인력, 전문기업의 집적, 관련기업간의 연계 등을 중시하는 산업공간이라 할 수 있음
- 향후 산업단지 공급은 단순 노동력 확보나 생산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물리적 하부구조 보다는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과 환경의 쾌적성 확보에 치중할 필요가 있음. 작업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넓고 편리하며 쾌적한 작업 및 주변환경이 필요하고, 주거환경으로는 단순한 주거수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단위의 질 높은 사회적·문화적 도시환경이 포함되어야 함
 - － 특히 첨단산업의 발전과 함께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대학의 육성과 이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중요한 입지인자로 작용할 것이므로 두뇌기능과 생산기능간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됨

(표4-13) 새로운 산업공간의 요소특성

구분	전통적 산업공간	새로운 산업공간	새로운 산업공간의 특성
자본	대규모 자본 투입	기술적 우위 및 기술개발력	혁신적 환경 중시
노동	저렴한 노동력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 및 연구개발인력	높은 수준의 기술인력 중시
경제	규모의 경제	신속한 제품개발 능력	전문기업의 집적
거래비용	거래비용의 내부화	기업간 네트워크 원활화	관련기업간 네트워크의 활발

- 새로운 유형의 산업입지는 서로 배척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동일한 단지에 유치하여 집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도된 공간으로 주거기능, 생산기능, 연구기능, 정보기능, 업무기능, 상업기능 등이 결합한 동종업종과 이종업종의 집단화로 집적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복합적인 산업입지라고 할 수 있음
- 복합적인 산업입지는 첨단산업, 지식산업, 고차적 서비스 산업 등 성장률이 높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정보교류, 인적교류에 의존도가 높은 미래지향적 성장산업과 지원기능이 집적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생산환경이 조성되어 경제활동과 도시활동이 결합될 수 있는 입지라고 할 수 있음

2. 지식기반산업의 합리적 입지공급

- 일반적으로 기존의 지역발전 전략은 제조업중심의 발전전략,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정책,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 개별적·단편적 추진으로 정리됨
- 이에 비해 새로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는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별 차별화 전략,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지역내외 네트워크의 구축,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시도 등이 제시됨
-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공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으로는 각 부처에서 특정산업육성을 위해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 입지시책을 서로 연계하여 추진토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제도의 효과적 활용, 국민임대 산업단지를 활용한 소규모 지식기반산업 입지공급 확대, 해외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전용단지 등의 활성화,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정 및 운영의 효율화 도모 등이 필요함

3. 중소기업을 위한 소규모 산업단지 및 임대공장 공급확대

- 부동산 시장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앞으로 토지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조세행정의 관리능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본이득을 기대한 부동산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및 외부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저렴한 가격의 임대산업단지와 임대공장을 공급함으로써 산업입지 공급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제조업의 소프트화에 대응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산업입지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도시의 경우 저렴한 가격의 임대공장을 공급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임

4. 지역의 자율적인 산업단지 육성과 책임경영 강화

- 지역의 산업입지 개발은 지역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정부의 자율적인 계획과 추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 과잉경쟁에 따라 총량적으로 공급과잉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수요의 정확한 추정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지역정부 주도의 산업입지 공급을 위해 지원 및 기준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경영을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함. 산업입지 개발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중장기적인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과 아울러 명확한 수요추정을 바탕으로 산업입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경영을 강화토록 해야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및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5. 산업입지 개발의 지원확대

- 앞으로도 산업입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여건 변화에 맞춘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 첫째, 재원확보방안의 확대 및 다양화해야 함. 국가가 일반산업단지를 지원할 때 지역정부가 일정비율을 부담만 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도입하는 방식이 있음. 이와 함께 지역정부가 산업입지 개발을 위해 외자도입을 도모할 경우 지역정부의 책임아래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해야 함. 따라서 재원확보 방안의 개발 및 확대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매칭펀드, 고용창출장려금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 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산업입지 지원을 체계화해야 함. 향후의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산업입지 개발방식 및 개발규모가 다양화될 경우 지원대상 입지의 선정에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산업입지 지원의 기준은 산업입지의 규모, 입지지역의 특성, 국가정책과 부합성 등의 측면에서 마련토록 함
- 셋째, 낙후지역 산업입지 개발의 합리적 지원이 필요함. 산업입지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임. 특히, 낙후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지여건이 나빠 기업의 선호도가 낮으므로 낙후지역의 경우 균형개발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낙후지역의 산업입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의 선정기준과 지원방법,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산업입지제도에 반영토록 함

6.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개발

-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지역의 고용과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경쟁적인 산업단지 개발은 과도한 개발로 미분양사태의 초래와 환경문제의 발생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앞으로 소득수준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산업단지의 개발은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산업단지 지정·개발이 매우 어렵게 될 것임
- 앞으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산업단지를 공급하되 환경친화적인 입지로 개발해야 함. 특히 산업정책, 입지정책, 환경정책의 합리적 연계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환경용량을 감안한 산업입지 개발이 추진되어야 함. 아울러 생태산업단지 등 환경친화적인 산업입지개발모형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함

7. 기존 산업단지의 계획적 재정비

- 산업단지가 지정·개발되어 생산체계를 갖추게 되면 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원 및 관련 시설운동이 입지하게 되어 새로운 중심지를 형성하게 됨
-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존 도심의 확장으로 산업단지는 제 기능을 상실하거나 도심 내 문제지역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음. 이들 기존 산

업단지의 쇠퇴는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쳐 영향권 내의 도시지역의 쇠퇴를 동반하게 되어 사회적 문제를 발생케 됨

- 그러나 기존의 산업단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물적·인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고 있고 이미 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재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기존 산업단지를 공장의 집적지로서가 아니라 각종 지원 및 서비스기능이 집적된 새로운 도심으로 재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산업구조 재편방안, 도시개발 방향, 도시정비방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재활성화해야 할 것임

8. 국가의 산업단지개발에서의 역할 재정립

-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중화학 공업 등의 육성을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산업중심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도록 국가산업단지 제도가 운용될 필요가 있음. 즉 도시첨단산업단지제도를 일반산업단지로 운용하되 지식기반산업의 중요성과 아울러 지역의 여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산업단지 제도로 운영하도록 함
- 그리고 국가산업단지 제도의 운영의 경우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 후 단지의 기능이 정착되면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하여 지역에 의한 자율적 운영을 추진함. 즉 국가산업단지 가운데 일부는 운영 후 일반산업단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9. 외국인 투자기업의 효과적 유치에 위한 입지공급

- 글로벌 경제에서 외국인 투자의 유치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긴요한데, 각 지자체는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 일부 지자체는 효과가 있으나 일부의 경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효과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입지방안 마련이 지역차원에서도 필요함

-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투기업')을 위한 입지공급방안의 목표는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 유치추진, 외투기업의 입지효과 극대화, 역차별의 효과적 방지, 규제 극소화와 환경규제운용 등이 있을 수 있음
- 외투기업의 유치를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외투기업 입지수요특성의 적극적 수용, 종합적이되, 현실적인 투자환경 마련, 진입 및 입지비용의 절감도모, 중앙의 역할과 지자체의 재량과 책임증대, 기존 제도 및 입지의 효과적 활용, 외투와 지역발전의 효과적 연계 등을 설정함
- 추진전략으로는 투자자유지역의 지정, 업종별 전문화단지의 조성, 국가별 전용단지 공급, 핵심기업 연계단지 조성 및 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음. 이러한 방안은 배타적인 아닌 동시적용이 가능한 상호 연계모형이며 기존의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전용공단, 수출자유지역 등은 상기 방안에 포함 또는 연계되어야 함

10. 해외직접투자 증대에 따른 산업입지의 대응

- 해외직접투자는 급증해 왔으며, 향후 더욱 가속화 될 것임. 이는 세계화 시대에 불가피한 현상이나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산업공동화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산업입지 부문에서도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해외투자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함. 해외투자에 따른 입지부문의 영향을 수용할 대체 산업 또는 기업의 창출을 도모해야 함. 특히 국내자본의 해외이동을 대체하는 차원에서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입지차원에서 지원함
- 해외투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의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의 지역산업 구조조정과 아울러 산업연계의 유지 또는 활성화를 지원함. 산업단지 가운데 해외투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산업단지의 구조재편을 추진하되, 이에선 산업단지 재정비와 아울러 업종재편 등 구조고도화를 포함함
- 해외이전에 따른 이전적지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이에선 이전적지를 가급적 산업용으로 유지하거나 복합적인 용도로 활용

하되 도시계획차원에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국민임대산업단지 개발 등이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음

- 해외직접투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차원에서도 기업의 생존을 위해 추진되기도 함. 따라서 중소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외산업단지의 개발을 추진해야 함. 이에선 단순한 입지공급차원이 아닌 정보제공과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되도록 해야 함
- 개성공단, 신의주 특구 등 북한경제의 개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북투자도 광의적 의미 또는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해외직접투자의 한 유형임. 따라서 북한개방 및 북한투자를 해외직접투자와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이에선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보완, 안행형(雁行型) 모형(Flying geese model)의 적용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제5장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 ① 제3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 ② 경남의 산업입지 수요추정 및 전망
- ③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제5장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① 제3차 산업입지 공급계획⁴⁾

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평가

1) 제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 총 공급규모 : 전반기('92~'96년) 중 49.3km², 10년간('92~2001) 114.4km²를 공급
- 선공급 물량을 '91년도의 3.5년분에서 2001년도에는 4.8년분으로 확대
- 계획입지비율을 '96년 61.4%, 2001년 63.1%로 확대
- 산업단지 유형별 계획입지 공급비율
- 국가공단의 공급비율을 '96년에는 60%, 2001년에는 58.2%로 배정
- 지역별 배분비율
- 전반기 공급량의 56%인 34.0km²를 충남북 및 호남지역에 공급

2)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 2002~2003년간 산업용지는 2001년에 비해 8.8km²가 증가하여 매년 약 4km²씩 증가하였으며,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 제시하는 연간 증가량 10.6~12.0km²에 비해 실제 공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통계자료의 오류로 판단되는데, 2002년에 비해 2003년의 용지면적이 10km²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임. 이러한 통계상의 오류를 반영한다면 계획치와 비슷하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2) 제3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 2007~2017년 동안 총 108.6km²~123.2km² 정도의 산업용지 공급이 필요
- 공급면적 = 순수요면적(96.6~108.5km²) + 선공급면적(20.3~23.0km²) + 재정비·재개발면적(15km²) - 미분양면적(7.3km²) - 해외이전 수요면적(3.5km²) - 휴·폐업면적(12.5km²) = 108.6~123.2km²
- 2007~2017년까지 매년 10.9~12.3km², 평균적으로 매년 약 11.6km²정도

4) 건설교통부,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2007.10) 자료

를 공급토록 함

- 계획입지비율은 서울과 광역시(인천, 울산 제외) 등 대도시의 경우 개별 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하여 60:40으로 적용함
- 인천과 경기도는 개별입지 억제에 정책적 의지 반영으로 70:30을 적용
- 울산은 기존 계획입지 위주의 용지 공급을 감안하여 80:20을 적용
- 여타 도지역은 70:30을 적용
-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총 증가분 108.6~123.2km² 가운데 신규 산업 단지 조성 등을 포함한 계획입지로 전체 공급면적의 약 70%인 76.0~85.7km², 나머지 30%인 32.6~37.5km²를 개별입지로 공급토록 함
-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기간 중 산업단지 개발규모는 134.6km²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전국 계획입지 공장부지 80.8km²,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율은 60%를 적용
- 지역별 산업단지 면적은 경기 31.8km², 경남 19.6km², 충남 15.8km²

(표5-1) 산업입지 공급계획

구분	1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3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계획기간	1992~1996(5년간), 2001(10년)	2002~2011(10년간)	2007~2017(11년간)
계획의 주요내용	공급규모 : 5년간('92~'96) : 49.3km ² 공급 계획입지 비율 : '96년 61.4%, 2001년 63.1%로 확대 국가공단 공급비율 : '96년 60%, 2001년 58.2% 배정 지역별 배분비율 : 전반기 공급량의 56%인 34.0km ² 를 충남북 및 호남지역에 공급	공급규모 : 106.3km ² ~120.0km ² 공급 계획입지 비율 : 수도권 65%, 울산 80%, 기타 대도시 65%, 도지역 75%로 산정 권역별 공급규모는 수도권 21%인 22.8km ² ~24.4km ² , 비수도권이 79%인 83.5km ² ~95.6km ² 공급	공급규모 : 108.6km ² ~123.2km ² 계획입지 비율 : 수도권 60%, 울산 80%, 기타 대도시 60%, 도지역 70%로 산정 수도권은 25.9~26.5km ² 24.4~26.8%
실적 및 평가	1992~1996년간 공업입지 공급계획상의 2~3배 수준으로 공급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충남·북지역에서 계획 면적을 크게 초과 경제활황기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개별입지가 급증 지방에서 공급된 일부 산업용지는 기업 수요에 부적합하여 미분양 사례 발생	2001년부터 2003년까지 8.8km ² 가 증가하여 매년 약4km ²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 제시하는 연간 증가량 10.6~12.0km ² 에는 못 미침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상 2003년의 공장부지 면적이 2002년에 비해 10km ²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상의 오류로 사료됨	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기간 중 산업단지 개발 규모 : 134.6km ² 에 달함 전국 계획입지 8.08km ²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율 60% 지역별 산업단지 면적 :경기 31.8km ² , 경남 19.6km ² , 충남 15.8km ² 등 주요산업단지 : 대구 석대지구, 봉무지구, 광주 평동산단, 울산 감천, 달천, 경남 마산 진동, 대덕특구 1단계, 석문산단, 포항 테크노 등이 있음

2] 경남의 산업입지 수요추정 및 전망

1. 경남의 업종별 생산액 전망

- 경제전망과 산업구조전망을 볼 때 향후 경남의 제조업은 수출산업의 국제경쟁 심화 및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등의 여건변화로 인해 증가 추세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전자와 같은 기술집약산업들의 높은 성장, 그리고 전통산업과 첨단기술과의 접목과 IT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등장할 것임
- 업종별로는 정보통신과 컴퓨터관련 제조업·정밀기기·비철금속 등이 성장 유망산업으로 전망되고, 특히 경남은 지역의 특성상 기계분야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남의 업종별 생산액을 과거 15년(1990~2005) 자료를 토대로 지수평활법으로 전망함

(표5-2) 경남의 업종별 생산액(1990~2007)

(단위:백만원)

업종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음식료품	1,737,500	3,070,668	4,065,181	4,602,948	4,634,767	5,283,291
섬유의복	1,543,700	1,689,829	1,741,607	1,415,664	1,603,311	1,545,462
목재종이	553,724	1,516,096	1,431,761	1,880,640	1,705,992	1,980,844
석유화학	5,871,814	3,218,780	3,422,655	6,154,279	5,196,444	4,644,940
비금속	856,786	1,576,711	1,186,716	1,856,540	1,896,900	1,933,050
철강	3,024,733	6,205,658	3,802,446	7,235,856	6,158,181	5,402,568
기계	5,587,737	12,623,520	15,087,170	28,711,075	25,629,575	27,056,150
전기전자	2,952,258	5,500,127	8,719,872	10,433,788	11,335,927	11,205,556
운송장비	10,077,381	23,162,933	12,425,242	21,972,150	18,989,043	17,465,489
기타	187,222	264,561	206,062	548,683	353,185	354,712
제조업계	32,392,895	58,828,883	52,088,712	84,811,623	77,503,325	76,872,061

자료)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 연도.

2006년, 2007년 생산액은 추세연장에 의한 추정치임.

- 본 연구에서 추정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이중지수평활법임. 이는 단순지수평활법을 두 번 적용하는 방법으로 시계열 자료에 경향(trend)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하는 지수평활법임

$$S_t^{[1]} = \omega Y_t + (1 - \omega)S_{t-1}^{[1]}, S_t^{[2]} = \omega S_t^{[1]} + (1 - \omega)S_{t-1}^{[2]} \quad (\text{식 3.2})$$

- 즉 $S_t^{[1]}$ 은 Y_t 의 평활한 값이고 $S_t^{[2]}$ 는 $S_t^{[1]}$ 의 평활한 값임. 그리고 k기간 이후 예측치는 다음과 같이 구함

$$\hat{Y}_{t+k} = (2 + \frac{\omega}{1-\omega}k)S_t^{[1]} - (1 + \frac{\omega}{1-\omega}k)S_t^{[2]} \quad (\text{식 3.3})$$

- 평활상수 ω 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상수로서 $0 < \omega < 1$ 의 범위 내에서 정한 상수로서 Brown(1962)은 0.05와 0.3사이의 값을 사용하기를 권장하였으며, Montgomery와 Johnson(1976)은 다음 식을 제안하였음

$$\omega = 1 - 0.8^{1/trend} \quad (\text{식 3.4})$$

- 본 연구에서는 이중지수평활법으로 생산액을 추정하였고 평활상수 ω 는 식 3.4에 의해 0.11로 정함
- 업종별 생산액 추정치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방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경남은 매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즉 경남 제조업 생산액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울산시가 광역시로 분리함에 따라 과거 자료의 추세치가 일관성 있는 전망자료로 활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점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하는 방법으로 울산시가 분리되기 이전의 자료를 울산 분리 이후 경남의 제조업 생산액 추세를 근거로 역으로 과거자료를 등차급수 방법으로 추정하여 전체 10년간(1995~2005년)의 생산액 자료를 만들어 2020년까지의 생산액 추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음

- 추정결과 2008년도에 79조원에서 2020년에는 109조원으로 증가하고 1990년 기준(약 32조원)으로 연평균 약 8%씩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5-3) 경남의 업종별 생산액 전망치(2008~2020년)

(단위:백만원)

업종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음식료품	5,493,578	5,703,865	5,914,152	6,124,439	6,334,726	6,545,014	6,755,301
섬유의복	1,525,511	1,505,559	1,485,608	1,465,656	1,445,705	1,425,753	1,405,801
목재종이	2,062,914	2,144,985	2,227,056	2,309,127	2,391,197	2,473,268	2,555,339
석유화학	4,721,558	4,798,176	4,874,795	4,951,413	5,028,032	5,104,650	5,181,268
비금속	1,994,942	2,056,833	2,118,725	2,180,617	2,242,509	2,304,400	2,366,292
철강	5,495,947	5,589,326	5,682,706	5,776,085	5,869,465	5,962,844	6,056,224
기계	28,379,167	29,702,184	31,025,201	32,348,218	33,671,235	34,994,252	36,317,269
전기전자	11,645,527	12,085,497	12,525,467	12,965,437	13,405,407	13,845,377	14,285,347
운송장비	17,680,870	17,896,251	18,111,633	18,327,014	18,542,395	18,757,776	18,973,157
기타	359,955	365,198	370,441	375,684	380,927	386,170	391,413
계	79,359,969	81,847,874	84,335,784	86,823,690	89,311,598	91,799,504	94,287,411
업종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08~2020 총증가액
음식료품	6,965,588	7,175,875	7,386,162	7,596,449	7,806,736	8,017,024	약 30조원 증가
섬유의복	1,385,850	1,365,898	1,345,947	1,325,995	1,306,044	1,286,092	
목재종이	2,637,409	2,719,480	2,801,551	2,883,622	2,965,692	3,047,763	
석유화학	5,257,887	5,334,505	5,411,123	5,487,742	5,564,360	5,640,979	
비금속	2,428,184	2,490,075	2,551,967	2,613,859	2,675,751	2,737,642	
철강	6,149,603	6,242,982	6,336,362	6,429,741	6,523,121	6,616,500	
기계	37,640,286	38,963,303	40,286,320	41,609,337	42,932,354	44,255,371	
전기전자	14,725,317	15,165,288	15,605,258	16,045,228	16,485,198	16,925,168	
운송장비	19,188,538	19,403,919	19,619,300	19,834,681	20,050,062	20,265,443	
기타	396,656	401,899	407,142	412,385	417,629	422,872	
계	96,775,318	99,263,224	101,751,132	104,239,039	106,726,947	109,214,854	

주1) 울산광역시 분리 이전의 데이터를 등차급수($b = \sum_{i=1}^n \frac{(P_i - P_{i-1})}{n} = \frac{P_n - P_0}{n}$)에 의해 과거의 자료를 보정한 경상남도 제조업 생산액 자료로 추정.

주2) 2008년 추정치임

주3) 기준년도 : 1990년

2. 산업입지 원단위 전망

- 추정된 원단위는 22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반면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행한 「산업입지 수요조사방법 및 기준 표준화 방안 연구」에서는 연구 편의상 10개 중분류로 제시하고 있어 국가산업용지계획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10개 중분류로 변환할 필요가 있음
- 22개 업종을 10개 업종으로의 변환은 업종 간 생산액 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고려한 가중평균치를 적용하여 산출함

(표5-4) 생산액(백만원)당 소요부지 면적원단위 추정

(단위:m²)

업 종 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식료품	0.91	0.90	0.90	0.89	0.88	0.87	0.86	0.86	0.85	0.84	0.83	0.82	0.81
담배	1.14	1.19	1.25	1.30	1.36	1.41	1.47	1.53	1.58	1.64	1.69	1.75	1.80
섬유제품	1.09	1.06	1.03	0.99	0.96	0.93	0.89	0.86	0.83	0.79	0.76	0.73	0.69
의복 및 모피	0.23	0.22	0.22	0.22	0.21	0.21	0.21	0.21	0.20	0.20	0.20	0.20	0.20
가죽, 가방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7	0.68	0.69	0.70
목재 및 나무	2.31	2.35	2.39	2.44	2.48	2.52	2.56	2.60	2.65	2.69	2.73	2.77	2.82
펄프, 종이	1.58	1.60	1.61	1.63	1.64	1.66	1.67	1.69	1.70	1.72	1.73	1.75	1.76
폴판, 인쇄	0.51	0.51	0.51	0.51	0.52	0.52	0.52	0.52	0.52	0.53	0.53	0.53	0.53
석유정제품	0.32	0.31	0.30	0.29	0.28	0.27	0.26	0.25	0.25	0.24	0.23	0.23	0.22
화학제품	0.63	0.58	0.54	0.50	0.46	0.42	0.39	0.36	0.33	0.31	0.28	0.26	0.24
고무	1.01	1.00	0.98	0.97	0.96	0.94	0.93	0.92	0.90	0.89	0.88	0.86	0.85
비금속	2.38	2.33	2.28	2.23	2.18	2.14	2.10	2.05	2.02	1.98	1.94	1.90	1.87
1차 금속	0.82	0.77	0.74	0.70	0.66	0.62	0.59	0.55	0.53	0.50	0.47	0.44	0.42
조립금속	1.63	1.66	1.70	1.73	1.77	1.80	1.84	1.87	1.91	1.94	1.98	2.02	2.05
기타 기계	0.72	0.69	0.66	0.64	0.61	0.58	0.55	0.52	0.49	0.46	0.43	0.40	0.37
사무용기기	0.05	0.04	0.03	0.03	0.02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기타전기기계	0.58	0.57	0.57	0.56	0.55	0.54	0.54	0.53	0.52	0.52	0.51	0.51	0.50
음향 및통신장비	0.08	0.07	0.06	0.06	0.05	0.04	0.04	0.03	0.03	0.02	0.02	0.02	0.02
의료,정밀,광학기기	0.48	0.47	0.46	0.46	0.45	0.44	0.44	0.43	0.42	0.42	0.41	0.41	0.40
자동차 및 트레일러	0.56	0.55	0.54	0.53	0.52	0.51	0.51	0.50	0.49	0.49	0.48	0.47	0.47
기타운송장비	0.81	0.75	0.70	0.66	0.61	0.57	0.54	0.50	0.47	0.44	0.41	0.38	0.36
가구 및 기타	1.42	1.45	1.47	1.49	1.51	1.53	1.55	1.57	1.59	1.61	1.63	1.66	1.68

(표5-5) 업종분류변환에 따른 원단위 조정

분류	중분류	산업 중분류명	업종별생산액 (백만원)	업종비중	2008	2009	2010	2011	2012
음식료품	15	음·식료품	43,900,000	0.92	0.91	0.90	0.90	0.89	0.88
	16	담배	3,800,000	0.08	1.14	1.19	1.25	1.30	1.36
	소계	-	47,700,000	1.00	0.93	0.93	0.92	0.92	0.92
섬유의복	17	섬유제품	22,900,000	0.57	1.09	1.06	1.03	0.99	0.96
	18	봉제의복	12,300,000	0.31	0.23	0.22	0.22	0.22	0.21
	19	가죽, 가방	5,100,000	0.13	0.57	0.58	0.59	0.60	0.61
	소계	-	40,300,000	1.00	0.76	0.74	0.72	0.71	0.69
목재종이	20	목재 및 나무	3,700,000	0.12	2.31	2.35	2.39	2.44	2.48
	21	펄프, 종이	14,300,000	0.48	1.58	1.60	1.61	1.63	1.64
	22	출판, 인쇄	11,800,000	0.40	0.51	0.51	0.51	0.51	0.52
	소계	-	29,800,000	1.00	1.25	1.26	1.27	1.29	1.30
석유화학	23	코크스, 석유	37,100,000	0.28	0.32	0.31	0.30	0.29	0.28
	24	화합물 및 화학	66,000,000	0.50	0.63	0.58	0.54	0.50	0.46
	25	고무 및 플라스틱	28,800,000	0.22	1.01	1.00	0.98	0.97	0.96
	소계	-	131,900,000	1.00	0.63	0.60	0.57	0.54	0.52
비금속	26	비금속광물	22,500,000	1.00	2.38	2.33	2.28	2.23	2.18
철강	27	제1차금속	56,200,000	0.68	0.82	0.77	0.74	0.70	0.66
	28	조립금속	26,400,000	0.32	1.63	1.66	1.70	1.73	1.77
	소계	-	82,600,000	1.00	1.08	1.06	1.04	1.03	1.01
기계	29	기타기계 및 장비	55,700,000	1.00	0.72	0.69	0.66	0.64	0.61
전기전자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20,300,000	0.13	0.05	0.04	0.03	0.03	0.02
	31	기타전기기계	26,000,000	0.17	0.58	0.57	0.57	0.56	0.55
	32	전자부품, 음향및통신	103,500,000	0.67	0.08	0.07	0.06	0.06	0.05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5,700,000	0.04	0.48	0.47	0.46	0.46	0.45
	소계	-	155,500,000	1.00	0.18	0.17	0.16	0.15	0.14
운송장비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74,900,000	0.75	0.56	0.55	0.54	0.53	0.52
	35	기타운송장비	25,600,000	0.25	0.81	0.75	0.70	0.66	0.61
	소계	-	100,500,000	1.00	0.62	0.60	0.58	0.56	0.54
기타	36	가구 및 기타제품	9,800,000	1.00	1.42	1.45	1.47	1.49	1.51

주) 업종별 생산액은 전국통계치임(2003년)

(표5-5) 업종분류변환에 따른 원단위 조정(계속)

분류	중분류	산업 중분류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식료품	15	음·식료품	0.87	0.86	0.86	0.85	0.84	0.83	0.82	0.81
	16	담배	1.41	1.47	1.53	1.58	1.64	1.69	1.75	1.80
	소계		0.92	0.91	0.91	0.91	0.90	0.90	0.90	0.89
섬유의복	17	섬유제품	0.93	0.89	0.86	0.83	0.79	0.76	0.73	0.69
	18	봉제의복	0.21	0.21	0.21	0.20	0.20	0.20	0.20	0.20
	19	가죽, 가방	0.62	0.63	0.64	0.65	0.67	0.68	0.69	0.70
	소계		0.67	0.65	0.63	0.62	0.60	0.58	0.56	0.54
목재종이	20	목재 및 나무	2.52	2.56	2.60	2.65	2.69	2.73	2.77	2.82
	21	펄프, 종이	1.66	1.67	1.69	1.70	1.72	1.73	1.75	1.76
	22	출판, 인쇄	0.52	0.52	0.52	0.52	0.53	0.53	0.53	0.53
	소계		1.31	1.33	1.34	1.35	1.37	1.38	1.39	1.41
석유화학	23	코크스, 석유	0.27	0.26	0.25	0.25	0.24	0.23	0.23	0.22
	24	화합물 및 화학	0.42	0.39	0.36	0.33	0.31	0.28	0.26	0.24
	25	고무 및 플라스틱	0.94	0.93	0.92	0.90	0.89	0.88	0.86	0.85
	소계		0.49	0.47	0.45	0.43	0.42	0.40	0.38	0.37
비금속	26	비금속광물	2.14	2.10	2.05	2.02	1.98	1.94	1.90	1.87
철강	27	제1차금속	0.62	0.59	0.55	0.53	0.50	0.47	0.44	0.42
	28	조립금속	1.80	1.84	1.87	1.91	1.94	1.98	2.02	2.05
	소계		1.00	0.99	0.98	0.97	0.96	0.95	0.95	0.94
기계	29	기타기계 및 장비	0.58	0.55	0.52	0.49	0.46	0.43	0.40	0.37
전기전자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0.02	0.02	0.01	0.01	0.01	0.01	0.01	0.01
	31	기타전기기계	0.54	0.54	0.53	0.52	0.52	0.51	0.51	0.50
	32	전자부품, 음향및통신	0.04	0.04	0.03	0.03	0.02	0.02	0.02	0.02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0.44	0.44	0.43	0.42	0.42	0.41	0.41	0.40
	소계		0.14	0.13	0.13	0.12	0.12	0.12	0.11	0.11
운송장비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0.51	0.51	0.50	0.49	0.49	0.48	0.47	0.47
	35	기타운송장비	0.57	0.54	0.50	0.47	0.44	0.41	0.38	0.36
	소계		0.53	0.51	0.50	0.49	0.47	0.46	0.45	0.44
기타	36	가구 및 기타제품	1.53	1.55	1.57	1.59	1.61	1.63	1.66	1.68

주) 업종별 생산액은 전국통계치임(2003년)

3. 생산액당 부지원단위 방식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 지수평활법에 의해 2009~2020년까지의 생산액을 추정하고, 각각의 업종에 대해 전향에서 예측한 생산액당 부지원단위를 곱하여 소요 산업 용지를 추정함
- 추정결과 산업구조 고도화 등 부지생산성향상으로 부지면적 원단위 값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약하나마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 방법은 신규산업의 생성과 경제침체에 따른 가동율 저하 등의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음

(표5-6) 생산액당 부지원단위 방식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단위:km²)

업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식 료품	5.12	5.3	5.5	5.6	5.8	6.0	6.2	6.3	6.5	6.7	6.8	7.0	7.2
섬유 의복	1.2	1.1	1.1	1.0	1.0	1.0	0.9	0.9	0.8	0.8	0.8	0.7	0.7
목재 종이	2.6	2.7	2.8	3.0	3.1	3.3	3.4	3.5	3.7	3.8	4.0	4.1	4.3
석유 화학	3.0	2.9	2.8	2.7	2.6	2.5	2.4	2.4	2.3	2.2	2.2	2.1	2.1
비금속	4.8	4.8	4.8	4.9	4.9	4.9	5.0	5.0	5.0	5.0	5.1	5.1	5.1
철강	4.5	4.3	4.2	4.0	3.8	3.7	3.6	3.4	3.3	3.2	3.0	2.9	2.8
기계	38.2	38.9	39.7	40.5	41.2	42.0	42.8	43.5	44.4	45.2	46.0	47.0	47.8
전기 전자	2.1	2.0	2.0	2.0	1.9	1.9	1.9	1.9	1.9	1.9	1.9	1.8	1.8
운송 장비	11.0	10.7	10.5	10.3	10.1	9.9	9.8	9.6	9.4	9.3	9.2	9.0	8.9
기타	0.5	0.5	0.5	0.6	0.6	0.6	0.6	0.6	0.6	0.6	0.7	0.7	0.7
계	72.8	73.2	73.9	74.5	75.0	75.8	76.5	77.1	78.0	78.8	79.5	80.5	81.4

4. 과거추세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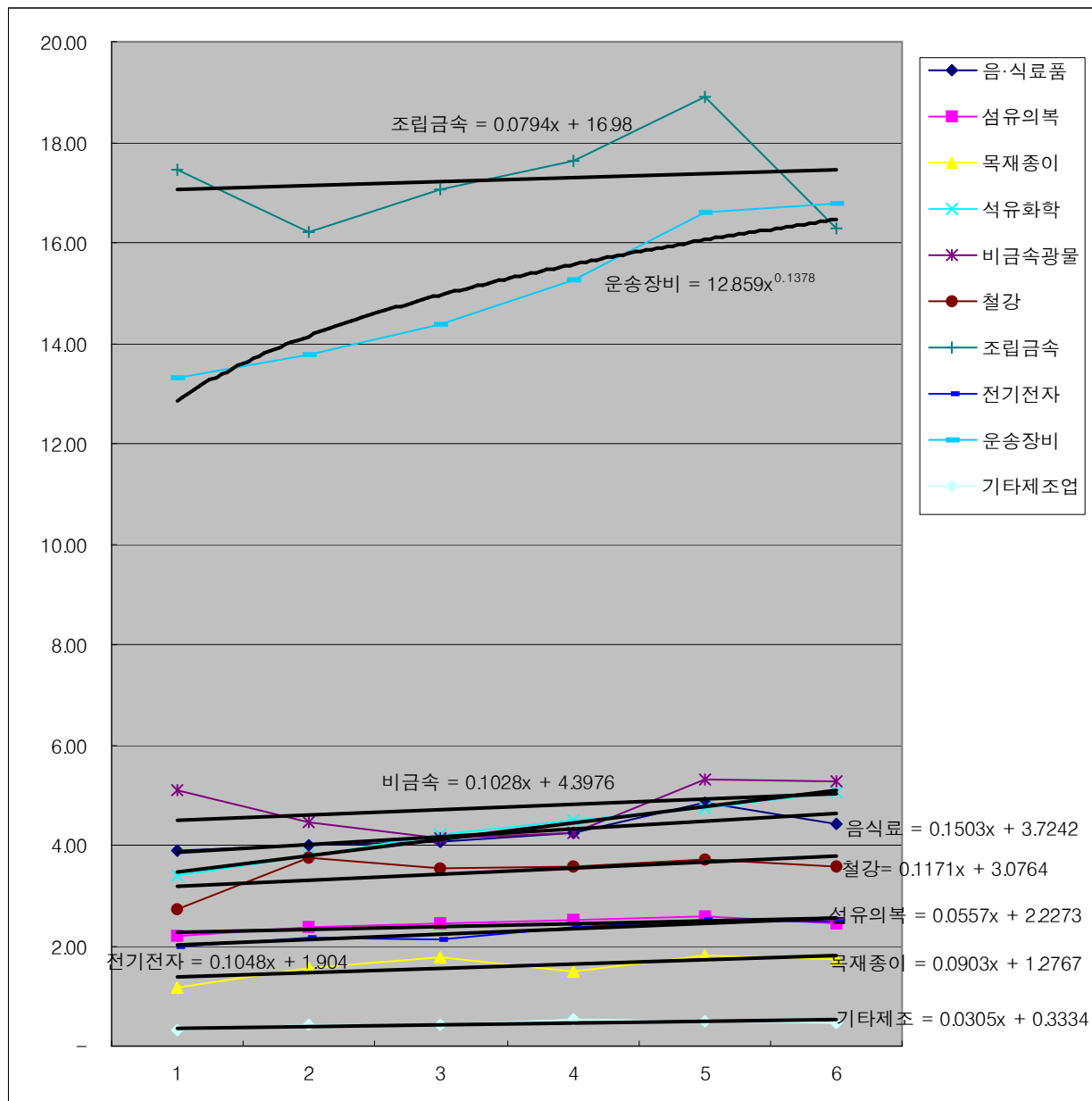
- 과거(1998년~2003년)추세의 산업 용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광공업 통계 자료」를 활용, 업종별 산업용지를 추출한 후 추세연장법(extrapolation)을 이용하여 2008~2020년까지의 산업용지의 면적을 추정하였음
- 경남의 업종별 구성에 있어 22개 업종을 10개 업종으로 변환하여 살펴 보면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제조업이 약 30~35%, 운송장비제조업이 25~30%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 두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2003년도의 경우 조립금속이 16.28km², 운송장비가 16.80km²에 달하고 전체면적(58.51km²) 대비 약 56.5%로서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5-7) 업종별 산업용지 증가추이

(단위:km²)

업종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음식료품	3.90	4.02	4.07	4.26	4.84	4.42
섬유의복	2.19	2.36	2.44	2.53	2.58	2.43
목재종이	1.18	1.57	1.78	1.49	1.80	1.73
석유화학	3.41	3.80	4.22	4.50	4.73	5.06
비금속	5.11	4.46	4.13	4.24	5.32	5.28
철강	2.74	3.75	3.54	3.59	3.72	3.57
조립금속	17.45	16.20	17.08	17.65	18.89	16.28
전기전자	2.00	2.15	2.12	2.39	2.50	2.47
운송장비	13.30	13.76	14.37	15.26	16.60	16.80
기타제조업	0.32	0.42	0.42	0.52	0.48	0.48
제조업계	51.60	52.49	54.16	56.44	61.48	58.51

- 이들 업종의 과거 추세를 살펴보면 총 10여개의 업종 중 대부분의 업종이 직선적 성장경향(등차급수식)을 보여주고 있으나 운송장비는 거듭 제곱식 성장경향(등비급수식)을 보여주며 모든 업종에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그림5-1) 업종별 산업용지 증가추세 분석도

- 1998년도를 기준으로 업종별 증가추세를 고려하여 장래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연장 추계해본 결과 경남지역의 산업용지 총 면적은 약 81.13km²로 추정됨
- 경남지역의 특화 업종인 조립금속 및 전기·전자 업종의 변화를 살펴보면 조립금속의 경우 전체의 23%, 전기·전자의 경우 23.8%로 추정되어 과거 년도에 비해 그 비중이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예측됨
- 반면에 석유화학, 전기·전자 제조업이 2003년 현재 8.6%, 4.2%에서 2020년에 13.1%, 5.3%로 추정되어 타 업종에 비하여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표5-8) 생산액당 부지원단위 방식에 의한 산업용지 추정

(단위:km²)

업종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음식료품	5.38	5.53	5.68	5.83	5.98	6.13	6.28	6.43	6.58	6.73	6.88	7.03	7.18
섬유의복	2.84	2.90	2.95	3.01	3.06	3.12	3.17	3.23	3.29	3.34	3.40	3.45	3.51
목재종이	2.27	2.36	2.45	2.54	2.63	2.72	2.81	2.90	2.99	3.08	3.17	3.26	3.35
석유화학	6.71	7.04	7.36	7.68	8.01	8.33	8.65	8.98	9.30	9.62	9.95	10.27	10.59
비금속	5.53	5.63	5.73	5.84	5.94	6.04	6.15	6.25	6.35	6.45	6.56	6.66	6.76
철강	4.36	4.48	4.60	4.72	4.83	4.95	5.07	5.18	5.30	5.42	5.54	5.65	5.77
조립금속	17.85	17.93	18.01	18.09	18.17	18.25	18.33	18.41	18.49	18.57	18.65	18.73	18.81
전기전자	3.06	3.16	3.27	3.37	3.48	3.58	3.69	3.79	3.90	4.00	4.10	4.21	4.31
운송장비	17.89	18.11	18.31	18.50	18.68	18.84	19.00	19.15	19.29	19.43	19.56	19.69	19.81
기타제조업	0.67	0.70	0.73	0.76	0.79	0.82	0.85	0.88	0.91	0.94	0.97	1.00	1.03
제조업계	66.57	67.84	69.09	70.33	71.57	72.79	74.00	75.20	76.40	77.59	78.78	79.96	81.13

5. 경남의 산업용지 수요추정 및 결과값 보정

- 각각의 수요추정 방법론에 의한 산업용지 수요추정 면적치는 2009년 추정면적의 경우 생산액당 부지원단위 방법과 과거추세에 의한 방법을 비교해 볼 때 유사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생산액당 부지원단위법이 약 5.08km² 더 높게 산출됨
- 따라서 2009년 산업용지 수요추정면적 및 2009~2020년의 산업용지 순수요 면적의 최소값과 최대값은 2009년 결정값의 평균값을 두고 2020년의 추정방법에 따른 결과값과의 차이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정하였음
- 추정결과 2009년 산업용지 수요추정면적은 70.53km²로 산출되었으며, 2020년 수요추정면적은 81.13km²~81.43km², 순수요 면적은 10.6km²~10.9km²로 추정됨

(표5-9)수요추정의 방법론별 차이값 및 결과값의 보정

방법론	2009년 추정 면적(km ²)	2020년 추정 면적(km ²)	순수요 면적(km ²)
생산액당 부지원단위법	73.22	81.43	(+)8.21
과거추세에 의한 방법	67.84	81.13	(+)13.29
평균값	70.53	81.28	(+)10.75
최종 보정값	70.53	81.13~81.43	10.6~10.9

3]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1. 공급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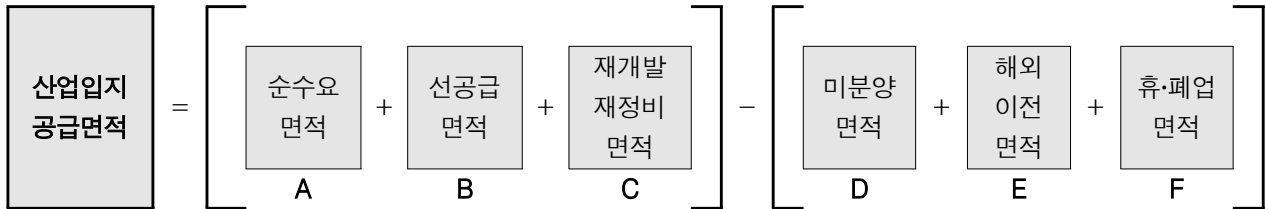
-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필요성은 신경쟁(New Competition)시대에도 입지 정책 필요, 인프라 공급을 위한 공공의 역할 계속 등임
- 신경쟁 시대의 기업은 비용절감 보다 생산제품, 생산과정, 조직혁신을 통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함. 기업의 본질은 가격 경쟁보다는 창조적 파괴에 있으며, 기업의 생존은 효율성보다는 혁신에 의해 장기적인 생존이 결정됨
- 그러므로 시장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의 경제가 기업생존의 주요현안임
- 산업입지는 도로, 항만, 상·하수도 및 마천가지로 인프라의 일부임. 한편 신경쟁 시대에도 기업은 준공공 조직들이 결성되어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정부의 전략적인 산업정책이 중요함
- 결국 정부의 경쟁정책은 기업의 혁신과 시장순응성을 높이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며, 지원정책으로 인프라(Hard 및 soft)투자가 필요함
- 공급계획의 기본원칙은 지역별 산업발전추이 및 잠재력 수용, 산업입지공급계획의 탄력성 제고, 산업입지 구조재편의 효율적 수용,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실천력 제고 등임

2.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1) 산정과정

- 산업입지 공급규모는 산업용지의 순수요 면적에 추가수요인 선공급 면적, 재개발·재정비 면적, 미분양 면적, 해외이전 면적, 휴·폐업 면적을 감안하여 산정함
- 산업입지 공급규모는 순수요 면적과 추가수요 면적을 감안하여 산정함. 이에 대한 산정방법은 아래 표에 의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08~2020년 지역별 산업용지 공급규모 산정은 동 기간 동안 산업용지 순수요면적과 선공급면적, 여기에 재개발·재정비면적과 미분양, 해외이전 면적 등을 고려하여 2020년까지의 공급규모를 산정함

(표5-10)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과정



① 순수요 면적(A)

- 순수요추정면적은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생산액 원단위를 활용하여 부지면적을 추정한 결과 2009~2020년까지의 순수요면적은 10.6~10.9km²로 2009년 70.53km²에서 최소치와 최대치를 적용하여 2020년 81.13~81.43km²로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매년 0.88~0.91km²의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② 선공급 면적(B)

- 선공급 면적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동안 공급의 공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업의 입지수요와 공급 간의 시간적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면적임
- 다만, 선공급 면적은 순수요 면적 중 계획입지만을 대상으로 선공급함
- 선공급면적은 계획입지 수요 중 3년치의 산업용지를 선 공급하며, 부지면적이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공급면적을 배제함
-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2009~2020)에 의거 선공급 면적은 도지역의 경우 순수요면적의 70% 정도의 면적을 3년 동안 공급한 면적에 해당되므로 1.86~1.91km² 정도라 할 수 있음

③ 재개발·재정비 면적(C)

- 산업단지 재정비는 준공(부분준공을 포함)된 산업단지로서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지역의 확산 및 산업시설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본 계획에서 기준년도인 1989년 이전임
- 다만, 준공된 지 20년 미만의 산업단지 중에서 도시지역 확산으로 업종 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으나 해당사항 없음

- 재개발·재정비 대상면적 중 산업용지율(60%)과 재정비시 기업들이 희망하는 확장규모(약 150~160%)를 고려하여 재정비·재개발 면적을 산정함

□ 계획입지 재개발 재정비 면적산출

- 2007년 전국산업단지 통계에 의하면, 경남지역의 계획입지 중 1989년 이전에 준공해 재개발, 재정비 대상인 산업단지 면적은 산업단지 면적은 5.42km²에 이름
- 한편 설문조사에 의해 계획입지 내 기업들 중 향후에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율 86.6%와 재정비사업 시행 시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 59.8%를 고려할 때 대상면적은 2.81km² 임
- 이중 재개발·재정비 대상면적 중 산업용지를 60%를 적용할 경우, 1.69km²이며 기업들이 희망하는 확장규모 약150~160%를 고려하여, 확장규모 155%를 적용했을 경우 산출면적은 2.62km²임
- 즉 산업단지 재정비에 의해 공급해야 할 계획입지 면적은 2.62km²이며, 지역별 배분은 1989년 이전 준공된 산업단지 면적 비율을 기준으로 함

□ 개별입지 재개발 재정비 면적산출

- 개별입지의 재개발 면적산정의 방법 역시 산업단지 재정비 산정 방법과 동일함
- 단 산업입지 공급계획수립지침(2009~2020)년에 의해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70:30으로 공급함에 있어, 재개발 재정비 대상면적인 1989년 이전까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가동 중인 산업단지 면적은 5.42km²의 30%인 1.63km²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음
- 한편 설문조사에 의해 개별입지 내 기업들 중 향후에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율 94.2%와 재정비사업 시행 시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 42.0%를 고려할 때 대상면적은 0.64km² 임
- 이중 재개발·재정비 대상면적 중 산업용지를 60%를 적용할 경우, 0.38km² 임
- 또한 재개발 사업 시행 후 계획입지 입지비율이 66.1% 정도로 가정했을

때 순수하게 개별입지에 남아있는 면적은 0.13km² 임

- 결국 계획입지 재정비 수요 2.62km²와 개별입지 재정비 수요 0.13km²를 고려했을 때 이들을 합한 2.75km²를 공급계획에 반영토록 함

④ 미분양 면적(D)

- 산업단지 미분양면적 가운데 기업수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선 공급된 면적으로 간주하여 공급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수립 직전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함
- 미분양 면적은 2007년 말을 기준으로 경남전체 미분양면적은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 0.40km²임
- 하지만, 0.4km²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면적은 기업수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0.36km²에 대해서만 선공급된 면적으로 간주하여 2020년까지 공급해야 할 면적 중에서 제하기로 함
- 따라서 미분양 면적은 0.36km² 임

⑤ 해외이전 면적(E)

- 1970년대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섬유·의복(신발포함) 제조업을 비롯한 노동집약적 산업들은 1980년대에 들어 임금인상, 지가상승 등 생산비용의 증가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기 시작함
- 또한 1990년대에 들어서는 환경규제에 대한 강화와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이들 업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짐
- 결국 비용절감, 노동력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기 시작하였고 이전대상 업종도 음식료품, 섬유·의복제조업에서 전자통신장비 및 수송기계 등으로 확대됨
-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합해 응답업체의 4.48%가 해외이전을 계획 중인 것으로 밝혀짐
- 해외이전 면적은 제조업 전체 업종에 대해 이들 업체들이 국내에 있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부지면적을 산정함
-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진출 현지기업의 매출액 현황과 매출액 당

부지원단위를 활용하여 면적을 산출하며, 여기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이전 면적을 추정하며, 이중 향후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비율을 적용하여 해외이전에 의해 발생하는 이전적지 면적을 산정함

- 공급계획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설비 해외이전에 따른 이전적지를 산업용지로 재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 면적을 산출하여 공급계획에 반영토록 함
- 이전적지의 면적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진출 현지기업의 매출액 현황과 매출액 원단위를 활용하여 면적을 산출함

(표5-11) 해외투자금액에 대한 매출액 현황

업종	해외투자금액 (천달러)		해외투자에 의한 매출액 (천달러)	
	2006	2007	2006	2007
음식료품	9,626	10,000	-	312
섬유의복	119,360	134,154	505,878	536,975
목재종이	16,290	14,790	217,984	261,733
전기전자	102,486	696,021	980,854	1,457,074
합계	247,762	854,965	1,704,716	2,256,094

주) 자료는 한국 수출입은행 내부자료임
업종은 주요 해외이전 산업임.

2006년 음식료품에 대한 해외투자에 의한 매출액은 자료가 누락됨. 따라서 제외하고 합계 계산함

- 2007년 현재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해외 총 투자액은 8억 5천 달러이며, 해외투자에 의한 현지기업의 매출액은 22억 6천 달러에 달하고 있음
- 위의 표에 있는 ‘2006년과 2007년의 해외투자금액에 대한 매출액 현황’을 이용하여, 2009년 해외이전업종에 대한 매출액을 예측하고, 「제4장 산업용지 수요추정 및 전망」에서 추정한 ‘생산액당 부지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업용지를 추정하면 총 1.94km²가 될 것으로 예상됨

(표5-12) 산업용지 추정

업종별	2009년 산업용지 추정면적(㎡)	2009년 매출액 추정액(백만원)	매출액당 부지면적 원단위(㎡/백만원)
음식료품	652	701	0.93
섬유의복	665,125	898,818	0.74
목재종이	660,049	523,848	1.26
전기전자	614,414	3,614,202	0.17
합 계	1,940,240	5,037,569	0.39

주) 1. 환율은 1,500원

2. 짧은 기간 예측이므로 등차급수식으로 추정

·증가율(r) = 음식료품(24.92%), 섬유·의복(6.15%), 목재·종이(20.07%), 전기·전자(48.55%)

·음식료품의 증가율은 타업종 증가율의 평균치 적용

- 즉 이들 업종이 만약 국내에서 생산활동을 했을 경우의 소요 부지면적 약 1.94km²가 해외투자로 인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각 국에서 발생하게 된 것임
- 한편 해외투자로 인해 국외에서 발생한 산업용지 수요 1.94km²는 기존에 해외에 진출해 있던 국내기업들의 신규투자 확대와 기존 생산설비 증설, 국내 기업의 해외이전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 가운데 해외이전에 의한 부지면적은 앞서 언급한 설문결과를 토대로 추정할 수 있음
- 즉 현재까지 해외에 생산거점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는 조사업체들 중 4.48%로 나타나 총 수요 1.94km²의 면적 중 0.09km²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추정치를 이용하여 2020년까지 산업용지의 증가를 단순연장 추정한 결과 5.51km²로 산출됨
- 따라서 본 수요량에 2009년 이후 생산설비 해외이전 기업 비율 4.48%를 적용해보면 해외이전에 의해 발생하는 면적은 0.25km²로 추정되며 순수요는 2009년 수요량 0.09km²를 제외한 0.16km²가 될 것으로 판단됨

⑥ 휴폐업 면적(G)

- 시·군·구내 휴업 및 폐업한 공장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휴·폐업면적을 산정함
- 단지 내 휴·폐업면적은 공장용지로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100%를 공장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간주함
-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에서는 휴·폐업 면적을 고려토록 하고 있으나, 경남지역 공장등록 분석결과 기존 공장 중, 휴·폐업 공장 면적은 그 규모가 미약하므로 분석에서 배제토록 함

3. 경남의 산업용지 공급규모산정

- 2008년 현재 앞에서 설명한 산출과정을 적용해 보았을 때 2009~2020년 산업용지 순수요는 10.6~10.9km²로 분석되었으며, 2020년까지 총 공급규모는 14.69~15.04km²가 예상되어, 2020년 산업용지 공급규모는 85.22~85.57km²가 예상되어짐

(표5-13) 경남의 산업용지 공급계획

(단위:km²)

	현황 (A)	순수요 (B)	추가수요 (C)					총공급 (D)			2020년 면적 (E)
		2009년 ~2020년	계	선공급 (+)	재개발 재정비 (+)	미분양 (-)	해외 이전 (-)	계	계획 입지	개별 입지	
경남	70.53	10.60 ~10.90	4.09 ~4.14	1.86 ~1.91	2.75	0.36	0.16	14.69 ~15.04	10.28 ~10.53	4.41 ~4.51	85.22 ~85.57

주) (A)는 2009년 산업용지 추계면적임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은 산업입지 공급계획수립지침에 의해 70:30으로 산정

-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조성된 산업용지 중 순수산업시설에 해당하는 부지는 보통 60% 정도로 나머지 40%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하는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경남의 경우 산업시설 부지가 65%정도로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이는 기계, 조선 등 전통적인 제조업 관련 산업용지가 많은 경남의 특성으로 파악되나 세계적인 추세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종사자들의 욕구 증가를 고려할 때 공공용지 비율이 많이 증가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제6장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 ① 계획의 전제
- ② 공급현황 및 제3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 ③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제6장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① 계획의 전제

- 도내 산업입지의 공급량은 5장에서 제시한 공급규모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공급량을 결정함
- 목표연도(2020년)의 지역별 공급량은 2008년 현재 입지량을 기준으로 배분하되 미래년도에 대한 정책적 용량의 고려가 필요하므로 이들 용량은 해당지역에서 계획하고 있는 입지량을 기준으로 보정토록 함
- 다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조성규모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지자체에서 직접시행 등 사업시행자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그 규모를 인정토록 배분함

② 공급현황 및 제3차 산업입지 공급계획

1.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현황

- 도내 지역별 산업용지의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현재 총 152.8km² 중 창원시가 35.1%인 53.63km²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거제시가 12.9% 19.7km²로 분석되어 높은 비중을 보임
- 입지유형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된 창원시, 진주시의 계획입지 구성이 높은 반면에 김해시, 양산시, 마산시, 창원군, 남해군, 고성군 등에서는 개별입지의 구성이 높음
- 특히 김해시의 경우 도내 20개지역 중 전체 산업비중은 창원시, 거제시에 이어 세 번째이나 개별입지가 계획입지의 4배에 달하고 있어 개별입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지역임
- 권역별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중부경남권역(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이 전체 권역의 40.2%를 차지하고 있어 경남 산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서부해양권역과 서북부권역은 그 비중이 낮아 향후 산업기능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임

(표6-1)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현황

(단위:천㎡·%)

구 분		계획입지		개별입지		합계	
권역	시·군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동부경남	김해시	2,969	2.6	12,137	30.4	15,106	9.9
	양산시	3,876	3.4	4,193	10.5	8,070	5.3
중부경남	창원시	53,074	47.0	552	1.4	53,626	35.1
	마산시	1,160	1.0	1,749	4.4	2,909	1.9
	진해시	4,198	3.7	706	1.8	4,904	3.2
중북부경남	창녕군	197	0.2	1,368	3.4	1,565	1.0
	밀양시	1,837	1.6	1,017	2.5	2,854	1.9
중부내륙 경남	함안군	5,599	5.0	3,190	8.0	8,789	5.8
	의령군	817	0.7	367	0.9	1,184	0.8
서부경남	진주시	5,397	4.8	784	2.0	6,180	4.0
	사천시	4,775	4.2	3,803	9.5	8,578	5.6
서남부경남	하동군	7,569	6.7	463	1.2	8,032	5.3
	산청군	563	0.5	354	0.9	917	0.6
남부해양 경남	거제시	13,146	11.6	6,531	16.3	19,676	12.9
	통영시	3,776	3.3	503	1.3	4,279	2.8
서부해양 경남	남해군	59	0.1	126	0.3	185	0.1
	고성군	614	0.5	921	2.3	1,535	1.0
서북부경남	거창군	1,281	1.1	314	0.8	1,594	1.0
	함양군	1,492	1.3	528	1.3	2,020	1.3
	합천군	443	0.4	382	1.0	825	0.5
합계		112,841	100.0	39,987	100.0	152,828	100.0

자료) 각 시·군별 내부자료, 2008. 8.

공급현황 자료는 공급계획의 지역적 특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별 내부자료를 활용함.

주) 내부공공시설 및 기타면적 포함 면적임.

2. 경남의 산업단지 조성계획현황

- 산업용지 공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수요예측에 따른 산술적인 공급량의 결정은 해당지역의 정책적 차이 등 지역요소가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별 계획량을 분석하였음
- 각 시·군에서 제출한 계획규모에는 사업시행 주체가 불확실하거나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 사업실현에 따른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공급량에서 제외하여 산정하였음
- 너무 불확실한 요소를 고려할 경우 본 계획에서의 추정치가 실제로 큰 오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량을 분석함
- 현실적 실현가능성 판단 기준
 - － 사업시행시기가 불명확
 - － 개발주체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전문디벨로퍼가 제안한 경우)
 - － 개발주체가 없는 경우
 - － 산업단지 공급계획 실태조사에서 기지정·고시된 단지 중 미착공단지에 대한 조성계획은 미반영
 - －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산업단지의 조성계획은 미반영

(표6-2) 경남의 산업단지 조성계획현황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위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유치업종	사업비 (억원)	신청 예정일	추진실적	반영여부
김해	테크노 밸 리	일반	진례면 담안리	5,777	'09~'15	한화그룹 한국산업은행	자동차, 선박기자재 등	16,946	'09. 7	민간 투자자 신청완료	○
	제2산업 단 지	일반	명법, 풍류동원	1,481	'08~'15	민간개발	"	5,444	'09.10	투자의향서 제출	○
	하계	일반	진영읍 하계리	852	'10~'15	민간개발	"	1,800	'09. 9	임지타당성 조사용역완료	
	병동	일반	한림면 병동리	1,184	'10~'15	민간개발	"	2,500	'09. 9	"	
양산	용당	일반	용당	415	'08.01.~ '12. 12.	민간개발	자동차 부품관련	914	'09.10	사업시행자 공모공고	○
	동리	일반	어곡	165	'08.11~ '11.12	민간개발	비금속광물 전기전자 운송장비	437	'08.11	산업단지계획 협의중	○
창원	창원	일반	대산	479	'07.5~ '12.12	한국토지공사	컴퓨터 및 전자부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1,400	'09.5	실시계획 수립중	○
	동전	일반	북면	1,849	'08.11~ '13.12	민간개발	IT산업 부품소재	5,000	'19.12	산업단지 계획수립중	
	천선	일반	천선	96	'08.02~ '12.12	창원시장	자동차 부품	450	'09.12	산업단지 계획수립중	
마산	도시형	첨단	회성동	404	'07 ~'12.12	한국토지공사	지식기반형제조업	1,692	'09.10	임지타당성용역완료 GB해제 용역	○
	창포 (임해)	일반	진동/ 진전면	9,435	'07 ~'15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유치	첨단기계, 조선	30,031		임지타당성용역완료	○
	난포	일반	진전면	3,900	'06 ~'14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유치	조선, 조선기자재	9,750		임지타당성용역완료	○
	수정	일반	구산면	276	'09 ~'10	STX중공업	조선기자재	691	'08.11.0 7	산업단지계획승인신 청	○
	예곡	일반	예곡동	600	'12 ~'15	정부투자 기관유치	첨단산업 및 로봇관련 산업			임지타당성 검토 용역중	
	평성	일반	내서읍	900	'12 ~'15	정부투자 기관유치	기계,금속 및 물류산업			임지타당성 검토 용역중	
	중리	일반	내서읍	89	'10 ~'13	정부투자 기관유치	기계			임지타당성 검토 용역중	
	가포	일반	가포동	624	'09 ~'13	정부투자 기관유치	조선				
	구암	일반	구암동	75	'09 ~'12	민간개발	제조				
	안계	일반	내서읍	400	'09 ~'12	민간개발	제조		'09		
	정곡	일반	진전면	870	'09 ~'16	민간개발	조선				
	석곡	일반	구산면	233	'09 ~'11	우양비엔피산 업외 3개사	기계	295	'09.5	투자의향서 제출	○
	수정2	일반	구산면	50	'10 ~'12	민간개발	조선기자재, 기계				
	진전평암	일반	진전면	80	'09 ~'12	진로소주	제조	188	'09.04	투자의향서 제출, 임지타당성 검토결과 확인	○
	용담	일반	내서읍 용담리	35	'09 ~'11	민간개발	제조	60	'09.07		

(표6-2) 경남의 산업단지 조성계획현황(계속)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위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유치업종	사업비 (억원)	신청 예정일	추진실적	반영여부
진해	죽곡2	일반	죽곡	85	'08.12~ '10.12	진해시장	조선 기자재	310	'09.10	입지타당성 중간보고완료	○
	제덕	일반	제덕	1,030	'08.12~ '11.12	진해시장	조선 기자재	3,120	'09.10	입지타당성 중간보고완료	○
	남양	일반	남양	200	'08.12~ '12.12	진해시장	기타 운송장비	720	'10.10	입지타당성 중간보고완료	○
	용재	일반	용재	150	'08.12~ '12.12	민간개발	기계, 장비	560	'10.10	입지타당성 중간보고완료	
창녕	대합2차	일반	대합 합리	1,000	10~14	창녕군수	금속산업, 기계	1,300	10.06.	입지타당성검토	
	하리	"	하리	298	08~10	화인베스틸	금속산업	1,200	09.04.	MOU체결 투자의향서 통보	○
	억만	"	고암 억만	60	08~10	코아스틸	기계	300	09.04.	MOU체결 투자의향서 통보	○
	사리	"	계성 사리	80	08~10	진일	금속산업	300	09.05.	투자의향서 통보	
	등지	"	대합 등지	60	08~09	삼호아이앤디	선박부품	50	08.10.	산업단지 심의중	
	광계	"	계성 광계	200	09~10	경남산업건기	기계	210	09.06.	MOU체결 투자의향서 통보	
	장가	"	장마 장가	90	09~10	세유	선, 봉, 관	100	09.05.	투자의향서 통보	
	송진	농공	도천 송진	300	08~10	창녕군수	선박부품	300	08.05.	실시계획 수립중	○
	서리	농공	영산 서리	200	08~10	창녕군수	자동차부품	200	08.04.	실시계획 수립중	
	밀양 첨단과학	국가	밀양 부북	3,426	'07.07~ '12.12	한국 토지공사	국책연구기관, 나노관 련 제조업	5,934	'09.09	MOU체결(한국토지 공사, 부산대학교, 전기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 나노기술협의회)	○
밀양	용전	일반	밀양 삼랑진	695	'08~'11	밀양자동차부 품소재공단사 업협동조합, (주)경진인터 내셔널	자동차, 선박부품 제조업	1,245	'09.02.17 (실시계획 신청)	관련기관(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
	하남	일반	밀양 하남	1,020	'09~11	밀양하남기계 소재공단사업 협동조합	제1차금속 제조업	1,666	'09.02.17 (실시계획 신청)	관련기관(부서) 협의 합동설명회 개최	○
	춘화	농공	밀양	207	'08~'10	밀양시장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장비제조업	268		지구지정승인2008. 10.2	
	미전	농공	밀양	174	'08~'10	미전지구농공 단지협동조합(주)	기타기계장비제조업,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93	2009. 5월	투자의향서제출지 2009. 2. 24	

(표6-2) 경남의 산업단지 조성계획현황(계속)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위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유치업종	사업비 (억원)	신청 예정일	추진실적	반영여부
합안	칠서 태곡	일반	칠서	1,010	'08~'13	민간개발	금속가공 제품제조 외4종	1,476	'09.07	투자의향서 제출 및 검토완료	○
	대산 부목	일반	대산 부목	1,000	'08~'11	민간개발	기타기계 장비제조 외2종	1,252	'09.05	투자의향서 제출 및 검토완료	○
	법수 우거	일반	법수 우거	122	'08~'10	민간개발	기타운송 장비제조 외3종	128	'09.04	투자의향서 제출 및 검토완료	○
	대산 대사	일반	대산 대사	750	'09~'12	민간개발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등	1,000	'09.12	입지타당성 검토 (민간개발)	○
	법수 강주	일반	법수 강주	150	'09~'11	민간개발	기타운송 장비제조 외4종	150	'09.05	입지타당성 검토 (민간개발)	
	칠북 화천	일반	칠북 화천	300	'09~'11	민간개발	금속가공 제품제조 외3종	309	'09.12	입지타당성 검토 (민간개발)	
	법수 윤외	일반	법수 윤외	250	'09~'12	민간개발	기타기계장비제조업 등	283	'09.09	입지타당성 검토 (민간개발)	
	법수 황사	일반	법수 황사	500	'09~'12	민간개발	기타기계장비제조업 등	567	'09.07	입지타당성 검토 (민간개발)	
	칠서 회산	일반	칠서 회산	300	'09~'12	민간개발	기타기계장비제조업 등	340	'09.07	입지타당성 검토 (민간개발)	
	대산장암	농공	대산 장암	100	'09~'11	민간개발	기타기계장비제조업 등	113	'09.09	입지타당성 검토 (민간개발)	
	군북월촌	농공	군북 월촌	149	'08~'10	민간개발	금속가공 제품제조 외4종	170	'09.04	투자의향서 제출 및 검토완료	○
	칠원운서	농공	칠원 운서	95	'08~'10	민간개발	자동차및 트레일러 제조외4종	137	'09.04	투자의향서 제출 및 검토완료	○
사천	광포	일반	곤양 대진 서포 조도	2,598	'08~'12	대우ST, 사천시	기타운송장비제조	6,762	'09.12	사업계획 재수립중	
	곤양홍사	일반	곤양 홍사	650	'08~'11	홍보산업	비금속광물제조	864	'09. 3	승인신청서 접수	○
	축동	일반	축동 가산	710	'09~'12	D&S	기타기계장비제조	500	'10. 6	사업계획 수립중	
	축동사다	일반	축동 사다	973	'09~'11	동은산업 개발	금속가공제품제조	903	'09. 7	투자의향서 접수	
	사천구암	일반	사천 구암	191	'08~'11	드림에이스테 크	기타기계장비제조	297	'09. 2	승인신청서 접수	○
	사천제3	일반	사천 사남	781	'09~'12	SPP해양 조선, 유니슨	기타운송장비제조	1,482	'09.10	사업계획 수립중	
	미룡	일반	노룡동	41	'09~'10	삼원전기 건설	항공기부품제조	66	'09. 5	투자의향서 접수	○
	노룡	일반	노룡동	92	'09~'11	SPP자원	강관제조	220	'09. 6	투자의향서 접수	○
	송포	일반	송포동	2,250	'08~'12	SPP에너지	신재생에너지	3,970	'10. 6	사업계획 수립중	○
	향촌	일반	향촌동	1,023	'08~'11	두레개발	기타기계	1,466	'09. 7	사업계획 수립중	

(표6-2) 경남의 산업단지 조성계획현황(계속)

시·군	단지명	단지 유형	위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유치업종	사업비 (억원)	신청 예정일	추진실적	반영여부
하동	갈사만 조선 ⁵⁾	일반	금성	5,613	'09.01~ '12.12	하동군 하동지구개발 사업단	조선 기자재	24,578	'09.9.19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완료	○
	대송	일반	금성 금남	992	'09.11~ '11.12	하동군 대송산업개발 (주)	1차금속 조립금속	974	'09.4.	개발계획 변경신청	
	금성 조선	농공	금성	147	'08.1~ '10.12	BN금성개발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	470	'09.3.	투자의향서 검토 완료	○
	명교	일반	고전	109	'09.1~ '10.12	민간개발 (주)비앤후	전기장비 제조업	467	'09.6	투자의향서 사업타당성 검토단계	
산청	금서제1	일반	금서면 매촌리	98	'08 ~ '09. 12	민간개발	기계 및 장비제조	450	'08.03	부지 및 기반시설정비	○
	금서제2	농공	금서면 매촌리	198	'08 ~ '09. 12	민간개발	기계등	186	'08.04	부지 및 기반시설정비	○
	금서제2	일반	금서면 매촌리	79	'08 ~ '09. 12	민간개발	기계등	75	'09.01	주민설명회 및 부지보상협의	○
	화현	농공	생비량면 화현리	148	'09 ~ '12. 12	민간개발	기계등	150	'09.10	타당성 조사	
	산청	일반	산청읍 지리	240	'07. ~ '09. 10	산청군	관광서 및 기계등	100	'09.07	부지 및 기반시설정비	
	신안	일반	신안면 외고리	2,100	'09 ~ '12. 12	민간개발	기계등	1,000	'09.12	타당성 조사	
거제	청포	일반	사등	1,210	2008.~ 2011.	신해중공업	기타운송 장비제조업	4,247	2008.12.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한내	일반	연초	523	2008.~ 2011.	웅진개발	기타운송 장비제조업	2,902	2009.03.	특례법에 의거 투자의향서 제출 및 검토 의견 회신 완료(경상남도)	
	죽도	국가	장평 ·사등	900	1974.~ 2013.	삼성중공업	기타운송 장비제조업	11,049	2009.03.	특례법에 의거 투자의향서 제출 및 검토 의견 회신 완료(국토해양부)	
통영	안정	일반	광도면 안정리	1,336	2007 ~ 2013	민간개발	기타운송장비	2,992	2009.3	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	○
	덕포	“	광도면 덕포리	1,039	2007 ~ 2013	민간개발	기타운송장비	2,697	2009.3	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	○
	법송	“	도산면 법송리	625	2007 ~ 2011	민간개발	기타운송장비	950	2009.5	산업단지지정승인신청	○
	황리지구	농공	광도면 황리	128	2009 ~ 2011	민간개발	기타운송장비	115	2009.3 월	투자의향서 검토완료	○
남해	서면	일반	남해 서면	2,071	2008~ 2012	민간개발	조선소 기자재	7,000	2009.03	임지타당성 중간보고완료	○

5)갈사만조선산업단지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으로 기존 '갈사만매립지'와 '갈사만매립배후지' 통합

(표6-2) 경남의 산업단지 조성계획현황(계속)

사·군	단지명	단지 유형	위치	면적 (천㎡)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유치업종	사업비 (억원)	신청 예정일	추진실적	반영여 부
고성	상리	일반	상리, 자은 무선	755	'08.~'11	민간개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타 기계 및장비제조업	993	기 신청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접수 및 개별법 협의 중	○
	마암	일반	도전 보전 삼락리	2,757	'08.12~ '12.12	민간개발	엔진 중전기 플랜트	3,100	'09. 06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 완료	○
	봉암	일반	동해 봉암	298	'08.~'10	민간개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701	기 신청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접수 및 개별법 협의 중	○
	대독	일반	고성 대독	258	'08.~'10	민간개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425	기 신청	계획신청접수 및 개별법 협의 중	○
	월평	일반	고성 월평	177	'08.~'10	민간개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441	기 신청	계획신청접수 및 개별법 협의 중	○
	내산	일반	동해 내산	98	'08.~'09	민간개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130	기 신청	실시계획 승인 완료 및 공사착공	○
	동해	일반	동해 장기	243	'09 ~ '11	민간개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710	'09. 6	입지타당성 조사 및 계획승인 용역 중	
	척정	일반	대가 척정	190	'09 ~ '11	민간개발	기타운송장비제조업	225	'09. 6	입지타당성 조사 및 계획승인 용역 중	
거창	남상 월평	일반	남상 월평, 대산, 무촌	1,241	'08.6~ '13.6	한국토지공사	조립금속, 기계, 장비, 전기전자	1,480	'10.11	임대·전용산업단지후 보지 확정	○
	가조 병산	일반	가조 병산, 수월	1,828	'08.6~ '13.6	한국토지공사	조립금속, 기계, 장비, 전기전자	2,168	'10.11	임대·전용산업단지후 보지확정	○
	거창 승강기	농공	남상 월평	317	'08.9 ~ '11.12	거창군수	승 강 기 관련 부품 및 제조업	352	'09.07	입지타당성 완료 농공단지계획용역중	○
함양	휴천	일반	휴천 목현	83	'08.10~ '09.06	"	인고트 특수제강	500	'08.10	부지 조성중	○
	함양	"	수동 원평	800	'07.02~ '13.12	"	자동차및트레일러제조업	3,500	'06.03	부지 조성중	
	안의 2	농공	인의 황곡	271	'07.10~ '10.12	"	금속가공 제조업	157	'09.03	행정절차마무리 단계	
	휴천 2	일반	휴천 목현	495	'09.07~ '15.12	민간개발	자동차및조선기자재	1,000	'09.03	부지확보 완료	○
	도북	"	수동 도북	600	'09.08~ '15.12	"	자재및 의약품	1,100	'09.05	부지확보및 환경청사건 심사중	○
	봉곡	농공	지곡 시목	75	'09.01~ '11.12	"	"	49	'09.04	개발계획 수립	
	안의 3	"	안의 석천	155	'10.01~ '12.12	"	"	89	'09.12	계획 수립	
	옥동	일반	유림 옥동	165	'10.01~ '15.12	"	"	150	'09.10	부지확보완료	
합천	청덕	일반	청덕면 가현리	1,200	12.12~ 14.12	합천군	전자 전기통신 IT산업	1,700	2011.2	조성계획 검토	○

- 조성계획 면적 중 가장 큰 규모로 계획중인 지역은 마산시로 총 14.32km²를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김해시가 7.25km², 밀양시가 5.14km²를 계획하고 있어 이들 3개 시·군이 전체의 약 51.4%에 해당함
- 계획중인 이들 산업단지 중에 공공기반시설 및 기타시설용지(약 40%)를 제외한 실산업용지는 약 35.84km²가 될 것으로 예측됨

(표6-3) 공급계획 반영이 필요한 지역별 조성계획현황

시·군	단지명	단지유형	위치	면적(천㎡)	실산업용지(천㎡)
김해	테크노밸리	일반	진례면 담안리	5,777	3,466
	제2산업단지	일반	명법, 풍류동	1,481	889
	소 계	-	-	7,258	4,355
양산	용 당	일반	용당	415	249
	동 리	일반	어곡	165	99
	소 계	-	-	580	348
창원	창 원	일반	대산	479	287
	소 계	-	-	479	287
마산	도시형	첨단	회성동	404	242
	창포 (임해)	일반	진동, 진전면	9,435	5,661
	난 포	일반	진전면	3,900	2,340
	수 정	일반	구산면	276	166
	석 곡	일반	구산면	233	140
	진전평암	일반	진전면	80	48
	소 계	-	-	14,328	8,597
진해	죽곡 2	일반	죽곡	85	51
	제 덕	일반	제덕	1,030	618
	남 양	일반	남양	200	120
	소 계	-	-	1,315	789
창녕	하 리	일반	하리	298	179
	억 만	일반	고암 억만	60	36
	송 진	농공	도천 송진	300	180
	소 계	-	-	658	395
밀양	밀양첨단과학	국가	부북	3,426	2,056
	용 전	일반	삼랑진	695	417
	하 남	일반	하남	1,020	612
	소 계	-	-	5,141	3,085
합안	철서 태곡	일반	철서	1,010	606
	대산 부목	일반	대산 부목	1,000	600
	법수 우거	일반	법수 우거	122	73
	대산 대사	일반	대산 대사	750	450
	군북 월촌	농공	군북 월촌	149	89
	철원 운서	농공	철원 운서	95	57
	소 계	-	-	3,126	1,876

(표6-3) 공급계획 반영이 필요한 지역별 조성계획현황(계속)

시·군	단지명	단지유형	위치	면적(천㎡)	실산업용지(천㎡)
사천	곤양 흥사	일반	곤양 흥사	650	390
	축동 사다	일반	축동 사다	973	584
	사천 구암	일반	사천 구암	191	115
	미 룡	일반	노룡동	41	25
	노 룡	일반	노룡동	92	55
	송 포	일반	송포동	2,250	1,350
	소 계	-	-	4,197	2,519
하동	갈사만 조선	일반	금성	5,613	3,368
	금성 조선	농공	금성	147	88
	소 계	-	-	5,760	3,456
산청	금서 제1	일반	금서면 매촌리	98	59
	금서 제2	농공	금서면 매촌리	198	119
	금서 제2	일반	금서면 매촌리	79	47
	소 계	-	-	375	225
거제	청 포	일반	사등	1,210	726
	소 계	-	-	1,210	726
통영	안 정	일반	광도면 안정리	1,336	802
	덕 포	“	광도면 덕포리	1,039	623
	법 송	“	도산면 법송리	625	375
	황 리	농공	광도면 황리	128	77
	소 계	-	-	3,128	1,877
남해	서 면	일반	서면	2,071	1,243
	소 계	-	-	2,071	1,243
고성	상리	일반	상리 자은 무선	755	453
	마 암	일반	도전 보전 삼락리	2,757	1,654
	봉 암	일반	동해 봉암	298	179
	대 독	일반	고성 대독	258	155
	월 평	일반	고성 월평	177	106
	내 산	일반	동해 내산	98	59
	소 계	-	-	4,343	2,606
거창	남상 월평	일반	남상, 월평, 대산 무촌	1,241	745
	가조 병산	일반	가조, 병산, 수월	1,828	1,096
	거창 승강기	농공	남상 월평	317	190
	소 계	-	-	3,386	2,031
함양	휴 천	일반	휴천 목현	83	50
	휴천 2	일반	휴천 목현	495	297
	도 북	일반	수동 도북	600	360
	소 계	-	-	1,178	707
합천	청덕	일반	청덕면 가현리	1,200	720
	소 계	-	-	1,200	720
합계		-	-	59,733	35,842

3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1. 지역별 공급비중의 추정

- 2008년도 각 시·군 자료에 의한 지역별 산업입지비중을 살펴보면 창원시가 전체의 35%로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거제시, 김해시, 사천시, 양산시, 하동군이 5.3%~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반면에 조성계획량에 있어서는 창포, 난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계획중인 마산시가 전체의 27.0%, 김해시가 전체의 13.7%, 밀양시가 9.7%, 사천시가 7.9%의 구성을 보여주고 있어 이들 지역이 장래 산업용지의 공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장래 지역별 산업용지의 공급은 수용예측에서 추정된 증가분과 기초자치단체의 공급의지에 따라 나타난 조성계획량의 사이에서 결정할 필요가 있음

2. 지역별·입지유형별 공급계획

- 앞장(5장)에서 산정된 산업용지의 공급규모를 순증가분의 최소값으로 설정하고 본 공급규모에 각 지역별 조성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급량을 합한 값을 최대값으로 설정하여 순증가분을 계획함
- 해당지역내 공급량을 도내 전체공급규모에 2008년 지역별 공급비중을 고려하여 배분함
- 지역별 개별입지량은 지역별 공급량 중 산업입지 지침에 의거 30%로 강제 배분하고 이외의 양을 계획입지에 수용토록 계획함
- 특히, 김해시와 같이 개별입지량이 너무 방대하여 순계획단지에 입지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준산업단지제도를 활용하여 공급량의 70%이상이 계획입지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장래(2020년) 각 지역별 공급량을 배분한 결과 창원시가 29.90~30.19 km^2 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다음으로 김해시, 거제시가 각 8.42~12.78 km^2 , 10.97~11.70 km^2 로 나타났으며, 마산시의 경우, 창포, 난포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공급량이 1.62 km^2 ~10.22 km^2 에 달

- 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입지에 있어 수위도시가 될 것으로 판단됨
- 2009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는 마산시, 창원군, 밀양시, 합천군 등이 해당할 것으로 추정됨

(표6-4) 지역별 공급비중

구 분		공급현황		조성계획	
권역	시·군	공급비중(%)	개별입지비중(%)	계획량(천㎡)	비중(%)
동부경남	김해시	9.9	30.4	4,355	12.2
	양산시	5.3	10.5	348	1.0
중부경남	창원시	35.1	1.4	287	0.8
	마산시	1.9	4.4	8,597	24.0
	진해시	3.2	1.8	789	2.2
중북부경남	창녕군	1.0	3.4	395	1.1
	밀양시	1.9	2.5	3,085	8.6
중부내륙 경남	함안군	5.8	8.0	1,876	5.2
	의령군	0.8	0.9	-	0.0
서부경남	진주시	4.0	2.0	-	0.0
	사천시	5.6	9.5	2,518	7.0
서남부경남	하동군	5.3	1.2	3,456	9.6
	산청군	0.6	0.9	225	0.6
남부해양 경남	거제시	12.9	16.3	726	2.0
	통영시	2.8	1.3	1,877	5.2
서부해양 경남	남해군	0.1	0.3	1,243	3.5
	고성군	1.0	2.3	2,606	7.3
서북부경남	거창군	1.0	0.8	2,032	5.7
	함양군	1.3	1.3	707	2.0
	합천군	0.5	1.0	720	2.0
합계		100.0	100.0	35,842	100.0

주) 2008년도 지역별 공업입지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표6-5) 지역별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단위:km²)

구 분		2009년	순수요						2020년
			최소치			최대치			
권역	시군		계획입지	개별입지	합계	계획입지	개별입지	합계	
동부경남	김해시	6.97	1.02	0.44	1.45	4.06	1.74	5.81	8.42 ~ 12.78
	양산시	3.72	0.54	0.23	0.78	0.79	0.34	1.12	4.50 ~ 4.85
중부경남	창원시	24.75	3.61	1.55	5.15	3.81	1.63	5.44	29.90 ~ 30.19
	마산시	1.34	0.20	0.08	0.28	6.21	2.66	8.88	1.62 ~ 10.22
	진해시	2.26	0.33	0.14	0.47	0.88	0.38	1.26	2.73 ~ 3.52
중북부 경남	창녕군	0.72	0.11	0.05	0.15	0.38	0.16	0.55	0.87 ~ 1.27
	밀양시	1.32	0.19	0.08	0.27	2.35	1.01	3.36	1.59 ~ 4.68
중부내륙 경남	함안군	4.06	0.59	0.25	0.84	1.90	0.82	2.72	4.90 ~ 6.78
	의령군	0.55	0.08	0.03	0.11	0.08	0.03	0.11	0.66 ~ 0.66
서부경남	진주시	2.85	0.42	0.18	0.59	0.42	0.18	0.59	3.45 ~ 3.45
	사천시	3.96	0.58	0.25	0.82	2.34	1.00	3.34	4.78 ~ 7.30
서남부 경남	하동군	3.71	0.54	0.23	0.77	2.96	1.27	4.23	4.48 ~ 7.93
	산청군	0.42	0.06	0.03	0.09	0.22	0.09	0.31	0.51 ~ 0.74
남부해양 경남	거제시	9.08	1.32	0.57	1.89	1.83	0.79	2.62	10.97 ~ 11.70
	통영시	1.97	0.29	0.12	0.41	1.60	0.69	2.29	2.39 ~ 4.26
서부해양 경남	남해군	0.09	0.01	0.01	0.02	0.88	0.38	1.26	0.10 ~ 1.35
	고성군	0.71	0.10	0.04	0.15	1.93	0.83	2.75	0.86 ~ 3.46
서북부 경남	거창군	0.74	0.11	0.05	0.15	1.53	0.66	2.19	0.89 ~ 2.92
	함양군	0.93	0.14	0.06	0.19	0.63	0.27	0.90	1.13 ~ 1.83
	합천군	0.38	0.06	0.02	0.08	0.56	0.24	0.80	0.46 ~ 1.18
합계		70.53	10.28	4.41	14.69	35.37	15.16	50.53	85.22 ~ 121.06

주1) 2009년 자료는 2008년 자료를 기초로 한 추정치임

주2) 순증가분의 최대치는 수요량의 증가를 기초로한 공급량(최소치)에서 각 지역별 조성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급량을 더하여 산출

3. 개발가능지 고려에 따른 공급계획

- 최종적으로 경상남도 각 시군에 대한 산업용지에 대한 개발가능지를 반영하여 공급계획을 수립
 - ① 실질적으로 산업용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 및 시가화예정구역으로, 그 중 시가화예정구역은 2020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개발가능지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2007 경상남도 통계연보」와 각 시군별 내부자료 상의 계획관리지역과 공업지역의 면적을 이용하여 보정
 - ② 다만 이 면적 모두가 산업용지로 이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상남도 전체 면적에 대한 공업지역 면적의 비중(0.00727)을 적용하여 산업용지로 전환될 수 있는 면적을 추계한 후 산업용지이용률 0.6을 곱하여 산정
 - ③ 최종적으로 구한 산업용지 이용률을 보정한 면적과 조성계획상의 면적을 비교하여 산업용지 이용률 보정면적/조성계획의 비중에 따른 증가면적만큼 적용
 - 또한 조성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산업용지 이용률을 보정한 면적을 반영
 - 가정에 대한 사유는 기존의 산업이 낙후된 지역의 경우 추정기법의 한계상 상대적으로 산업이 활성화된 지역에 비해 공급면적이 적을 수밖에 없고, 현재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많은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 그 결과 총 약 11km²정도가 공급계획안에 추가산정 되었음. 권역별로는 서북부경남권역이 2.77km²로 가장 많은 면적이 추가 산정되었으며, 다음으로 서남부경남권역 1.87km², 중북부경남권역 1.52km², 중부내륙경남권역이 1.13km², 서부해양경남권역 1.07km², 서부경남권역이 1.03km², 동부경남권역이 0.64km², 중부경남권역 0.5km², 남부해양경남권역 0.45km²이 추가 산정됨

(표6-6) 개발가능지 고려에 따른 공급계획량 산정

(단위: %·천 m²)

권역		계획관리지역	공업지역	소계	공업지역/도 시지역 보정	산업용지율 0.6 보정	조성계획	계획관리지역 /조성계획(%)	채택량
동부경남	김해시	94,630	7,800	102,430	737	442	4,355	0.10	4,797
	양산시	33,290	11,570	44,860	323	194	348	0.56	542
중부경남	창원시	37,760	23,270	61,030	439	264	287	0.92	551
	마산시	40,650	5,190	45,840	330	198	8,597	0.02	8,795
	진해시	0	7,720	7,720	56	33	789	0.04	822
중북부 경남	창녕군	170,740	540	171,280	1,233	740	395	1.87	1,135
	밀양시	178,480	1,340	179,820	1,295	777	3,085	0.25	3,862
중부내륙 경남	함안군	147,340	2,850	150,190	1,081	649	1,876	0.35	2,525
	의령군	110,850	890	111,740	805	483	—	0.00	483
서부경남	진주시	122,140	3,750	125,890	906	544	—	0.00	544
	사천시	104,410	8,150	112,560	810	486	2,518	0.19	3,004
서남부 경남	하동군	205,780	950	206,730	1,488	893	3,456	0.26	4,349
	산청군	225,740	0	225,740	1,625	975	225	4.33	1,200
남부해양 경남	거제시	60,370	7,930	68,300	492	295	726	0.41	1,021
	통영시	32,290	2,570	34,860	251	151	1,877	0.08	2,028
서부해양 경남	남해군	113,770	0	113,770	819	491	1,243	0.40	1,734
	고성군	132,860	960	133,820	964	578	2,606	0.22	3,184
서북부 경남	거창군	193,540	480	194,020	1,397	838	2,032	0.41	2,870
	함양군	152,660	160	152,820	1,100	660	707	0.93	1,367
	합천군	294,600	50	294,650	2,121	1,273	720	1.77	1,993
합 계		2,451,900	86,170	2,538,070	18,274	10,964	35,842	—	46,806

자료 : 경상남도 통계연보, 2007.

각 시군별 내부자료.

(표6-7) 경상남도 산업용지 공급계획

(단위:km²·%)

구 분		2009년	순수요		2020년(A)	조성 계획	계획관리 지역/조성 계획	채택량	개발 가용지	2020년(B)	
			최소치 합계	최대치 합계							
동부경남	김해시	6.97	1.45	5.81	8.42 ~ 12.78	4.35	0.10	4.80	0.44	8.42 ~ 13.22	
	양산시	3.72	0.78	1.12	4.50 ~ 4.85	0.35	0.56	0.54	0.19	4.50 ~ 5.04	
	소계	10.69	2.23	6.93	12.92 17.63	4.7	-	5.34	0.63	12.92 18.26	
중부경남	창원시	24.75	5.15	5.44	29.90 ~ 30.19	0.29	0.92	0.55	0.26	29.90 ~ 30.45	
	마산시	1.34	0.28	8.88	1.62 ~ 10.22	8.60	0.02	8.80	0.20	1.62 ~ 10.42	
	진해시	2.26	0.47	1.26	2.73 ~ 3.52	0.79	0.04	0.82	0.03	2.73 ~ 3.55	
	소계	28.35	5.9	15.58	34.25 43.93	9.68	-	10.17	0.49	34.25 44.42	
중북부 경남	창녕군	0.72	0.15	0.55	0.87 ~ 1.27	0.40	1.87	1.14	0.74	0.87 ~ 2.01	
	밀양시	1.32	0.27	3.36	1.59 ~ 4.68	3.09	0.25	3.86	0.78	1.59 ~ 5.46	
	소계	2.04	0.42	3.91	2.46 5.95	3.49	-	5	1.52	2.46 7.47	
중부내륙 경남	함안군	4.06	0.84	2.72	4.90 ~ 6.78	1.88	0.35	2.53	0.65	4.90 ~ 7.43	
	의령군	0.55	0.11	0.11	0.66 ~ 0.66	-	0.00	0.48	0.48	0.66 ~ 1.14	
	소계	4.61	0.95	2.83	5.56 7.44	1.88	-	3.01	1.13	5.56 8.57	
서부경남	진주시	2.85	0.59	0.59	3.45 ~ 3.45	-	0.00	0.54	0.54	3.45 ~ 3.99	
	사천시	3.96	0.82	3.34	4.78 ~ 7.30	2.52	0.19	3.00	0.49	4.78 ~ 7.79	
	소계	6.81	1.41	3.93	8.23 10.75	2.52	-	3.54	1.03	8.23 11.78	
서남부 경남	하동군	3.71	0.77	4.23	4.48 ~ 7.93	3.46	0.26	4.35	0.89	4.48 ~ 8.82	
	산청군	0.42	0.09	0.31	0.51 ~ 0.74	0.23	4.33	1.20	0.98	0.51 ~ 1.72	
	소계	4.13	0.86	4.54	4.99 8.67	3.69	-	5.55	1.87	4.99 10.54	
남부해양 경남	거제시	9.08	1.89	2.62	10.97 ~ 11.70	0.73	0.41	1.02	0.30	10.97 ~ 12.00	
	통영시	1.97	0.41	2.29	2.39 ~ 4.26	1.88	0.08	2.03	0.15	2.39 ~ 4.41	
	소계	11.05	2.3	4.91	13.36 15.96	2.61	-	3.05	0.45	13.36 16.41	
서부해양 경남	남해군	0.09	0.02	1.26	0.10 ~ 1.35	1.24	0.40	1.74	0.49	0.10 ~ 1.84	
	고성군	0.71	0.15	2.75	0.86 ~ 3.46	2.61	0.22	3.18	0.58	0.86 ~ 4.04	
	소계	0.8	0.17	4.01	0.96 4.81	3.85	-	4.92	1.07	0.96 5.88	
서북부 경남	거창군	0.74	0.15	2.19	0.89 ~ 2.92	2.03	0.41	2.87	0.84	0.89 ~ 3.76	
	함양군	0.93	0.19	0.90	1.13 ~ 1.83	0.71	0.93	1.37	0.66	1.13 ~ 2.49	
	합천군	0.38	0.08	0.80	0.46 ~ 1.18	0.72	1.77	1.99	1.27	0.46 ~ 2.45	
	소계	2.05	0.42	3.89	2.48 5.93	3.46	-	6.23	2.77	2.48 8.7	
합계		70.53	14.69	50.53	85.22 ~ 121.06	35.84	-	46.81	10.96	85.22 ~ 132.02	

주1) 2009년 자료는 2008년 자료를 기초로 한 추정치임

주2) 순수요의 최대치는 수요량의 증가를 기초로 한 공급량(최소치)에서 각 지역별 조성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급량을 더하여 산출

(A) 조성계획부분만을 반영한 2020년 산업용지량

(B) 조성계획과 개발가용지를 분석하여 반영한 2020년 산업용지량
2020년(A) 최대치 + 개발가용지 = 2020년(B) 최대치

4. 경남의 산업입지 공급계획

- 경남의 산업용지 순수요량은 2009~2020년까지 14.69km²~50.53km²로 2020년에는 85.22km²~121.06km²가 될 것이며, 이에 개발가용지를 고려하면 2020년 산업용지는 최대 132.02km²가 될 것임

1) 동부경남권역(김해·양산)

- 동부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2.23km²~7.57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12.92km²~18.26km²가 될 것임
- 김해시는 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와 김해제2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한 결과 순수요량은 1.45km²~5.81km²로 산정됨. 이에 김해시의 개발가용지를 고려하여 추가산업용지를 산정한 결과 0.44km²로 산정되어 목표연도 2020년 김해시의 산업용지는 8.42km²~13.22km²가 될 것임
- 양산시는 용당동리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산정한 결과 순수요량은 0.78km²~1.12km²임. 이에 개발가용지 0.19km²를 고려하면 2020년 4.5km²~5.04km²의 산업용지를 확보할 것임

2) 중부경남권역(창원·마산·진해)

- 중부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5.9km²~16.07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34.25km²~44.42km²가 될 것임
- 창원시는 창원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한 결과 순수요량은 5.15km²~5.44km²로 산정됨. 여기에 개발가용지 0.26km²를 고려하면 2020년 산업용지는 29.9km²~30.45km²가 공급될 것임
- 마산시는 첨단산업단지와 난포·수정·석곡진전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한 결과 순수요량은 0.28km²~8.88km²로 산정되었으며 개발가용지 0.2km²를 고려하면 2020년 산업용지가 1.62km²~10.42km²가 될 것임
- 진해시는 죽곡제2일반산업단지와 제덕·남양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순수요량을 산정한 결과 0.47km²~1.26km²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산정된 개발가용지 0.03km²를 고려하면 2020년 산업용지 총량이 2.73km²~3.55km²가 될 것임

3) 중북부경남권역(창녕·밀양)

- 중북부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0.42km²~5.43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2.46km²~7.47km²가 될 것임
- 창녕군은 하리·억만일반산업단지와 송진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순수요량에 반영한 결과 0.15km²~0.55km²로 산정되었으며, 추가산정된 개발가용지 0.74km²를 고려한 결과 2020년 산업용지는 0.87km²~2.01km²가 될 것임
- 밀양시는 밀양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와 용전·하남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순수요량에 반영한 결과 순수요량은 0.27km²~3.36km²로 산정됨. 이에 개발가용지 0.78km²를 고려하면 2020년 산업용지는 1.59km²~5.46km²가 될 것임

4) 중부내륙경남권역(함안·의령)

- 중부내륙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0.95km²~3.96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5.56km²~8.57km²가 될 것임
- 함안군은 칠서태곡·대산부목·법수우거·대산대사일반산업단지와 군북월촌·칠원운서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순수요량에 반영한 결과 총 공급량은 0.84km²~2.72km²로 산정되었으며, 개발가용지 0.65km²를 고려하면 2020년 산업용지는 4.9km²~7.43km²가 될 것임
- 의령군의 순수요량은 0.11km²이나 조성계획된 산업단지가 없어 산업용지로 전환될 수 있는 개발가용지의 면적 0.48km²를 고려하여, 여기에 산업용지이용률 0.6를 적용한 값 0.48km²를 공급계획량에 반영하여 2020년 0.66km²~1.14km²의 산업용지를 계획함

5) 서부경남권역(진주·사천)

- 서부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1.41km²~4.96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8.23km²~11.78km²가 될 것임
- 진주시의 순수요량은 0.59km²이나 조성계획된 산업단지가 없어 산업용지로 전환될 수 있는 개발가용지의 면적을 고려하여, 여기에 산업용지이용률 0.6를 적용한 값 0.54km²를 공급계획량에 반영하여 2020년 3.45km²~3.99km²의 산업용지를 계획함
- 사천시는 곤양·홍사·축동·사다·사천구암·미룡·노룡·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계

획을 순수요량에 반영한 결과 순수요량은 0.82km²~3.34km²로 산정되었으며, 개발가능지 0.49km²를 고려하면 2020년 산업용지는 4.78km²~7.79km²가 될 것임

6) 서남부경남권역(하동·산청)

- 서남부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0.86km²~6.41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4.99km²~10.54km²가 될 것임
- 하동군은 금성조선농공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한 순수요량은 0.77km²~4.23km²로 산정되었으며, 개발가능지 0.89km²를 고려하면 2020년 하동군의 산업용지는 4.48km²~8.82km²가 될 것임
- 산청군은 금서제2농공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순수요량이 0.09km²~0.31km²로 산정됨. 이에 개발가능지 0.98km²를 고려하면 2020년 산청군의 산업용지는 0.51km²~1.72km²가 될 것임

7) 남부해양경남권역(거제·통영)

- 남부해양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2.30km²~5.36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13.36km²~16.41km²가 될 것임
- 거제시는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반영하여 순수요량이 1.89km²~2.62km²로 산정되었음. 순수요량에 개발가능지 0.3km²를 고려하면 2020년 거제시의 산업용지는 10.97km²~12km²가 될 것임
- 통영시는 안정·덕포·법송일반산업단지와 황리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순수요에 반영한 결과 0.41km²~2.29km²로 산정되었으며, 개발가능지 0.15km²를 고려하면 2020년 산업용지는 2.39km²~4.41km²가 될 것임

8) 서부해양경남권역(남해·고성)

- 서부해양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0.17km²~5.08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0.96km²~5.88km²가 될 것임
- 남해군은 서면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순수요량에 반영한 결과 총공급량이 0.02km²~1.26km²로 산정됨. 여기에 개발가능지 0.49km²를 고려한 결과 2020년 산업용지는 0.1km²~1.84km²가 될 것임
- 고성군은 마안암·봉암·대독·월평·내산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순수요량에

반영한 결과 총공급량은 0.15km²~2.75km²로 산정되었으며, 개발가능지 0.58km²를 고려한 2020년 산업용지는 0.86km²~4.04km²가 될 것임

9) 서북부경남권역(거창·함양·합천)

- 서북부경남권역은 2009~2020년 동안 약 0.42km²~6.66km² 증가하여 2020년 산업용지가 2.48km²~8.7km²가 될 것임
- 거창군의 경우 남상월평·가조병산일반산업단지와 거창승강기농공단지 조성계획을 순수요량에 반영한 결과 총공급량이 0.15km²~2.19km²로 산정되었으며, 개발가능지 0.84km²를 고려한 2020년 산업용지는 0.89km²~3.76km²가 될 것임
- 함양군의 경우 휴천·휴천제2·도북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순수요량에 반영한 결과 총공급량이 0.19km²~0.9km²로 산정됨. 이에 개발가능지 0.66km²를 고려한 2020년 산업용지는 1.13km²~2.49km²가 될 것임
- 합천군은 창덕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순수요량에 반영한 결과 총공급량은 0.08~0.8km²로 산정되었으며, 개발가능지 1.27km²를 고려하면 2020년 산업용지는 0.46km²~2.45km²가 될 것임



제7장 산업입지 관련계획 및 법률

- ①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안)
- ② 산업용지 관련계획
- ③ 산업용지 관련법률
- ④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 지원제도

제7장 산업입지 관련계획 및 법률

①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안)

1. 총칙

1) 지침의 목적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각 시·도에서는 본 지침을 바탕으로 산업입지공급계획(이하 “공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고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의의

- 공급계획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입지요구를 고려한 산업입지공급 정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입지의 공급을 위한 종합계획임
- 공급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시하는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공급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감안하여 실천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들 계획 중 계량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수립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급계획에 부합되게 입지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공급계획을 초과하여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향후 공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계획이 되도록 보완하여야 함

3)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지위와 성격

- 산업집적활성화계획,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관련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도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산업입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산업입지 공급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

- 시·도의 산업여건 및 수요, 시·군·구별 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상향식 계획이며 수요자 중심의 계획임
- 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산업입지 수요와 공급실적을 검토하여 5년을 주기로 검토·보완하는 연동계획임
-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산업입지분야의 전략계획으로 산업정책, 입지정책, 기반시설 공급정책 등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임

4) 법적근거

- 국토해양부장관의 공급계획 수립지침 작성과 시·도지사의 공급계획 수립의 법적근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임

2.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수립범위

1) 계획수립 대상

- 공급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하며, 계획권역은 특별시, 광역시, 도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함
-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한 시·도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 미리 인접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공급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시·군별로 작성하거나 지역권역별로 작성할 수 있음

2) 목표년도

- 계획수립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로 하되,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연도와 단계별 개발방안 등을 감안하여 목표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구분하여 표기
- 시·도지사는 5년마다 공급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계획보다 최소·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 20% 미만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없이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증감현

황, 사유 등 내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산업입지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3.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내용 및 작성원칙

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내용

- 공급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1)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2) 지역별 및 입지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3)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4)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5) 산업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 (6) 주요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 (7) 산업단지 재정비에 관한 사항 등

2)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 물리적인 공급계획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계획과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포괄하여 수립함
-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지역산업진흥계획, 수도권정비계획,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반영하며,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 반영함
- 친환경적 산업입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구축함
- 광역녹지축, 생태계보전지역, 우량농지, 임상이 양호한 임야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공급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함
- 산업입지 수요와 공급실적을 검토하여 계획의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로 공급계획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수정·보완함

-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미분양면적, 휴폐업 면적,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재활용 등 기존 용지를 산업용지로 우선 공급함

3) 계획수립 및 정비시 유의사항

- 공급계획은 수립지침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며, 공급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에 누락이 없도록 함
- 산업입지 수요에 대한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통계자료는 최신자료를 사용하여 수요추정의 합리성 및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함
- 공급계획은 미래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과 추진계획인 점을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최소치와 최대치로 제시(예시 범위, $\pm 5\%$)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함
- 공급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공급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함
- 공급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공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4.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기준

1) 산업입지 추이분석

- 시·군별, 업종별, 첨단산업 및 전통산업별 사업체수, 종업원 수, 생산액, 부가가치액,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등 산업입지 변화추이를 조사·분석함
- 통계자료는 통계청 등 신뢰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출처를 명기함
- 산업입지 변화추이 분석은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등을 활용하며 최근 20년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최근동향 분석을 위해 최근 10년간 자료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음

- 기타 자료는 가급적 최근 10년간 이상의 자료를 사용하며, 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 입지유형(계획입지와 개별입지)별 변화추이와 산업단지의 유형별(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변화추이를 조사·분석함
- 생산성 증가, 고부가가치화, 자동화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변화가 예상되는 입지 원단위 추이를 조사·분석함

2) 산업입지 및 육성정책 분석

- 산업입지정책의 문제점 분석, 산업구조변화 전망, 지역여건변화 전망 등을 토대로 시·도별 산업입지 정책을 수립함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단지 규모의 추이와 기존 산업단지 재개발을 통한 입지공급, 친환경적 산업입지, 자족적 복합단지 개념의 산업단지로의 입지정책 변화 등을 반영함
-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과 지역산업진흥계획, 시·도별 산업육성계획 등 관련계획을 조사·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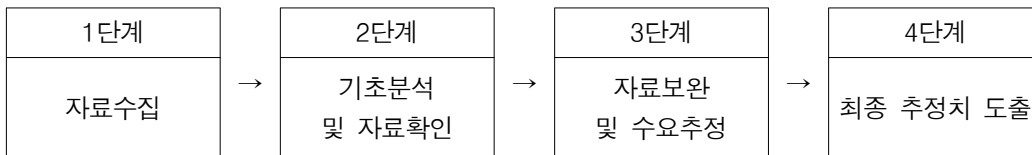
3) 산업구조 전망

- 목표년도의 시·도 및 시·군·구별 잠재성장율, 산업구조 변화, 제조업 성장 및 업종별 구조를 전망하여 반영함
- 목표년도의 제조업 업종별 생산액을 전망하고,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의 성장을 전망하여 반영함
- 목표년도의 생산액과 부지면적, 생산액당 부지면적 원단위를 업종별로 전망하여 반영함

4) 산업입지 수요추정

- 수요추정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산업입지 수요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에 따라 시·군·구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추정하며,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시설 용지를 기준으로 함
 - (2) 기타 자료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이용하며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료출처를 명시

- (3) 업종의 구분은 2000년에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산업입지 공급계획에서 제시하는 10개 업종으로 재분류함. 다만, 시·도의 사정에 따라 업종구분을 달리할 수 있음
 - (4) 첨단산업과 전통산업의 수요추정시 첨단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에서 규정하고 있는 첨단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전통산업은 첨단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을 기준으로 함
 - (5) 부지면적의 추정은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과 생산액 원단위에 의한 방법 2가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함수식을 사용할 수 있음
- 기업의 실질적인 입지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기업체 방문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1) 기업의 입지변동 추이와 수요변화
 - (2) 산업입지 재개발 및 재정비에 따른 수요
 - 산업입지 수요추정 방법은 다음에 의하되, 실증적 추정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음
 - (1) 과거 추세치에 의한 방법
- 가. 수요추정을 위해 1단계 자료수집, 2단계 기초분석 및 자료확인, 3단계 자료보완 및 수요추정, 4단계 최종 추정치 도출의 과정을 거침



- 나. 1단계 : 자료수집 단계에서는 최근 20년 이상의 광공업 통계조사보고서를 기본으로 시·군·구별로 10개 업종으로 재분류
- 다. 2단계 : 기초분석 및 자료확인 단계는 분석 전 기초데이터(Raw-Data)를 검토하는 단계로서 시·도별, 업종별 부지면적 추이를 분석하여 이상이 있는 자료는 따로 목록을 작성하여 자료를 확인

라. 3단계 : 자료보완 및 수요추정 단계는 시나리오에 맞게 자료를 수정·보완하거나 적용 기준년도를 달리하여 추계

마. 4단계 : 최종 추정치 도출 단계는 시나리오 중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시나리오 1개를 선택하고 공급계획을 위한 최종 추계치를 도출

(2) 원단위에 의한 방법

가. 지역별·업종별 생산액 추정치를 산정하고 시·군별/업종별 입지 원단위(생산액/부지면적)를 추정하고, 이를 생산액 추정치에 적용하여 시·군별 수요면적을 산정함

나. 원단위는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지면적, 건물연면적으로 구분하여 시·군·구별 특성을 감안하여 적용

• 산업입지의 순수요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추세치에 의한 수요추정 면적과 원단위에 의한 추정 면적 중에서 최소치와 최대치(Range)로 제시

(2) 시·군·구별/업종별 공장부지의 순수요 면적을 추정

(3) 정책적 수요, 외국인투자 유치수요(FDI) 등은 별도로 관리

5)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

• 산업입지 공급규모는 산업용지의 순수요 면적에 추가수요인 선공급 면적, 재개발·재정비 면적, 미분양 면적, 해외이전 면적, 휴·폐업 면적을 감안하여 산정함

• 산업입지 공급규모는 순수요 면적과 추가수요 면적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이에 대한 산정방법은 아래 표에 의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산업입지 공급규모 산정과정>

$$\begin{array}{|c|} \hline \text{산업입지} \\ \text{공급면적} \\ \hline \end{array} = \left[\begin{array}{|c|} \hline \text{순수요} \\ \text{면적} \\ \hline \end{array} \begin{array}{|c|} \hline \text{선공급} \\ \text{면적}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재개발} \\ \text{재정비} \\ \text{면적} \\ \hline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hline \text{미분양} \\ \text{면적}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해외이} \\ \text{전면적} \\ \hline \end{array} + \begin{array}{|c|} \hline \text{휴·폐업} \\ \text{면적} \\ \hline \end{array} \right]$$

A B C D E F

(1) 순수요 면적(A) : 추세치, 원단위 방법 등에 의한 순수요 면적을 추정

(2) 선공급 면적(B)

가. 선공급 면적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동안 공급의 공백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업의 입지 수요와 공급간의 시간적 불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공급되는 면적임. 다만, 선공급 면적은 순수요 면적 중 계획입지만을 대상으로 선공급함

나. 향후 계획기간 동안(10년) 계획입지 수요 중 3년치의 산업용지를 선공급하며, 부지면적이 감소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공급면적을 배제

(3) 재개발·재정비 면적(C)

가. 산업단지 재정비는 준공(부분준공을 포함한다)된 산업단지로서 20년 이상이 경과되어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지역의 확산 및 산업시설의 노후화가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함. 다만, 준공된 지 20년 미만의 산업단지 중에서 도시지역 확산으로 업종재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음

나. 재개발·재정비 대상면적 중 산업용지율(60%)과 재정비시 기업들이 희망하는 확장규모(약 150-160%)를 고려하여 재정비·재개발 면적을 산정

(4) 미분양 면적(D)

가. 산업단지 미분양면적 가운데 기업수요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면적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만 선공급된 면적으로 간주하여 공급계획에 반영

나. 미분양면적은 계획수립 직전년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함

(5) 해외이전 면적(E)

가. 해외이전 면적은 해외이전이 활발할 것으로 판단되는 노동집약적 업종인 음식료품,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기·전자 업종 등이 국내에 있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부지면적을 산정

나. 해외이전 면적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진출 현지기업의 매출액 현

황과 매출액당 부지원단위를 활용하여 면적을 산출하며, 여기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이전 면적을 추정

다. 이중에서 향후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비율을 적용하여 해외이전에 의해 발생하는 이전적지의 면적을 산정

(6) 휴·폐업 면적(G)

가. 시·군·구내 휴업 및 폐업한 공장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휴·폐업면적을 산정

나. 단지내 휴·폐업면적은 공장용지로 재사용할 수 있으므로 100%를 공장용지로 공급할 수 있다고 간주

6)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방향

- 공급계획은 산업입지 여건변화를 반영하되, 향후 산업단지 확충계획등 자체적인 발전방향을 포함하여 수립함
- 시·도별 산업발전 추이 및 잠재력을 고려하고 공급계획의 탄력성을 제고함
- 산업입지 구조재편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공급계획의 실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함
- 지역별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원활하게 입지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군·구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함
- 입지유형별(계획입지·개별입지)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되, 목표년도까지 산업입지 공급에 있어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시·군·구별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함
- 시·군·구별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의 비율은 시·도별 총량범위내에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적정비율을 적용함
- 공급계획은 목표년도까지 공급할 계획입지 비율과 산업시설용지 비율을 감안하여 산업단지 개발규모를 산정하여 수립함
-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기준
 - (1) 순수요 가운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은 개별입지를 억제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입지 비율을 70%로 하고, 울산광역시에는 기존에 계획입지 중심으로 입지공급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80%로 산정하며, 서울특별시와 기타 광역시

는 60%, 도지역은 70%로 산정함

- (2) 지방자치단체의 입지정책이나 계획을 고려하여 (1)호에도 불구하고 계획입지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이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다만, 수도권외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입지 비율을 증가하여 조정할 수 없음

-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공급계획(안) 시달

-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공급계획(안)을 연구하여 제시할 수 있음
- (2)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시한 공급계획(안)을 바탕으로 시·도별 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동 계획(안)을 공급계획 승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식기반산업 공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되, 제조업중 지식기반산업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하여 계획기간중 지식기반산업의 입주수요를 전망하고 지식기반산업의 입지공급계획을 수립함
- 지식기반산업 입지는 부처별 지식기반산업 공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함

5.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절차

1)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입안 및 의견청취

- 시·도지사는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처리시설의 집중 배치 등을 위해 계획입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공급계획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의하여 수립함
- 시·도지사는 수립된 공급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
- 시·도지사는 공급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계획의 충실도 제고를 위해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산업입지 분야 전문가와 기업체대표 등에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공급계획(안)에 대하여 일반산업입지심의회가 설치된 경우에도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2) 산업입지 공급계획 승인절차

- 시·도지사는 공급계획을 확정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승인신청된 공급계획(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승인신청된 공급계획(안)의 적정성과 합리성 등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전문기관등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조의 9에 의거하여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단을 국토해양부내에 구성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내에 설치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급계획을 승인하며, 시·도지사는 승인받은 공급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

6.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효율적 관리

1) 지역간 산업입지 공급규모 조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과잉공급 및 편중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공급계획 재정비시 지역별 산업입지 공급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간 산업입지 공급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내에 설치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산업입지 공급에 관한 계획 대비 실적 등 공급계획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공급계획의 부합성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간 산업입지 공급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시·군의 목표년도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당해 연도 시·군의 총량의 범위내에서 계획입지와 개별입지 공급물량의 20%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자체조정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음. 다만,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

는 계획입지 비율을 증가하여 조정할 수 없음

2)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의 정기보고

-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산업입지 수요추세 자료와 공급실적, 공급계획에 의한 심사분석자료, 향후 개발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함
- 향후 산업단지 개발계획은 지정계획년도와 면적(기 제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록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지정·개발하기 위해 계획 중이거나 구상 중인 산업단지는 위치, 면적, 주요 유치업종, 사업시행자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매년 산업입지의 수요추세와 공급실적을 분석하여 현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공급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5년간 공급계획 대비 20%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3)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평가 및 지원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별 과잉공급 및 편중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산업입지 공급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바탕으로 공급계획을 평가할 수 있음
- 시·도지사는 공급계획을 재정비할 경우 공급계획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야 함
-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단지 공급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비교·평가하여 산업단지 공급실적이 공급계획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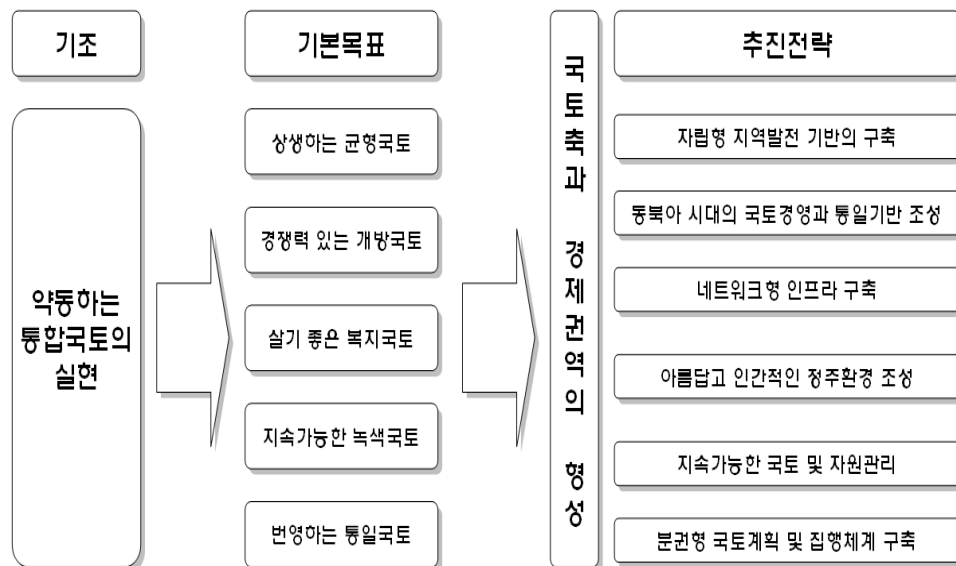
7. 부 칙

- 이 지침은 2008년 6월 일부터 시행한다.

2 산업용지 관련계획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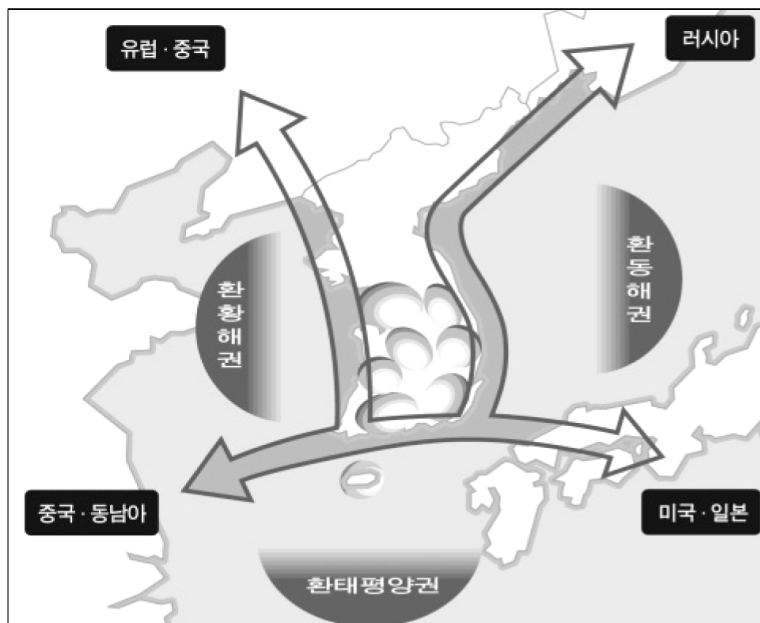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우리 국토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 기조에는 내포된 두가지 요소는 ‘국가의 도약과 지역혁신을 유도하는 약동적 국토실현’, ‘지역간 균형발전과 남북이 상생하는 통합국토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7-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본틀

- 제4차 국토종합수정계획에서는 국토문제를 극복하고 균형과 경쟁우위 개념을 확보한 국토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개방형 국토발전축과 다핵연계형 국토구조를 기본골격으로 제시하였음
- 미래의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지역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대외적으로는 개방성을 지향하고, 국내적으로는 지역간 연계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토구조의 구축방향을 제시하였음
- 먼저 대외적으로는 유라시아 대륙과 환태평양을 지향하는 개방형 국토축(π 형)을 구축하기로 하고 남해안축·서해안축·동해안축 등 3개 연안축을 형성하고자 하였음

- 대내적으로는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간 상생을 촉진하는 다핵연계형 국토 구조를 제시하였는데, 다핵연계형 국토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단위로 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북권·광주권·대구권·부산권과 제주도 등 7+1로 경제권역을 설정하였음
- 지방의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역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자립형 지방화와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간적 기본단위로 육성하도록 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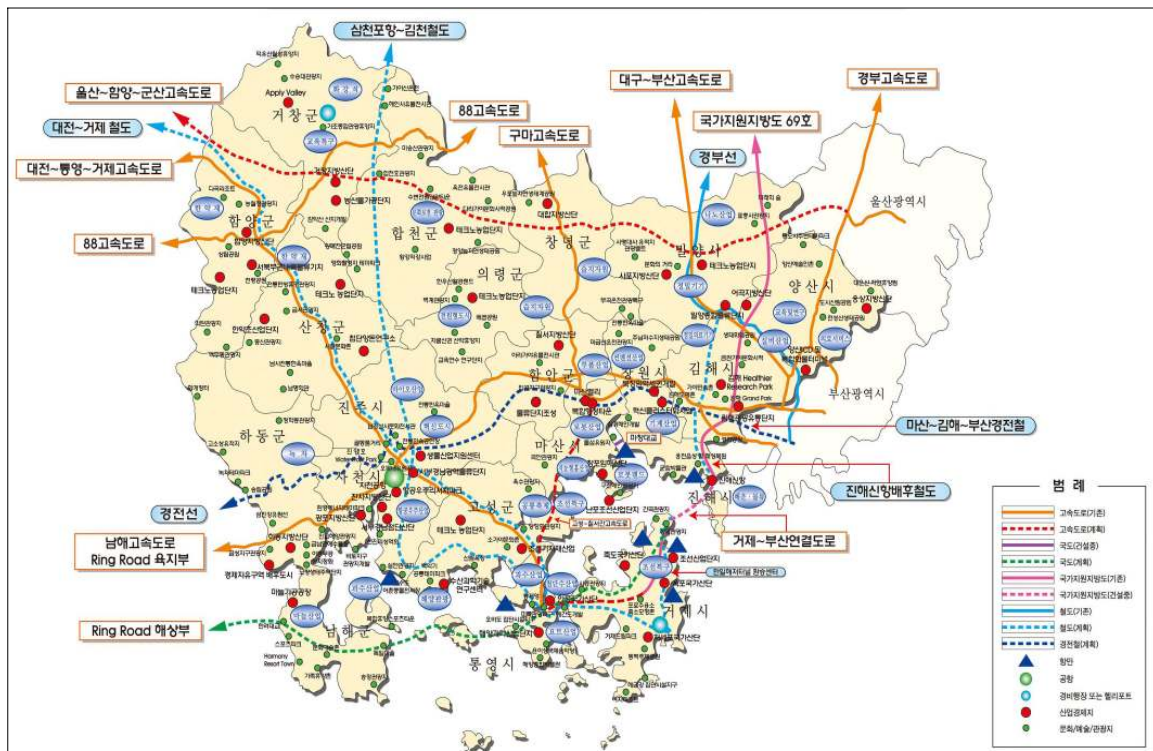
(그림7-2)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구도

- 수도권 일극중심의 국토 비효율을 극복하려면 자립형 지방화를 통하여 다극형 국토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묶어 행정구역을 초월 하는 공간단위를 구축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지향하는 경제권역을 육성 해야 함
- 국토종합계획에서의 경상남도는 지식기반 첨단산업 선도지역으로 발전하 기 위해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창출지역', '한태평양시대 국제교류의 주 도지역', '해양문화관광의 중심지역' 을 계획의 기본목표로 제시하였음

2.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 본 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위계획으로서 지역의 발전방향과 주요정책·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되었음
-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광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실천적 계획으로, 도내 20개 시·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을 가짐
-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은 인간·환경·지식중심을 남해안시대 중추경남을 계획이념으로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9대 중핵권을 설정하여 경남의 교통여건·산업·문화·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공간구조는 기존의 개발축 개념보다는 창원과 진주를 개발의 핵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공간구조로 개조
- 이전의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5대 권역을 산업·문화·정체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9개 중권역별로 분류
 - 서북부경남(거창·함양·합천)권역은 특화산업 및 자연산업(화강석·한약재 등)특구·산악내륙 순환관광·특화교육 도시·문화보전 및 계승·융합·청정농산물·한약재 특구 등을 조성
 - 서남부경남(하동·산청·사천·서부)권역은 특화산업 및 자연(지역연고)산업 특구·산악내륙 순환관광·문화보전 계승 및 융합·녹차 및 한약재 특구 조성
 - 동부경남(김해·양산)권역은 정밀기기산업 및 관련교육과 연구·의료산업 육성 및 관련산업 집중육성·연구교육 강화(부산대·양산캠퍼스·인제대·양산대·영산대 등) 의료서비스·노인건강·실버산업 육성·관광 및 레저산업을 육성
 - 중부경남(창원·마산·진해)권역은 국제도시 건설·기계산업수도 육성·조선클러스터육성 및 해운물류 기지화·복합행정타운조성·주택산업 및 지능형 홈산업을 집중 육성
 - 중북부경남(창녕·밀양)권역은 정밀기기 및 교육과 연구·나노연구 및 관련 벤처산업 육성·연구교육 강화하며(부산대 밀양캠퍼스 중심), 물류·가공산업 육성·문화관광·휴양도시 건설·습지생태계 보존 및 람사르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제시

- 남부해양경남(거제·통영·고성 동부) 권역은 조선산업 특구육성·Clean 수산업 보고 육성·Blue Ocean 해양관광산업·요트 산업 등 해양레포츠 산업·첨단과수산업(한라봉·유자 등)·국제음악 및 미술제 개최·남해안시대 중심권을 개발함
- 서부해양경남(남해·고성·사천 남부) 권역은 공룡축제의 국제자원화·Clean 수산업 보고 육성·Blue Ocean 해양관광·요트 산업 등 해양레포츠 산업·첨단과수산업(한라봉·유자 등)·외국인 마을 조성·마늘 장수산업 육성 등 남해안시대에 부합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함
- 서부경남(진주·사천 동부) 권역은 교육문화도시 육성·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기초연구 강화·청정농산물 보급기지 활성화·첨단산업·외국인산업단지 등 조성·항공우주클러스터 추진함
- 중부내륙경남(함안·의령) 권역은 경남 배꼽공원 조성 및 배꼽공원을 중심으로 전원형 경남중심도시 조성·공공기관 유치·부품산업 육성·청정환경 및 교육특구를 육성함



(그림-7-3)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종합계획도

3. 제2차 산업입지 공급계획(2002~2011)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차원의 산업용지 공급계획으로 제1차 계획기간(1992~2001)이 종료되고, 그간의 산업·경제환경이 현저하게 변화함에 따라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는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2001~2011)을 수립·확정하였음
- 제2차 계획에서는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종전환·제조업 부지원단위 감소·산업단지 규모축소 추세 등을 감안하여 제1차 계획기간의 공급물량 140km²보다 약 15% 감소한 총 120km²의 산업용지를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에 걸쳐 매년 12km²를 공급하는 것으로 책정하고 있음
-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기업 활동의 지방화와 세계화·첨단산업의 선도산업 부상·친환경적 개발 및 산업단지의 재정비 수요 증가 등으로 입지여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2차 계획에서는 산업입지 정책방향과 지역별·업종별·유형별 산업입지 공급물량을 제시하였음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입지의 지방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체 120km² 중 수도권에 20%인 24km², 지방에 80%인 96km²를 공급하여 수도권의 공급비율을 줄여나감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환황해안축과 환남해안축을 연계한 신산업지대망 구축과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위한 산업입지를 지원하고자 함(수도권비율 : 2001년 26% → 2011년 25%)
- 난개발·환경훼손 방지를 위해 계획입지 공급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공급면적을 71%인 86km²로 늘리고 개별입지는 29%인 34km²로 제한하는 한편,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하기보다는 20여개의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별공장 건축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는데 많은 배려를 하고 있음(계획입지 비율 : 2001년 52% → 2011년 56%)
- 비교적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는데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데, 기존 산업단지(오송생명·구미4·석문·군장 등 28개)의 최대한 활용과 20여개의 신규단지 지정 등 총 119km²를 개발하여 86km²의 산업용지(계획입지)를

공급하기로 함

- 특히, 이들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진입도로·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전액 국고 지원하여 산업용지 분양가를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임
- 제2차 계획에서는 2011년까지 경남에 11.5km²의 산업용지를 신규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함

(표7-1) 시·도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단위: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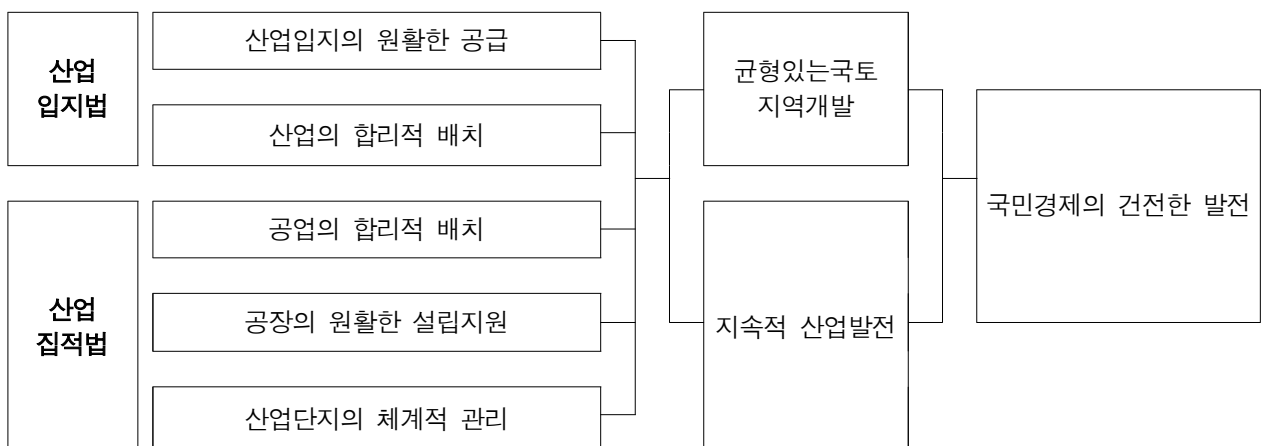
구분	현황 (A)	순수요 (B)	추가수요(C)					총공급(D)			2011년 면적 (E)
	2001	02~11	계	선공급	재정비	미분양	해 외 이 전	계	계 획 입 지	개 별 입 지	
전국	512.0	102.3	17.7	22.8	14.6	-16.2	-3.5	120.0	85.6	34.4	632.0
서울	5.2	-0.2	0.0	-	0.1	-	-0.1	-0.2	-0.1	-0.1	5.0
부산	16.9	3.9	0.6	0.8	0.4	-0.5	-0.1	4.5	2.9	1.6	21.4
대구	14.2	1.5	1.6	0.3	1.5	-	-0.2	3.1	2.0	1.1	17.3
인천	30.7	3.0	1.8	0.7	1.2	-	-0.1	4.8	3.1	1.7	35.5
광주	8.9	2.1	0.3	0.4	0.5	-0.5	-0.1	2.4	1.6	0.8	11.3
대전	8.2	2.4	0.9	0.5	0.5	-	-0.1	3.3	2.1	1.2	11.5
울산	48.4	3.1	0.7	0.7	0.1	-	-0.1	3.8	3.0	0.8	52.2
경기	98.4	16.7	3.1	3.6	2.2	-1.8	-0.9	19.8	12.1	7.7	118.2
강원	13.0	4.5	0.8	1.0	0.7	-0.8	-0.1	5.3	4.0	1.3	18.3
충북	32.4	10.9	1.4	2.5	1.5	-2.3	-0.3	12.3	9.2	3.1	44.7
충남	51.4	12.0	2.4	2.7	1.2	-1.2	-0.3	14.4	10.8	3.6	65.8
전북	24.3	10.7	0.1	2.4	1.5	-3.6	-0.2	10.8	8.1	2.7	35.1
전남	50.1	11.3	0.1	2.5	0.9	-3.2	-0.1	11.4	8.6	2.8	61.5
경북	51.1	9.8	1.9	2.2	0.9	-0.7	-0.5	11.7	8.8	2.9	62.8
경남	57.1	9.7	1.8	2.3	1.4	-1.6	-0.3	11.5	8.6	2.9	68.6
제주	1.7	0.9	0.2	0.2	-	-	-	1.1	0.8	0.3	2.8

주)D=B+C, E=A+D

2 산업용지 관련법률

1. 산업입지 관련 법률체계

- 1990년 1월부터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체계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3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의 양대 법체계로 통합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 두 법률은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관리, 개별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림7-4)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목적과 주요목표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관련지침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표7-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관련규정

구 분	주 요 내 용
정의 (법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 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함 ◦"지식산업"이라 함은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연구개발업·엔지니어링 서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의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함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 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함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함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농공단지: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준산업단지"라 함은 도시 또는 도시주변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제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을 말함

(표7-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관련규정(계속)

구 분	주 요 내 용
<p>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6조)</p>	<p>①국가산업단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함</p> <p>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지역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p> <p>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p> <p>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함</p> <p>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함. 다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 에는 산업단지의 지정후에 제3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또는 제8호의 사항을 정하여 이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사업시행방법 5. 주요유치업종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7. 자원조달계획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p>⑥제5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내용 중 산업시설용지의 면적은 산업단지 종류에 따라 산업단지유상공급면적의 40/100 이상 70/10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p>
<p>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7조)</p>	<p>①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음</p> <p>②제1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대상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바닷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음</p> <p>③시·도지사 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음</p> <p>④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산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p>

(표7-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상 관련규정(계속)

구 분	주 요 내 용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7조)	<p>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 해양 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함</p> <p>⑥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⑦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정을 요청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조정할 수 있음</p>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7조의 2)	<p>①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대통령 령이 정하는 시장이 지정하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함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음</p> <p>②인구의 과밀방지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없음</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첨단 산업단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입안 하여 제출하여야 함</p> <p>④제1항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권자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개발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함.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음</p> <p>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시·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함</p>
농공단지의 지정 (법 제8조)	<p>①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함</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함</p> <p>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농공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p> <p>⑤지식경제부장관 및 농림수산물부 장관은 제2조제5호라목의 대통령 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지정된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농공단지와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음</p>
준산업단지의 지정 (법 제8조의 3)	<p>①준산업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함</p> <p>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준산업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장의 소유자들의 의견을 듣고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함</p> <p>③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함</p>

2)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표7-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산업단지의 지정요건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요건 1.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 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작성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간배치구상과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 ◦교통시설계획, 물류시설설치계획, 용수공급계획, 폐·하수처리계획, 공원녹지계획, 폐기물 처리시설계획, 에너지 공급 및 통신시설계획 등 기반시설계획 ◦공공지원시설, 생산지원시설, 후생복지시설과 주거시설계획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 ◦지원시설공간은 산업시설공간과 연계하여 시설규모 결정
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지확보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km²이상 :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13%미만 - 1km²~3km² : 7.5%이상~10%미만 - 1km²미만 : 5%이상~7.5%미만 - 공공녹지 최소규모 : 500m²이상 ◦도로확보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km²이상 : 10% - 1km²미만 : 8%이상 - 단지 내 간선도로폭 15m이상 확보

3)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표7-4)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적용범위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 -국민임대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지원요청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서식에 의거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 하여야 함
지원대상 및 시기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중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이 준공된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조성면적이 30만㎡미만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 기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에서 산업입지정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산업단지

3. 산업집적법 및 관련지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표7-5)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정의 (제2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 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을 말함 "과밀억제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함 "성장관리지역"이라 함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함 "유치지역"이라 함은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함 5의2. "산업집적"이라 함은 기업, 연구소, 대학,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함 5의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라 함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함 5의4. "지식기반산업"이라 함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함 5의5. "산업집적기반시설"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설, 기업지원시설, 기술 인력의 교육·훈련시설 및 물류시설 등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5의6. "산업기반시설"이라 함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함 5의7. "산업단지구조조고도화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고부가 가치화, 기업지원서비스의 강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을 통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 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함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개발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함

2) 「산업단지 관리지침」

(표7-6) 「산업단지 관리지침」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적용대상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을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요령고시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기본계획 중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관리권자는 입주자격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인하고자 하는 면적이 산업단지 총면적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합리적 배치,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및 지역 간의 공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안의 일부지역에 입주할 업종을 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업종의 입주를 하게 할 수 있다.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 중분류 (2단위)로 한다.

4.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008.9.6)

1) 특례법안 제정 배경

- 최근 조선·자동차산업 등의 수출호조, 중국진출기업의 회귀수요 등의 영향으로 산업용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산업단지는 이미 수도권·경남·전남 등에서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어 공급부족에 의한 수급불균형이 우려되고 있음
- 또한 공장등록수도 2006년 이후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당장 공장가동이 가능한 부지가 필요한 실정임
- 현재 산업단지 인·허가에 2~4년이 소요되는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제정함

2) 특례법안의 주요내용

□ 적용범위(제3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적용됨
- 부칙 제3조제2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이 특례법안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제5조)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함
- 국토해양부 또는 시·도의 산업단지 관련 분야별 공무원과 환경청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 받은 직원으로 상설조직인 ‘지원센터’를 구성하여 관련된 여러 분야에 대한 검토 및 협의를 ‘원스탑 서비스’로 제공함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제6조)

- 국가산업단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

의위원회를,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일반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환경, 교통 등 분야별로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는 여러 위원회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면서, 분야별로 위원을 참여하도록 구성함으로써 각종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간소화함

(표7-7) 지원센터의 기능(제5조 제6항)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의향서 접수 및 이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업무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 협의·조정업무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에 관한 업무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말함 이하 같다)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기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표7-8)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제6조 제2항)

1. 당해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당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여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함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당해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당해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당해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산업단지계획(제8조)

- 현행 2단계(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로 분리되어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절차를 1단계(산업단지계획)로 통합하여 유사한 절차의 중복을 제거토록 함
-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 공유수면매립,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조사, 에너지사용계획, 기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제8조제3항)

(표7-9) 산업단지 계획에 포함할 사항 (제8조 제1항)

1. 산업단지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에너지 사용계획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주민동의 의견청취 (제9조)

-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함
- 주민의견 수렴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교통영향평가서·재해영향평가서 및 인구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함
- 지정권자는 열람게시일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사전환경성 검토 관련사항,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 관계 기관 협의 (제10조)

- 관계 기관의 장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국방부 15일)이내(근무일 기준)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이견없이 산업단지계획의 신청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봄

□ 통합조정협의 (제11조)

- 제10조에 따른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불참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
- 사업시행자는 회의참석시 의견제시가 가능

□ 산업단지계획 승인기간의 제한 (제16조)

-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기간 준수 등을 통해 승인기간이 준수되도록 적극 협조함

□ 농공단지예의 적용 (제17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시·군·구가 속한 시·도의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당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이를 검토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함
- 시·군·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도 동 규정을 준용함

□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9조)

- 국토해양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국방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산림청장, 문화재청장, 소방방재청장 등이 마련한 산업단지계획의 기준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적용특례(제21조, 제22조)

-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다만, 이는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예정용지 총 면적의 30/100 범위 이하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 한함
-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이 수

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봄. 다만 이를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20일(근무일 기준)내 협의를 완료해야 함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등의 적용 특례 (제23조)

-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불구하고 산업단지 예정부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사전환경성 검토만을,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 사전환경성 검토는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는 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도록 의무화함
- 환경영향평가지 필요시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조사할 수 있음

□ 기타 적용특례 (제24조~2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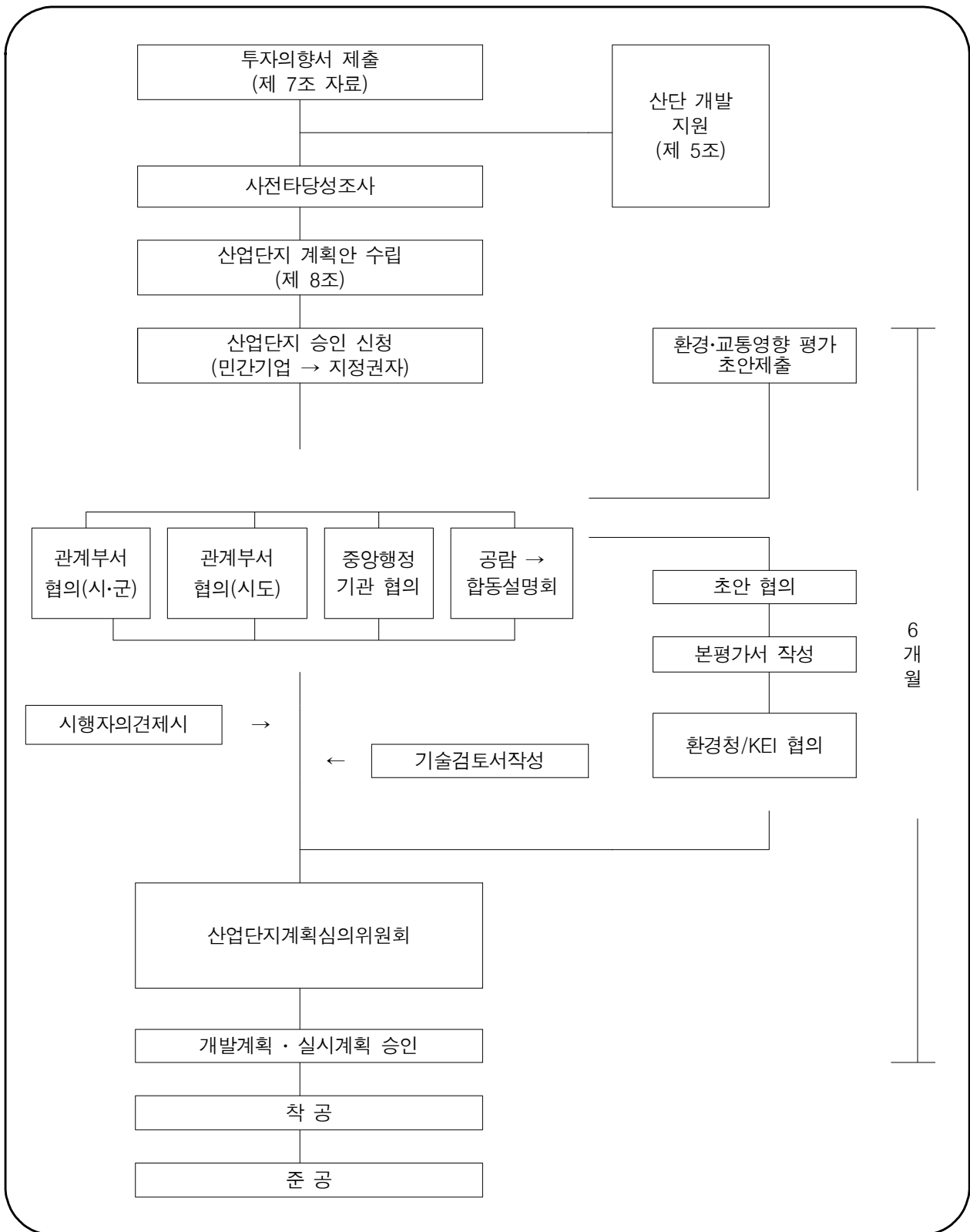
-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함
-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변경·해제가 된 것으로 봄. 다만 공익용산지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지정목적해제가 가능한 공익용산지를 편입하는 경우,
-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해제가 된 것으로 봄
-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변경·해제가 된 것으로 봄

4) 추진절차

- 산업법은 크게 개발계획승인단계와 실시계획승인단계로 구분함.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시 14개의 규제(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항목 65개 포함시 79개 규제)에 대한 행위를 하여야 하는 등 그간 정부의 산업단지 규제 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가 많음
- 특례법은 총리실에 투자촉진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사업자가 투자의향서를 제출, 승인신청하여 영향평가, 주민공람, 관계기관협의하여 사전에 문제

를 해결한 다음 통합조정회의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조정 후 기술검토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고시함

- 특례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개발계획승인단계와 실시계획승인단계의 2단계로 나뉘져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가 한 단계로 통합되어 통상 24개월~48개월(산업법에 의한 산업단지조성의 경우)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이 평균 6개월로 단축됨



(그림7-5)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추진절차

5. 기존 법률과의 비교분석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장점

- 계획적으로 조성된 입지이므로 각종 금융 세제지원이 가능하며, 대규모 단지조성에 따른 산업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 동력·용수·하수 등의 지원 시설이 양호함
- 또한, 공장집단화에 따른 상호 정보교환, 기술교류, 업종교류, 협업화가 가능하며, 환경오염방지시설이 공동설치 및 운영되어 공해배출업종의 입주가 가능함

□ 단점

- 단지개발에 상당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확보하기가 곤란하며, 분양산업단지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적소에 공장건축이 어려운 점이 있음
- 또한 계획단지이므로 일단 입주하면 향후 사업확장(증축)에 제한이 있으며, 개별입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은 편임

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 장점

- 민간의 산업단지조성에 있어 관계법령의 인·허가 사항을 포함하여 6개월 내 승인여부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적용한 법으로 적기에 용지를 공급하여 산업활성화 및 사업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음

□ 단점

- 타당성 검토 이후 일괄행정진행에 따른 초기업무과다 및 과다비용 지출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개별 법률의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가가 비싼 평지 또는 환경사지의 개발보다는 산지 또는 매립지의 개발을 촉진시켜 환경적 악영향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4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 지원제도

1.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제도 개요

(표7-10) 「산업단지 관리지침」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적용대상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을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적용함
입주업종, 입주자격 및 입주요령고시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리기본계획 중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에는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함 ◦관리권자는 입주자격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승인하고자 하는 면적이 산업단지 총면적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함 ◦지식경제부장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합리적 배치,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및 지역 간의 공장의 균형 있는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안의 일부지역에 입주할 업종을 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업종의 입주를 하게 할 수 있음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 중분류 (2단위)로 함

(표7-11)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제도 개요

구 분	지 원 근 거
개발비용의 보조 및 기반시설설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동 시행령 제26조, 법 제29조와 동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산업단지 개발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특정 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의거하여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재산세·도시계획세·교육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부담금 감면할 수 있음
산업단지 개발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의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단지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2. 지원내용

(표7-12) 산업단지 개발사업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보조의 내용	<p>◦보조대상 비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3.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4. 이주대책사업비 5. 토지 또는 시설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비 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6.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7.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전력·통신시설등 기반 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8. 문화재조사비
비용의 부담	<p>◦각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를 보조할 수 있음. 다만, 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와 문화재조사비 및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액을 보조할 수 있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미개발·미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3.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우선공급	<p>◦우선지원기반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만·도로 및 철도 2. 용수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3.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산업단지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3. 산업단지 개발 비용보조 및 지원기준

1) 적용범위

-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제3조에서 국가지원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표7-13) 적용범위

구 분	주요내용
국가가 전액 보조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용 및 문화재조사비(단, 개발사업 이 이미 준공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이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된 미개발·미분양 산업단지에 중소기업 또는 지방이전 기업에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임대할 목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간선도로·녹지시설·용수공급시설·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국가가 지원하는 기반시설	◦지원도로 및 용수공급시설
융자금 지원대상	◦융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임대산업단지 및 임대목적의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한 단지에 한정

2) 지원대상

(표7-14) 지원대상

구 분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중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구
지원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사업이 준공된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면적이 30만㎡미만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수도권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단, 성장관리권역에서 첨단업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중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에서 지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기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에서 산업입지정책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산업단지
지원시기	◦산업단지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기에 맞추어 지원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조기 설치로 인하여 시설이 유휴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3) 지원대상 시설 설치 기준

(표7-15)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지원도로 지원기준

단지규모	지 원 기 준 ^{※1}		
	사업성격	총연장(km) ^{※1}	차선수
330만㎡ 미만	도로신설	6	4차선
	도로확장	—	2차선(최대6차선)
330만㎡ 이상	도로신설	8	6차선
	도로확장	—	4차선 ^{※2}

- 주) 1. 총연장은 주변도로망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2. 단지규모가 990만㎡이상일 경우는 최대 8차선, 990만㎡ 미만일 경우는 최대 6차선으로 제한
 3. 외국인전용단지가 있는 경우는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기준에 관계없이 전액지원



제8장 산업단지 개발의 기대효과

- ① 제도의 개편
- ② 산업용지 개발의 기대효과

제8장 산업단지 개발의 기대효과

1 제도의 개편

1. 제도의 개편방향

1)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 개발

- 우리나라 산업입지 수급체계는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하였고 기업은 입지난을 겪고 있으며 일부 산업단지는 미분양 상태에 있음
- 따라서 공급자중심의 수급체계에서 수요대응적인 산업용지공급체계로 바꾸도록 하며, 지역별·업종별·입지유형별 수요를 감안한 수급체계를 구축함

2) 지방중심의 산업입지 개발

-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지방은 수요자중심의 수급체계를 구축하면서 산업입지를 공급하고 있음
- 국가는 전국적인 산업입지 수급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방향과 관리체계를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개발과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발이 추진되도록 유도함

3) 산업입지 지원확대

- 산업입지 지원확대 방안은 재원확보방안 확대 및 다양화, 산업단지 지원체계화, 산업용지 가격인하, 낙후지역 산업입지 개발 지원 등임
- 특히, 산업용지가격 인하를 위해 분양가 자율화 및 분양가격 인하 유도와 지원대책을 적극 추진함

4) 계획입지 수급정책의 효율성 제고

- 산업입지 공급은 계획입지 위주를 유지하되 계획입지의 효율성을 증대하도록 함
- 이를 위해 산업단지 전문화·복합화 유도, 적시적소 공급, 저가 공급, 산업입지 정보망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산업용지 개발시 생산, 지식, 업무, 생산지원기능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유도함

- 민간참여기회를 높이기 위해 민간주도형 제3섹터, 신탁업자, 전문건설업체에 의한 산업용지 개발을 유도하며 산업용지의 저가공급을 위한 기반시설비용에 대해 정부의 적극 지원 및 선행투자를 추진토록 함

5) 산업구조재편에 따른 산업입지 공급체계 형성

- 기술변화와 첨단기술산업의 발전 및 정보화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을 원활히 수용하는 새로운 산업입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산업입지 여건의 변화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벤처산업 유형을 보일 것이며 공장용지 보다는 입지공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하드웨어적」인 요인보다 「소프트웨어」성격의 요인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임

6) 산업입지 제도의 체계화

- 산업입지 지정, 개발, 분양, 관리를 한 제도에 일원화하고 공업의 입지, 공장의 설립, 계획입지의 지정·개발·분양·관리 및 개별입지를 포괄하는 제도를 설정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계획입지의 지정 및 개발, 계획입지의 관리, 개별공장 입지, 공업의 재배치, 공장의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산업입지 통합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야 함

7)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입지지원

- 외국인전용단지를 지방대도시 및 중심도시 등에 적극 확대하며 경제특구, 투자자유지역 확대와 아울러 첨단산업 유치시 수도권 입지에 대해서도 검토후 추진
- 외국대기업의 지역총괄본부(RHQ), 업무총괄본부(OHQ) 지구 지정 제도 확대 및 대도시지역에 유치 지원을 추진함

2. 제도개선 추진방안

1) 수요자 중심의 산업용지 개발

① 민간 산업입지 개발의 적극지원

- 민간산업단지 개발의 장점은 첫째, 공사비 절감 및 간선시설 축소 등이 가능하여 원가를 다소 줄일 수 있음
- 둘째, 현실수요에 부합한 적정입지의 확보가 가능하며, 셋째,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에 의한 공장 신·증설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
- 따라서 민간 산업입지 개발의 적극지원을 위해서는 개발주체간의 실질적인 자유경쟁을 유도하고 도시개발, 부동산개발 유형으로 산업입지 개발을 추진하며, 민간개발자의 산업단지 조성시 조세경감 및 기반시설 지원을 적극 추진함

② 실수요기업의 산업용지 지정요청제 도입

- 산업용지를 미리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법보다는 실수요기업 등이 위치, 면적, 분양조건 등을 정하여 산업용지 지정권자에게 해당지구를 산업용지로 지정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를 검토한 후에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는 제도를 도입함
- 이는 미분양율을 낮출 뿐만 아니라 기업이 선호하는 입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개별입지 수요를 계획입지로 유인할 수 있을 것임

③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 활성화

-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 이상 50만㎡ 범위내에서 공장설립유도지구를 지정하도록 함
- 시장·군수가 지구지정시 사전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설립 희망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공장입지수요를 계획된 입지로 유도함으로써 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④ 준산업단지 제도 도입

- 개별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개별공장 집적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열악한 환경문제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움

- 따라서 향후 시장·군수가 공장주들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환경 개선함

⑤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화

-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용이하게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함

2) 자치단체의 역할

① 자치단체의 책임경영 강화

- 산업용지의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며 투자자본회수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경쟁적인 산업용지개발은 공급과잉으로 이어져 미분양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국가적 자원의 낭비 우려와 함께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산업용지 개발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중장기적인 차원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과 아울러 명확한 수요추정을 바탕으로 산업용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경영을 강화토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를 위해 자율성의 최대한 보장 및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강화 등을 적극 추진함

3) 산업용지 지원확대

① 재원확보방안의 확대 및 다양화

- 국가가 일반산업단지를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일정비율을 부담만 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방식을 도입함.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산업용지 개발을 위해 외자도입을 도모할 경우 지방정부의 책임아래 적극 추진하도록 허용함
- 따라서 재원확보 방안의 개발 및 확대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아울러 매칭펀드, 고용창출장려금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검토후 추진함

② 산업용지 자원의 체계화

- 향후의 산업수요에 대응하여 산업단지 개발방식 및 개발규모가 다양화될 경우 지원대상 단지의 선정에 있어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단지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산업단지 지원의 기준은 산업단지의 규모, 입지지역의 특성, 국가정책과의 부합성 등 다음 3가지 측면에서 마련토록 함
- 첫째, 산업단지 규모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에 대해 국가가 우선 지원하며, 둘째, 입지지역의 경우 낙후지역에 입지한 단지에 대해 국가가 우선 지원하며, 셋째, 국가정책과 부합하는 업종의 유치 등의 이유로 국가적으로 특별히 육성할 필요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토록 함

③ 산업용지 가격인하 방안

- 산업용지 가격인하 방안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장기임대용지의 공급, 저렴한 용지의 발굴 및 사업조달비에 대한 저리융자 등의 제도를 확충하여 추진

④ 낙후지역 산업용지 개발의 합리적 지원

- 산업용지개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사업임. 특히 낙후지역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지여건이 나빠 기업의 선호도가 낮으므로 낙후지역의 경우 균형개발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 낙후지역의 산업용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낙후지역의 선정기준과 지원방법,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산업용지제도에 반영토록 함

4) 계획입지 수급정책의 효율성 제고

① 계획입지 개념의 확대와 적용

- 계획입지에 개별입지의 장점을 보완하고, 개별입지에 계획입지의 장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산업입지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입지 개념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산업용지를 계획입지개념에서 수용토록 함
- 즉 계획입지에 적극적인 행위로 용지를 공급하는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 계획하에 개발 또는 관리되는 모든 입지공간을 계획입지로 규정토록 함
- 새로운 개념의 계획입지에는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내 기존의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내 공업지역·준공업지역·아파트형공장 등이 포함되며, 비도시지역내의 개별입지가 집단화된 공장단지 등이 포함되도록 함
 - 이에 는 현재의 계획입지 뿐만 아니라 향후 「계획」의 개념 아래 지정·개발·관리되는 모든 입지공간을 말하며, 공업지역 등 집단화된 공장단지를 위해 「준산업단지」 성격을 부여함
 - 개별입지는 도시지역내 비공업지역내(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 분산된 개별입지와 비도시지역내 분산된 개별공장으로 하되 비도시지역내 분산된 공장은 환경관리차원에서 추후 계획입지개념에 포함토록 함
 - 계획입지 가운데 산업단지는 적극적 지원을 위한 계획입지이며 집단화된 공장단지(또는 준산업단지)는 제한적으로 지원하되 환경·토지이용 측면에서의 사후관리의 개념이 적용되는 경우라 할 수 있음
 - 개발의 잠재력 또는 높은 수요가 예상되는 일정지역을 산업단지 적지로 지정토록 함
 - 산업용지 적지지정은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가 시행하고 중앙 또는 시·도는 전체적인 기준을 제시토록 함
 - 산업용지의 경우 제한된 범위내 산업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지방세감면 등의 세제지원을 하며, 공장설립 허가절차를 쉽게 해주고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도 활성화하여 적기적소에 공장설립이 용이토록 함
 - 공장단지에 대한 지원은 산업단지와 산업촉진지구의 중간적 수준으로 하며, 해당지역내 토지이용은 건축허가만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지역내에서 산업단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토지수용권을 허용토록 함

② 개별입지의 관리철저

- 계획입지 중심의 수급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개발 등 환경문제가 있는 개별입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③ 선공급의 개념확대

- 미분양 보다 유보·비축이라는 개념을 도입함. 즉, 유보 또는 비축(reserve)의 경우 미분양에서 제외하는 등 미분양에 대한 개념을 조정

함. 또한 선공급의 개념확대방안으로 선토지 사용제도를 도입함

5) 산업구조재편에 따른 산업입지 공급체계 형성

① 벤처산업, 지식기반산업 등 산업구조를 반영한 입지공급체계

- 소규모 산업단지, 자연친화적인 산업단지, 임대방식 및 민간주도형 개발 등의 공급체계 마련과 아울러 판교 등과 같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산업용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② 산업전환지대 설정

- 산업전환지대는 산업법에 의한 시행 및 기존산업집적 지역에 설정함과 아울러 산업입지 재정비, 공장재개발 활용 등을 적극 추진

6) 산업입지제도의 체계화

① 산업입지통합법의 제정

- 산업입지 지정, 개발, 분양, 관리를 한 제도에 일원화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공업의 입지, 공장의 설립, 계획입지의 지정·개발·분양 관리 및 개별입지를 포괄하는 제도를 설정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통합된 법률체계가 요구됨
- 통합 법률에는 산업입지, 계획입지의 지정 및 개발, 계획입지의 관리, 개별공장입지, 공업의 재배치, 공장의 설립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산업입지 통합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산업입지통합법의 제정을 추진토록 함

② 산업입지 유형의 정비

- 산업단지의 유형구분은 입지지역, 개발목적, 개발주체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음
- 현행의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유형을 기능에 따라 일반 산업단지, 복합산업단지, 업무단지, 연구단지 등으로 분류함

③ 산업단지의 지정·개발, 분양, 관리권 일원화

- 산업단지 지정기관이 산업단지 개발, 분양, 관리의 체계적 계획 및 시행의 일괄체계를 확립하고 산업단지 관리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협

회 위주의 추진을 검토

7)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의 입지지원

① 외국인 전용단지 확대

- 외국전용단지 지정 및 개발을 지방대도시·중심도시에 적극 확대함. 아울러 경제특구 및 투자자유지역 확대도 추진

② 지역총괄본부 등의 유치확대

- 대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외국대기업의 지역총괄본부(RHQ), 업무총괄본부(OHQ) 등의 유치를 추진함

2 산업용지 개발의 기대효과

- 국가 또는 지역의 경제성장은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산업 중 가장 적극적이고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부문은 제조업의 성장이라 할 수 있음
- 제조업의 성장은 타 산업부문, 즉 1차산업, 3차산업 성장을 빠르게 견인할 수 있어 각 국은 제조업의 성장을 가장 중요한 국가성장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이는 경남지역 내에서도 같은 경우로 나타나고 있기에 해당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제조업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제시하고 자치단체간 경쟁을 벌이고 있는 데서도 유추할 수 있음
- 산업(제조업)의 유치는 1차적으로 지역인구의 성장과 소득의 증대로 나타나고 이는 바로 농산물을 비롯한 도·소매업의 성장으로 파급 될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금융, 법률 등 사업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의 성장은 다시 지역인구의 성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성장의 순순환사이클로 전환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함
- 그러나 제조업의 성장에는 반드시 환경의 파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제조업의 유치 시에는 환경을 고려한 입지의 결정이 매우 중요함
- 산업용지의 개발과 공급이 부족하거나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무계획적으로 공장들이 입지하게 되고 이는 지역경제성장이라는 과실에 비하여 환경저감비용, 또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개설 비용 등 지역관리비용이 더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산업용지의 개발은 필요한 공급량을 필요한 시기에 현실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고려한 용지의 개발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함

■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성장을 견인

- 지역의 산업특성과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여 용지를 개발, 공급하고 특성화된 산업 클러스터를 이룸으로써 산업의 성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
- 이 경우 산업계열간 또는 단지의 규모 간 수직적, 수평적 치계화가 중요

■ 환경에 대한 악 영향의 최소화

-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개별 공장의 입지는 환경에 대한 공간적 피해 범위가 넓고 환경저감시설의 설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용의 증가가 발생
- 계획적으로 용지를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환경피해범위의 제어,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해져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환경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자원의 순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음

■ 지역관리자의 경제적 관리가 가능

- 산업용지를 일정지역에 집적화시킴으로써 도로, 전기, 통신, 용수 등의 유틸리티 공급시설의 설치비와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관리가 가능하며 입주자 입장에서는 이용요금을 줄일 수 있어 생산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

■ 경제적 정(+)의 효과 발생

- 용지의 개발은 동종 계열간 정보교환, 기술교류, 인력수급, 시설 또는 자재의 공동구매, 이용 등 집적의 경제효과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외부경제의 효과도 함께 발생
- 또한 치안, 소방 등의 공공서비스와 소매·여가 등 편의·생활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도시경제 및 규모의 경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부록

- ① 설문조사 개요
- ② 설문조사 결과분석
- ③ 설문조사서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의 개요

- 본 설문조사는 장래 경상남도내 산업용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도내 업체별 산업용지에 대한 재개발·재정비 또는 해외이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을 수립하는데 의미가 있음

2. 주요조사내용

- 기업의 입지변동 추이와 수요변화
- 산업입지 재개발 및 재정비 현황
- 산업입지 해외이전에 관한 사항

3. 표본설계 (Sampling Design)

구 분	내 용
1) 조사 대상	◦경상남도 제조업체
2) 표본 크기	◦513개 업체
3) 표본추출방법	◦층화강제할당, 대상표집추적조사 및 누적표본추출 조사
4) 조사 방법	◦우편, 팩스, 전화 설문조사

4. 실사 설계(Fieldwork Design) 및 자료처리

1) 실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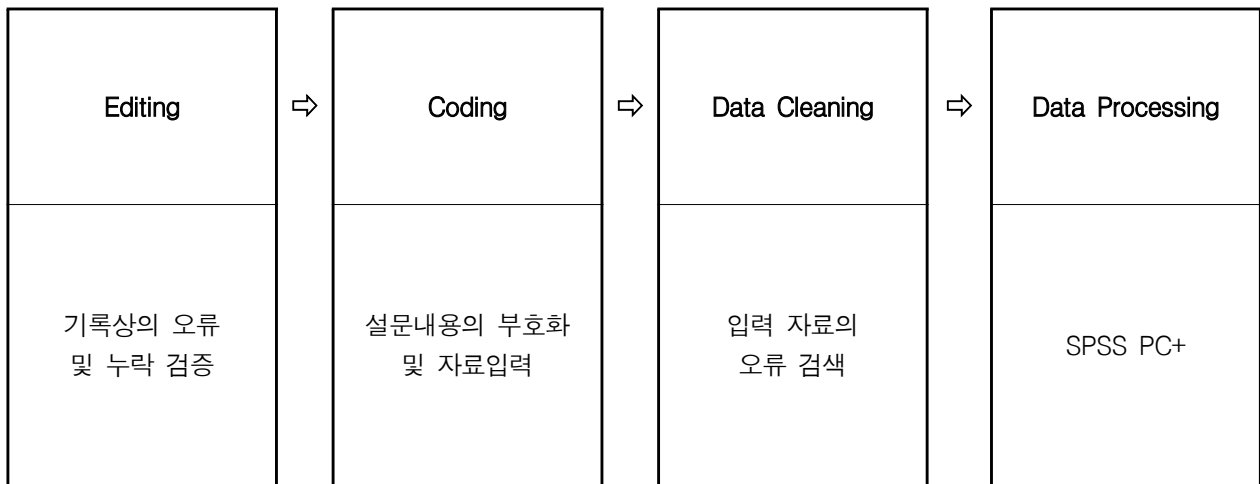
면접원 선정 ↓	◦본사 소속 전문 전화조사원 중 적격자 선발
면접원 교육 ↓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하여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조사내용을 숙지함 으로, 비표본오차(Non-SamplingError)최소화와 조사과정의 표준화 (Standardization)를 도모함
면접원 통제 ↓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Supervisor)가 매일 질문지를 회수, 검토하여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노력함
검 증 조 사	◦완성된 질문지중 20%를 무작위추출하여, 본 연구소 검증원이 검증함. 만일 검증결과 응답의 허위기재나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부를 무효화하고 재조사를 실시함

2) 조사방법(Survey Method) 및 일시

-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 조 사 방 법 : 우편, 팩스, 전화 설문조사
- 조 사 기 간 : 2008년 11월 4일~2008년 11월 23일

3) 자료 처리(Data Processing)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과정을 거쳐 Pentium PC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C+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2 실문조사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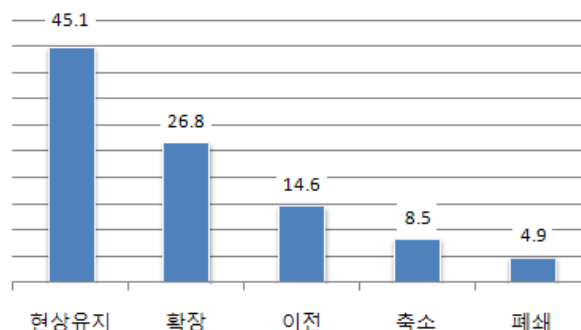
1. 계획입지 결과분석

1) 향후 업체가 나아갈 기업운영방법

- 향후 업체가 나아갈 방법에 대한 질문에 ‘현상유지’가 45.1%(37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확장’ 26.8%(22개 업체), ‘이전’ 14.6%(12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업체가 나아갈 방법 □

구분	빈도	퍼센트
현상유지	37	45.1
확장	22	26.8
이전	12	14.6
축소	7	8.5
폐쇄	4	4.9
합계	82	100.0



2) 확장 또는 이전을 원하신다면 희망하고 있는 지원사항

- 확장 또는 이전을 원하신다면 희망하고 있는 지원사항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토지, 건물 구입비 지원’이 1순위로 나타났고,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순으로 나타남

□ 희망하고 있는 지원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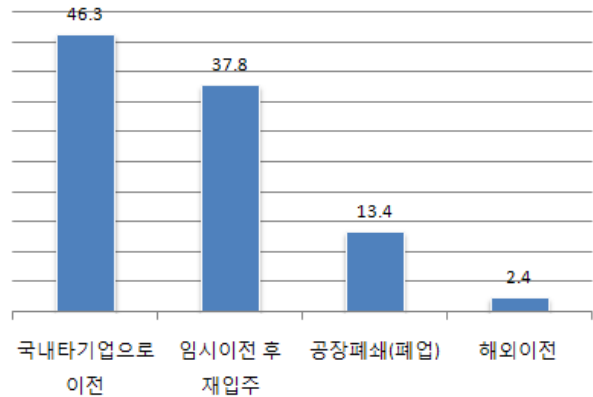
구분	거주지 선택사유					합계 A+B	순위
	1순위			2순위			
	빈도(A)	%	빈도(A)*2	빈도(B)	%		
토지, 건물 구입비 지원	39	47.6	78	9	13.2	87	1
세금 및 부담금 감면	20	24.4	40	33	48.5	73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6	7.3	12	8	11.8	20	3
인력확보 및 교육지원	5	6.1	10	4	5.9	14	5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4	4.9	8	9	13.2	17	4
마케팅, 홍보지원	3	3.7	6	3	4.4	9	6
기타	3	3.7	6	1	1.5	7	7
해외산업입지 정보제공	2	2.4	4	1	1.5	5	8
합계	82	100.0	-	68	100.0	-	-

3) 이전예상 지역

- 이전예상 지역에 대한 질문에 ‘국내 타기업으로 이전’ 이 46.3%(3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임시이전 후 재입주’ 37.8%(31개 업체), ‘공장폐쇄(폐업)’ 13.4%(11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이전예상 지역 □

구분	빈도	퍼센트
국내 타기업으로 이전	38	46.3
임시이전 후 재입주	31	37.8
공장폐쇄(폐업)	11	13.4
해외이전	2	2.4
합계	82	100.0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가 1순위로 나타났고, ‘이주비용 지원’, ‘노후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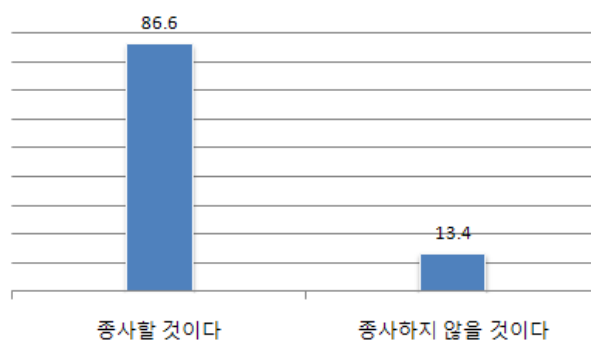
구분	거주지 선택사유					합계 A+B	순위
	1순위			2순위			
	빈도(A)	%	빈도(A)*2	빈도(B)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25	30.5	50	10	13.9	60	1
이주비용 지원	20	24.4	40	11	15.3	51	2
노후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14	17.1	28	17	23.6	45	3
각종 부담금 및 세제지원	10	12.2	20	22	30.6	42	4
사업기간 중 대체부지 조성	9	11.0	18	12	16.7	30	5
기타	4	4.9	8	—	—	12	6
합계	82	100.0	—	72	100.0	—	—

5) 향후 제조업 종사 의향

- 향후 제조업 종사 의향은 ‘종사할 것이다’가 86.6%(71개 업체)로 나타남

□ 향후 제조업 종사 의향 □

구분	빈도	퍼센트
종사할 것이다	71	86.6
종사하지 않을 것이다	11	13.4
합계	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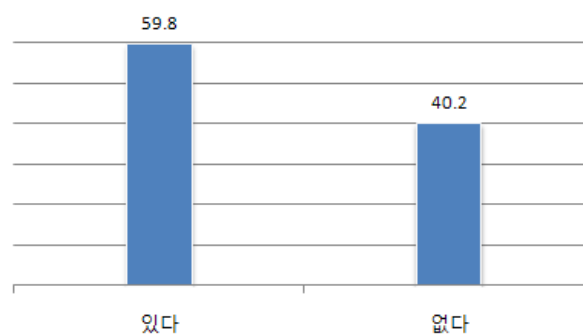


6) 재정비 시 참여의사

- 재정비 시 참여의사가 ‘있다’ 59.8%(49개 업체)로 나타남

□ 재정비 시 참여의사 □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49	59.8
없다	33	40.2
합계	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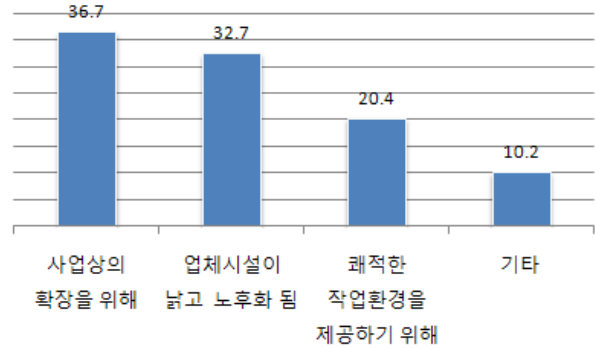


7) 재정비 시 참여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

- 재정비시 참여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사업상의 확장을 위해’가 36.7%(1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업체시설이 낡고 노후화 됨’ 32.7%(16개 업체),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4%(10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재정비 시 참여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 □

구분	빈도	퍼센트
업체시설이 낡고 노후화 됨	16	32.7
사업상의 확장을 위해	18	36.7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0	20.4
기타	5	10.2
합계	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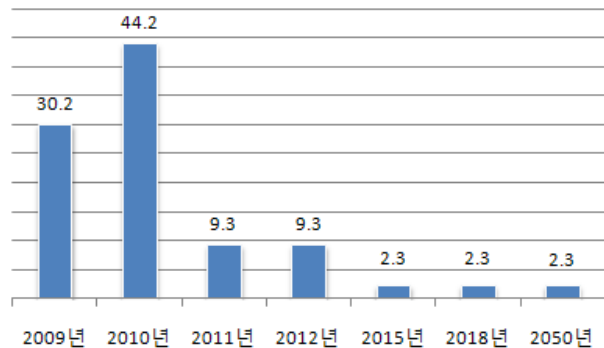


□ 재정비 시기

- 재정비 시기에 대해 ‘2010년’에 재개발을 희망한다는 업체가 44.2%(19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2009년’ 30.2%(13개 업체), ‘2011년’, ‘2012년’ 9.3%(4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재정비 시기 □

구분	빈도	퍼센트
2009	13	30.2
2010	19	44.2
2011	4	9.3
2012	4	9.3
2015	1	2.3
2018	1	2.3
2050	1	2.3
합계	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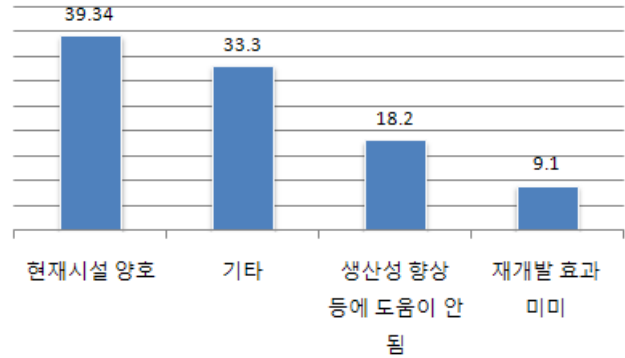


8) 재정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

- 재정비 시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이유에 대해 ‘현재시설 양호’가 39.4%(1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생산성 향상 등에 도움이 안 됨’ 18.2%(6개 업체), ‘재개발 효과가 미미’ 9.1%(3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그 외의 의견으로는 인력난 ‘인력 확보가 안된다는 의견’과 ‘인건비 상승’, ‘기술자 부족’ 등의 이유를 들었음

□ 참여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 □

구분	빈도	퍼센트
현재시설 양호	13	39.4
기타	11	33.3
재개발 효과가 미미	3	9.1
생산성 향상 등에 도움이 안 됨	6	18.2
합계	3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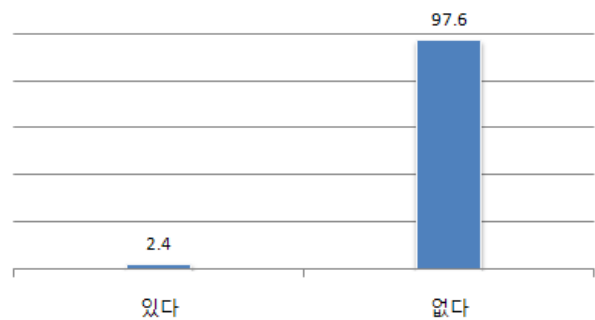


9) 해외이전 의사

• 해외이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없다’ 가 97.6%(80개 업체)로 나타남

□ 해외이전 의사 □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2	2.4
없다	80	97.6
합계	8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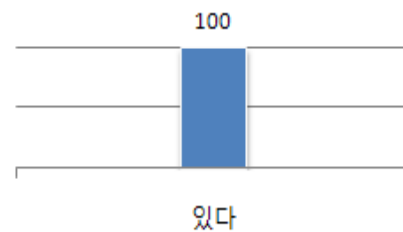


10) 해외이전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

• 해외이전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100.0%(2개 업체)로 나타남

□ 해외이전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 □

구분	빈도	퍼센트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2	100.0
합계	2	100.0



□ 해외이전 시기

- 해외이전 시기에 대해 ‘2009년’ 이 100.0%(1개 업체)로 나타남

□ 해외이전 시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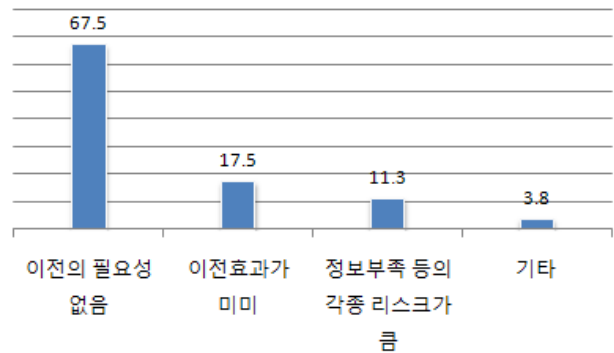
구분	빈도	퍼센트
2009	1	100.0
합계	1	100.0

11) 해외이전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

- 해외이전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이전의 필요성이 없음’ 이 67.5%(54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이전효과가 미미’ 17.5%(14개 업체), ‘정보부족 등의 각종 리스크가 큼’ 11.3%(9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해외이전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 □

구분	빈도	퍼센트
이전의 필요성 없음	54	67.5
이전효과가 미미	14	17.5
정보부족 등의 각종 리스크가 큼	9	11.3
기타	3	3.8
합계	80	100.0



12) 기타의견

- 기타의견으로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책 확대’, ‘환율에 대한 리스크 감소책’, ‘무역금융 채원확대’, ‘ERP구축에 따른 지원책 강구 등이 있음
- 그리고 산업단지내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의견등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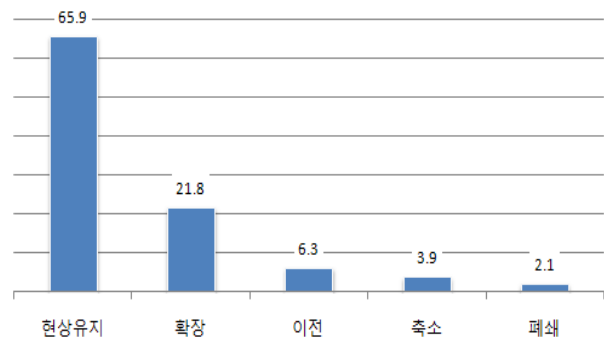
2. 개별입지 결과분석

1) 향후 업체가 나아갈 기업운영방법

- 향후 업체가 나아갈 방법에 대한 질문에 ‘현상유지’가 65.9%(284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확장’ 21.8%(94개 업체), ‘이전’ 6.3%(27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업체가 나아갈 방법 □

구분	빈도	퍼센트
현상유지	284	65.9
확장	94	21.8
이전	27	6.3
축소	17	3.9
폐쇄	9	2.1
합계	431	100.0



2) 확장 또는 이전을 원하신다면 희망하고 있는 지원사항

- 확장 또는 이전을 원하신다면 희망하고 있는 지원사항에 대해서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토지, 건물 구입비 지원’이 1순위로 나타났고, ‘세금 및 부담금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순으로 나타남

□ 희망하고 있는 지원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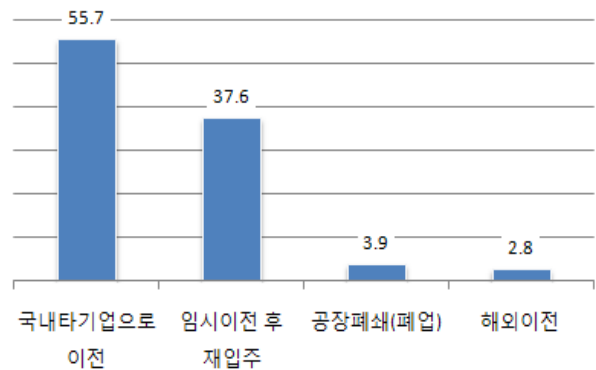
구분	거주지 선택사유					합계 A+B	순위
	1순위			2순위			
	빈도(A)	%	빈도(A)*2	빈도(B)	%		
토지, 건물 구입비 지원	223	51.9	446	57	14.6	503	1
세금 및 부담금 감면	92	21.4	184	155	39.6	339	2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59	13.7	118	83	21.2	201	3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19	4.4	38	24	6.1	62	5
인력확보 및 교육지원	15	3.5	30	38	9.7	68	4
마케팅, 홍보지원	12	2.8	24	29	7.4	53	6
해외산업입지 정보제공	2	0.5	4	1	0.3	5	8
기타	8	1.9	16	4	1.0	20	7
합계	430	100.0	—	391	100.0	—	—

3) 이전 예상지역

- 이전예상 지역에 대한 질문에 ‘국내 타기업으로 이전’ 이 55.7%(240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임시이전 후 재입주’ 37.6%(162개 업체), ‘공장폐쇄(폐업)’ 3.9%(17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이전예상 지역 □

구분	빈도	퍼센트
국내 타기업으로 이전	240	55.7
임시이전 후 재입주	162	37.6
해외이전	12	2.8
공장폐쇄(폐업)	17	3.9
합계	431	100.0



4)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에 대해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이주비용 지원’ 이 1순위로 나타났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노후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순으로 나타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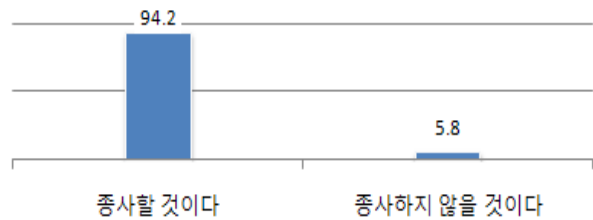
구분	거주지 선택사유					합계 A+B	순위
	1순위			2순위			
	빈도(A)	%	빈도(A)*2	빈도(B)	%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125	29.0	250	68	17.0	318	2
노후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77	17.9	154	69	17.3	223	3
이주비용 지원	120	27.8	240	85	21.3	325	1
사업기간 중 대체부지 조성	47	10.9	94	68	17.0	162	5
각종 부담금 및 세제지원	55	12.8	110	107	26.8	217	4
기타	7	1.6	14	2	0.5	16	6
합계	431	100.0	-	399	100.0	-	-

5) 향후 제조업 종사 의향

- 향후 제조업 종사 의향은 ‘종사할 것이다’가 94.2%(406개 업체)로 나타남

□ 향후 제조업 종사 의향 □

구분	빈도	퍼센트
종사할 것이다	406	94.2
종사하지 않을 것이다	25	5.8
합계	4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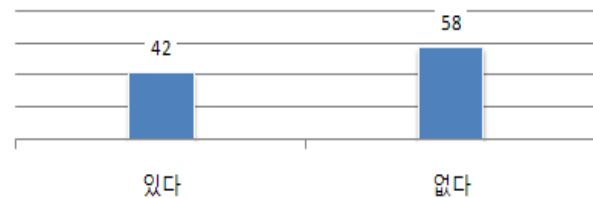


6) 재개발 시 참여의사

- 재개발 시 참여의사가 ‘없다’ 58.0%(250개 업체)로 나타남

□ 재개발 시 참여의사 □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181	42.0
없다	250	58.0
합계	4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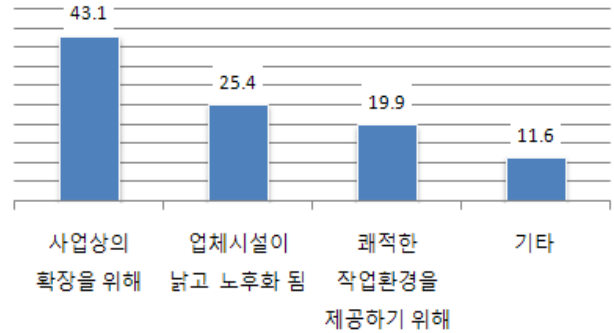


7) 재개발 시 참여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

- 재개발 시 참여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에 대한 질문에 ‘사업상의 확장을 위해’가 43.1%(7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업체시설이 낡고 노후화 됨’ 25.4%(46개 업체),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9.9%(36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 곤란하여 재개발에 참여’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재개발 시 참여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 □

구분	빈도	퍼센트
업체시설이 낡고 노후화 됨	46	25.4
사업상의 확장을 위해	78	43.1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6	19.9
기타	21	11.6
합계	18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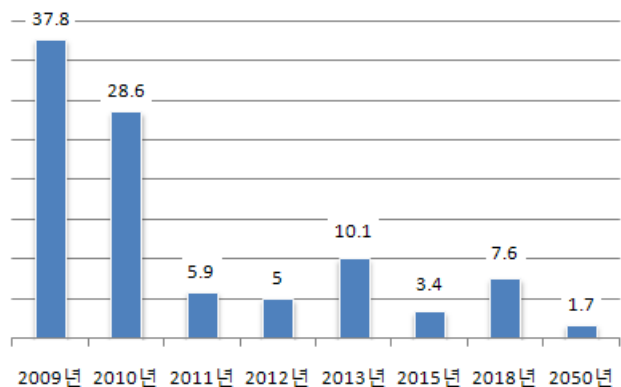


□ 재개발 시기

- 재개발 시기에 대해 ‘2009년’에 재개발을 희망한다는 업체가 37.8%(45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2010년’ 28.6%(34개 업체), ‘2013년’ 10.1%(12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재개발 시기 □

구분(년도)	빈도	퍼센트
2009	45	37.8
2010	34	28.6
2011	7	5.9
2012	6	5.0
2013	12	10.1
2014	4	3.4
2015	9	7.6
2018	2	1.7
합계	1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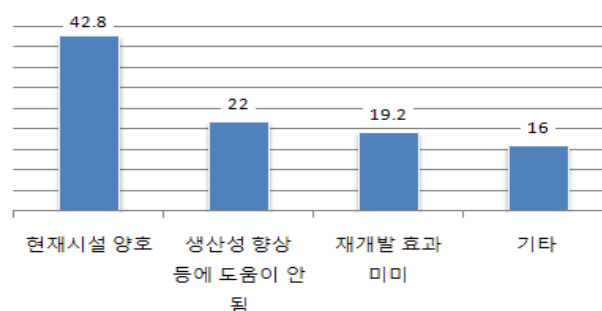


8) 재개발 시 참여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

- 재개발시 참여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에 대해 ‘현재시설 양호’가 42.8%(107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생산성 향상 등에 도움이 안됨’ 22.0%(55개 업체), ‘재개발 효과가 미미’ 19.2%(48개 업체)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재개발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

□ 참여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 □

구분	빈도	퍼센트
현재시설 양호	107	42.8
생산성 향상 등에 도움이 안됨	55	22.0
재개발 효과가 미미	48	19.2
기타	40	16.0
합계	2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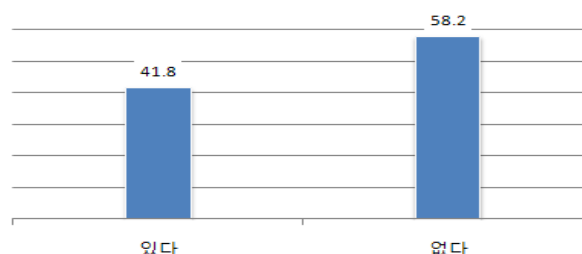


9) 산업단지 입주회사

• 산업단지 입주회사를 묻는 질문에 ‘없다’가 58.2%(251개 업체)로 나타남

□ 산업단지 입주회사 □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180	41.8
없다	251	58.2
합계	4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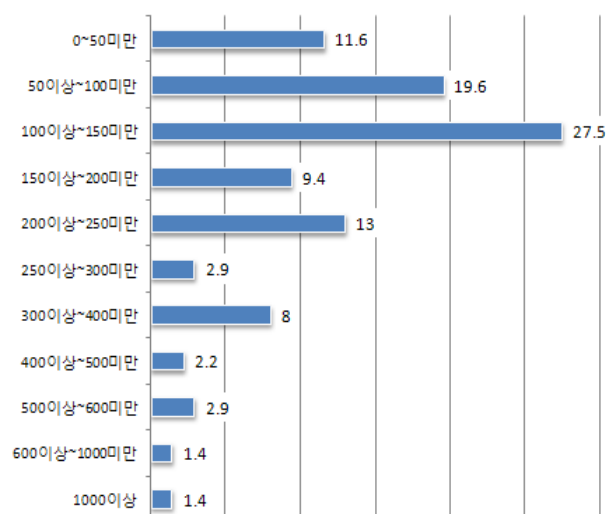


10) 재개발시 부지확장 비율

• 부지확장 비율에 대해 ‘100이상-150미만’가 27.5%(38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50이상-100미만’ 19.6%(27개 업체), ‘200이상-250미만’ 13.0%(18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부지확장 비율 □

구분	빈도	퍼센트
0~50미만	16	11.6
50이상~100미만	27	19.6
100이상~150미만	38	27.5
150이상~200미만	13	9.4
200이상~250미만	18	13.0
250이상~300미만	4	2.9
300이상~400미만	11	8.0
400이상~500미만	3	2.2
500이상~600미만	4	2.9
600이상~1000미만	2	1.4
1000이상	2	1.4
합계	1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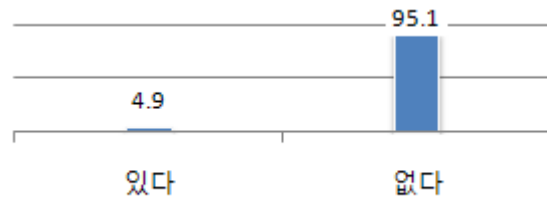


11) 해외이전 의사

- 해외이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없다’ 가 95.1%(410개 업체)로 나타남

□ 해외이전 의사 □

구분	빈도	퍼센트
있다	21	4.9
없다	410	95.1
합계	43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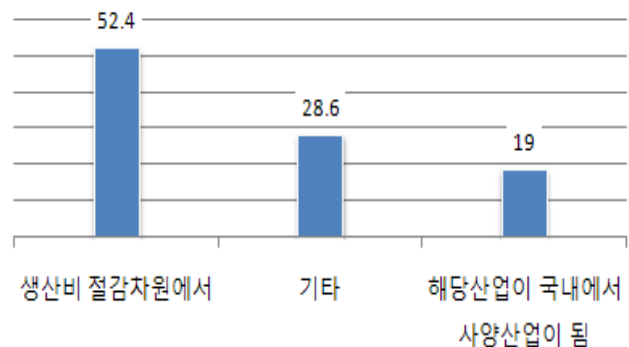


12) 해외이전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

- 해외이전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52.4%(11개 업체), ‘해당산업이 국내에서 사양산업이 됨’ 19.0%(4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해외이전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 □

구분	빈도	퍼센트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11	52.4
해당산업이 국내에서 사양산업이 됨	4	19.0
기타	6	28.6
합계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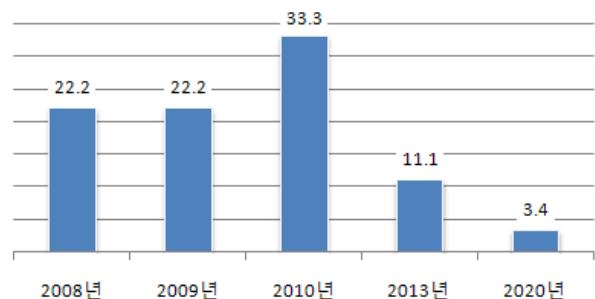


□ 해외이전 시기

- 해외이전 시기에 대해 ‘2010년’ 이 33.3%(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2008년’, ‘2009년’ 22.2%(2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해외이전 시기 □

구분	빈도	퍼센트
2008	2	22.2
2009	2	22.2
2010	3	33.3
2013	1	11.1
2020	1	11.1
합계	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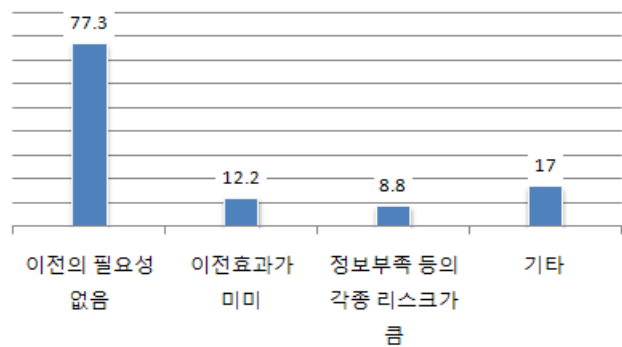


13) 해외이전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

- 해외이전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이전의 필요성이 없음’ 이 77.3%(317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이전효과가 미미’ 12.2%(50개 업체), ‘정보부족 등의 각종 리스크가 큼’ 8.8%(36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해외이전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 □

구분	빈도	퍼센트
이전의 필요성이 없음	317	77.3
이전효과가 미미	50	12.2
정보부족 등의 각종 리스크가 큼	36	8.8
기타	7	1.7
합계	410	100.0



14) 기타의견

- 기타의견으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자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 는 의견과
- 정부에서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금지원’ 및 ‘세금감면’ 의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음
- 또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부탁한다’ 는 의견도 있었음

3. 시사점

- 산업용지 공급규모는 순수요면적과 추가수요면적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됨. 본 연구에서는 순수요면적 중 재개발·재정비 면적과 해외이전면적을 구하기 위해 기업체 수요조사를 실시했음
- 그 결과 계획입지 내 기업들 중 향후에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율이 86.6%와 재정비사업에 의사가 있는 기업이 59.8%로 조사됨. 이는 계획입지의 재개발·재정비면적 산출하는데 고려됨
- 또한 개별입지 내 기업 중 향후에도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의 비율은 94.2%, 재정비사업에 의사가 있는 기업이 42.0%임.
- 우리나라는 1990년대 들어 환경문제인식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70년대 생산성이 높았던 노동집약적 산업들의 약세가 계속됨. 결국 비용절감, 노동력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기 시작했고 이전대상 업종도 음식료품, 섬유·의복 제조업에서 전자통신장비 및 수송기계 등으로 확대됨
- 설문조사에 따르면 계획입지와 개별입지를 포함한 응답업체의 4.48%가 해외이전을 계획중인 것으로 나타남

①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② 노후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③ 이주비용 지원
④ 사업기간 중 대체부지 조성
⑤ 각종 부담금 및 세제지원
⑥ 기 타 ()

5. 귀사는 향후에도 제조업에 종사할 것입니까?

- ① 있다(⇒7번 문항으로) ② 없다(⇒8번 문항으로)

7-1. 재정비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희망하는 연도(2009~2018년사이)를 적어주십시오. (답변 : 년)

① 있다(⇒10번 문항으로) ② 없다(⇒11번 문항으로)

10-1. 해외이전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희망하는 연도를 적어주십시오. (답변 : 년)

2. 개별입지 설문조사서

조사원:

분류번호		

경상남도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수립』에 따른 업체별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금번 우리도에서는 장래 도내 산업용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을 수립중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도내 업체별 산업용지에 대한 개별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작성하여주신 내용은 계획수립시 소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주관 : 경남발전연구원 (☎

055-239-0149)

* 질문에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응답란의 해당번호에 V 표시 해 주시고, 보기 중 귀하의 생각과 같은 것이 없을 경우 ‘기타’란에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 기업의 입지변동 추이와 수요변화에 관한 설문입니다.

1. 귀사가 희망하는 향후 업체가 나아갈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확장 ② 축소 ③ 이전
④ 현상유지 ⑤ 폐쇄

2. 만약 귀사가 확장 또는 이전을 원하신다면 희망하고 있는 지원사항에서 우선적인 사항부터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 | | |
|-------------------|---------------|
| ① 토지, 건물 구입비 지원 | ② 세금 및 부담금 감면 |
| ③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 ④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
| ⑤ 인력확보 및 교육지원 | ⑥ 마케팅, 홍보지원 |
| ⑦ 해외산업입지 정보제공 | ⑧ 기 타 () |

3. 재개발을 실시한다면 귀사는 어디로 이전할 생각입니까?

- ① 국내 타기업으로 이전
② 해외이전
- ③ 임시이전 후 재입주
④ 공장폐쇄(폐업)

4. 재개발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에서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항부터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 2순위 : ()

- | | |
|-------------------|------------------|
| ① 행정절차 간소화 및 규제완화 | ② 노후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
| ③ 이주비용 지원 | ④ 사업기간 중 대체부지 조성 |
| ⑤ 각종 부담금 및 세제지원 | ⑥ 기 타 () |

□ 재개발에 관한 설문입니다.

5. 귀사는 향후에도 제조업에 종사할 것입니까?

- | | |
|-----------|---------------|
| ① 종사할 것이다 | ② 종사하지 않을 것이다 |
|-----------|---------------|

6. 귀사는 업체에 대한 재개발시 참여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별

- | | |
|----------------|----------------|
| ① 있다(⇒7번 문항으로) | ② 없다(⇒8번 문항으로) |
|----------------|----------------|

7. 만약 재개발시 참여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업체시설이 낡고 노후화 됨 | ② 사업상의 확장을 위해 |
| ③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 ④ 기 타 () |

7-1. 재개발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희망하는 연도(2009~2018년사이)를 적어주십시오. (답변 : 년)

8. 만약 재개발시 참여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현재시설 양호 | ② 재개발 효과가 미미 |
| ③ 생산성 향상 등에 도움이 안됨 | ④ 기 타 () |

9. 재개발 완료시 산업단지로 입주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 | |
|-----------------|------|
| ① 있다(⇒10번 문항으로) | ② 없다 |
|-----------------|------|

10.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신다면 부지 확장비율은 어느정도로 생각하십니까? (답변 : %)

□ 해외이전에 관한 설문입니다.

11. 귀사는 해외이전의 의사가 있으십니까?

- | | |
|-----------------|-----------------|
| ① 있다(⇒12번 문항으로) | ② 없다(⇒13번 문항으로) |
|-----------------|-----------------|

12. 만약 해외이전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 ② 해당산업이 국내에서 사양산업이 됨 |
| ③ 쾌적한 작업환경의 제공차원 | ④ 기 타 () |

12-1. 해외이전 시기는 언제가 좋을지 희망하는 연도를 적어주십시오. (답변 : 년)

13. 만약 해외이전의 의사가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이전의 필요성이 없음 | ② 이전효과가 미미 |
| ③ 정보부족 등의 각종 리스크가 큼 | ④ 기 타 () |

※ 끝으로 경상남도의 산업발전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수립(안)에 대한 검토의견

□ 산업용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수립(안) 최종보고회

- 일 시 : 2009. 02. 24
- 장 소 : 경남발전연구원 2층 회의실
- 제출의견 : 7건

수정·보완 할 내용	조 치 사 항	비고
○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 연구보고서 II~VI 목차 준수	○ 목차 및 내용 전면 수정	반영
○ 산업단지 개발계획도(1식) 제출	○ 별도 첨부	반영
○ 산업단지공급계획 시장·군수 의견수렴 절차 이행	○ 각 시군에 보고서 발송하여 2일 이내 의견 수렴하여 최종 검토 후 수정 보완	반영
○ 용역 수립근거, 절차, 법적효력 등 추가	○ 제1장 및 제7장 수정하여 법적근거 및 과업절차, 법적효력 등 추가 : p3~p6	반영
○ 개발 가용지인 계획관리지역, 공업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중치를 부여 공급수요 시·군별 재산정	○ 시군별 추가 산업단지 조성계획 및 개발가용지 현황 자료 협조 받아 추가 공급계획안 제시 : p162~p168	반영
○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 지침상 목차 및 내용 등을 준수 재편집 - 산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 - 지역별 및 산업입지 유형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종류별 공급에 관한 사항 - 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지정계획, 재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등	○ 산업입지 정책의 기본방향 : p117 반영 ○ 지역별·유형별·종류별 산업용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 p159 반영 ○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p205 반영 ○ 재정비·재개발 관한 사항 : 141p ○ 산업단지 조성(지정)계획에 관한 사항 : 151p	반영
○ 입지유형별, 산업단지 유형별 변화추이 재검토	○ 반영 제2장 전면 수정 : p9~p25	반영